

전략연구 2012-01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고승희 · 홍성호 외

발간사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까지 전 세계적인 최대 화두는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웰빙’을 비롯하여 복지국가 건설 등 개인과 사회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규모 뿐 아니라 생활수준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행복이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루고 나면 사람들이 행복해 질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고 있는 듯 합니다.

행복을 위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국가의 정책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시도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적 연구를 시도하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 수준은 더욱 미흡합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의 많은 사업들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민선 5기에 들어 행복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을 행복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충청남도의 발전방향과 전략마련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도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고승희 박사와 홍성효 박사를 비롯하여 많은 조언과 참여를 아끼지 않아주신 외부 연구진과 자문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에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행복의 조작적 정의나 행복지수의 측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인생을 보다 잘 즐기기 위한 고민으로써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행복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에 관한 연구의 활발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는 서양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행복 지표를 대부분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의 정서가 반영된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서은국 외, 2010). 따라서, 충남의 여건과 실정이 고려된 충남도민에게 적용가능한 행복지수의 개발과 이를 통한 충남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충남도민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복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조작적 정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도구를 본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충남도민의 행복지수 측정과 더불어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해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영역의 선정에 있어 충남 혹은 도내 시군 단위에서의 실현가능한 정책대상 영역을 포함해야 하며 정책수혜대상인 도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이러한 영역의 선정과 해당 영역별 변수들의 선택 및 정책방향의 설정으로 요약된다.

2. 행복에 대한 이해와 영역설정

행복에 대한 이해를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환경학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학에서 행복에 관해 주로 다루는 지표는 교육, 가족 등 주로 전통적으로 사회학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내용이며 교육, 가족, 시민참여, 문화와 여가, 안전 등을 고려한다.

행복의 심리학적인 측면은 주로 주관적 만족과 관련된다. 주관적 만족은 다른 영역들(사회학, 경제학, 환경학 등)에서 살펴본 객관적 지표들과 달리 각 개인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나타내며 평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얼마나 경험하는가를 의미한다.

행복의 경제학적 측면은 경제적 활동 및 자원에 대한 통제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력은 노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원 획득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연결망 및 정체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행복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는 사회지표나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지 않았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그 중요도가 높아져 환경 지표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들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환경오염으로 인해 기후변화나 생태계의 변화 등이 발생하고, 자연자원의 고갈 등이 문제시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충남도민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 과 ‘사회의 질’ 차원으로 구분 접근한다. 현재 충남도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이고, 그 양상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복을 보는 관점은 실제로 일자리·소득·소비, 주거·교통,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문화여가, 환경, 주민참여, 주관적 웰빙 9개의 관심영역 설정을 통해 파악된다. 이들 각각의 영역에서 행복한 삶이 유지될 때,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이 유지되는 사회로 볼 수 있다.

3. 충남도민의 행복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정책방향을 위한 설문조사를 충남 15개 시·군 주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2일 4일간 실시하였으며 각 부문별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 및 교통부문의 객관적 지표 우선순위는 자가거주비율이 1순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택전세가격지수로 범죄발생건수,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도, 통근 통학소요시간, 1인당 공원 및 녹지조성면적, 교통사고 발생건수, 상수도보급률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및 교통 지표의 도민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며 주거환경 만족도에 비해 교통시설 이용의 편리성이나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소득·소비부문의 객관적 지표 우선순위는 고용률이 1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질 임금, 청년층 고용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 비중, 고령층 고용률, 여성 실업률, 성별 임금격차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소득·소비 지표의 도민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이며 일자리에 대한 충남의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 내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및 공동체 부문의 객관적 지표 우선순위는 가족접촉빈도가 1순위로 나타났고, 사회적 관계망, 한부모 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단체참여율, 자살률, 지방정부 신뢰도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공동체 지표의 도민 만족도 결과는 전반적으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교육 부문의 객관적 지표 우선순위는 평생교육 접근성이 1위로 나타났고, 고등교육 접근성, 유아교육 접근성, 학습시간의 적정성과 성취도,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교사/학생 비율, 학교폭력 경험비율, 1인당 장서 수(공공도서관)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교육여건, 자신의 전공, 학생과 교사의 친밀도, 교우 관계, 학습 내용, 학습 결과의 6가지 지표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문화 및 여가 부문의 객관적 지표 우선순위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가 1순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레저시설 이용여부, 국내관광여행여부, 독서여부, 해외여행 여부, 일반신문 구독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문화·여가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려함’이 낮은 비율로 응답되었으며, 지역의 문화·여가시설이 질적 변화 여부에 ‘좋아짐’으로 답한 의견은 높게 나타났다.

환경 부문의 객관적 지표 우선순위는 하천 및 호소수질 오염이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환경오염 질환발생, 폐기물 및 쓰레기 관리, 통합대기환경지수(공기오염도), 주거지역 야간 소음도, 친환경 축산농가율, 환경민원 해소율, 야생 동식물 다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환경전반에 대한 관리상태를 설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다수였다. 부문별 관리상태로는 하천 및 호소의 수질관리 상태,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 위협을 느끼는 정도, 폐기물 관리 등 청결상태, 공기오염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건강 및 보건 부문의 객관적 지표 우선순위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흡연율과 음주량, 인구 천명당 의사 수 혹은 병상 수, 출생시

기대수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및 보전에 대한 도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하는 사람들에 비해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비율은 불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주민참여 부문의 객관적 지표 우선순위는 부패지수가 1순위로 나타났고, 투표율, 자원봉사 참여율, 정보공개율, 주민참여위원회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도정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반면, ‘불만족’의 비율이 높았으며 도정 정책에 대한 인지율도 낮게 나타났다. 개인이 도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정보의 공개, 도정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4.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영역별 지표선정

주거 및 교통 지표의 측정은 지역생활 환경의 수준과 현상의 객관적 측정이 필요하며 지표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주거 및 교통영역의 객관적 지표는 주택전세 가격지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범죄 발생건수이며 주관적 지표는 주택 만족도,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이 포함된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경제적 요인, 금전적 요인이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남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경제적 여건, 인구통계적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지표 선정 시 지역적 특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자리·소득·소비영역의 객관적 지표는 고용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실업률, 비농가 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실질임금 총액, 성별 임금격차이며 주관적 지표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가 포함된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화 경향, 1차적 관계가 갖는 중요성이 감소되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공동체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커진다. 가족 및 공동체의 다양한 측면 중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측정을 선정하며 어떤 면을 측정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객관적 지표는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소년 소녀 가장 비율, 가까운 친구 수, 자살률, 사회단체 참여율이며 주관적 지표는 가족접촉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 갈등, 가족 폭력, 부정적 일가족 전이, 부정적 가족 전이, 사회적 관계망,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신뢰가 포함된다.

개인의 소득 및 심리적 만족감 등에 영향을 미치며 행복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의 생산 준비로 교육영역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교육지표는 충남의 특성, 지역적 차이, 개인 및 가구 단위를 고려하여 측정하며 교육 영역의 객관적 지표는 영유아교육 접근성, 고등교육 접근성, 평생교육 접근성, 교원 1인당 학생 수, 1인당 장서 수, 성적, 학습시간이며 주관적 지표는 계열 혹은 전공 만족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효과성, 학습내용 만족도, 학습결과 만족도가 포함된다.

문화 및 여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는 아니지만 삶의 활력을 증대하며 개인의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하다. 문화 및 여가 영역의 지표는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충남도민의 행복을 고취시키는 방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표를 선정한다. 문화 및 여가 영역의 객관적 지표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레저시설 이용 여부, 국내관광여행 여부, 해외여행 경험 및 여부이며 주관적 지표는 지역 자원파악, 지역 자원활용 여부, 지역자원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문화여가활동 만족도가 포함된다.

환경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환경보호 요구와 환경적 가치는 더욱더 중요시 다루어진다. 체감성 및 현안성에 따라 물, 폐기물, 공기 등 총 7개로 분류하며 세분화된 지표를 측정한다. 환경 영역의 객관적 지표는 하천수질, 호소수질, 생활폐기물 처리율,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율이며 주관적 지표는 수질 만족도, 주변 청결상태, 건강위협이 포함된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대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요인들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상태에 대한 측정은 매우 복잡하다. 개인 차원지표 및 사회차원 지표와 결과지표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며, 건강 및 보건 영역의 객관적 지표는 출생시 기대수명,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며 주관적 지표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된다.

지방자치 실시 후 주민운동이나 참여행위가 급증하면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커졌고 향후 정책의 전망 제시가 요구되어 왔다. 주민참여와 정부는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념화 측정이 어려우며 주민참여 영역에서 객관적 지표는 투표율, 청렴도, 정보공개율, 주관적 지표는 도정에 대한 만족도, 정책인지, 영향도, 신뢰가 포함된다.

사회통계 분야에서, 특히 ‘삶의 질’이나 ‘웰빙’ 측정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생활 영역 혹은

주제가 새롭게 국제기구나 국가통계에서 부각되고 있다.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해서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모두 측정하고자 한다. 주관적 웰빙 측정 항목은 삶의 만족도, 정서경험, 심리적 번영, 성격 측정으로 구성한다.

5. 정책제언 및 결론

충남도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향후 추진해야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하는 기쁨을 안겨주어야 한다. 충남도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해보고 싶은 매력적인 일을 지역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매력적인 생활여건이 창조되어야 한다. 도민들이 충남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매력적인 공간을 창조하여야 한다. 다른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하여도 생활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류인구는 일시적으로 늘어날지 모르나 상주인구의 증가는 의문시 된다.

셋째, 창의적인 학습공간을 준비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이 자신의 성장과 타인에 대한 기여로서 체감하는 것처럼 이는 다양한 학습을 통해 준비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학습은 학교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교육기관을 통한 학습이 중요하지만 사회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주민들간의 연계와 공동체 형성은 물리적 제도와 함께 정신적 공감대 형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표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의지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는 단체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2
1) 연구의 주요내용	2
2) 연구의 추진체계	4
제2장 행복에 대한 이해와 영역설정	5
1. 행복의 개념	5
1) 행복의 사회학적 이해	7
2) 행복의 심리학적 이해	9
3) 행복의 경제학적 이해	11
4) 행복의 환경학적 이해	12
2. 기존 측정사례 및 지표	14
1) 행복측정에 대한 접근	14
2) 행복 및 유사 측정지표	18
3) 행복 및 유사지수 적용사례	20
4) 행복지수의 개별 연구	35
5) 행복 및 유사지표의 검토	39
3. 행복측정을 위한 측정틀	44
1) 행복측정을 위한 측정틀의 개요	44
2) 상호작용 관점의 채택	46
3) 관심영역의 설정	49
4) 행복측정을 위한 측정틀	55

제3장 충남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도민 의견조사 57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57
- 2. 각 영역별 결과분석 59

제4장 충남의 행복지수를 위한 영역과 지표개발 76

- 1. 주거 및 교통 부문 76
 - 1) 행복에 있어 주거 및 교통이 왜 중요한가? 76
 - 2) 어떻게 주거 및 교통을 측정할 것인가? 79
 - 3) 주거 및 교통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81
 - 4) 주거 및 교통영역에서의 정책 방향 95
- 2. 일자리·소득·소비 부문 101
 - 1) 행복에 있어 일자리·소득·소비가 왜 중요한가? 101
 - 2) 어떻게 일자리·소득·소비를 측정할 것인가? 108
 - 3) 일자리·소득·소비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109
 - 4) 일자리·소득·소비영역에서의 정책 방향 116
- 3. 가족 및 공동체 부문 118
 - 1) 행복에 있어 가족 및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118
 - 2) 어떻게 가족 및 공동체를 측정할 것인가? 126
 - 3)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126
 - 4)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정책 방향 141
- 4. 교육 부문 144
 - 1) 행복에 있어 교육이 왜 중요한가? 144
 - 2) 어떻게 교육을 측정할 것인가? 157
 - 3) 교육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158
 - 4) 교육영역에서의 정책 방향 167
- 5. 문화 및 여가 부문 170
 - 1) 행복에 있어 문화 및 여가가 왜 중요한가? 170
 - 2) 어떻게 문화 및 여가를 측정할 것인가? 173
 - 3) 문화 및 여가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177
 - 4) 문화 및 여가영역에서의 정책 방향 185

6. 환경 부문	189
1) 행복에 있어 환경이 왜 중요한가?	189
2) 어떻게 환경을 측정할 것인가?	191
3) 환경 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193
4) 환경 영역에서의 정책 방향	204
7. 건강 및 보건 부문	206
1) 행복에 있어 건강 및 보건의 왜 중요한가?	206
2) 어떻게 건강 및 보건을 측정할 것인가?	213
3) 건강 및 보건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214
4) 건강 및 보건에서의 정책 방향	220
8. 주민참여 부문	222
1) 행복에 있어 주민참여가 왜 중요한가?	222
2) 어떻게 주민참여를 측정할 것인가?	228
3) 주민참여에서의 지표 선정	230
4) 주민참여에서의 정책 방향	235
9. 주관적 웰빙 부문	238
1) 행복에 있어 주관적 웰빙이 왜 중요한가?	238
2) 어떻게 주관적 웰빙을 측정할 것인가?	240
3) 주관적 웰빙에서의 지표 선정	243
4) 주관적 웰빙에서의 정책 방향	253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255
1. 정책제언	255
2. 결론	258
<참고문헌>	262
<설문지>	266

표 목 차

<표 1>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	18
<표 2> 일본 신국민생활지표 요약	22
<표 3> 캐나다 웰빙 지수의 영역 및 측정 내용	25
<표 4> GNH의 영역별 세부내용	29
<표 5> 홍콩의 삶의 질 지수	30
<표 6> 인간개발지수의 구성 지표	31
<표 7> OECD How's Life 영역 및 지표	32
<표 8> Calvert-Henderson QoL 영역 및 지표	33
<표 9> WHO 삶의 질 척도(WHOQOL-100)	34
<표 10> EIU 삶의 질 지수 구성	35
<표 11> 선행연구의 영역구성과 내용	41
<표 12> 한국의 사회지표 영역과 선행연구 영역의 비교	43
<표 13> 사회의 질에 관한 측정 관심	51
<표 14> 차원별 관심영역 구성	53
<표 15> 관심 영역별 측정 내용	55
<표 16>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8
<표 17> 주거 및 교통 객관적 지표 순위	59
<표 18> 주택 혹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비중(%)	60
<표 19> 교통시설에 대한 만족도 비중(%)	60
<표 20> 사고의 위험	60
<표 21> 일자리·소득·소비 객관적 지표 순위	61
<표 22>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비중(%)	61
<표 23> 직장 내 스트레스에 대한 만족도 비중(%)	62
<표 24>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 비중(%)	62
<표 25> 가족 및 공동체 객관적 지표 순위	62
<표 26>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중(%)	63
<표 27>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비중(%)	63
<표 28>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비중(%)	63
<표 29> 사회에 대한 신뢰	64
<표 30>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비중(%)	64
<표 31> 교육 객관적 지표 순위	64

<표 32> 충남의 교육여건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중(%)	65
<표 33> 계열 혹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 비중(%)	65
<표 34> 학생과 교사 간 친밀도	66
<표 35> 교우 간 관계	66
<표 36>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비중(%)	66
<표 37> 학습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 비중(%)	67
<표 38> 문화·여가 객관적 지표 순위	67
<표 39> 문화·여가 전반적 만족도 비중(%)	67
<표 40> 대표적 지역문화의 존재 여부	68
<표 41> 지역문화에 대한 향유 여부	68
<표 42> 문화·여가 시설의 질적 변화여부	68
<표 43> 문화·여가활동의 기여여부	69
<표 44> 환경 객관적 지표 순위	69
<표 45> 충남의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중(%)	70
<표 46> 건강상 위협	70
<표 47> 공기	70
<표 48> 수질	71
<표 49> 청결	71
<표 50> 건강 및 보건 객관적 지표 순위	72
<표 51> 충남의 건강/보건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중(%)	72
<표 52>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비중(%)	72
<표 53>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비중(%)	73
<표 54> 공중보건에 대한 만족도 비중(%)	73
<표 55> 주민참여 객관적 지표 순위	73
<표 56> 충남의 도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중(%)	74
<표 57> 정책에 대한 인지	74
<표 58> 도정에 대한 영향력	74
<표 59> 정보의 공개	75
<표 60> 도정에 대한 신뢰	75
<표 61> 주거 및 교통 부문의 지표 조사표	79
<표 62> 주거 및 교통 지표의 자료출처	80
<표 63> 외국 주거 및 교통지표의 구성	82
<표 64> 통계개발원의 삶의 질 지수 중 주거 및 교통 지표	83
<표 65> 농림수산물식품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84

<표 66>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거 및 교통의 주관적 지표	86
<표 67> 주거 및 교통의 지표 후보군	90
<표 68> 주거 및 교통의 핵심지표	92
<표 69>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93
<표 70> 주거 및 교통에 대한 도민 만족도	94
<표 71> 주거 및 교통의 최종지표	95
<표 72>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낮은 만족도를 지닌 사람의 비율	103
<표 73> 일자리 영역 세부지표 구성의 해외 사례	110
<표 74> 일자리 영역 세부지표 구성의 국내 사례	111
<표 75> 일자리/소득/소비 영역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112
<표 76> 충남의 일자리/소득/소비에 대한 도민 만족도	114
<표 77> 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의 지표	115
<표 78> 지역별 인구규모 및 인구밀도	120
<표 79> 지역별 고령인구 규모도	121
<표 80> 사회활동 참여 현황	124
<표 81> 일본의 생활개혁지수 중 가족과 공동체 관련 지표(2004년)	127
<표 82> 연령/생애단계별 잠재적 시간이용 지표 및 웰빙과의 연관성	128
<표 83> 공동체 활력 영역의 지표들	129
<표 84> 가족 및 공동체 영역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137
<표 85> 가족 및 공동체 영역 도민 만족도	140
<표 86> 충남 행복지수 가족 및 공동체 영역 지표	141
<표 87> 지역별 공공도서관 현황	156
<표 88> OECD(2011)의 교육과 숙련 지표	159
<표 89> 한 준 외(2011)가 제시한 삶의 질 지수를 구성하는 교육 부문 지표	161
<표 90> 한 준 외(2011)가 제시한 삶의 질 측정에서 교육 부문의 세부지표	161
<표 91> 충남 행복지수 교육 영역별 객관적 지표 자가 점검표	162
<표 92> 교육 영역의 도민 만족도	165
<표 93> 교육 영역의 최종 지표	166
<표 94> 문화·여가 지표를 포함한 웰빙지표 사례	178
<표 95> 문화·여가 행복지표 영역	180
<표 96> 문화·여가 기존지표 분석결과	181
<표 97> 문화 및 여가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182
<표 98> 문화·여가 도민 만족도	184
<표 99> 문화 및 여가 영역의 최종 지표	185

<표 100> 충남 문화·여가 정책 방향 및 전략	187
<표 101> 환경지표의 세분류 현황	198
<표 102> 환경 영역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201
<표 103> 충남의 환경 영역 도민 만족도	203
<표 104> 충남의 환경영역 지표	204
<표 105> 건강/보건 영역 세부지표의 구성에 대한 해외 사례	215
<표 106> 건강/보건 영역 세부지표의 구성에 대한 국내 사례	216
<표 107> 건강/보건 영역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217
<표 108> 충남의 건강/보건 영역 도민 만족도	219
<표 109> 충남 행복지수 건강/보건 영역 최종 지표	220
<표 110> 주민참여영역에서의 선행연구 사례	231
<표 111> 주민참여 영역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232
<표 112> 주민참여 영역 도민 만족도	234
<표 113> 주민참여 영역 최종 지표	235
<표 114> 주관적 웰빙 측정 사례 비교	245
<표 115> 주관적 웰빙 측정 항목 구성	248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주요 내용	2
<그림 2> 행복지표 구성 영역	3
<그림 3> 연구의 추진체계	4
<그림 4> 캐나다의 웰빙 만다라(Mandala of Wellbeing)	24
<그림 5> OECD How's Life의 개념적 프레임	32
<그림 6> 사회적 환경속의 지역사회	48
<그림 7>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	48
<그림 8> 행복 측정을 위한 측정틀(framework)	56
<그림 9> 주거 및 교통지표 선정절차	81
<그림 10> 주거 및 교통 지표의 우선순위(설문결과)	93
<그림 11> 템포 30-존 시행으로 인한 도로공간의 변화	98
<그림 12> 시애틀의 지역사회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99
<그림 13> 범죄유발공간(offensable space)	100
<그림 14>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의 구성요소	105
<그림 15> 충남의 고용률(%)	106
<그림 16> 충남의 실업률(%)	106
<그림 17>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	107
<그림 18> 3년차 1인 연간 급여액	107
<그림 19> 삶의 질 관련 도민만족도(2010)	108
<그림 20> 충남의 일자리/소득/소비 영역 객관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113
<그림 21> 가구주와 따로 사는 부모의 주거방식	122
<그림 22> 사회활동 참여 현황	125
<그림 23> 가족과 공동체	132
<그림 24> 가족 및 공동체 부문 지표 우선순위 결과	138
<그림 25> 인구 비중 대비 유치원 학생 비중	152
<그림 26> 인구 비중 대비 유치원 교사 비중	152
<그림 27>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153
<그림 28>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154
<그림 29> 고등학교 교원 1인당1인당 학생 수	154
<그림 30> ‘사는 것이 어떠세요?’ 연구의 행복과 진보의 측정 틀	158
<그림 31> 삶의 질 영역 간의 영향 관계	160

<그림 32> 교육 영역의 객관적 행복 지표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	163
<그림 33> 우리나라 문화·여가 생활의 현실	170
<그림 34> 문화·여가와 행복과의 관계설정	171
<그림 35> Average hours actually worked Hours per year per person in employment, 2006	172
<그림 36> 문화·여가 측정의 기본개념	173
<그림 37> 문화·여가 객관적 지표 순위	182
<그림 38> 물환경정보 시스템	192
<그림 39> 환경통계 연감2	193
<그림 40> 물환경정보 시스템	194
<그림 41> 충남의 환경 영역 객관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202
<그림 42> 건강/보건관련 분석틀	207
<그림 43>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건의 구성요소	208
<그림 44> 기대수명(년)	209
<그림 45> 흡연률(%)	210
<그림 46> 요양기관수(개소)	210
<그림 47> 중증 암환자 수(천명)	211
<그림 48> 삶의 질 관련 도민만족도(2010)	211
<그림 49> 보건기관 서비스 만족도(%)	212
<그림 50>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212
<그림 51> 개인적 차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213
<그림 52> 사회적 차원의 건강/보건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214
<그림 53> 충남의 건강/보건 영역 객관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218
<그림 54> 충남의 주민참여 영역 객관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233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에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행복의 조작적 정의나 행복지수의 측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인생을 보다 잘 즐기기 위한 고민으로써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행복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에 관한 연구의 활발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는 서양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행복 지표를 대부분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충청도민의 정서가 반영된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서은국 외, 2010). 따라서, 충남의 여건과 실정이 고려된 충청도민에게 적용가능한 행복지수의 개발과 이를 통한 충청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충청도민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복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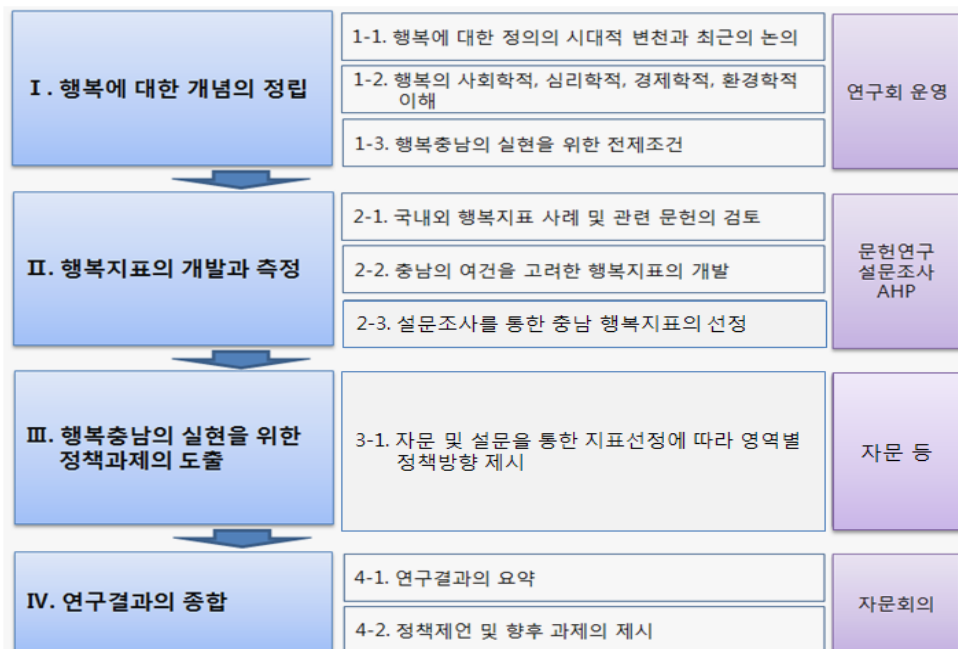
적 정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도구를 본 연구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특히, 충남도민의 행복지수 측정과 더불어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해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영역의 선정에 있어 충남 혹은 도내 시군 단위에서의 실현가능한 정책대상 영역을 포함해야 하며 정책수혜대상인 도민의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이러한 영역의 선정과 해당 영역별 변수들의 선택 및 정책방향의 설정으로 요약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1)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행복에 대한 개념의 정립, 행복지표의 개발과 측정, 그리고 행복충남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로 구성된다. 먼저, 행복의 개념정립을 위해 행복에 대한 정의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사회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환경학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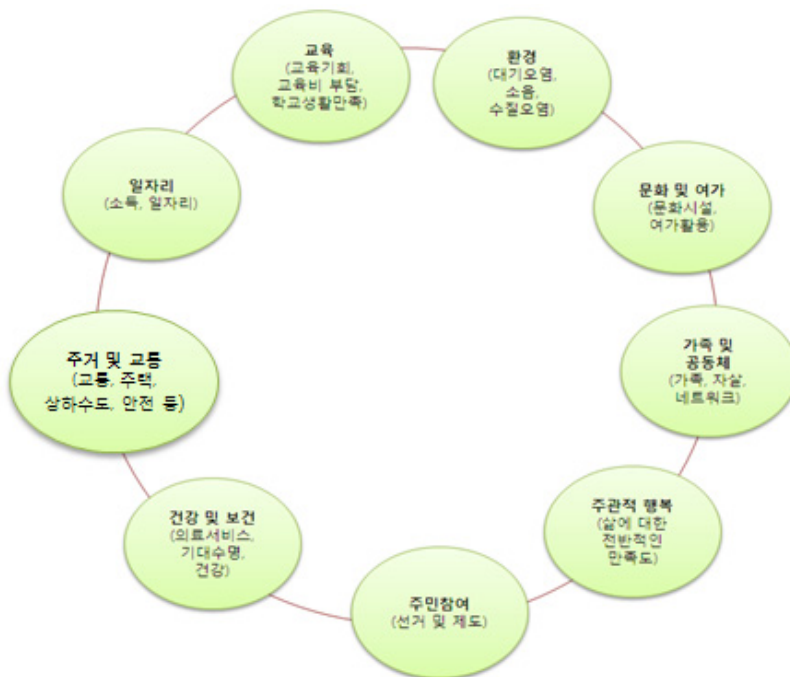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주요 내용



충남 행복지표의 개발과 측정을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충남의 여건을 고려한다. 행복지표의 개발은 보편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영역과 변수들을 포함하고 더불어 충남의 특성을 반영하는 영역과 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개발된 지표의 신뢰성과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인다.

본 연구는 충남 행복지표의 측정을 통해 도민의 전반적인 행복 혹은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남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영역별 지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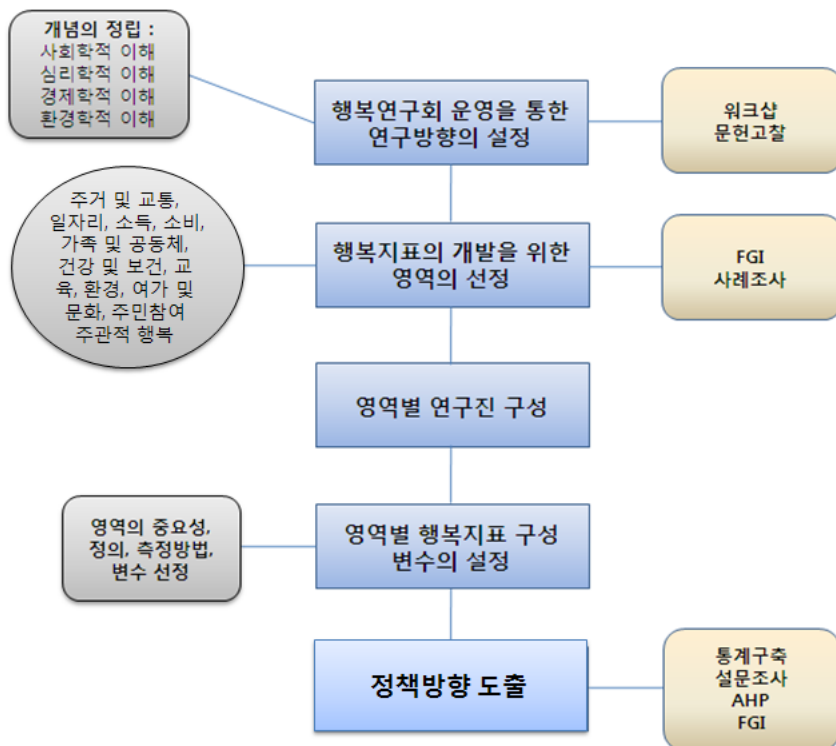
〈그림 2〉 행복지표 구성 영역



2) 연구의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은 연구방향과 체계의 설정을 위해 행복을 사회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환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정리하는 연구회를 운영하며,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영역을 구분하여 영역별 연구진을 구성한 후에 해당 영역의 행복지표 변수를 선정한다. 영역별로 전문가 세미나 혹은 FGI 등을 통해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3〉 연구의 추진체계



제2장 행복에 대한 이해와 영역설정

1. 행복의 개념

표준국어사전에서는 행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복된 좋은 운수”이다. 둘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이다. 행복(happiness)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상태를 특정 짓는 안녕(安寧)의 상태”이다. 영어에서 행복을 의미하는 “happy”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인 “happ”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행운”이라고 한다. 학자들은 행복의 정의에 대하여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Veenhoven(1991)의 정의가 현재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주관적 안녕을 크게 전반적 개념과 세부적 개념 이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전반적인 개념에는 생활만족, 욕구충족, 그리고 기쁨수준을 포함시켰고, 세부적 개념에는 직무만족, 자긍심, 그리고 통제신념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정동섭, 2002; 김승권 외, 2008 재인용).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국내총생산(GDP)을 ‘발전’ 또는 ‘진보’를 측정하는 척도로 간주했다. 국내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 가치를 가리킨다. 이는 국내의 기업과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집계한 것이다. 최근까지 국내총생산은 ‘경제수준’ 또는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주장은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얻어 새로운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행복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척도는 국내총생산이다. 세계은행에서는 매년 국내총생산을 발표한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의 측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범죄가 늘어나고 감옥에 죄수가 많이 수감될수록 정부지출이 늘어나 국내총생산 역시 늘어난다. 그러나 범죄가 늘어나고 죄수가 많아질수록 행복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회사에 과로로 질병에 걸린 직원들의 병원 진료비가 비쌀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총생산도 늘어난다.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면 가정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행복은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국내총생산은 경제지표로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윤태, 2010).

행복을 측정하는 경제학적 접근법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가장 유명한 주장으로 ‘이스털린 역설’ Easterlin Paradox ‘이 있다. 1974년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국내총생산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행복감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Easterlin, 1974). 이 주장은 당시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서양 사회의 실질임금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상승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73~2004년 동안 실질임금은 2배로 증가했으나, 행복감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마치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듯하다(김윤태, 2010; 이회길, 2012).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가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의 도입이다. ‘삶의 질’ 개념은 자연히 ‘좋은 삶(good life)’ 혹은 ‘좋은 사회(good society)’에 대한 다양한 이론의 발전을 가져왔다. 삶의 질에 대한 조작화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대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스칸디나비아의 접근법은 자원 및 객관적 생활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미국의 접근법은 조건과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웰빙을 강조한다. 객관적 사회지표는 개인의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이고, 주관적 사회지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만족도에 대한 측정값이다. 기존의 ‘삶의 질’ 접근법에서는 암묵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그 조건에 주목하여, 전체 사회차원의 중요하게 고려치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삶의 질’ 접근은 기존의 GDP로 대표되는 경제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형평, 공평, 자유, 사회적 유대와 같은 전체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회길, 2012).

이렇게 행복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성공적인 삶’, ‘좋은 삶’으로 대체되고,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이라는 개념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능가하게 되었다. 행복을 포괄적 의미에서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과 객관적인 ‘성공적인 삶’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욕구충족의 논리를 벗어나면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려는 궁여지책인데, 두 가지 발전 경향의 종착점을 비교해보면 하나의 일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양자는 모두 개인의 삶이라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면모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삶 또는 좋은 삶,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만족이 바로 그것이다(박성환, 2009).

1) 행복의 사회학적 이해

사회학에서 행복에 관해 주로 다루는 지표는 교육, 가족, 시민참여 등 주로 전통적으로 사회학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교육은 사회발전의 원동력 및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며 개인과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높은 교육성취는 좋은 직업과 고소득, 사회적 계층의 상승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성취는 직접적으로 직업과 소득으로 연결되며,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교육기회와 교육의 성과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은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인 생산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의 삶의 질 측정은 사회의 교육정도가 어떠한지,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한지, 교육성취 결과가 어떠한지 등을 통해서 측정가능하다.

가족은 개인들에게 있어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1차적인 집단으로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및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며(Trewin, 2001) 이웃공동체와 친구공동체는 사회적 연결(connection)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다.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지원과 돌봄 정도, 화목한 가족관계의 유지는 개인이나 사회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가족 이외에도 이웃이나 친구 등 공동체 소속감과 더불어 사회신뢰, 사회참여 등에 대한 부분으로 삶의 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웰빙의 측정(Trewin, 2001)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은 공동체의 연결망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난다.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사회, 즉 공정

한 분배, 질서와 정의가 구현되는 제도적 토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존재하는 사회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사회자본’¹⁾이라고 한다(Trewin, 2001).

따라서 가족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이를 위한 정부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삶의 질의 측정에 있어서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그리고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의 질과 그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로 측정 가능하다.

시민적 참여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이다.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필수적 참여기회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시민적 참여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만족감과 효능감을 통해서 주관적 만족이 높아진다.

문화와 여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소득이나 건강, 주거와 같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삶의 활력과 휴식, 재충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가의 개념은 산업화 이후 집을 떠나 휴식이 없는 노동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자유시간의 개념으로 발생하였다. 즉 여가는 필수적이거나 의무적인 활동이 아닌 그 외의 자유시간 활동과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다(Trewin, 2001). 문화와 여가생활은 직업적인 문화활동이 아닌 경우 개인에게는 비경제적 활동이지만,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며, 여가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시켜줌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개인들이 충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간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화생활 또는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안전 영역은 사회가 범죄와 재해, 기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를 측정하고자

1) 사회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서는 여러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호주통계청에서는 사회자본을 ‘개인들의 행동의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의 웰빙에 향상을 가져오는 상호작용들을 촉진시키는 공유된 사회적 가치와 신념들 및 태도들의 위계적 구성체’로 지칭한다(Trewin, 2001).

하는 영역이다. 범죄나 전쟁, 재해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불안감은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안전한 사회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는 사회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여부는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사회의 안전하거나 또는 위험한 정도,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환경 등을 통해서 측정 가능하다.

2) 행복의 심리학적 이해

정신건강(mental health)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남용 등 다양한 정신장애(mental illness)를 경험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며, 반면 정신장애로 이환(罹患)되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 정신건강에 대한 전통적 견해이다.

이와 달리, 한국 심리학회의 정신건강지수 개발 위원회에서 개발한 ‘정신건강지수’는 정신건강에 대한 한층 새로운 견해를 담고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새로운 견해는 정신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상태 그 자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신개념을 설파한 Keyes(2002, 2005b)는 진정으로 건강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정신적 웰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정신적 웰빙을 경험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과 즐거움 등의 긍정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며, 불안, 분노 등의 부정 정서를 보다 적게 느끼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정신적 웰빙은 상기의 정서적 웰빙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기능에 대한 주관적 평가까지 포괄한다. 개인의 기능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심리적 웰빙, 그리고 사회의 기능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사회적 웰빙이라 칭하기도 한다.

‘심리적 웰빙’을 구가하는 사람은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내면적인 기준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을 하며, 친밀감을 느끼면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늘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 인생의 지침이 되는 목표나 신념,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사회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고, 긍정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으며,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사람이 바로 ‘사회적 웰빙’을 경험하는 사람이다(임영진 외, 2010).

주관적 삶의 질 또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연구의 선발주자에 해당하는 Diener 등(1999)은 주관적 삶의 질이 크게 두 영역의 세 가지 상호 독립된 차원들로 구성되고 제안하였다. 하나는 정서적인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인지적인 영역이다.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감정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상호 독립적인 두 차원 즉, 즐거운 감정(pleasant affect)과 불쾌한 감정(unpleasant affect)으로 구분된다. 즉, 즐거운 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많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작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 한편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주관적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로서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내려는 노력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되는데 상호간에 상당히 상이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소위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접근(bottom-up approach)이라 하여, 삶을 구성하는 하위 개별 영역들에 대해 만족하게 될 때, 삶 전반에 대한 만족 및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한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인간의 욕구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면 주관적 안녕이 높아지리라는 가정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응답자가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 및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또 다른 접근은 소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접근(top-down approach)이라 하여, 개인의 성격적인 특질에 따라 동일한 조건일지라도 만족도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외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 성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컵에 물이 반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이나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낙관적으로 느끼는 성격과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관적으로 느끼는 그 성격이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 조건보다는 자기존중감, 외향성, 낙관적 성격, 자기통제감과 같은 성격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을 결정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Diener & Emmons 1984; Diener et al. 1999; 김명소·한영석, 2006 재인용).

이처럼 행복의 심리학적 측면은 주로 주관적 만족과 관련된다. 주관적 만족은 다른 영역들(사회학, 경제학, 환경학 등)에서 살펴본 객관적 지표들과 달리 각 개인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나타내며 평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얼마나 경험하는가를 의미한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지표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객관적 지표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적 측면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이외에도 주관적 측면에서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아울러 각 영역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주관적 측면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서은국, 2012).

3) 행복의 경제학적 이해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라 행복에 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결정요소로 사람들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긍정적 의미에서건 부정적 의미에서건 돈, 소득, 부 같은 경제적 요소들일 것이다. 그런데 현대 경제학자들은 부가 증대해도 일정 수준이 되면 부와 행복간의 상관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소득증대와 경제변영이 진행되었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최항섭, 2009).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복경제학(Happiness economics)’이란 생소한 학문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 경제학자로는 ‘행복의 경제학’을 쓴 마크 아니엘스키(Mark Anielski), ‘행복의 역설’을 쓴 그레그 이스터부룩(Gregg Easterbrook) 등을 들 수 있다. 행복경제학은 돈 또는 경제라는 객관적인 조건과 각 개인의 심리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또 사회적인 제도와는 어떻게 접맥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조승헌은 행복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선진국 학문’이라고 설명한다. 물질적으로는 궁핍한 후진 사회에선 돈은 곧 행복으로 연결되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돈이 행복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해진다는 것이다.

경제적 조건에서는 경제적 활동 및 자원에 대한 통제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력은 노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원 획득의 기초일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연결망 및 정체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Trewin, 2001). 일자리가 없는 개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의 여부와 아울러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수준을 결정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Trewin, 2001). 소득과 부와 같은 경제적 자원이 없으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들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개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빈곤계층의 증가와 소득불평등은 복지의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경제적 조건 중에서 소득 및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주거는 단순히 추위나 더위를 막아주는 안전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공동체 소속, 투자의 수단 등으로도 기능하고 있다(Trewin, 2001). 주택의 소유는 거주공간의 확보 뿐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서 재산의 가치를 가지며,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주거공간에 대한 비용(월세, 전세금 이자 등)이 수반되므로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주택의 소유 여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주택의 질이나 주거환경, 주택가격 등은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영역에서 삶의 질 측정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교통시설 기반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통해서 측정 가능하다.

4) 행복의 환경학적 이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흔히 제시되는 행복의 조건들로는 연령이나 성별 같은 선천적 요인을 비롯하여 소득, 지위, 직업, 교육, 건강, 이념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과 더불어 행복의 요인으로서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아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과 교류 그리고 연대에 관련된 것이다. 행복에 관한 장기 통계연구에 의하면 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교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obinson and Martin, 2008). 행복에 대한 집단 실험조사에서도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 등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행복의 요건들 가운데 가위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호가드, 2006). 행복한 사람의 이웃에만 살아도 행복지수가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정치참여에 있어서 사람들은 보다 친밀한 형식인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호가드, 2006:32).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관계맺기가 행복의 핵심요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때 그런 일이 실제로 발현하는 삶의 현장, 곧 공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공간, 즉 환경은 시간과 더불어 모든 경험의 전제조건이자 배경무대이기 때문이다(전상인, 2009).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는 사회지표나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지 않았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그 중요도가 높아져 환경 지표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들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환경오염으로 인해 기후변화나 생태계의 변화 등이 발생하고, 자연자원의 고갈 등이 문제시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의 정도와 자연자원의 보호, 생태계 유지 등이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환경은 환경 관련 질병발생 등으로 건강과도 관련되며,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 발생, 자연자원의 감소, 생태환경 유지 등과 관련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환경은 단순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적절한 기후와 쾌적함 뿐 아니라 자연자원의 생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영역에서의 삶의 질 측정은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지, 정부나 개인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2. 기존 측정사례 및 지표

1) 행복측정에 대한 접근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공유하면서도 이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각각 행복을 보는 시각과 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이 단순히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고유의 독특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기분이 좋은 감정인 쾌락, 고통, 불안이 없는 상태인 불쾌감의 부재, 만족스러운 삶이라 느끼는 만족감에 기인한다고 한다.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시작된 것에 비해 값진 삶(virtuous life)와 좋은 삶(good life), 행복한 삶(happy life)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간다. 역사적으로 행복에 대한 초기 접근은 철학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경험적 행복에 접근하고 있다. 경험적 접근은 크게 생물학적 접근, 사회적 접근, 긍정심리학적 접근으로 구분될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철학적 접근은 행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기원전 350년경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야말로 인생에서 그 자체로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이 부나 명예, 건강 혹은 친구를 추구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지만 행복은 그 자체로서 추구하는 것이며 이때 행복은 “이성과 일치하는 정신의 가치 있는 활동” 즉, 가치의 실천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행복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 혹은 객관적 상태가 아닌 가치로운 주체적 행동이다. 행복에 대해 사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성이 본질을 다하고 있는 상태로 보았으며 칸트는 자아의 결정에 의해 자기존재의 충족성과 조화를 의미하는 인격의 통일성이 성취된 상태로 정리하고 있다.

생물학적 접근은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호르몬이나 약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경계의 물질이 정신적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약물을 통해 정신적 즐거움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 등이 있다.

Heylighen(1992)에 의하면 행복은 한 개인이 생물학적으로 적절하고 환경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능력, 즉, 인식적으로 통제가능하다는 것으로 물질적 능력(material competence), 인지적 능력(cognitive competence), 주체적 능력(subjective competence)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감량화 할 수 있다.

Veenhoven(1995)은 행복지수의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 행복은 단순히 주관적인 시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복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으로 부(wealth), 지식접근성(access to knowledge), 개인의 자유(personal freedom), 평등(equality), 건강(health), 심리학적 성격(psychological character), 사회적 위치(social position), 일상사건(life event) 등을 들고 있다.

긍정심리학은 다양한 학문을 모두 아우르는 학문으로 행복에 있어 성격, 기질 등과 같은 내적 요인만을 강조한 접근과 소득, 물질 등과 같은 외적 요인만을 강조한 접근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 둘 모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행복이 다루어지고 있다. Martin Seligman(2003)과 같은 긍정심리학자는 행복이 긍정적 감정과 긍정적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긍정적 감정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정이 포함되며, 긍정적 행위에는 신체적 즐거움, 고차원적 즐거움, 만족감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보이지만 외부적 자극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 ‘행복’의 개념에 대한 조작화 노력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²⁾. 그 하나는 자원 및 객관적 생활조건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른 접근법은 조건과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서 개인의 주관적 웰빙을 강조한다(Noll, 2004). 객관적 사회지표는 개인의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이고, 주관적 사회지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의 측정값이다.

객관적 지표의 옹호자들은 사회지표는 사회정책을 안내해야 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사회문제의 실태와 그 문제해결 노력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보는 객관적 사실이어야 하고 이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주관적 지표는 정책과정에 왜곡을 가져오고 과학적 관리를 방해하는 비합리성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Veenhoven, 2002).

2) 통계개발원,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 2006, pp 14-18 재구성

객관적 지표는 실제 조건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었지만 복지 또는 행복의 고려사항으로 적합한 차원들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합의를 명료하게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충남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주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경우 삶의 질과 행복은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기 자신이 평가의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한다. 가장 중요한 주관적 웰빙의 지표는 만족감과 행복감의 측정이며 이러한 시각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관적 지표를 주장한다(Veenhoven, 2002). 첫째, 사회정책은 물질적 문제와 정신적 문제 모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관적 목표는 주관적 지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물질적 목표에서도 항상 객관적으로만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관적 지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측정의 포괄성 측면에서는 주관적 만족지표가 훨씬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넷째, 객관적 지표로 정책결정자는 대중의 선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마지막으로 대중의 결집과 욕구를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객관적 지표로 어렵다는 것이다.

주관적 지표의 경우 삶의 질과 행복은 개인들에게 인식되어야 하며 이는 각 개인들에 의해 가장 잘 평가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에 있어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 등 논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대한 논쟁에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객관적인 조건과 시민들의 주관적 평가의 시각을 함께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시 객관적 지표와 사회조사를 통해 확보한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구분한 연구(임희섭, 1996)들이 있다. 객관적 차원은 사회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관적 차원은 개인의 삶에 대한 내면적인 기준(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차원은 생활수준, 평균수명, 직업기회, 범죄율, 교육기회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으로 삶의 질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의 관계가 항상 일정한 관계를 지니지 않고 가변성을 갖는 것은 내면적인 기대수준과 외재적인 준거로 설명한다. 즉, 객관적 조건의 향상이 기대수준을 높여서 두 관계가 가변성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준거집단과의 비교에 의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동시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인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경제적 성취 및 사회발전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질 측정에 대해서 세 가지 접근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Stiglitz et al., 2009). 첫 번째 접근은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심리학 연구에 기반을 가진 주관적 웰빙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행복’ 하거나 ‘만족’ 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목적이라고 가정한다. 개인의 판단에 근거하는 것은 개인들의 선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모을 수 있으며,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삶의 질 측정에서의 능력(capabilities) 개념에 근거한다. 이 접근법은 인간의 삶을 다양한 ‘행위와 존재(doing and being)’, 즉 기능의 결합 및 이러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기능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이나 행동으로 건강, 지식, 직업과 같은 개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가진다. 이 접근방식은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몇 개의 단계를 요구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이용가능성, 사람들의 가치, 정치적 목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능력, 즉 지표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평가는 기능과 능력의 방향성을 웰빙의 수치로 변환시켜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려운 점은 사람들마다 기능과 능력에 대한 가치의 평가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기초로 작성된 연구로는 UNDP의 HDI가 있다. 세 번째 접근방식은 경제적 접근방식으로 경제복지와 분배의 측면에 근거한 개념이다. 이 접근의 기본개념은 삶의 질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와 관련되어, 삶의 질의 다양한 비화폐적 측면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호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비화폐적 차원에 대한 특정한 선호도와 함께 사람들의 현재의 상황과, 개인들의 선호도에 대한 정보 등이 요구된다. 이 접근방식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 간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호도만을 불균형하게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통계개발원, 2011).

〈표 1〉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최종목적	객관적 삶의 수준 향상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 제고
평가주체	전문가	일반국민
장점	정책활용 용이 시계열 비교 용이	국민의 다양한 견해 반영 국민의 실제 체감 측정
단점	심리적 측면 간과 측정의 신뢰성	열망(기대)의 수준에 영향

자료 : 이희길, 충남발전연구원 행복위크숍 발표자료 2012. 2. 25

2) 행복 및 유사 측정지표

(1) 행복 및 유사지표

① 행복지표

기존의 행복측정 관련 지표들은 UNDP 인간개발지수, 행복한 지구 지수(HPI, The Happy Planet Index), 행복공식(영국BBC 방송), 부탄 국민총행복지수(GNH), 행복도측정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행복을 측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관점, 객관적 관점, 혼합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관점을 중시하는 지표들은 행복공식, 행복도측정조사, 국민총행복지수 등이며 객관적 관점을 중시하는 지표는 객관적 UNDP 인간개발지수 등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행복한 지구 지수 등이다.

기존의 행복관련 지표는 상당수 국가별 수준이나 순위를 비교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며 특히 지역별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② 사회지표

1960년대 들어 개발되기 시작된 사회지표는 경제지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가치체계 및 개발개념의 변화에 따라 국가 혹은 지역수준에서의 사회복지나 삶의 질 같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지표는 사회적 영역의 현재 상태나 과거, 미래의 경향에 관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OECD에 따르면 사회지표는 국가적 평균치를 나타내어야 하며 분석적인 목적을 위해 세부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이상적으로 바람직한 것 사이의 균형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균형이란 규범적인 고려사항, 해명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프로그램 관찰과 평가 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지표에 포함되는 사항은 연구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보건, 질병, 자연환경, 소득, 문화예술, 참여, 공공질서 등에 관한 정보이다.

③ 삶의 질 지표

1991년-1992에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관 하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삶의 질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회의에서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였다. 삶의 질이란 ‘자신들의 문화 및 가치체계의 관점과 그들의 목표, 기대, 표준 및 관심의 관점에서 자신의 지위(위치)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 정도’를 말한다. 이는 삶의 질에 대한 광의적인 접근이며 개인의 육체적 건강, 정신상태, 독립정도, 사회적 관계, 신뢰 및 환경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삶의 질이 문화적, 사회적 및 환경적 부문에 내재되어 있는 주관적 평가를 뜻한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삶의 질 또는 생활의 질 지표(Quality of Life Indicators)는 경제, 사회, 환경지표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회개발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삶의 질 지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보건, 소득, 고용, 생산성, 교육, 교양, 자유, 개인주의 등 경제, 사회 및 환경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지표체계는 6개의 영역(물리적, 심리학적, 독립성, 사회적 관계, 환경, 정신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측면을 강조하는 삶의 주관적 지표체계라고 평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는 100개의 주관적 문항으로 구성되며 삶의 질 간편척도의 경우 26개의 주관적 문항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는 4개의 항목(신체적 건강, 심리적, 사회적 관계, 환경)과 24개의 하부척도로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④ 환경 질 지표

환경 질 지표(Quality of Environment Indicators)는 환경상태의 측정을 위한 일련의 지표라 할 수 있다. 환경 질 지표는 1970년대 초 도시환경문제의 악화에 따라 환경지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78년 OECD의 도시환경지표개발위원회의 개념규정에 의하면 사회지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환경지표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지표 개발의 주요대상은 공기 및 수질오염의 측정, 위험물질의 사용한도 측정, 폐기물처리, 토지이용과 토양보전, 자원고갈, 야생동물의 관리 등이다.

⑤ 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로 발달하여온 사회의 성장이나 발달을 측정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흔히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복지를 희생시키지 않고 현 세대의 복지를 만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된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기본전제는 현상에 대한 기술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지표체계를 논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 범위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며 환경, 자원, 생태,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제도, 정치,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를 보는데 있어 단순히 환경의 질 변화 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수용능력 변화에 대한 관찰을 보다 중시한다.

3) 행복 및 유사지수 적용사례

(1) 국가별 운영사례

①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PLI)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icators)는 일본 국민생활을 둘러싼 환경변화, 국민의 의식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에

서 1992년부터 제안하여 작성한 지표이다.

PLI는 개인 생활의 풍부함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기본분야에 더하여 개인의 여가와 자유시간 활용 측면을 파악하여 주거, 소비, 근로, 양육, 보건, 여가, 교육, 교제/관계의 8개 활동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영역에 대해서 안전, 공정, 자유, 쾌적 등 4개의 평가축을 설정해 각 활동영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영역별 중요도에 따라서 지표구성을 하였다.

〈표 2〉 일본 신국민생활지표 요약

활동영역	안전	공정	자유	쾌적
주거	위험주택비율 공해고충처리 건수 교통사고발생 건수 건물화재건수 등	주택취득 연수배율 토지자산 격차 등	세대용 임대주택 착공비율 유도거주수준이 상 주택비율 등	일조시간 5시간이상 주택비율 1인당 공원면적 자원재활용비율 등
소비 지출	1인당 가계소득 소비자물가지수 수입대비 저축 개인파산건수 등	생활보호 세대비율 물가 지역격차 소득격차 등	소매점수 백화점수 외식지출비용 등	택배취급개수 편의점 수 내구소비재 지출비율 등
근로	실질임금 실업률 전직률 등	장애인비율 기업간 임금비율 여성취업률 등	전직률 개업건수 유연시간적용 등	실노동시간수 통근시간 1시간 1인당 근무면적 등
양육	영아사망률 보육소정원 진학률 등	아동복지 시설수 모자상담원 비율 등	유치원재적률 유치원정원수 교육비 지출 등	청소년교육시설 수 학생1인당 교지면적 등
보건	평균여명 보건의료비 지출의 사수 등	장애인원호시 설 정원수 보호시설 정원수 차액배드수 등	유료노인홈정원 차액배드수 등	복지시설종사자 보호시설 이용상황 보호시설 배드수 등
여가	해외여행사고 피해자수 연속휴가실시 일 등		문화시설 수 음식점수 공원유원지수 등	이용원천수 스포츠행동자율 등
교육	대학입학자수 정시제고교수 등	육영회장학생 채용수 등	대학원진학률 유학자수 상급학교 진학률 등	도서관수 박물관수 학습연구시간 등
관계	이혼률 혼인률 자녀동일거주 등		교제비 지출 봉사활동시간 일일교류인구 등	교제시간 공민관수 지역정보화 등

자료 : 장영식 외,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2007

② 캐나다의 웰빙 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캐나다 웰빙 지수(이하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는 인간의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다차원적 척도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CIW는 ‘캐나다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진보의 의미’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범국가적 지표개발 프로젝트로서, 1999년부터 캐나다 지도자, 전문가, 대중 등 각계의 협력을 통해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CIW는 생활수준(Living Standards), 건강(Health), 공동체 활력(Community Vitality), 민주적 참여(Democratic Engagement), 여가와 문화(Leisure and Culture), 시간사용(Time Use), 교육(Education), 환경(Environment) 등 모두 여덟 개 하부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덟 개 영역 각각은 몇 개의 주제 아래 8-10개의 개념들로 분화되며, 각 개념들은 다시 수십 개의 변수들로 측정된다. CIW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캐나다인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단일한 지수와 각 하부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한 지수(Headline Indicators)를 구축하고자 한다.

CIW는 GDP, GNP와 같은 기존 지표들이 캐나다인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우선 캐나다 국민들의 웰빙을 측정하고자 한다. CIW는 캐나다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측정하고(measuring stick), 문제점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여(spotlight), 이를 예방하거나 실제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공공 정책수단(public policy tool)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CIW는 GDP와 같은 협의적 수준의 경제적 척도를 넘어서 다차원적인 새로운 지표의 구성을 통해 캐나다인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특정영역과 관련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책입안자, 정책결정자, 미디어, 지역사회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캐나다인의 웰빙에 대한 현재의 경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나 지표구성 연구들을 토대로 웰빙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표들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단, 객관적 지표가 주관적 지표보다 반드시 과학적이거나 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한다.

CIW는 생활수준, 건강인구, 공동체 활력, 민주적 참여, 여가와 문화, 시간사용, 교육, 환경

등 모두 여덟 개 하부영역들로 구성되며, 여덟 개 영역 각각은 몇 개의 주제 아래 8-10개의 개념들로 분화되며, 각 개념들은 여러 개의 변수들로 측정된다.

CIW는 소위 “웰빙의 만다라(Mandala of Wellbeing)” 라고 불리우는 영역별 구성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의 중심은 웰빙이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사회와 캐나다인들이 진보하고 있는 양상을 측정하려는 CIW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심원은 인간이 웰빙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들을 의미하며 중심의 1번째 동심원은 인간이 개인적 웰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으로 건강, 교육, 시간사용 등을 포함한다. 중심의 2번째 동심원은 지역공동체에서 전체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공 영역으로부터 산출될 수 있는 공적 자원(public resources)을 나타내며 생활수준, 공동체 활력, 여가 및 문화, 민주적 참여 등을 포함한다. 중심의 3번째 동심원은 웰빙을 위한 생태체계자원(ecosystem resources)을 나타내며, 다른 원들과 영역들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이다.

CIW는 생활수준, 건강인구, 공동체 활력, 민주적 참여, 여가와 문화, 시간사용, 교육, 환경 등 8개의 영역들은 다시 8-10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이것들은 다시 핵심지표와 2차 지표로 구성된다. 각 하위영역의 핵심지표들을 이용하여 8개의 영역별로 구성지표(composite index)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의 전반적 추세뿐만 아니라 영역별 웰빙의 현상도 동시에 파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캐나다의 웰빙 만다라(Mandala of Wellbeing)



〈표 3〉 캐나다 웰빙 지수의 영역 및 측정 내용

영역	측정내용
생활수준	소득과 부의 분배, 빈곤, 소득변화, 경제적 안정, 직업안정성
시간사용	시간 사용과 통제 정도, 시간활용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
건강	신체적 육체적 건강, 기대수명, 의료서비스의 접근가능성과 질 등의 환경
환경	자연환경의 보전,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교육	교육수준,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서의 능력, 발전가능성
공동체 활력	이웃과의 관계와 활동, 소속감, 자원봉사 조직
시민참여	정치와 공공영역에서 시민참여, 정부의 투명성/효율성, 공정성, 공정성 및 접근성,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 여부
문화와 여가	문화활동, 예술활동(행위, 시간, 영상 예술), 여가 활동

출처: Institute of Wellbeing, 2009,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The First Report of The Institute of wellbeing(www.ciw.ca)

③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국민총행복지수

부탄연구센터(The Center for Bhutan Studies)가 중심이 되어 조사하고 있는 국민총행복지수는 경제적인 고도성장이 아닌 전국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 부탄정부의 정책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행복지수라 할 수 있다.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은 문화적 전통과 환경 보호,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부탄의 국정 운영철학으로 1998년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Sigme Singye Wangchuck) 부탄 국왕이 도입하였다. 물질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탄국민들의 행복도를 측정하여, 각종 정부 정책이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GNH란, 부탄의 개발 철학이며,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관적이고, 일률의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NH는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으나 지표로서 수치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1999년에 부탄연구센터가 설립되어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GNH라고 하는 개념을, 부탄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축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촉진(the promotion of equitable and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 문화적 가치의 보전과 진흥(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values)
- 자연환경의 보전(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 바람직한 거버넌스체제의 확립(the establishment of good governance)

국민총행복지수는 부탄인의 총체적인 행복과 후생 수준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되는 9개의 규범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몇 가지 지표에 의하여 평가된다.

①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의 정도로서 구성원 전체의 총체적 행복이 부탄왕국이 추구하는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명상과 기도 등과 같은 종교적, 영적 활동 등이 반영된다. 이를 위해 각 학교마다 종교활동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리적 웰빙지표는 일반적 심리 지표(general psychological indicators), 정서적 균형 지표(emotional balance indicators), 정신적인 지표(spirituality indicators)로 구성되며 일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 질투, 좌절,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 관대함, 동정심, 평정심 등과 같은 긍정적 감정, 명상과 기도와 같은 영적 활동 등이 척도로 측정되어 조사 결과를 수량화한다.

② 시간의 활용(Time Use)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영역으로 노동 시간 이외의 시간이 행복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나타낸다. 시간의 스케줄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총근로시간지표, 수면시간지표로 구성된다. 수면과 자기계발, 공동체 활동, 교육과 학습, 종교와 사회 및 문화적인 활동, 운동과 여가활동, 그리고 여행 등에 활용한 시간뿐만 아니라 살림을 하고, 애들을 키우고,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가사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③ 공동체 활성화(Community Vitality)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 사이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족활력지표, 안전지표, 상호호혜지표, 신뢰지표, 사회후원지표, 사회화지표, 친족친밀도지표로 구성되며 가족, 안전, 상호의존, 신뢰, 사회적인 봉사, 공동체 참여도, 그리고 친척과의 친밀도 등을 측정한다.

④ 문화·전통(Culture)

문화적 전통의 유지는 부탄의 중요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전통과 문화의 다양성은 부탄인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창의력 배양에 크게 공헌한다. 이를 위하여 복장이나 건축물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 부탄의 문화와 전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적 전통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언사용지표, 기초인식지표, 가치전달지표, 장인기술지표, 전통스포츠지표, 지역사회축제지표로 구성하며 방언, 전통, 운동, 공동체 축제, 예술적 기능, 가치관의 전파, 기본적 통찰력 등을 측정한다.

⑤ 건강(Health)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타국과 비슷한 사례로 건강상태지표, 건강지식지표, 보건장벽지표로 구성되며 질병의 발생, 질병의 전파에 대한 지식, 건강증진 시설 등을 측정한다.

⑥ 교육(Education)

부탄을 이끌어 가는 힘은 교육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미래를 전망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교육달성도지표, 지역언어지표, 민속 및 역사적 문헌해독지표로 구성되고 자기학습 및 탐구를 조장할 수 있는 조직, 문맹률 등을 측정한다.

⑦ 환경(Ecology)

환경은 부탄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영역이며 관광객 수의 제한 및 기타 여러 정책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생태학적 다양성과 회복력을 측정하기 위한 생태환경악화지표, 생태환경지식지표, 조림지표로 구성된다.

⑧ 생활수준(Living Standard)

의식주 등의 기초생활수준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경제보다는 행복의 기반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의식주 등의 기초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소득지표, 주택지표, 신량안보지표, 곤궁지표로 구성된다.

⑨ 거버넌스(Governance)

정부의 부패를 막고 평등을 추구하는 정도를 다루고 있으며 행정의 질이나 효율성, 정직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성과지표, 제도에 대한 신뢰지표로 구성된다. 동지표는 단지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만 사용하지 않고 실제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으며, 부탄정부는 국민총행복지수의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표 4〉 GNH의 영역별 세부내용

영역	세부내용	주요지표
심리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과 주관적 웰빙을 의미	스트레스 지표, 영성지표, 감정균형지표
시간 활용	일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파악	총 근로시간 지표, 수면시간 지표
지역 사회 생명력	지역사회 및 개인 간의 상호관계 파악	가족활력지표, 안전지표, 상호호혜지표, 신뢰지표, 사회후원 지표, 사회화 지표, 친족 친밀도 지표
문화	문화 전통의 다양성과 특이성에 중점	방언사용 지표, 기초 인식 지표, 가치전달 지표, 장인 기술 지표, 전통스포츠 지표, 지역사회 축제 지표
보건	국민의 건강상태와 결정요인, 의료시스템	건강상태, 건강지식 지표, 보건장벽 지표
교육	교육성과 및 교육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웰빙 측면의 영향력과 효과 평가	교육달성도 지표, 지역 언어 지표, 민속 및 역사적 문헌 해독 지표
생태계	국내의 수요와 공급이 부탄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생태환경 악화지표, 생태환경 지식지표, 조림지표
생활 수준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제 상태 평가	소득지표, 주택지표, 식량 안보 지표, 곤궁 지표
좋은 거버넌스	정부의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평가	정부성과 지표, 제도에 대한 신뢰 지표

자료 : 통계청, 2009, 「OECD 세계포럼의 이해 - 제 2권 제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 pp. 50.

④ 홍콩의 삶의 질 지수(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홍콩의 삶의 질 지수는 홍콩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삶의 질 지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문화, 경제, 환경 영역의 21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지표들은 공식통계와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지수계산은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합한 값을 100으로 설정하여 연도별 변화율을 파악한다. 21개 지표 중 6개 지표(스트레스 지수, 삶의 만족도, 언론비판지수, 언론자유도 지수, 정부수행 지수, 현재 경제상황 지수)는 연구자들에 의해 측정되어 산출된 지표이다.

〈표 5〉 홍콩의 삶의 질 지수

영역	지표
사회문화	출산율, 기대수명, 건강에 대한 공공지출의 G에 비율, 신고가능한 전염병 신고율, 스트레스 지수,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지수, 언론자유도 지수, 언론비판 지수, 정부수행지수, 전체 범죄율
경제	주택구매비율, 전세지수, 실업률, 현재 경제상황지수, 실질임금지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 지역대학에서 프로그램의 연령별 참여 비율
환경	대기지수, 수질지수, 소음지수, 재활용률

(2) 국제기관 운영사례

①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HDI)는 170여개 UN회원국을 대상으로 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각각의 차원은 평균수명, 교육정도, 교육기회, 1인당 GDP 등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된다. 인간개발지수의 구성은 세 가지 차원의 산술평균으로 세 가지 지수를 더한 뒤, 3으로 나누어 산출된다³⁾.

인간개발지수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측정하고 있어,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비교가 용이하다. 그러나 지표수가 적고 단순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HDI는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평가하여 왔던 사회의 행복수준측정의 결함을 보완한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HDI는 한 국가의 행복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일인당 국민소득 보다 정교하게 산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HDI를 기준으로 구분한 상위, 중위, 하위 국가들 간에는 HDI 구성요소의 가중치가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이현재, 2006).

3) $HDI = 1/3(\text{life expectancy index}) + 1/3(\text{educational index}) + 1/3(\text{GDP index})$.

〈표 6〉 인간개발지수의 구성 지표

차원	지표	차원지수
A long and healthy life	Life expectancy at birth	평균수명 지수
Knowledge	Adult literacy rate Combined Gross enrolment ratio - 교육기회	교육지수 = $\frac{2}{3}(\text{Adult literacy index})$ + $\frac{1}{3}(\text{Combined Gross enrolment ratio})$
A decent standard of living	GDP per capita	GDP 지수

② OECD의 삶의 질 지수(How's Life Index)

OECD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사회발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물로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 등 각국의 웰빙 수준을 개념적 단계가 아닌 실제 비교 가능한 지표를 통해 항목별 및 전체 순위를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OECD의 How's Life에서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물질적 생활조건,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세 축으로 하는 틀을 따르고 있다. 물질적 생활조건 및 삶의 질은 현재의 웰빙과 관련된 반면 지속가능성은 미래의 웰빙과 관련된다. 웰빙측정과 관련 접근방법은 가계 및 개인에 중점, 웰빙결과에 집중, 웰빙의 분포에 관심, 웰빙의 객관적 및 주관적 측면 모두 고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질적 생활조건은 3개 영역인 소득과 부, 직업과 임금, 주거이며 삶의 질 8개 영역은 건강 상태, 일과 여가생활 균형, 교육과 기술, 거버넌스, 사회적 관계, 환경의 질, 신변안전, 주관적 웰빙 등이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적 변화와 국제 비교를 가능케 하는 자료와 지표를 제공한다.

〈그림 5〉 OECD How's Life의 개념적 프레임



〈표 7〉 OECD How's Life 영역 및 지표

영역	지표
물질적 생활수준	가계 순가처분소득, 가계 순금융자산, 고용률, 장기실업률, 1인당 연간임금, 1인당 방수, 주거시설
삶의 질	기대수명, 건강자가진단, 장기근무, 개인여가시간, 학업성취도, 취학아동주부 고용률, 학생 인지능력, 사회적관계 지원, 투표참여율, 정책결정 참여, 공기오염도, 살인율, 위험인지도, 삶의 만족도, 감정균형

③ Calvert-Henderson QoL Indicators

천연자원고갈과 이상기후현상, 그리고 불안정한 시장경제 상황은 전세계인들에게 ‘삶’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지표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Calvert-Henderson QoL Indicators이다.

Calvert-Henderson QoL Indicators는 미국의 자산관리회사인 Calvert와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Hazel Henderson이 각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12명의 학자들과 함께 ‘삶의 질’

을 측정하기 위해 6년 동안 개발한 새로운 지표이다.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미국인의 삶의 질과 미국의 지속가능성이 국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나, 지표 결과 해석에 있어 부분적으로 불특정 다수국의 사례를 들어 비교하기도 한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해서 설문조사나 FGI와 같은 주관적인 만족도, 행복감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다양한 통계량을 활용하고자 했다. 12개 영역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두 차례 이상의 정밀한 설문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언론, 정치적 캠페인, 토론결과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역, 국가, 국제 등 모든 수준의 통계를 사용하였다.

〈표 8〉 Calvert-Henderson QoL 영역 및 지표

영역	지표
교육 (Education)	정규교육이수자 수(1940-2008), 교육수준별 평균연봉(2006), 성인 문자해독률(2003), 문자해독율 수준에 따른 빈곤율(1992), 소득수준에 따른 중퇴율(1970-2007), 대학등록률(1970-2007), 22개국 중 학교 1학년 수학, 과학 학업성취도 비교(1965-2007), GDP대비 교육부문 지출 비중(1949-2007)
고용 (Employment)	노동인구(1948-2008), 실업률(1975-2008), 평균실업기간(1968-2008), 실업사유(1967-2008), 시간제노동자비율(2001), 비정규직노동자비율(2005), 2개 이상 직업보유자수(1999-2008)
에너지 (Energy)	에너지사용량과 대기중 이산화탄소농도(1960-2005), 에너지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1960-2005),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1980, 2006)
환경 (Environment)	천연자원사용량, 산업성장률, 상품 및 재화 생산량, 폐기물량
건강 (Health)	인종별 영아사망률(1983, 2005), 산모교육수준별 영아사망률(2005), 소득수준별 건강상태(1991, 2006),
인권 (Human Rights)	인종별 범죄자 사형선고율, 범죄선고 수, 대선투표자 수, 인종별 인구 수, 인종별 빈곤인 수,
소득 (Income)	가구소득 중위수(1947-2007), 소득계층별 가구소득 증가율(1979-2006), 성별에 따른 소득불평등(1973-2007),
사회경제 기반시설 (Infrastructure)	1인당 사회경제 기반시설 수(1950-1999)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	국제조약(1948-), 주요국제 군사충돌(1986-2002), 군비지출(1978-1997), PKO활동 수(2003), 국제테러발생현황(1977-2004), 국제테러로 인한 사망자수(1970-2000)

공공안전 (Public Safety)	미국인 주요사망 원인(2006),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1910-1998),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1980-2006), 기대여명(2006)
여가 (Re-Creation)	여가활동별 향유시간
주거 (Shelter)	주택보유자비율(1940-2008), 인구밀집도(1940-2005), 배관시설완비비율(1940-2005), 주택임대료부담(1978-2003), 인종별 주택보유현황(1980, 2000)

④ WHO 삶의 질 척도(WHOQOL-100)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 이라고 정의내리고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삶의 질 척도(WHOQOL;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라는 자기보고식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WHOQOL은 100개의 세부문항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원적인 측정도구이나 지나치게 문항이 상세하고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으로 인해 단축형인 WHOQOL-BREF도 개발되어 있다. WHOQOL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민의 전반적인 행복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라기 보다는 특정상황 또는 특정질환 이후의 삶의 질 변화수준을 평가하는 경우에 자주 활용된다. WHOQOL은 자기보고식의 도구이므로 객관적인 지표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삶의 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적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김용하 외; 2009).

〈표 9〉 WHO 삶의 질 척도(WHOQOL-100)

영역	지표
신체적 건강	삶과 건강의 질, 체력과 피로, 통증, 수면과 휴식
심리적 측면	외모에 대한 생각,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자존감,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 학습능력
자립성	이동성, 일상적 활동, 약물 및 의료기구 의존도, 노동능력
사회관계	대인관계, 사회적 지원, 성적활동
환경	새로운 기술과 정보습득의 기회, 여가참여기회, 물리적 환경, 공해/소음/교통/기후, 교통망
종교 및 개인적 신념	종교 및 개인적 신념

⑤ EIU의 삶의 질 지수(EIU's Quality of Life Index)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서베이 결과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표의 구성을 위하여 74개 국가의 삶의 만족도 서베이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 점수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9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들은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가능성이 높다. 이 지수는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차원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각 영역별로 한 개씩이어서 각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가 너무 단순화된 측면이 있다.

〈표 10〉 EIU 삶의 질 지수 구성

영역	지표
물질적 안녕	1인당 GDP
정치적 안정성	기대수명
가족생활	이혼율
공동체생활	교회참석이나 노동조합 조합회원의 비율
기온, 기후	따뜻하고 차가운 온도가 변화하는 범위
직업안정성	실업율
정치적 자유	정치와 시민자유 평균지수
성 평등성	남성과 여성의 평균임금 차이

4) 행복지수의 개별 연구

(1) 국내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중심의 정책에 주력하는 성장전략으로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에 따라 연구도 여전히 초기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을 넘어선 1990년 이후 외형적인 성장과 국민들이 실제로 인지하는 생활수준 간에 나타난 괴리현상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박대식, 2007). 우리

나라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조사하여 발표한 것은 1970년대 한국의 사회지표가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9년 최초의 128개 지표로 공표된 이후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지표는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현송(1997)은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사회지표들의 영역구분을 고려하여 소득, 보건, 교육, 노동, 문화/정보, 형평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6개 영역을 대표하는 통계지표들은 OECD 국가들의 통계자료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다양한 차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 안에서 지표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표구성이 제한적이며 전체적으로 사회참여나 환경과 관련된 영역은 제외되었다.

조명한 등(1998)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41개 국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후 이를 삶의 질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조사 영역은 주관적 안녕감, 세부영역(사회, 여가, 교육, 물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이상적인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 정서적 경험, 친숙도, 외향성 등이다.

추홍규 등(2005)은 개인별 행복지수 및 자가평가 건강수준과 이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며 개인의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명소 등(2006)은 Focus Group Interview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인식하는 행복요인을 도출한 후 행복지수 산출 공식을 개발하였다. 한국인의 행복요인은 경제력, 건강, 외모, 사회·정치·문화환경, 자녀의 바른 성장, 부모 및 친지와의 원만한 관계, 배우자와의 사랑,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수용감, 긍정적 인생관,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자립성, 종교, 사회봉사, 여가 등 16가지 요소들로 나타났다.

김경동 등(2006)은 세계 주요 도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도시경쟁력과 행복의 수준을 조사하여 이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현재 서울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행복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경제(직업선택 기회, 물가), 문화와 교육환경, 복지(복지제도, 복지시설, 양육시설, 소외계층 보호시설, 보건/복지환경), 생태환경(수돗물, 공기오염), 생활환경(교통, 공간확충, 편의시설), 사회안전(밤에 거리다니기, 교통사고/재해위험), 도시행정(정보접근성, 민원업무, 행정의 투명성), 공동체생활(이웃주민들과의 교류, 봉사활동) 등 8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성규 등(2006)은 자문회의와 사전조사 설문 등을 통해 8개의 행복영

역을 구성하였다. 행복지수 개발과정은 기존 문헌검토를 통해 지표의 공통부문을 추출하였고 구축된 지표를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설문문항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최종 8개 분야인 경제, 문화교육, 복지, 사회안전, 생태환경, 생활환경, 서울시정, 공동체의식 등에 37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장영식 등(2007)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들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삶의 질’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 GDP, 교육, 직업안정성, 환경, 가족생활, 안전, 디지털기회 등 8개 분야별로 8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김승권 등(2008)은 각 분야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표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개별 행복지표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현재의 가족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의 정도, 가족의 건강수준,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주관적인 건강수준 등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 그러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김용하 등(2009)은 OECD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를 사용하여 OECD국가들의 행복수준을 파악·비교하고 있다. NIW지표는 자료원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대별할 수 있으며 화폐지표와 비화폐 지표로 나눌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화폐지표의 경우 경제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으로 나누었으며 비화폐 지표는 사회적 요인(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과 환경, 주관적 행복으로 나누었다. 가능한 NIW에서 제시한 지표를 원용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상황에 대체(추가)지표를 사용하였다.

(2) 국외 연구

미국 미시간대 사회연구소가 1981년부터 발표해 오고 있는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는 각국 국민 1000-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인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 의해 기초자료가 확보된다. 개별 응답자가 느끼는 행복도와 생활만족도 점수의 평균으로 주관적 웰빙 순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행복지수’라 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진은 현장연구를

토대로 행복으로 가는 길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쉽게 행복을 느끼는 유전적 성향, 결혼, 친구사귀기, 욕심줄이기, 좋은 일 하기, 신념 갖기, 외모를 비교하지 않기, 돈을 더 많이 벌기, 우아하게 늙기, 천제가 아니라고 비판하지 않기 등이다.

Rothwell & Cohen은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80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상황을 선택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요소와 행복공식을 창안하였다.

$$\text{Happiness} = P + 5 * E + 3 * H$$

행복공식에서 P(Personal Characteristics)는 개인의 성격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도전능력, 긍정적 사고, 유연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체 행복의 20%정도를 차지한다. E(Existence Needs)는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뜻하는 것으로 건강, 재정, 안정 등을 의미한다. H(Higer Order Needs)는 삶과 개인의 관계에 깊게 관련된 고차원적인 행복요소로 자존심, 도전, 자아실현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 개의 구성요소로 개인의 전체 행복을 측정한다.

Hoon(2007)의 연구는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개인적 요인, 배경적이고 상황적인 요인, 인구학적인 요인, 제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경제적 요인 등 6개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특성이나 감정이 주관적 웰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배경적·상황적 요인은 개인의 배경이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는 직접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개인적 자유가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다는 것이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주관적 웰빙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주고 있다.

Helliwell(2006)의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8개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8개 요소는 건강과 교육, 소득과 실업, 종교, 사회자본, 신뢰, 민족, 이주자와 차별, 직업의 사회자본이다. 이 연구에서 소득은 행복에 매우 작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자본이 행복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의 만족도도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Shackman(2005) 등은 삶의 질 측정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최소한으로 포함되는 공통적인 영역은 경제, 건강, 교육, 환경의 질, 자유, 사회참여, 자아만족

등의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hoe(2007)에서는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러 문화나 국가에서 본질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다섯 가지 요인을 물질적 자원 또는 생활수준, 사회적 관계, 건강, 좋은 직업, 사회환경 등으로 보았다. Cooke(2005)의 공동체 웰빙지수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웰빙의 측정을 위해 교육, 노동시장 참여와 실업, 소득, 주거의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5) 행복 및 유사지표의 검토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 및 관련 연구를 통해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표산출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산출을 위해 사용된 개별지표들이 적절히 선택되었는지, 지표에 부여된 가중치는 적절한지 등의 문제이다.

국제기구와 외국의 행복지수들은 중점을 두는 영역에 따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활용한 지표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대표성 있는 지표를 활용하였는가에 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합리적 선정이 중요한 과정이다.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는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라 중요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행복지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과 평가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변화양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국내연구 검토

한국사회의 행복을 측정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개별 연구들로 일회성 연구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민 행복지수의 경우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범위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본 연구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표의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이현송(1997)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측정내용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연구의 대상이 다르기도 하지만 질문항목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2) 국제연구 검토

국제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 간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가 매우 단순화되어 있으며 통계자료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표의 구성에 있어 조사기관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측정기관이 각 기관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우리사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나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충남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부지표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가별 연구

국가별 연구는 행복지수 보다는 삶의 질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비교보다는 그 사회의 시계열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그 사회의 특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반영하는 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주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주관적 지표를 추가로 구성하고 있다. 영역의 구성에서 있어서도 나라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 사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부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OECD에서도 국가별 행복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지표는 아니지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수의 개발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은 참고된다.

(4) 개별연구

개별 연구들의 내용은 주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측정방식에 있어서도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되고 있으며 측정내용 또한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만족도, 자아성취감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전반적인 개인의 삶에 대한 항목으로 국가 또는 지역의 행복지수에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행복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될 수 있는가에는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11〉 선행연구의 영역구성과 내용

지표명	측정구분	지표구성		영역내용
		영역	지표	
UNDP의 인간개발 지수	객관적	3	4	평균수명/교육수준/생활수준
EIU의 삶의 질	객관적/ 주관적	9	9	물질적 안녕/건강/정치적 안정성/가족생활/공동체생활/기후/직업안정성/정치적 자유/성평등성
NEF의 행복한 지구 지수	객관적/ 주관적	3	3	평균수명/생태학적발자취/삶의 만족도
WHO	주관적	6	100	신체적 건강/심리적 측면/자립성/사회관계/환경/종교 및 신념
캐나다 웰빙	객관적/ 주관적	7	37	생활수준/시간사용/건강/생태계/교육/공동체/시민참여
부탄 GNH	객관적/ 주관적	9		심리적웰빙/시간활용/공동체활성화/문화전통/건강/교육/환경/생활수준/거버넌스
호주 웰빙	객관적/ 주관적	9		인구/가족과 공동체/건강/교육/직업/경제자원/주택/범죄/문화와 레저
행복공식	주관적	3	4	개인적 특성/생존욕구/고차원욕구
한국인의 삶의 질 (이현송)	객관적	6	30	소득/보건/교육/노동/문화정보/형평
행복지수 공식개발 (김명소 외)	주관적	16	97	경제력/사회정치문화환경/외모/건강/자녀성정/부모 및 친지관계/배우자의 사람과 신뢰/타인과의 관계/사회적 지위/자기수용/자기개발/자립성/여가/긍정적 인생관/사회봉사/종교
서울시민 행복지수	주관적	8	29	경제/문화교육/복지/사회안전/생태환경/생활환경/시민시정/공동체
신 국민 생활 지수 (일본)	객관적	8	204	주거/소비지출/근로/양육/보건의료/여가/교육/교제,관계
홍콩의 삶의 질	객관적/ 주관적	3	21	사회와 문화/경제/환경

지표 및 측정을 위한 노력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복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표들의 영역구분 방식은 대부분 기존 연구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행복과 삶의 질의 결정요소는 경제적 측면, 건강 측면, 사회관계 측면, 생활환경여건, 자아

성취와 만족감, 교육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측정지표의 구성에 있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사용에 신중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결과 측정지표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바, 연구 및 활용목적에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사용방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주관적 지표를 강조하고 있고 비교가능성과 정책활용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 두 측면 모두 중요하다. 객관적 지표의 경우 지표의 타당성과 주관적 만족도나 감정은 측정될 수 없기에 한계가 될 수 있지만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직업 등 일부 객관적 지표는 행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들로 간과할 수 없다.

〈표 12〉 한국의 사회지표 영역과 선행연구 영역의 비교

	UNDP HDI	EIU 삶의질 지수	NEF HPI	WHO QOL	캐나다 CIW	부탄 GNH	호주 웰빙 지수	한국인 삶의질 지수	서울 행복 지수	일본 PLI	홍콩 삶의질 지수	OECD 사회 지표
인구												
가구/ 가족		0					0					
소득/ 소비	0	0			0	0	0	0	0	0	0	0
노동		0					0	0		0		
교육	0				0	0	0	0	0	0		0
보건	0	0	0	0	0	0	0	0		0		0
주거/ 교통							0		0	0		0
정보/ 통신												
환경		0	0	0	0	0			0		0	0
복지									0			
문화/ 여가					0	0	0	0	0		0	0
안전							0		0			0
정부/ 참여		0		0	0	0			0	0		

자료 : 황명진 외, 행복지수의 개발

3. 행복측정을 위한 측정틀

1) 행복측정을 위한 측정틀의 개요

의미 있는 측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측정이 이루어질 개념적 영역을 서술하는 것이다. 행복을 측정하는 경우에 이는 실로 큰 과제이다. 여기서 행복의 사전적 정의에서 벗어나, 충남도민의 행복을 웰빙(wellbeing)과 유사한 의미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부탄의 GNH에서도 유사한데, 행복이란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건강하고 충족된 삶의 상태를 가르킨다. 즉,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족스런 삶의 상태를 말한다.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은 자연환경(빛, 열, 공기, 땅, 물, 금속, 동식물 등)과 인위적 환경(물질적 대상물들, 건물, 도로, 기계, 기구들, 기술 등), 사회구조(가족, 사회적 연결망, 결사체, 제도, 경제 등), 그리고 인간 의식(지식, 신념, 이해, 기능, 전통 등) 등으로 이루어진 역동적 문화의 구속을 받아가며 살아가야 한다. 행복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든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인생의 모든 측면들에서 건강하고 또한 충족된 삶의 상태로 서 간주될 수 있다. 행복의 측정은 따라서 삶 전체를 점검하는 과제와 함께 인간 삶의 질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닌 모든 사건들과 사회적 환경들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개인적 수준에서 여기에는 삶의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 및 정신적 측면들이 포함된다. 좀 더 광범위한 수준에서, 개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물질적 및 자연적 환경들은 상호의존하면서 행복 함수를 구성하는 부분적 변수들을 형성한다.

행복은 본 연구의 목적 및 방향성을 제공하는 기저 철학(underlining philosophy)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즉, 행복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good society)이고, 어떤 삶이 좋은 삶(good life)인가에 대한 고전적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용어로 활용되는 ‘복지’, ‘웰빙’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적인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를 다루는 ‘삶의 질’ 개념과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를 다루는 ‘사회의 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이에 대한 주

관적인 평가’로 정의되며,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은 “시민들이 그들의 삶의 질과 개인적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Walker & van der Maesen, 2004)된다.

‘사회의 질’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통합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의 삶의 상황(life situation)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행복의 구성요소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행복을 광의적으로 개념화하여 ‘행복’은 개인의 ‘삶의 질’과 함께 그 환경을 구성하는 ‘사회의 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충남도민의 행복 측정이란, 도민들의 인생이 여러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어떤 조건에 있고, 그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혹은 악화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민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 즉 생활 영역(life domains)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OECD는 관심영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OECD, 1976), 관심영역을 “인간 행복에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중요성을 갖는, 확인 가능하고 정의 가능한 관심들”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심영역의 설정은 행복의 측정에서 삶의 어떤 측면이 행복에 중요성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문제들이 가장 시급한 것들인지에 관해 가치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개인의 행복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느낌을 토대로 스스로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측정되거나, 그들의 행복 상태를 반영하는 몇몇 관찰 가능한 속성들의 상호비교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행복은 만족스러운 삶이 의미하는 바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적 행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이나 또는 인생의 여러 측면들에서, 즉 직업, 건강 등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기준 삼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 측정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일이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주관적 측정들을 다른 통계들과 연결시키고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추적한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삶의 조건들이 향상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망을 제공한다.

다른 접근방법은 과학적 전통에 보다 강하게 토대를 두고 있는데, 행복의 상태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속성들을 측정함으로써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민 건강의 여러

측면들은 특별한 종류의 건강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림으로써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행복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수를 파악함으로써, 부분적이긴 하지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주관적 측정치보다 객관적 측정치들에 더욱 큰 무게를 부여해왔다. 이러한 선택은 주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즉, 객관적 정보들이 행정서비스에 관여하고 있는 충남도의 정부기관들에 가장 큰 유용성을 지니고 있고, 또 보다 쉬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주관적 측정들도 객관적 통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보완적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이유로 해서 주관적 측정치들을 개별 관심영역 속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2) 상호작용 관점의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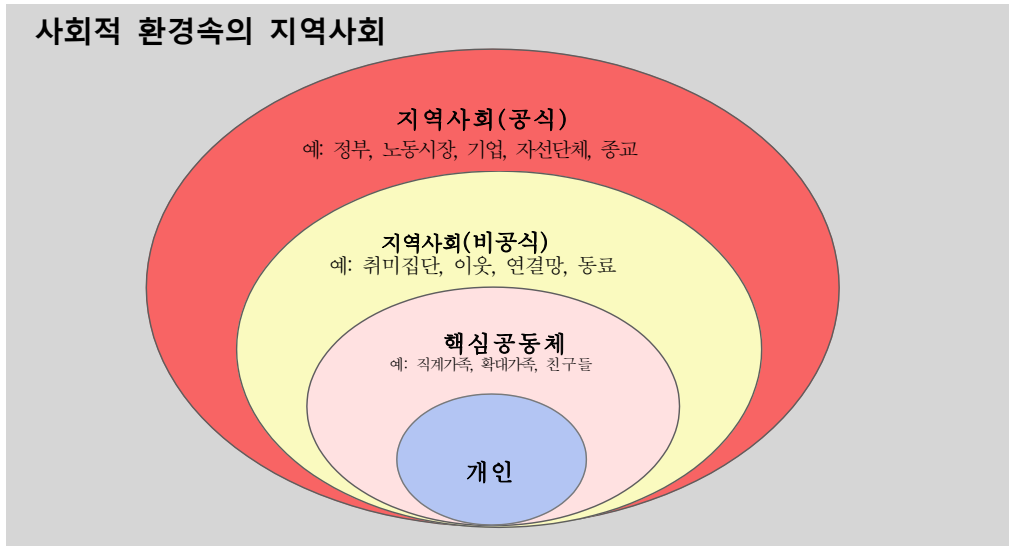
사람들은 가족과 그들을 주변 지역사회에 연결시키는 환경적 조건들의 망 속에 위치되어 있다. 행복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은 본질적으로 이들 연결망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단순히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행복 상태를 바꾸기를 원했을 때 특히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인적 또는 사회적 행복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들이다. 충남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또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또는 감소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범죄는 신뢰의 고갈을 가져오는 상호작용의 한 예이며, 따라서 사회자본을 감소시킨다. 반면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사람들 간에 우호감을 증진시키며, 사회통합을 가져온다.

상호작용, 또는 사회적 교환은, 사람들이 처음 호흡을 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아동들은 양육을 받고 사회적 가치들을 배우며, 아프거나 늙은 가족구성원은 보살핌을 받는다. 지방정부는 건강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 집단들은 여가와 소속감을 제공하고, 종교집단은 정신적 인도와 지원을 제공한다. 노동시장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계약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상호작용 모델은 전체 사회를 기술하고, 사회의 핵심에 있는 유기적 관계를 인지하며,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 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작용 모델은 행복의 측정에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충남도민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호주 통계청에서 제시한 상호작용 모델을 채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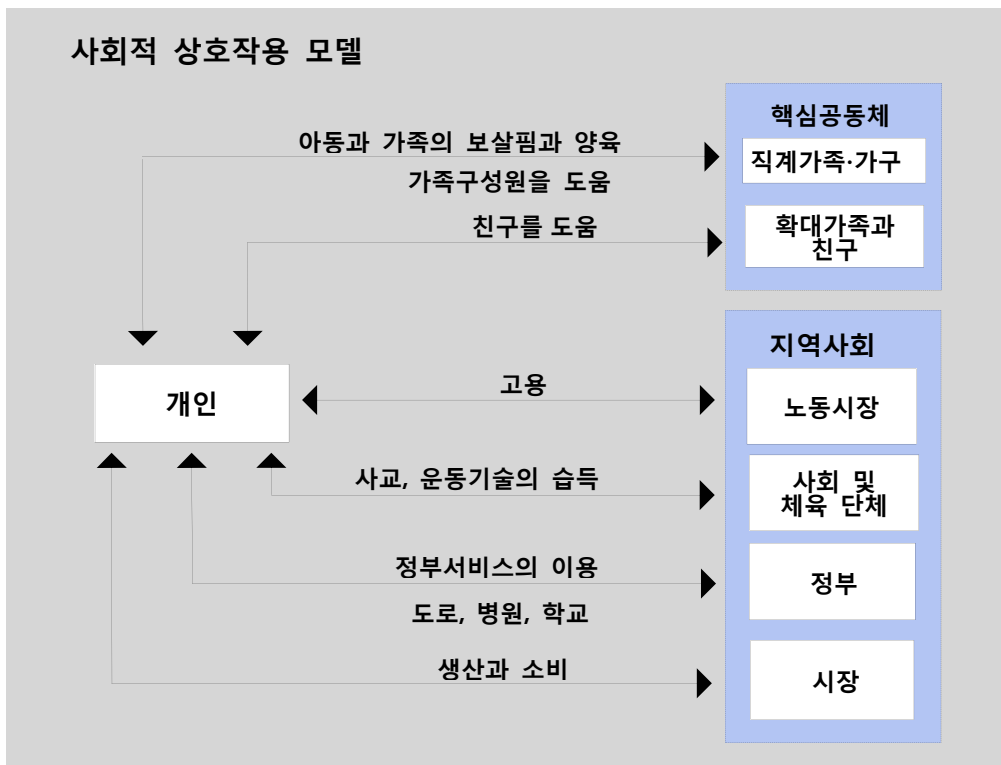
중요한 사실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또는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최선의 혜택을 끌어낼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된 환경적 조건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말려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머물러온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게 되고, 이것은 취업을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렵고 불리한 가족배경은 직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취득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구축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로 얽혀있는 이와 같은 요인들은 ‘사회적 역량’의 약화를 가져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상호작용 모델은 모든 관련 행위자들과 연결관계 및 상호의존적 관계를 포괄해서 다루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상호작용 모델은 개인을 상호작용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사회적 환경들을 규명함으로써 시작되고, 그리고 지역사회 맥락에서 이 환경들을 반영한다. 개인이 속한 핵심 공동체는(대개는 개인의 직계가족) 그 개인에 대해 원초적이며 가장 친숙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그 성격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받고, 동료애, 양육과 관심, 정신적 지지, 경제적 안정, 공유된 사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지도와 감독과 같은 중요 기능들을 수행한다는 사실에 의해 규정된다. 보다 큰 범위의 지역사회는 직접적으로 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로 이루어진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들이 맺고 있는 상호작용과 교환관계들을 포괄한다. 즉, 개인에 대해서 광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경계는 다른 사람들 또는 조직들이 그 개인과 더불어 또는 그 개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들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공식적 광역 지역의 핵심적 기능은 개인의 소비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일자리와 소득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공식 광역 지역의 핵심기능은 개인을 유사한 이해관계와 가치들을 소유한 타인들과 연결시키는 사회연결망과 의사소통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6〉 사회적 환경속의 지역사회



〈그림 7〉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



3) 관심영역의 설정

무엇이 자신들의 행복에 가장 크게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건강한 삶과 소득을 머리에 떠올린다.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다 보람 있는 직장과의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여가활동을 덧붙인다. 역사적으로, 관심영역 설정은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확인하는 직관적 접근방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970년대 전반에 OECD는 웰빙은 목표영역 또는 관심영역을 규정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는데, OECD 보고서는 목표영역 또는 관심영역을 ‘인간 웰빙에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중요성을 갖는 확인가능하고 정의 가능한 원망(願望)과 관심들’을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OECD는 ‘웰빙에 대해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중요성을... 토대로 하여’ 이들 영역들을 선별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체계의 구성이 이루어졌던 당시에 선택된 삶의 여러 측면들은 인간 생존의 여러 차원들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행복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관심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충남도민의 행복 측정 관점에서 관심영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 행복이나 웰빙, 혹은 삶의 질 측정을 시도한 다양한 국내외의 사례에 대한 논의로부터, 충남 행복측정에 필요한 측정틀(framework) 구축을 위한 관심영역 설정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대부분 GDP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경제지표만으로 그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관심 현상, 웰빙이나 행복을 측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경제적 발전을 시대의 과제로 상정하고 이를 통해 행복을 측정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이다. 즉, 경제 발전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다. 화폐로 전환가능한 측정만으로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화폐적인 영역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측정 관심의 변화는 ‘GDP를 넘어(beyond GDP)’ 혹은 ‘GDP와 이를 넘어서(GDP and beyond)’와 같은 슬로건으로 표현된다. 이는 기존의 국민 복지를 물질적 생활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과 함께 사회영역을 포괄하는 ‘삶의 질’ 영역을 포함한다. 여기서 ‘삶의 질’은 물질적 생활조건 즉, 소득소비, 노동, 주거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교육, 건강, 여가문화, 안전 및 주관적 웰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함께 이에 대한 도민의 인지 및 평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객관적 지표와 주관지표를 포함하고 또

한 기존의 경제지표와 함께 사회지표를 포함한다. 특히, 최근 행복측정에서 주목할만한 관심 영역으로 등장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도 포함한다. 이 영역은 다양한 관심영역에서 영역별 주관적 만족도와 같은 주관지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영역과 독립된(free) 독립영역으로 ‘주관적 웰빙’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둘째, 최근 행복 측정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사회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기존 ‘삶의 질’이 ‘삶의 질’과 관련된 현재 접근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삶의 질을 개인 특성과 생활환경 측면에서만 개념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Noll, 2004; Berger-Schmitt & Noll, 2000). 다시 말해 전체사회의 특성이나 질에 대한 차원, 즉 형평, 평등, 자유, 유대와 같은 개인들의 복지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1980년 후반기부터 1990년대에 걸쳐 유럽을 중심으로 명시적으로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 즉 전체 사회들 내에서 복지의 분배나 사회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서로 관련된 개념이다. 이들 개념들은 전체 사회의 통합(integration), 유대(solidarity) 및 안전성의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개인, 집단, 결사체, 제도 단위와 같은 사회의 단위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사회통합 개념이 사회자본이나 사회적 배제 개념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유럽에서 개발된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 개념은 이들 개념들을 포괄적이고 또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삶의 질’ 논의에 비해 ‘사회의 질’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 기반이 정교하다. 이 논의는 사회적 관계의 구성에서 출발한다. ‘사회의 질’은 “시민들이 그들의 웰빙과 개인적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공동체의 사회 및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시민들에 의해 경험되는 사회의 질은 네 가지 조건으로 구분된다. 사회의 질 개념에서 살기 좋은 사회는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고(보장성),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통합성), 다양한 제도나 관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고(포용성),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잘 발휘되는(역능성) 사회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Walker & van der Maesen,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 측정에서 이와 같은 사회의 질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관심영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사회의 질은 삶의 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시적 접근이고, 또한 삶의 질이 평균과 같은 대표값에 주목한다면, 사회의 질은 해당

속성의 사회 내에서 분포, 즉 분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OECD의 “How’s Life?”에서도 모든 관심영역에서 인구하위 집단 간 차이에 주목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스티글리츠위원회 보고서도 인구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의 질’ 관점에서 주목하는 관심영역은 보장성 차원에서 소득소비, 주거, 건강, 교육이고, 사회통합 차원에서는 신뢰, 통합적 가치, 사회적 연결망 등으로 이는 주로 공동체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과 관련해서는 노동, 공적 서비스, 사회적 연결망이 주요 관심사인데, 이는 노동과 공동체 영역에서 이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 역능성은 노동시장 참여, 교육, 제도에 대한 접근, 개인적 관계 등으로 노동과 공동체 영역과 주로 관련된다. ‘사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영역을 설정하기 보다는 기존 ‘삶의 질’ 영역에서 사회의 질을 고려한 지표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연하면, 이들 영역에서 지표를 선정할 때, 삶의 질과 함께 사회의 질도 동시에 고려한 지표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표 13〉 사회의 질에 관한 측정 관심

사회경제적 안전성(보장)	사회적 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원 • 주택/환경 • 건강 • 일자리 •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 통합적 규범과 가치 • 사회연결망 • 정체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 • 노동시장 • 공적 사적 서비스 • 사회연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토대 • 노동시장 • 제도에 대한 접근 • 개인적 관계

셋째, 기존의 행복 측정내용을 보면 그 영역이 일반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고 있

다는 점이다. 환경 영역은 삶의 질에서도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관심 영역을 넘어서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개념의 정의가 다음 세대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현 세대의 행복 측정보다는 다음 세대의 행복, 즉 행복의 세대 간 형평 문제를 다루는 차원이다. 광의적으로 보면 지속가능성 차원에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온당하지만, 이 개념을 본 연구에서 적용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 개념을 반영하지 위해서는 이에 대한 측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아직은 측정치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질 자원, 인적 자원, 사회자본, 환경자본에 대한 측정이 필요한데, 이는 아직 합의된 분석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현 세대 충남도민의 행복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향후 개선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충남도민들이 생활하는 자연환경, 즉 공기, 수질, 소음, 녹지 등과 같은 생활에서 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충남도민 행복측정을 위한 관심영역을 <표 14>와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삶의 질’은 객관적 생활조건(objective living condition)과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삶의 질’은 객관적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도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정의되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을 임의적으로 물질적인 생활조건과 사회적인 생활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질적 생활 조건을 주로 삶의 경제적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소득소비, 일자리로 대표되는 노동, 주거 및 교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생활조건은 건강, 교육, 문화여가, 안전 및 환경을 포함한다. 이러한 객관적 생활조건에 대한 충남도민의 주관적 평가는 객관적 생활 영역, 즉 관심영역별 만족도와 함께 주관적 웰빙을 별도 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어서, 사회의 질 차원은 삶의 안전성, 사회의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과 시민들의 역능성이라는 구체적인 가치를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경험적 지표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이를 통해 도민의 사회참여,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사회자본, 사회적 배재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영역을 넘어서, 하나의 차원으로 사회의 질을 각 관심영역별로 측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소득소비의 경우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과 저소득층의 비율을 측정하여 사회적 보장을 측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남도민의 행복 측정을 위한 관심영역은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포괄적으로

파악가능 하도록 9개 영역을 제시하고자 한다(<표 14> 참고).

〈표 14〉 차원별 관심영역 구성

영역	행복		
	삶의 질		사회의 질
	객관적 생활조건	주관적 인지·평가	
일자리 및 소득·소비	◎	○	◎
주거·교통	◎	○	△
가족 및 공동체	◎	○	○
건강	◎	○	○
교육	◎	○	◎
문화·여가	◎	○	○
환경	◎	○	△
주민참여	○	○	◎
주관적 웰빙		◎	△

◎ 관련성이 높음, ○ 관련성이 있음 △ 관련성이 적음

11개 영역별로 주요 측정 내용을 소개하면 <표 15>와 같다. 일자리 및 소득·소비는 가구가 필요로 하는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력(command over resources)과 분배를 측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경제자원은 소득과 같은 유량(flow)개념과 가구 자산과 같은 저장(stock) 개념을 포함한다. 나아가 사회의 질 차원에 경제자원의 분배를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즉 필요로 하는 경제자원이 부족한 가구가 적고, 더 많은 경제자원을 제공 받은 삶이 좋은 삶(good life)이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good society)인 것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일수록 바람직한 상태가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고용상태와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측정된다. 동시에 여기서는 일과 생활의 양립(work life balance)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가족생활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

주거환경은 가구원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는가를 주로 측정한다. 가구 구성에 맞게 적합한 주거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주거의 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주거의 질은 최저주거환경 기준(육실, 방수)을 만족시키고 또한 적절한 근린생활 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동과 관련된 교통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은 범죄와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한다.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고갈시키고 불안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등도 개인의 삶을 위협한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지 그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에 범죄와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파악해야 한다.

가족은 가족구조보다는 주로 가족의 본래적 기능, 즉 돌봄을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물론 결혼가족과 같은 가족구조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보다는 가족관계, 가족돌봄을 중심으로 서로 보살피고 지지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가족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측정의 중심이 된다.

주민참여는 공식 및 비공식을 모두 포함한다. 도민과 지방정부와의 관계와 이를 통한 신뢰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나야 하며, 적절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구성원들 간에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으로 간주된다. 건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랜 수명을 유지해야만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건강을 유지하지 할 수 있는 건강행동을 실천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질병에 걸릴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개인이 희망한 교육기회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공식 교육뿐 아니라 직업훈련까지를 포함한다. 교육기회 제공에 수반되는 교육비용은 감당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실행된 교육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성취를 충족시켜야 한다.

최근 여가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에 대비해 여가는 행복의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더 많은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을 통한 여가활동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가는 이를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사교를 통해 사회자본 축적의 기회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 관심사는 여가시간(자유시간)과 여가비용, 여가문화활동 향유 및 충족 여부이다.

환경은 주로 생활주변의 자연환경을 다룬다. 대기의 질, 수질, 토양오염, 소음 등이 주요 관심사이다.

끝으로, 주관적 웰빙은 그 자체로 중요한 영역이다.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주관적 웰빙이 높을수록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소득도 높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이 느끼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과거 일정 시점의 긍정 및 부정적 정서균형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심리적 번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주로 삶의 가치 및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조망을 제공한다. 주로 이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하여 측정하고 별도의 독립영역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는 독립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와 같은 평가항목을 주어 주관적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표 15〉 관심 영역별 측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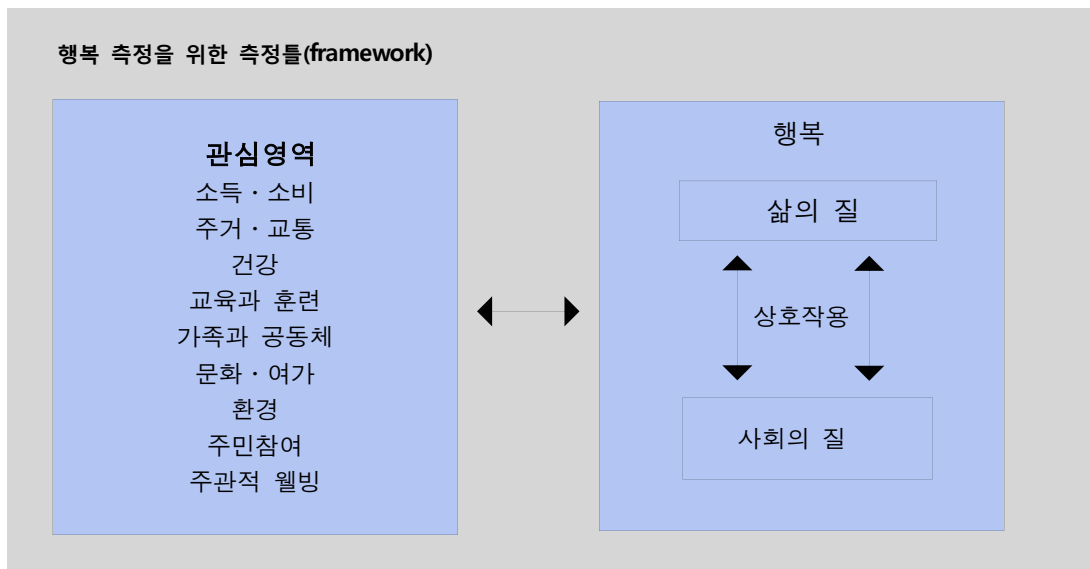
영역	측정 내용
일자리 및 소득·소비	고용상태,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측정 소득, 소비생활,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가구의 필요한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력(command over resources)과 분배를 측정
주거·교통	주택수급, 주거환경과 주거의 질, 교통의 질을 측정 범죄와 사고, 화재 및 안전의 수준을 파악
가족 및 공동체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기능·돌봄(아동 및 부모)을 측정하고, , 사회적 지지, 사회자본, 사회적 배제 등을 측정
건강	건강행태,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의 질을 파악
교육	교육기회의 충족도, 교육효과 및 성취를 측정
문화·여가	문화 및 여가자원(시간, 비용), 문화 및 체육 활동 충족도를 중심으로 측정
환경	환경의 질을 중심으로 측정
주민참여	공동체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도민의 사회참여와 신뢰 등을 측정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과 정서경험을 중심으로 측정

4) 행복측정을 위한 측정틀

충남도민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 과 ‘사회의 질’ 차원으로 구분 접근한다. 이런 접근법은 지속가능성을 고려치 않는다는 점에서 현 세대의 충남도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충남도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이고, 그 양상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한다.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로 설정하였다. 개인의 삶의 질이 높기 위해서는 사회의 질이 요구되고, 동시에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개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복을 보는 관점은 실제로 앞서 설명한 9개의 관심영역 설정을 통해 파악된다. 이들 각각의 영역에서 행복한 삶이 유지될 때,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이 유지되는 사회로 볼 수 있다.

〈그림 8〉 행복 측정을 위한 측정틀(framework)



제3장 충남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도민 의견조사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정책방향을 위한 설문조사를 충남 15개 시·군 주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2일 4일간 실시하였으며 각 부문별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역은 전체 가구 수에 비례 할당하여 지역별로 표본수를 정하였으며 총 2,010명에 이르는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915명(45.52%), 여성 1,091명(54.28%)으로 여성의 응답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41~50세 737명(36.67%), 31~40세 268명(33.58%)으로 대체적으로 30, 40대 응답자가 많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898명(44.68%),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 468명(23.2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혼인상태는 기혼 1,668명(82.99%), 미혼 246명(12.24%)으로 기혼자가 대다수였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표본수는 초등학교 639명(31.79%), 대학교 436명(2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유형은 아파트 1236명(61.49%), 단독주택 459명(22.84%) 등의 순으로 아파트 형태가 대다수였으며, 주거형태는 자가 1,422명(70.75%), 전세 346명(17.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표본수(명)	비율(%)
지역	천안시	354	17.61
	공주시	136	6.77
	보령시	112	5.57
	아산시	200	9.95
	서산시	139	6.92
	논산시	140	6.97
	계룡시	87	4.33
	당진시	141	7.01
	금산군	84	4.18
	부여군	113	5.62
	서천군	111	5.52
	청양군	84	4.18
	홍성군	113	5.62
	예산군	112	5.57
	태안군	84	4.18
성별	남성	915	45.52
	여성	1,091	54.28
연령	66세 이상	19	0.95
	51~65세	302	15.02
	41~50세	737	36.67
	31~40세	675	33.58
	30세 이하	268	13.33
	결측	9	0.45
학력	무학	6	0.30
	초등학교	35	1.74
	중학교	104	5.17
	고등학교	898	44.68
	대학교(4년제 미만)	402	20.00
	대학교(4년제 이상)	468	23.28
	대학원(석사과정)	70	3.48
	대학원(박사과정)	17	0.85
	결측	10	0.50
혼인상태	미혼	246	12.24
	기혼	1668	82.99
	사별	43	2.14
	이혼	44	2.19
	결측	9	0.45
학령기 자녀가 있는 표본수	미취학	240	11.94
	유치원	250	12.44

	초등학교	639	31.79
	중학교	383	19.05
	고등학교	366	18.21
	대학교	436	21.69
주거유형	단독주택	459	22.84
	아파트	1236	61.49
	다세대주택(연립주택/빌라)	230	11.44
	기타(오피스텔 등)	80	3.98
	결측	5	0.25
주거형태	자가	1422	70.75
	전세	346	17.21
	월세(보증금 있음)	186	9.25
	월세(보증금 없음)	39	1.94
	결측	17	0.85

2. 각 영역별 결과 분석

1) 주거 및 교통 부문

먼저 객관적 지표의 우선순위는 자가거주비율이 1순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택전세가격 지수로 범죄발생건수,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도, 통근 통학소요시간,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교통사고 발생건수, 상수도보급률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주거 및 교통 객관적 지표 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자가거주비율	1914	1
주택전세가격지수	1914	2
통근 통학소요시간	1914	5
교통사고 발생건수	1914	7
1인당 공원 및 녹지조성면적	1914	6
상수도보급률	1914	8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도	1914	4
범죄발생건수	1914	3

주택 혹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통이 4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 만족 32.36%, 매우 만족 12.08%, 다소 불만족 11.60%, 매우 불만족 2.14% 순위로 나타났다.

〈표 18〉 주택 혹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12.08
약간 만족	32.36
보통	41.82
다소 불만족	11.60
매우 불만족	2.14

교통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3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리한 편 29.78%, 불편한 편 23.04%, 매우 편리 5.96%, 매우 불편 4.70%으로 나타났다.

〈표 19〉 교통시설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편리	5.96
편리한 편	29.78
보통	36.52
불편한 편	23.04
매우 불편	4.70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는 보통이 5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한 편이 25.97%, 불안정한 편이 14.37%으로 대체적으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편으로 나타났다.

〈표 20〉 사고의 위험

매우 안전	1.78
안전한 편	25.97
보통	55.64
불안전한 편	14.37
매우 불안전	2.25

2) 일자리 · 소득 · 소비 부문

일자리·소득·소비 지표의 객관적 지표 우선순위는 고용률이 1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질 임금, 청년층 고용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 비중, 고령층 고용률, 여성 실업률, 성별 임금격차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일자리·소득·소비 객관적 지표 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고용률	1899	1
청년층 고용률	1899	3
고령층 고용률	1899	6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899	4
여성 실업률	1899	7
비정규직 비중	1899	5
실질임금	1899	2
성별 임금격차	1899	8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11%으로 가장 높에 나타났 으며, 다소 불만족이 25.58%로 다음 순위였다. 충남도민들은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만족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2.27
약간 만족	12.24
보통	53.11
다소 불만족	25.58
매우 불만족	6.75

직장 내 스트레스는 보통이 38.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있음이 36.67%, 매우 많음이 13.02%, 거의 없음이 9.79%, 전혀 없음이 2.32%으로 전반적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직장 내 스트레스에 대한 만족도 비중(%)

전혀 없음	2.32
거의 없음	9.79
보통	38.20
다소 있음	36.67
매우 많음	13.02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8.57%으로 가장 높에 나타났으며, 다소 불만족이 24.59%, 약간 만족이 14.99%, 매우 불만족이 8.20%, 매우 만족이 3.59%으로 나타났다.

〈표 24〉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3.59
약간 만족	14.99
보통	48.57
다소 불만족	24.59
매우 불만족	8.20

3) 가족 및 공동체 부문

가족 및 공동체 부문의 객관적 지표 우선순위는 가족접촉빈도가 1순위로 나타났고, 사회적 관계망,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단체참여율, 자살률, 지방정부 신뢰도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가족 및 공동체 객관적 지표 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가족접촉빈도	1888	1
한부모가구비율	1888	3
독거노인비율	1888	4
사회적관계망	1888	2
자살률	1888	6
사회단체참여율	1888	5
지방정부 신뢰도	1888	7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이 37.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30.52%, 매우 만족 26.91%, 다소 불만족 4.46%, 매우 불만족 0.32%으로 전반적으로 가족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26.91
약간 만족	37.79
보통	30.52
다소 불만족	4.46
매우 불만족	0.32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 만족 29.61%, 보통 27.72%, 다소 불만족 4.61%, 매우 불만족이 2.13%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35.87
약간 만족	29.61
보통	27.72
다소 불만족	4.61
매우 불만족	2.13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13%, 약간 만족이 34.53%, 보통 22.04%, 다소 불만족 3.12, 매우 불만족 0.18%으로 자녀와의 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40.13
약간 만족	34.53
보통	22.04
다소 불만족	3.12
매우 불만족	0.18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98%, 대체로 믿을 수 없음이 26.99%, 대체로 믿을 수 있음이 19.13%, 매우 믿을 수 없음이 4.52%, 매우 믿을 수 있음이 1.38%으로 나타났다.

〈표 29〉 사회에 대한 신뢰

매우 믿을 수 있음	1.38
대체로 믿을 수 있음	19.13
보통	47.98
대체로 믿을 수 없음	26.99
매우 믿을 수 없음	4.52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시간 이상이 52.76%, 1시간 ~ 2시간이 23.06%, 30분 ~ 1시간이 12.25%, 30분 미만인 5.72%, 없음이 6.05%으로 나타났다.

〈표 30〉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비중(%)

없음	6.05
30분 미만	5.72
30분 ~ 1시간	12.25
1시간 ~ 2시간	23.06
2시간 이상	52.76

4) 교육 부문

교육 부문의 객관적 지표 우선순위는 평생교육 접근성이 1위로 나타났고, 고등교육 접근성, 유아교육 접근성, 학습시간의 적정성과 성취도,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교사/학생 비율, 학교폭력 경험비율, 1인당 장서 수(공공도서관)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교육 객관적 지표 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유아교육 접근성	1884	3
고등교육 접근성	1884	2
평생교육 접근성	1884	1
교사/학생 비율	1884	6

1인당 장서 수(공공도서관)	1884	8
학교폭력 경험비율	1884	7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1884	5
학습시간의 적정성과 성취도	1884	4

충남의 교육여건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7.94%, 다소 불만족이 21.88%, 약간 만족이 14.39%, 매우 불만족이 4.62%, 매우 만족이 1.12%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충남의 교육여건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1.12
약간 만족	14.39
보통	57.94
다소 불만족	21.88
매우 불만족	4.62

계열 혹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3.94%, 다소 불만족이 24.65%, 약간 만족이 14.70%, 매우 불만족이 5.17%, 매우 만족이 1.49%으로 계열 혹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계열 혹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1.49
약간 만족	14.70
보통	53.94
다소 불만족	24.65
매우 불만족	5.17

학생과 교사 간 친밀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53.50%으로 가장 높에 나타났고, 다소 친밀하지 않음 24.24%, 약간 친밀 15.96%, 전혀 친밀하지 않음 4.32%, 매우 친밀 1.98%으로 나타났다.

〈표 34〉 학생과 교사 간 친밀도

매우 친밀	1.98
약간 친밀	15.96
보통	53.50
다소 친밀하지 않음	24.24
전혀 친밀하지 않음	4.32

교유 간 관계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50.96%으로 가장 높았으며, 약간 원만이 29.91%, 다소 원만하지 않음이 11.70%, 매우 원만 7.05%, 전혀 원만하지 않음 0.37으로 나타났다.

〈표 35〉 교유 간 관계

매우 원만	7.05
약간 원만	29.91
보통	50.96
다소 원만하지 않음	11.70
전혀 원만하지 않음	0.37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 만족 20.44%, 다소 불만족 17.97%, 매우 만족 2.79%, 매우 불만족 2.52으로 나타났다.

〈표 36〉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2.79
약간 만족	20.44
보통	56.28
다소 불만족	17.97
매우 불만족	2.52

학습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불만족 24.41%, 약간 만족이 14.61%, 매우 불만족 5.30%, 매우 만족이 1.77%으로 나타났다.

〈표 37〉 학습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1.77
약간 만족	14.61
보통	53.91
다소 불만족	24.41
매우 불만족	5.30

5) 문화 및 여가 부문

객관적 지표의 우선순위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가 1순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레저시설 이용여부, 국내관광여행여부, 독서여부, 해외여행 여부, 일반신문구독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문화·여가 객관적 지표 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1911	1
레저시설 이용여부	1911	2
독서 여부	1911	4
일반신문구독 여부	1911	6
국내관광여행 여부	1911	3
해외여행 여부	1911	5

충남의 문화·여가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불만족이 28.32%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도민들은 전반적으로 충남의 문화·여가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볼 수 있다.

〈표 39〉 문화·여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1.15
약간 만족	15.18
보통	48.53
다소 불만족	28.32
매우 불만족	6.81

거주하는 지역에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문화유적, 공연, 축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그렇지 않음이 28.20%로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표 40〉 대표적 지역문화의 존재 여부

매우 그러함	3.51
다소 그러함	21.12
보통	40.99
다소 그렇지 않음	28.20
매우 그렇지 못함	6.18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0.6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소 그러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3.79%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다소 그러함 17.16%, 매우 그렇지 못함 6.40%, 매우 그러함 1.99으로 나타났다.

〈표 41〉 지역문화에 대한 향유 여부

매우 그러함	1.99
다소 그러함	17.16
보통	40.66
다소 그렇지 않음	33.79
매우 그렇지 못함	6.40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역의 문화·여가시설이 질적으로 좋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4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소 좋아졌다는 의견도 37.68%로 높게 나타나 충남이 문화·여가 시설의 질 개선에는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 문화·여가 시설의 질적 변화여부

매우 그러함	3.20
다소 그러함	37.68
보통	48.53
다소 그렇지 않음	8.28
매우 그렇지 못함	2.31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한 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4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그러하다는 의견도 32.86%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여가활동이 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분명히 기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43〉 문화·여가활동의 기여여부

매우 그러함	5.56
다소 그러함	32.86
보통	46.65
다소 그렇지 않음	12.63
매우 그렇지 못함	2.25

6) 환경 부문

환경 부문의 객관적 지표의 우선순위는 하천 및 호소수질 오염이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환경오염 질환발생, 폐기물 및 쓰레기 관리, 통합대기환경지수(공기오염도), 주거지역 야간 소음도, 친환경 축산농가율, 환경민원 해소율, 야생 동식물 다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환경 객관적 지표 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하천 및 호소수질 오염	1892	1
통합대기환경지수(공기오염도)	1892	4
주거지역 야간 소음도	1892	5
환경오염 질환발생	1892	2
친환경 축산농가율	1892	6
야생 동식물 다양성	1892	8
환경민원 해소율	1892	7
폐기물 및 쓰레기 관리	1892	3

충남 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5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 만족이 22.85%, 다소 불만족이 16.18%, 매우 만족이 2.27%, 매우 불만족이 2.70%으로 나타났다.

〈표 45〉 충남의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2.27
약간 만족	22.85
보통	56.00
다소 불만족	16.18
매우 불만족	2.70

건강상 위협에 대해서는 보통이 4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안전이 32.79%, 다소 위협이 15.39%, 매우 안전이 3.91%, 매우 위협이 1.80%으로 건강상 위협에 대해 대체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46〉 건강상 위협

매우 안전	3.91
다소 안전	32.79
보통	46.11
다소 위협	15.39
매우 위협	1.80

공기에 대해서는 보통이 51.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 좋아짐 25.59%, 다소 나빠짐 14.70%, 매우 좋아짐 6.03%, 매우 나빠짐 2.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공기

매우 좋아짐	6.03
약간 좋아짐	25.59
보통	51.40
다소 나빠짐	14.70
매우 나빠짐	2.27

수질에 대해서는 보통이 58.56%, 약간 좋아짐 21.51%, 다소 나빠짐 13.90%, 매우 좋아짐

3.38%, 매우 나빠짐 2.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수질

매우 좋아짐	3.38
약간 좋아짐	21.51
보통	58.56
다소 나빠짐	13.90
매우 나빠짐	2.64

청결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6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불만족 23.37%, 약간 만족 21.05%, 매우 불만족 5.13%, 매우 만족이 3.75%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청결

매우 만족	3.75
약간 만족	21.05
보통	46.64
다소 불만족	23.37
매우 불만족	5.13

7) 건강 및 보건 부문

건강 및 보건 부문의 객관적 지표 우선순위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흡연율과 음주량, 인구 천명당 의사 수 혹은 병상 수, 출생시 기대수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50〉 건강 및 보건 객관적 지표 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	-------	----

출생시 기대수명	1910	5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1910	2
흡연율과 음주량	1910	3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1910	4
의료비 본인부담률	1910	1

충남의 건강 및 보건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02%로 가장 높에 나타났고, 다소 불만족 18.95%, 약간 만족 18.85%, 매우 불만족 4.55%, 매우 만족 1.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충남의 건강/보건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1.62
약간 만족	18.85
보통	56.02
다소 불만족	18.95
매우 불만족	4.55

건강상태는 보통이 47.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간 만족 30.59%, 다소 불만족 12.62%, 매우 만족 7.23%, 매우 불만족 1.68%순으로 나타났다.

〈표 52〉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7.23
약간 만족	30.59
보통	47.88
다소 불만족	12.62
매우 불만족	1.68

의료서비스 접근성 만족도에서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4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소 불만족 27.25%, 약간 만족 16.93%, 매우 불만족 6.24%, 매우 만족 2.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2.04
약간 만족	16.93

보통	47.54
다소 불만족	27.25
매우 불만족	6.24

공중보건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소 불만족 21.22%, 약간 만족 15.61%, 매우 불만족 3.67%, 매우 만족 1.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공중보건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1.89
약간 만족	15.61
보통	57.62
다소 불만족	21.22
매우 불만족	3.67

8) 주민참여 부문

주민참여 부문 객관적 지표의 우선순위는 부패지수가 1순위로 나타났고, 투표율, 자원봉사 참여율, 정보공개율, 주민참여위원회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주민참여 객관적 지표 순위

지표	유효관측수	순위
투표율	1913	2
부패지수	1913	1
정보공개율	1913	4
자원봉사참여율	1913	3
주민참여위원회수	1913	5

충남의 도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6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불만족 21.29%, 약간 만족 11.12%, 매우 불만족 2.67%, 매우 만족 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6〉 충남의 도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중(%)

매우 만족	1.31
약간 만족	11.12
보통	63.61
다소 불만족	21.29
매우 불만족	2.67

정책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지 않음이 37.60%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37.19%, 약간 그러함 14.70%, 매우 그렇지 않음 9.26%, 매우 그러함 1.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7〉 정책에 대한 인지

매우 그러함	1.26
약간 그러함	14.70
보통	37.19
다소 그렇지 않음	37.60
매우 그렇지 않음	9.26

도정에 대한 영향력은 보통이 36.6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소 그렇지 않음이 25.97%, 약간 그러함 22.72, 매우 그렇지 않음 9.32%, 매우 그러함 5.34%순으로 나타났다.

〈표 58〉 도정에 대한 영향력

매우 그러함	5.34
약간 그러함	22.72
보통	36.65
다소 그렇지 않음	25.97
매우 그렇지 않음	9.32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보통이 4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그렇지 않음 34.19%, 약간 그러함 11.47%, 매우 그렇지 않음 8.53%, 매우 그러함 1.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정보의 공개

매우 그러함	1.26
약간 그러함	11.47
보통	44.55
다소 그렇지 않음	34.19
매우 그렇지 않음	8.53

도정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보통이 5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소 그렇지 않음 23.38%, 약간 그러함 15.38%, 매우 그렇지 않음 5.91%, 매우 그러함 2.30%순으로 나타났다.

〈표 60〉 도정에 대한 신뢰

매우 그러함	2.30
약간 그러함	15.38
보통	52.98
다소 그렇지 않음	23.38
매우 그렇지 않음	5.91

제4장 충남의 행복지수를 위한 영역과 지표개발

1. 주거 및 교통 부문

1) 행복에 있어 주거 및 교통이 왜 중요한가?

(1) 주거 및 교통 영역의 필요성

근대 도시계획의 전통 확립에 큰 계기를 마련한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기계적인 도시관은 도시에서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능적인 존재로만 간주함으로써 1960년대에 들어와 사람이 부재하고 생활 부재의 도시를 만들었다는 비판⁴⁾을 받게 된다. 이후 공급자 중심의 도시 만들기를 반성하고 생활자 관점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선진국의 노력은 1970년대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1980년대 미국의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1990년대 영국의 어반 빌리지(Urban Village) 개념으로 발전되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왔다. 이들 이론의 공통원리는 사람 중심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커뮤니티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공간적으로 투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양적인 개발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물리적인 요소를 투입하는 하드웨어

4)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1961)』을 통해 반인간 중심의 현대도시를 비판하였다.

중심의 성장에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문화와 같은 창조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혁신의 시대를 거치고 있다. 장기적이고 거대한 인프라(infra) 중심에서 미시적인 생활공간과 공적인 장소가 점점 중요해진 것이다. 주거 및 교통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대량생산시대의 패러다임이 남긴 지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품종소량 생산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역환경⁵⁾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정의 슬로건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은 우리 모두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각 부분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 변화 중의 한 가지는 사람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일⁶⁾이다. 즉 우리의 일상공간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민이 행복한 삶에 대한 물리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 및 교통은 충남의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2) 주거 및 교통의 현황

충청남도의 주거 및 교통은 다른 광역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도시구조는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한 기능과 형태 위주로 형성되면서 유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 하천이 복개되고 고가도로가 건설되면서 하천은 하수도로 전락했고 보행환경은 악화되었다. 중소도시에서는 판상형 아파트를 대량으로 복제하면서 도시환경도 획일화되었다.

급속한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로 사람 중심의 도시정책도 부족했다. 교통정책은 승용차와 도로교통 이용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개인교통수단을 갖지 못한 사회적 약자⁷⁾의 이동에 제약이 되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을 어

5) 미래 청사진계획(blue print)에 의한 SOC 등 도시계획시설 중심의 개발에서 생활밀착형시설 공급, 프로젝트 중심의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6) 충청남도는 2010년 10월 국내 최초로 선진국형 주민참여방식인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도정에 도입한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300인의 참석자(1일 도지사)들이 선정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가 ‘주민 중심의 도시와 마을 조성’이었다.

7) 사회적 약자란 연령, 인종, 성, 장애 등 주어진 사회적 여건에 의해 다수의 집단과 분리되어 차별, 또는 소외되기 쉬운 소수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정책방향이나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시환경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를 정의하는 경우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신체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제공되는 편의시설이나 주거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칭할 수 있다.

떻게 확충할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생활하기에는 제도, 시설 등 도시공간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관리에서 성장지향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적용되어 왔음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가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며 건강한 성인 남성이 자동차를 타고 활동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현재 충청남도의 도로포장율은 74.9%(전국 79.8%)로 높은 수준인데 비해, 대중교통 분담율은 16.5%(2008년 기준, 수도권 38.8%)에 불과하다. 2010년 현재 일반가구수를 기준으로 충남의 주택보급률은 107.0%(전국 101.0%)인데 비해, 최저주거기준⁸⁾에 미달하는 가구비율은 10.0%(전국 11.8%)에 달한다.

충청남도의 출산율은 2010년 현재 1.48명 수준(전국 1.23명)인데 비해, 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미국의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⁹⁾는 범죄율과 각 사회적 물리적 요소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각종 범죄가 사회·경제적 요인¹⁰⁾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 특성¹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충청남도의 범죄발생건수(인구 천명당)는 2010년 38.2건으로 전국 평균(36.4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기초생활시설에 대한 하드웨어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으나, 주거 복지 및 대중교통 서비스나 안전도시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최저주거기준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5조의 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국토해양부 장관이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최저주거기준은 2004년 최초로 법제화된 기준이 공고(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173호, 2004.6.15)되었으며, 그 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11년 5월 27일 개정된 기준이 공고되었다.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최소 주거면적과 방수에 관한 기준, 필수적인 설비에 관한 기준, 구조·성능·환경에 관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9) U. S.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1996, 『Creating Defensible Space by Oscar Newman』, US.

10) 여성이 가장인 집은 범죄에 취약하며, 어른이 혼자면 애들을 제어하기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 의한 범죄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용인되는 편이며,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수 인종의 경우 경찰로부터의 보호를 많이 요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11) 물리적으로는 단지의 규모가 커지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병리현상 등이 강화되고, 건물의 높이나 입구 당 세대 수가 늘어나면 거주자가 그들의 환경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2) 어떻게 주거 및 교통을 측정할 것인가?

주거 및 교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적인 틀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개별지표의 적정성, 대표성 및 논리적인 타당성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고, 지표의 활용이 행복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주거 및 교통의 지표는 지역생활환경의 수준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성과 종합성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표성은 현재의 주거 및 교통에 부합하도록 구성해야 하고, 종합성은 행복지수를 측정하는데 있어 전체 지표간의 종합성을 확보하고 지표 및 영역간 배타성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주거 및 교통 지표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점검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균형성과 지속성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균형성은 주거 및 교통의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성이라 함은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자료 구축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주거 및 교통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통계조사, 사회조사 및 관련연구에서 제시된 지표 측정방법을 준용하되, 자료구득이 가능한 범위(충청남도, 시·군·구)를 차별화하여 측정한다. 지표 측정은 통계청에 승인된 지정통계 보고를 기준으로 하고, 국토지리정보원, KOSIS(국가통계포털), 주거실태조사 등에서 제시하는 지표산식을 따른다.

둘째, 주거 및 교통은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로 관계를 구분한다. 해당 지표가 주거 및 교통에 양의 관계를 미치는지, 부의 관계를 미치는지 판단해 행복지수 측정에 반영한다.

〈표 61〉 주거 및 교통 부문의 지표 조사표

영역	키워드	지표명	단위	출처	제공 년도	지표의미	측정 산식	자료 범위		관계
								도	시·군·구	
생활 기반 여건	공원 및 생활편익	1인당 공 원면적	m ²	통계연보, 내부자료	200 9	공원서비스를 공 급받고 있는 정 도	공원면적/ 인구수		○	N

주: N(negative, 부정적인 관계), P(positive, 긍정적인 관계)

셋째, 주거 및 교통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위별 비교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농림수산물 부는 2010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고, 전국 140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주거와 교통, 교육, 의료 등 농어촌 서비스 기준 8개 분야의 달성정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농어촌 서비스수준은『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시·군별 주거 및 교통이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농어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시지역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62〉 주거 및 교통 지표의 자료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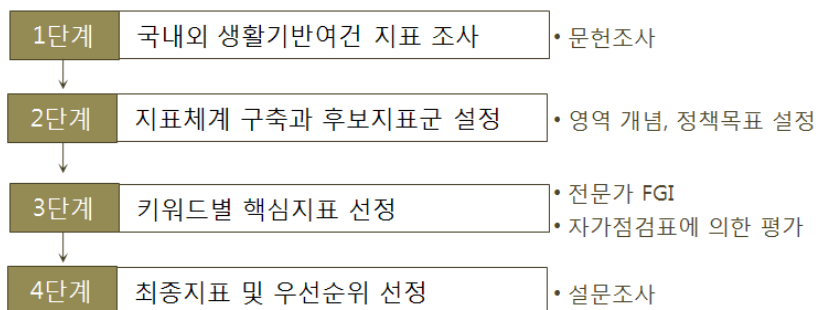
구분	지표	자료출처	주기	비고
주거	자가거주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시·군·구
	주택전세가격지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년	광역시·도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월	전국
	주택보급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tat.mltm.go.kr)	1년	시·군
	도시주택가격지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년	광역시·도
	1인당 주거면적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시·군·구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패널조사(국토연구원), 현재 미공개	3년	
	노후주택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시·군·구
	
교통	대중교통분담율	국토해양부·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시책평가	2년	시·군
	통근·통학소요시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광역시·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년	광역시·도
	
공원 및 생활 편의	1인당 공원면적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	1년	시·군·구
	
안전	경찰관 1인당 인구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년	광역시·도
	강력범죄발생률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광역시, 시·군·구
	화재발생건수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자료 소방본부, 시·군·구별 화재발생통계	1년	시·군
	집단식중독발생 환자수	식품의약품안전청	1년	전국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년	광역시·도
	사고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년	시·군·구
	

3) 주거 및 교통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주거 및 교통지표의 선정기준은 대표성, 종합성, 측정가능성, 간결 및 용이성, 중복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대표성은 주거 및 교통 영역을 대표하거나 사회문제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종합성은 결과지표로써 현실 속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측정가능성은 시계열 비교와 분석이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며, 신뢰할만한 통계적 기반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결 및 용이성은 알기 쉽게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중복가능성은 주거 및 교통영역 내 혹은 다른 영역과의 지표 간 중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 및 교통지표의 선정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국내외 주거 및 교통 지표를 조사한다. 2단계는 주거 및 교통 영역의 정책목표와 개념을 토대로 지표체계를 설정하고 후보지표군을 선정한다. 3단계는 후보지표군에 대한 유사성 여부를 토대로 중복적인 지표를 걸러내고, 이후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키워드별로 핵심지표를 도출한다. 여기에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함께 제안된다. 4단계에서 핵심지표는 균형성 원칙(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 긍정적 지표 및 부정적 지표)에 따라 대체 및 삭제 과정을 거쳐 최종지표로 확정되고, 도민설문 조사결과에 따라 지표 간 우선순위도 제시된다.

〈그림 9〉 주거 및 교통지표 선정절차



(1) 주거 및 교통영역에서 선행연구 사례

국가나 국제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행복지수나 삶의 질 지수는 주거 및 교통 영역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정도 등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특히, 주거 및 교통 영역에서는 행복지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표 63〉 외국 주거 및 교통 지표의 구성

구분		영역 및 지표 제안			
국 가	일본의 신국민 생활지표 (1992년~)	안전 위험주택비율, 공해고충처리건수, 교통사고발생건수, 건물화재건수 등	공정 주택취득 연수배율, 토지자산격차 등	자유 세대용 임대주택 착공비율, 유도거주수준이상 주택비율 등	쾌적 일조시간 5시간이상, 주택비율, 1인당 공원면적 등
	캐나다의 웰빙지수 (1999년~)	건강(신체적 육체적 건강, 기대수명, 의료서비스의 접근가능성과 질 등의 환경)			
	부탄의 국민총행복 지수 (1998년~)	지역사회 생명력(가족활력지표, 안전지표, 상호호혜지표, 신뢰지표, 사회후원 지표, 사회화 지표, 친족 친밀도 지표)			
	홍콩의 삶의 질 지수 (2007년)	사회문화영역(범죄율), 경제영역(주택구매비율)			
국 제 기 관	OECD의 삶의 질 지수	주택(사람별 방수, 기초설비를 결여한 가구들), 안전(살인율, 강도피해)			
	Calvert-Henderson QoL Indicators	사회경제 기반시설(1인당 사회경제 기반시설 수), 주거(주택보유자비율, 인구밀집도, 배관시설완비비율, 주택임대료부담, 인종별 주택보유현황)			
	JCC's QoL (1985~)	활기찬 경제 육성(신축 주택수, 부동산의 총 과세 가치, 항구 터미널 총 수리 수화물 무게), 효율적인 이동(출퇴근시 25분 이하 소요자, 평균 비행편 좌석 수, 국제공항에서 직항편으로 도달할 수 있는 도시수, 국제공항 이용승객수, 인구 1,000명당 주중 평균 국제공항 버스이용자수, 배차간격이 30/60분 이하인 국제공항 버시비율, 주중 평균 스카이웨이(모노레일) 이용자수),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인구 100,000명당 지표 범죄발생수,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사고, 밤에 인근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비율,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등)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련연구에서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물리적인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하기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주거와 교통, 안전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통계개발원(2011)의 삶의 질 지수는 주거와 교통 관련지표를 생활환경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행복 또는 삶의 질 측정의 구성요소로 주변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교통에 대한 만족도, 주택구매 관련지표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전지표는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으로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정부의 통계조사로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조사는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사회조사에서는 매년 조사영역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보건, 교육, 안전¹²⁾, 가족, 환경 부문을 조사하였다.

〈표 64〉 통계개발원의 삶의 질 지수 중 주거 및 교통 지표

대분류	중분류 (27)	객관적 /주관적	세부지표
주거/ 교통	주택수급	객관적	주택전세가격지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 자가거주비율, 주택보급률
	주거환경	객관적	노후주택비율,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공원 및 녹지면적
		주관적	주택만족도, 거주지역 만족도
	교통의 질	객관적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관적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안전	안전상태	객관적	강력범죄발생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고 사망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집단식중독 발생 환자수, 화재발생건수
		주관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 두려움
	안전 인프라	객관적	경찰관 1인당 인구수
		주관적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야간보행 두려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지역에 최소한의 기초생활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

12)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 향후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 수입 식품의 안전에 대한 인식, 수입 식품 안전이 불안한 이유, 학교 및 보육 시설의 급식 안전에 대한 인식, 급식 안전이 불안한 이유,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에 대한 인식, 학교 주변 판매 식품 안전이 불안한 이유, 식품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식품 안전이 불안한 이유, 식품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 다른 사람들의 준법 수준, 자신의 준법 수준,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공공질서 준수 수준,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자동차 운전 여부,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적으로 농어촌서비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서비스항목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5〉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부문 (개수)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관련기관
주거 (5)	거주 가능주택	·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농식품부 국토부 지자체
	난방	· 읍지역 도시가스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지경부 산림청
	공공시설 프로그램	·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자체 농진청
	안전한 마실 물	·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환경부 지자체 농식품부
	오폐수 처리	·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환경부
교통 (3)	대중교통 운행	· 도보 15분 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자체 (국토부)
	여객선 운행	·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국토부 지자체
	인도 설치	·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지자체 (행안부 국토부)
교육 (6)	유치원/ 초·중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교과부
	고등학교	·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과부
	폐교요건	· 폐교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과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 교과과목, 특기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비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한다.	교과부
	교육발전 위원회	·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교과부
	평생교육	·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을 1개 이상 운영된다.	교과부 문화부 지자체
보건	1차진료	·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	복지부

부문 (개수)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관련기관
의료 (3)	서비스	가 가능하다.	
	순회방문	·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복지부
	의약품 구입	·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부 지자체
사회 복지 (5)	노인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복지부)
	청소년	·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복지부
	아동	·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복지부 교과부 지자체 농식품부
	영유아	·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복지부 지자체
	다문화가족	·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농식품부
응급 (5)	응급서비스	·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복지부 소방청
	도서·벽지 서비스	·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청 해경청
	소방서비스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인다.	소방청
	도난방지	·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지자체 (경찰청)
	경찰서비스	· 112 신고시 90% 이상 5분내에 현장에 도착한다.	경찰청
문화 여가 (3)	독서	·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문화부 지자체
	찾아가는 문화공연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문화부 지자체
정보 통신 (1)	초고속망	·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에서 IPTV 시청이 가능하다.	방통위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주거 및 교통 영역의 주관적 지표는 정주환경, 교통의 편리성,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표 66〉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거 및 교통의 주관적 지표

구분	영역	설문조사 문항
EU(2006) ¹⁾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밤에 도시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 나는 교통사고, 화재, 건물 붕괴와 같은 다양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생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서 대중교통(열차,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은 용이하다 • 나의 주변(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갈 수 있는 거리)에는 앉거나 쉴 수 있거나 이웃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다. • 나는 식료품을 구입하러 쉽게 걸어서 상점에 갈 수 있다(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상점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²⁾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귀하의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³⁾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지역사회 포함)은 쾌적하다 •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편리하다 • 주변에 공원이나 운동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에 거리를 다니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 교통사고, 재해·재난 등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⁴⁾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 내가 사는 동네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 내가 사는 동네에는 어둡고 흥미진 곳이 많다 • 내가 사는 동네에는 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십대 청소년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통계개발원 (2011) ⁵⁾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시설 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소 범죄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 집 근처에는 야간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습니까? •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주 1: EU, 2006,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비교연구 프로젝트

2: 김승권의 3인,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이성규, 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 김신영외 1인, 2006, 한국 청소년 행복·역량지수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5: 통계개발원,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 2011

(2) 주거 및 교통영역에서의 행복지표 체계의 구축

① 지표체계 구축과 후보지표군 설정

지역의 주거 및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보다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창출해 가는 데에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거와 교통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주거 및 교통 영역에서 행복 측정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교통 시설 기반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¹³⁾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는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사회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 및 교통지표는 주거, 교통, 공원 및 생활편익¹⁴⁾, 안전 등 4개의 세부 영역별¹⁵⁾로 지표체계를 구축한다. 가능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였고, 세부영역별 후보지표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

주거는 숙소, 안전, 프라이버시(privacy)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요소이고, 사회환경의 질에 기여하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주거환경의 질이 지속가능한지, 소득과 연령, 능력에 관계없이 주거선택의 가능성과 정주성이 높은 사회인지 측정이 필요하다.

주거환경은 주택보급률, 도시주택가격지수¹⁶⁾, 주택전세가격지수¹⁷⁾,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¹⁸⁾, 자가거주비율, 노후주택비율¹⁹⁾, 과소필지비율²⁰⁾, 공가율²¹⁾, 1인당 주거면적(1인당 주거

13) 인간은 활동(activities)을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활동은 교통(transportation)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통 영역은 행복 추구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14) 도시기반시설 중 환경시설, 정보통신시설에 한정한다.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15) 생활편익시설은 주거 및 교통의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통계개발원의 삶의 질 지수를 참고하였으며, 국외에서는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의 영역 구분을 참고하였다.

16) 전년대비 도시주택가격의 변화지수

17) 국민은행에서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일정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한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여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구성비를 가중치 값으로 부여하여 산출하는 지표

18) Price Income Rate의 약자로 PIR은 주택 구매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집값 상승이나 하락세를 가늠할 때 소득 수준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배수로 나타낸다. 즉,

용 건축물 면적)²²⁾, 주택만족도²³⁾, 거주지역 만족도²⁴⁾, 주거환경의 쾌적성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더불어 물리적 주거수준과 주거비 지불능력 측면에서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상황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최저주거기준²⁵⁾미달가구 규모(거주가능주택)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나. 교통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주요 거점지역과 주거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아져 에너지 절약적이고 공동체적인 생활방식이 자리잡을 수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도와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측정이 필요하다. 측정지표는 지역의 대중교통분담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및 커뮤니티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이 활용가능하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거 및 가로환경 정비 정도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도시의 읍 또는 면 지역은 해당 시군의 중심적인 커뮤니티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주기적 또는 상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이용하므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공간적으로 투영되어야 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율²⁶⁾, 대중교통(버스, 여객선 등) 운행실적, 교통안전시설 만족도²⁷⁾,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인도 설치정도, 주차장 확보정도, 통근통학 소요시간(통근통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비율), 교통사고 발생건수²⁸⁾, 사고사망률 등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PIR이 10배라면 10년치 소득을 모두 모아야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

19) 신축되지 20년 이상 지난 주택수/전체주택수×100

20) 불합 불가능한 대지면적(지자체 조례)/전체면적×100

21) 집을 이용하지 않고 비워둔 상태의 것을 공가라 하며, 전체 주택 중 그 비워놓은 주택의 공간비율을 의미

22) 주민 1인당 사용 주거면적의 변화를 파악, 총주거면적/총인구

23)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리커드 척도)

2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리커드 척도)

25)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별로 최소 주거면적 및 방 개수, 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

26) 여객 및 화물의 총수송량(총수송거리)에서 대중교통 수송량(수송거리)이 차지하는 비율

27)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리커드 척도)

28) 인구십만명당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인구수)×100,000

다. 공원 및 생활편익

행복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에 따라 지역민의 행복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영역에서 주거 및 교통의 측정은 쾌적한 공원 및 녹지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원녹지율, 1인당 공원면적²⁹⁾, 1인당 공원 및 녹지 지정면적³⁰⁾,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³¹⁾, 공원과의 접근용이성 등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주민의 일상생활의 동선에 맞게 공공편익시설이 적절하게 공급되고 배치되는 것도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물리적 조건이다. 생활밀착형 생활필수시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영역이 필요한 이유이다. 생활편익은 근린주구 형성(도로로 10분 내 거리에 편익시설 배치정도), 난방지 저감시설 설치정도(도시가스보급률), 안전한 마실 물 공급수준(상수도보급률), 오폐수처리정도(하수도보급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비율 등을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라. 안전

안전 영역은 사회가 범죄와 재해, 기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 범죄, 사고, 법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 영역에서의 주거 및 교통은 사회의 안전하거나 또는 위험한 정도,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환경 등을 측정해야 한다.

현상을 측정하는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³²⁾, 범죄발생건수³³⁾, 강력범죄발생률³⁴⁾, 범죄피해의 두려움³⁵⁾, 화재발생건수, 집단식중독 발생 환자수³⁶⁾, 경찰관 1인당 인구수³⁷⁾, 범죄피해의 두

29) 1인당 공원면적(m²)은 공원면적(m²)/인구수로 산정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인 1인당 6m² 이상을 충족하도록 제시

30) 공원 및 녹지지정면적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및 녹지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면적

31)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및 녹지 중 실제로 조성된 공원 및 녹지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면적

32) 사회안전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건축물, 교통, 식품·의약품, 정보보안에 대한 안전도를 측정한 결과,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리커드 척도). 통계청이 발간하는 사회조사보고서에서 안전부문에는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 수입식품 안전, 학교 및 교육시설 급식 안전, 학교 주변 판매식품 안전, 식품 안전, 다른 사람들의 준법수준, 자신의 준법수준, 공공질서 수준, 도로교통사고 원인,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등을 제시

33) 인구 십만명당 총 범죄발생건수, (형법범죄와 특별범죄 발생건수/인구수)×100

34)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등 5대 강력범죄 발생률, (강력범죄건수/형법범죄건수)×100

35) 평소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리커드 척도)

36) 전년 대비 집단식중독 발생 건수 증가비율로 측정

37) 경찰관 1인당 인구분담률

려움, 소방서비스 정도³⁸⁾, 도난방지시설 구축정도³⁹⁾, 경찰서비스정도⁴⁰⁾, 아동안전사고 사망률⁴¹⁾, 야간보행 두려움(야간보행에 대한 안전감 조사)⁴²⁾ 등과 함께 치안방재·의료 서비스단위를 확충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정비율, 관련예산 투자비율, 야간조망 설치정도⁴³⁾, 어둡고 후미

〈표 67〉 주거 및 교통의 지표 후보군

키워드	객관적/주관적	주거 및 교통지표	
		긍정적 지표	부정적 지표
주거 (14)	객관적 (11)	주택보급률, 도시주택가격지수, 자가거주비율, 1인당 주거면적,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주택전세가격지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 노후주택비율, 과소필지비율, 공가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비율
	주관적 (3)	주택만족도, 거주지역 만족도, 주거환경의 쾌적성	-
교통 (9)	객관적 (4)	대중교통분담율, 통근·통학 소요시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고사망률
	주관적 (5)	대중교통운행실적,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만족도), 인도설치정도, 주차장 확보정도	-
공원 및 생활편익 (10)	객관적 (8)	공원·녹지율, 1인당 공원면적, 1인당 공원 및 녹지 지정면적,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도시가스보급률,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비율	-
	주관적 (2)	공원과의 접근용이성, 도보로 10분 내 거리에 편익시설 배치정도	-
안전 (16)	객관적 (11)	경찰관 1인당 인구수, 소방서비스 정도, 도난방지시설 구축정도, 경찰서비스정도, 치안인프라 정비율, 관련 예산투자비율	범죄발생건수, 강력범죄발생률, 화재 발생건수, 집단식중독 발생 환자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주관적 (5)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야간조망설치 정도	범죄피해의 두려움, 어둡고 후미진 곳의 분포정도, 야간보행 두려움

진 곳의 분포정도 등이 안전영역의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38) 화재발생 신고 접수후 5분 이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

39)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비율

40) 112 신고시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

41) OECD국가의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률

42) 집근처에 야간보행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 있는지 여부조사(야간보행이 두렵다고 느끼는 비율)

43) 야간조명 설치정도는 'km당 가로등 설치수' 지표로 대체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가로등 DB가 도시지역에만 구축되어 있어 주관적지표로만 활용

② 키워드별 핵심지표 선정

키워드별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⁴⁴⁾를 실시하였다. 5개 키워드별로 지표선정기준⁴⁵⁾에 따라 양적지표(객관적 지표, 지역의 행복도를 대표)와 질적지표(주관적 지표, 개인의 행복도를 대표)를 균등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리커트 척도(5점)로 평가하여 10개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예비지표 3개를 추가하였다.

주거 부문에서는 객관적 지표인 자가거주비율과 주관적 지표인 주택만족도를 선정하고 예비지표로 주택전세가격지수를 정하였다. 자가거주비율 지표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통해 구득이 가능한데, 지표의 측정주기(5년)가 행복지수 측정주기와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전세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지표로 반영하였다.

교통 부문에서는 객관적 지표인 통근통학 소요시간과 주관적 지표인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을 선정하고 예비지표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정하였다. 통근통학 소요시간 지표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통해 구득이 가능한데, 지표의 측정주기(5년)가 행복지수 측정주기와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지표로 반영하였다.

공원 및 생활편의 부문에서는 객관적 지표로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과 상수도보급률을 선정하고, 주관적 지표로 공원과의 접근성, 생활편의시설(문화여가체육시설)과의 접근성을 정하였다.

안전 부문에서는 객관적 지표인 사회안전망(CCTV) 구축도와 주관적 지표인 자연재해·재난에 대한 안정성을 선정하고 예비지표로 범죄발생건수를 정하였다. 범죄발생건수는 안전 영역의 예비 3순위 지표로써 안전영역에서 중요한 지표라는 전문가 자문에 의해 추가된 지표이다.

전문가 FGI를 통해 나타난 주거 및 교통 영역의 핵심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지표 13개 중에서 긍정적 지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정적 지표는 3개 지표(주택전세가격지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범죄발생건수)로 나타났다.

둘째, 핵심지표는 ① 주거 및 교통이 어느 정도 공급되었는지(기반공급수준), ② 주민이용 정도는 어떠한지(주민이용실태), ③ 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주민만족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반공급수준 지표는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

44) 2012년 7월 25일, 관련분야(교통, 도시계획, 지역경제 분야 등)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5) 대표성, 종합성, 측정가능성, 간결 및 용이성, 중복가능성 5개 선정기준을 리커트 척도(5점)로 평가하였다.

도 등 2개인데 비해, 주민이용실태 지표(자가거주비율, 주택전세가격지수, 통근·통학 소요시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범죄발생건수)와 주민만족도 지표(주택만족도,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공원과의 접근용이성, 생활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자연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성)는 5개에 달하고 있다. 물리적인 시설 공급보다는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한 이용실태와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68〉 주거 및 교통의 핵심지표

구분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생활 기반 여건	주거	① 자가거주비율 ③ 주택전세가격지수(-)	② 주택만족도
	교통	② 통근·통학 소요시간 ③ 교통사고 발생건수(-)	①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공원 및 생활편익	②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③ 상수도보급률	④ 공원과의 접근용이성 ① 생활편익시설(문화·여가· 체육시설)과의 접근성
	안전	①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도 ③ 범죄발생건수(-)	② 자연·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성

키워드별 핵심지표 선정에서 도출된 핵심지표를 토대로 최종지표를 정하기 위해 연구총괄 조정팀에서 제시한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와 도민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객관적 지표는 결과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 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등 7개의 지표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객관적 지표를 자가점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키워드별 핵심지표 선정에서 수행한 전문가 FGI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주택전세가격지수(자가거주비율과 대체가능한 예비지표), 교통사고 발생건수(통근·통학소요시간과 대체가능한 예비지표), 범죄발생건수는 후보지표임에도 보편성, 간결성, 결과지표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거주비율, 통근·통학소요시간이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계열측정이나 가변성 기준에서 점수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69〉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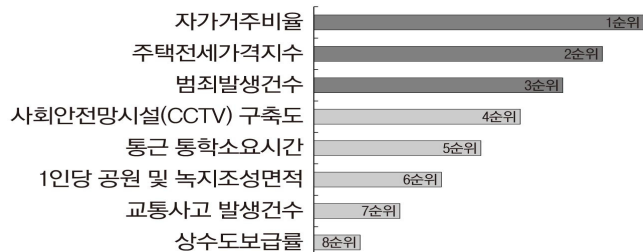
지표명	선정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자가거주비율	○	△	○	○	○	○	○
주택전세가격지수	○	○	○	○	○	△	○
통근·통학소요시간	○	△	○	○	○	○	○
교통사고 발생건수	○	○	○	○	○	○	○
1인당 공원 및 녹지조성면적	x	○	○	x	△	○	○
상수도보급률	x	○	○	x	x	○	○
사회안전망시설 구축도	x	○	○	x	○	○	○
범죄발생건수	○	○	○	△	○	○	○

- 주 : 1) 결과(outcome)지표는 해당 지표가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이 아닌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여부
 2) 시계열 측정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로 측정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3) 가변성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여부
 4) 보편성은 해당 지표가 삶의 질이나 웰빙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5) 영역 간 중복은 해당 지표가 타 영역에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6) 간결성은 해당 지표가 일반인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7) 적용성은 해당 지표가 충남에 대해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8) 선정기준에 대한 부합성은 ○ : 기준에 매우 부합함, ○ : 대체로 부합함, △ : 보통, x : 부적합으로 구분

(3)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지표 검토

도민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주거 및 교통 영역의 주거지표(자가거주비율>주택전세가격지수)~안전지표(범죄발생건수>사회안전망시설 구축도)~교통지표(통근·통학소요시간>교통사고 발생건수)~기타지표(1인당 공원 및 녹지조성면적>상수도보급률)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주거 및 교통 지표의 우선순위(설문결과)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결과와 도민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거 및 교통 영역에서 객관적 지표는 주택전세가격지수, 범죄발생건수, 1인당 공원 및 녹지조성면적,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을 최종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별(주거, 안전, 공원 및 생활편의, 교통)로 1개 지표씩 선정하되, 나머지 지표는 주민선호도가 높더라도 시계열 측정가능성(자가거주비율, 통근·통학소요시간)이나 동일 키워드에서 관련지표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배제하였다.

주관적 지표는 당초 주택만족도,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공원과의 접근용이성,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자연재해·재난에 대한 안정성 지표를 발굴하였으나, 연구총괄조정팀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택(주거환경)만족도,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등 3개 지표로 단순화하였다. 이 지표를 토대로 도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충남도민들은 주거환경에 대해 전체의 44.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체적인 주거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교통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5.8% 정도였고,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상은 전체의 27.8%에 불과했다. 즉, 주거환경 만족도에 비해 교통시설 이용의 편리성이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0〉 주거 및 교통에 대한 도민 만족도

구분		구성비율(%)
주택(혹은) 주거환경 만족도	매우 만족	12.08
	약간 만족	32.36
	보통	41.82
	다소 불만족	11.60
	매우 불만족	2.14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매우 편리	5.96
	편리한 편	29.78
	보통	36.52
	불편한 편	23.04
	매우 불편	4.70
사고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매우 안전	1.78
	안전한 편	25.97
	보통	55.64
	불안전한 편	14.37
	매우 불안전	2.25

따라서, 주거 및 교통 영역에서 최종지표는 다음 표에서처럼 주택전세가격지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범죄발생건수 등의 객관적 지표(4개)와 주택(주거환경) 만족도,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성 등 주관적 지표(3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71〉 주거 및 교통영역의 지표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생활 기반 여건	주거	주택전세가격지수(-)	주택(주거환경) 만족도
	교통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공원 및 생활편익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
	안전	범죄발생건수(-)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주 : (-)는 부정적 지표를 의미

4) 주거 및 교통영역에서의 정책방향

주거 및 교통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과제이다. 특히, 충남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주거 및 교통의 핵심은 외부공간의 변화와 주민 간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 물리적인 외부공간의 변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동네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개별화된 관계들을 보듬어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의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주거 및 교통의 개념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사람의 가치, 사람다움이 되살아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도시(Human City)를 물리적인 공간조직, 사회적인 관계, 주민자치, 생태체제 등 네 차원으로 나누어 본다면, 각 차원에서 사람다움의 키워

드를 구현해내는 방식으로 지역을 재편해 가는 것이 인간도시 만들기 그 자체가 된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보다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창출해 가는 데에 있다.

(1) 사람 중심의 도시 및 마을 만들기

사람 중심의 마을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면서 물리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마을주민 간에 개별화된 관계들을 보듬어가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경제순환체계가 구축되어 유자·발전하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도시와 농촌 마을간 자매결연을 체결해 도농간 상호교류를 시작하고, 해체된 주민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개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형 도시 및 농촌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⁴⁶⁾를 구축하고, 민선 5기에서 추진 중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그린 홈(Green Home) 으뜸 아파트 만들기 사업⁴⁷⁾을 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입장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가 이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을 확충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수요자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전원테마주택, 친환경주택, 임대주택, 저렴한 주택, 고가의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물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도 중요한 시책으로 다뤄야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저층부 공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가로환경계획에 있어서도 보행약자 및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인구 감소 및 기존 도심 쇠퇴에 대응하는 도심재생 활성화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에서 산업 활성화, 정주여건 및 생산기반을 중시하는 복합적·창조적인

46) 마을 만들기를 위한 정책추진과제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마을 만들기 추진기구 및 지원센터,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계획 등을 제안한다.

47) 충청남도에서는 2007년부터 기존 도시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양식이 아파트로 변화하며 공동체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에 조성된 아파트에서 주민들 간에 공동체 형성과 주민참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확산을 통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추진은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2007년 ‘살기 좋은 아파트’ 시책에서 2009년에는 저탄소·저에너지부분을 대폭 보완한 ‘그린 홈 으뜸아파트’ 시책으로 변환하여 2011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역 및 도시재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의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기존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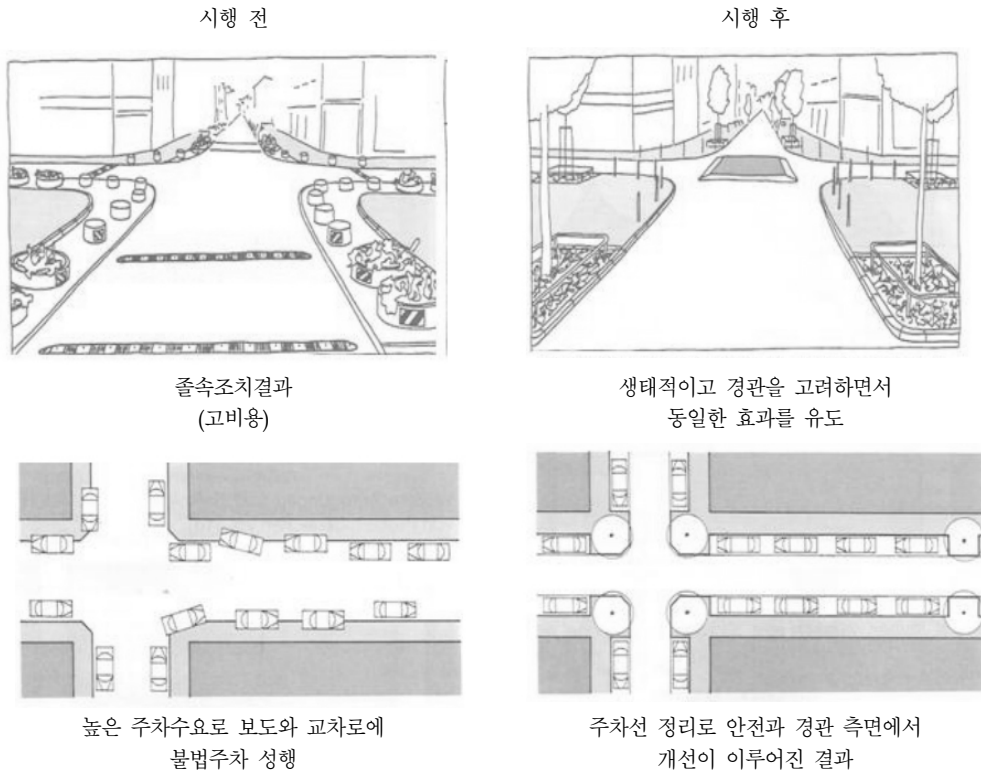
(2) 대중교통·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다소비형 도로·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철도·자전거·사람 중심의 저탄소 녹색교통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요 거점지역과 주거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여 에너지 절약적이고 공동체적인 생활방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교통정온화기법 중 하나인 독일의 템포-30 존(Tempo 30-Zone)⁴⁸⁾을 검토하여 민선5기 주요시책 중 하나인 3S(Slow, Small, Safe)도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템포-30 존의 발상은 차가 없는 도로가 보행자가 없는 도로보다 훨씬 좋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벽지노선의 수요대응형 교통체계(DRT : Demand Responsive Transport)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둘째, 도민편익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거점지역 내에서의 이동은 보행이나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친환경 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해야 한다.

48) 독일이 1980년대부터 실시해 온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기법으로써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역,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 쾌적한 환경 및 소음방지가 필요한 시설이 많은 지역, 통과교통이 많은 지역, 주거밀집지역 및 주차시설의 문제가 많은 지역, 도로경관이 나쁜 지역에 대하여 주행속도를 30km로 규제하여 교통량을 감소하고 저속 주행을 유도하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11〉 템포 30-존 시행으로 인한 도로공간의 변화¹⁾



자료 : 김경석, 2011, “3S 도로 조성방안”,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만들기 전략과제 워크숍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3)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순환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도시환경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매력도를 증대시키는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원·녹지로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오픈스페이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주민의 삶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정원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커뮤니티 단위의 공원이나 옥상정원

등에 공동의 도시정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의식을 향상시키고, 주요 작물에 대해서 공동 경작 및 텃밭 제공을 통해 지역의 안전먹거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고, 2011년 11월에『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정책대안으로 도시농업공원이 부각되고 있다. 도시농업공원은 도시공원 내 일부구역을 텃밭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전체를 텃밭과 서비스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 시애틀에서는 소규모 시민정원(Community Garden)으로 피-패치 프로그램(P-Patch Program)을 추진하면서 녹색 공간을 넓혀 건강한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있다. 매년 6천명 이상의 정원사가 70여 곳의 부지에서 10톤 이상의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하여 지역의 푸드 뱅크(Food Bank)에 공급하고 있다.

〈그림 12〉 시애틀의 지역사회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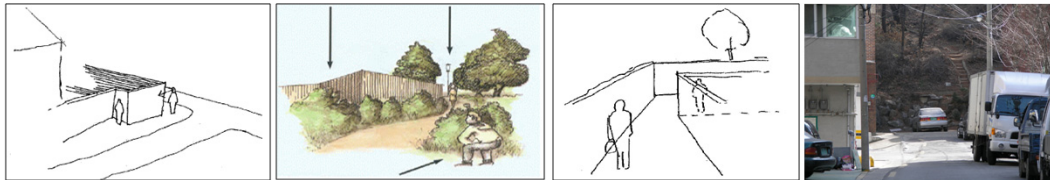
(4)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를 조성하고 기후영향에 따른 재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설계기법(Universal Design)⁴⁹⁾을 적용하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환경을 정비한다. 특히, 도시공간환경을 고려하여 범행동기를 유발하는 취약공간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에 범죄예방형 환경설계기법(CEPTED: Crime

49)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환경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접근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신체 능력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도입해야 한다. 범죄예방형 환경설계는 지역주민에게는 범죄에 대비하는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고 주민들이 서로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지역의 개선과 이용을 보다 증진시켜 범죄를 통제하고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림 13〉 범죄유발공간(offensive space)



다른 한편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형화일상화되고 있는 폭우재해에 대비하여 지역의 모든 구성요소가 위험을 분담하는 토탈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⁵⁰⁾. 토탈방재시스템은 재해위험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폭우·산사태·폭염·가뭄 재해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도시기반시설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재해취약 도심지를 중심으로 하천, 하수도 등의 설계용량을 상향조정하고, 도로·광장 등 불투수포장으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설은 방재기준을 강화하며, 산사태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사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민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 지역에서 오랜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재해 취약요소를 확인·신고하고, 상습침수지역 내 주민들은 집중강우 시 우수받이 막힘 현상을 제거하는 자발적인 동참도 필요하다.

50) 국토연구원, 2012,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재해 취약성 분석 및 도시방재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제388호

2. 일자리 · 소득 · 소비 부문

1) 행복에 있어 일자리 · 소득 · 소비가 왜 중요한가?

(1) 일자리 · 소득 · 소비 영역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삶의 만족지수는 OECD의 평균인 0.69를 크게 하회하는 0.45로 전체 조사대상 26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하여 경제적 요인이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나타난다(2006 OECD 사회지표).⁵¹⁾ 그럼에도 일자리는 근로소득의 원천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사회 내에서의 자아감, 개인적 자부심 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실업은 소득의 상실로 인한 금전적 효과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효과-즉, 사회적 관계나 사회 내에서의 존재감 혹은 개인적 자부심의 감소-를 지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 혹은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선행연구는 실직 혹은 실업이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Clark and Oswald(1994)는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실업이 정신적 고통(mental distress)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업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장애에 의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Winkelmann and Winkelmann(1998)은 German Socio-Economic Panel(1984-1989)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실업은 삶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⁵²⁾ 개인에 대한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모형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실업의 부정적인 효과는 건강상의 문제보다 세 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이들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연관된 비용보다는 (실직에 의한) 사회적 관계나 사회 내에서의

51) 실제로, Happy Planet Index와 Ecological Footprint는 GDP를 포함하지 않는다.

52) 이들의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조사에 포함된 개인의 조사시점에서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척도 변수-즉,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표시된 변수-를 이분변수(binary variable)로 전환한 것이며, 설명변수는 조사시점에서의 고용상태, 건강상태(만성질환이나 장애의 유무), 연령과 이의 자승, 혼인상태를 포함한다. 특히, 이들의 분석은 패널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조사에 포함된 개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하여 변수의 누락에 따른 편의(omitted variable bias)와 같은 계량경제학적 문제를 줄이고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른 종속변수의 개인 간 차이를 통제하였다.

자아감 혹은 개인적 자부심의 감소로부터 발생하는 비금전적 비용이 훨씬 큼을 보여준다.⁵³⁾ 또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일자리가 있으나 실업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을 포기한 경우, 그리고 구직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Wilson and Walker(1993)의 결과 역시 실직은 물리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큰 부정적 효과를 지님을 보여주며, Blanchflower(1996)는 23개 국가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 실업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다.

53) 34개 OECD 국가의 개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 Boarini et al.(2012)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연구에서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실업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실업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여덟 배만큼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부정적 효과보다는 비금전적 요인에 의한 부정적 효과가 오히려 큼을 유추할 수 있다.

〈표 72〉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낮은 만족도를 지닌 사람의 비율, 1984-1989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전체						
평균	7.435	7.231	7.284	7.184	7.085	7.124
	(0.032)	(0.033)	(0.032)	(0.032)	(0.032)	(0.033)
비율	7.4	8.0	7.0	7.3	8.2	7.8
	(0.004)	(0.004)	(0.004)	(0.004)	(0.005)	(0.005)
관측수	4,183	3,658	3,416	3,410	3,197	3,080
고용						
평균	7.638	7.422	7.459	7.317	7.224	7.251
	(0.032)	(0.033)	(0.033)	(0.032)	(0.033)	(0.033)
비율	5.0	5.5	4.8	5.5	6.4	6.0
	(0.004)	(0.004)	(0.004)	(0.004)	(0.005)	(0.005)
관측수	3,530	3,043	2,856	2,858	2,661	2,563
낙담자						
평균	6.688	6.890	6.839	6.873	6.663	6.717
	(0.119)	(0.110)	(0.110)	(0.109)	(0.113)	(0.112)
비율	17.5	11.5	13.0	11.1	13.8	13.5
	(0.018)	(0.016)	(0.017)	(0.016)	(0.019)	(0.017)
관측수	445	382	385	370	347	392
실업						
평균	5.587	5.296	5.406	5.725	5.899	5.792
	(0.197)	(0.173)	(0.176)	(0.184)	(0.169)	(0.229)
비율	27.4	34.8	29.1	28.6	23.3	25.6
	(0.031)	(0.031)	(0.034)	(0.034)	(0.031)	(0.039)
관측수	208	233	175	182	189	125
실업경험 있는 고용						
평균	7.286	7.112	6.898	6.931	6.985	6.928
	(0.143)	(0.142)	(0.138)	(0.137)	(0.137)	(0.132)
비율	7.7	8.3	11.1	6.9	7.5	6.3
	(0.017)	(0.019)	(0.021)	(0.017)	(0.019)	(0.017)
관측수	248	206	226	218	200	207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출처 : Winkelmann and Winkelmann(1998)

이와 함께, 실직의 (부정적인) 영향은 평생 지속되고 실직으로부터의 심리적 회복 가능성은 낮다는 측면에서 행복에 있어서의 고용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Dolan et al., 2008). 특히, Lucas 외(2004)는 실업이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정값(set point)을 변화시킴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설정값 이론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여기서는 실직-에 대해 초기에는 반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 원래의 삶의 만족도를 회복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Lucas 외(2004)의 결과는 실직 후에 다시 고용이 된 경우에도 삶의 만족도는 실직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용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추정함에 있어 과거 실직경험의 유무를 통제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의 결과는 주관적 웰빙의 감소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 하기 보다는 실업이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인과 관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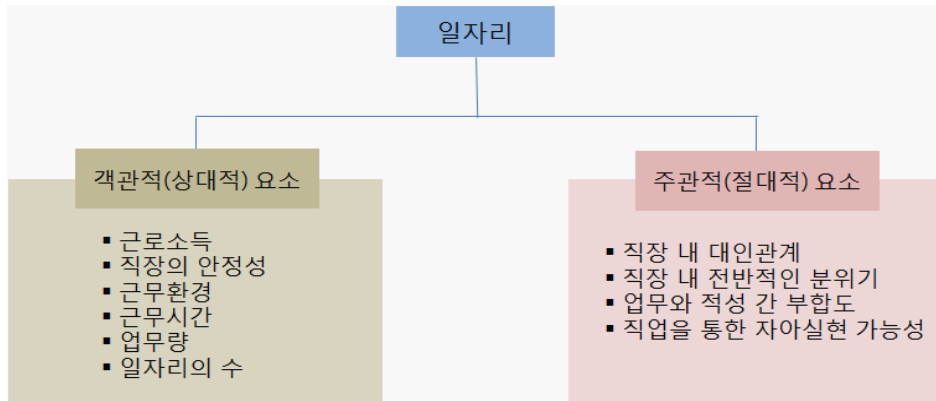
반면, 은퇴자나 학생과 같이 근로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업이 아닌 경우에는 삶의 만족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Blanchflower and Oswald, 2011).

일자리의 유무와 더불어 근로조건, 즉 일자리의 질(quality) 또한 중요하며, 이는 안정성, 소득, 혜택, 직장 내 관계, 동기부여 등에 의존한다(UNECE, 2010).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 수년간 고용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으며, 충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 대상이었다. 더불어, 개인의 행복에서 일자리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의 행복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일자리·소득·소비영역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행복과 관련하여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나 분석의 범위는 단순한 생계수단으로써만 고려되기 보다는 근무환경이나 조건, 근로자의 만족도 등이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일자리를 단순히 소득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상대적) 크기나 고용의 안정성 등이 분석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 사회 내에서의 자아감 실현, 개인적 자부심의 확립이 우선시 되는 경우 주관적 가치관에 기초한 일자리 여건의 부합도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림 14〉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의 구성요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가운데 개별 요소의 중요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시간할애를 위해 근로시간이 고용으로부터의 행복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직장생활 초기에는 급여나 대기업 여부 등이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기 퇴직에 대한 추세로 인해 직장생활 후기에는 안정성이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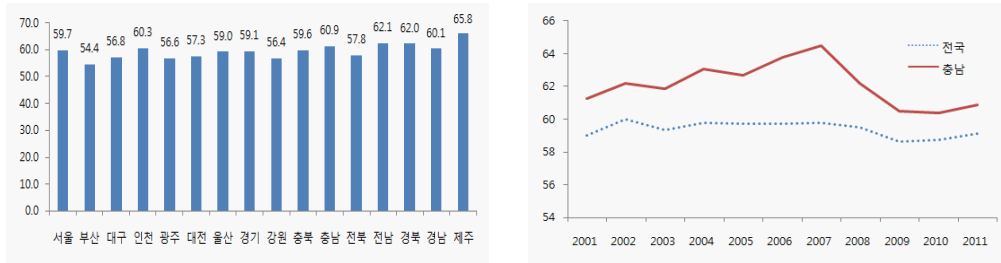
(2) 일자리 · 소득 · 소비의 현황

① 일자리 · 소득 · 소비의 객관적 요소

충남의 2011년 4/4분기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59.3%, 고용률은 58.1%, 실업률은 2.1%로 전국의 수치와 비교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이 각각 1%p, 0.4%p, 0.9%p만큼 낮은 수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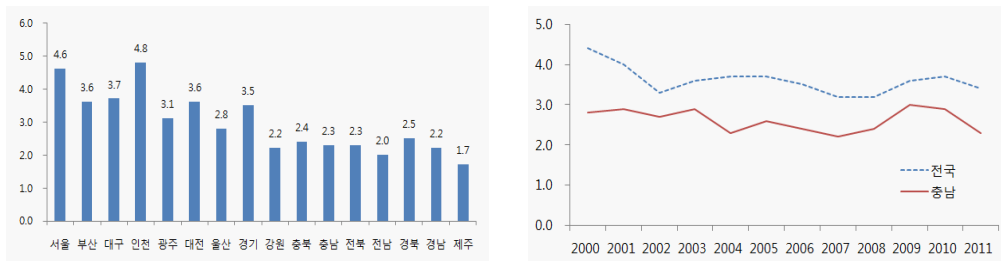
충남의 2011년 고용률은 60.9%로 나타나며, 이는 제주(65.8%), 전남(62.1%), 경북(62.0%) 다음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이 기간에 충남의 고용률은 전국의 수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2007년에는 충남의 고용률이 64.5%를 기록한 반면 전국의 수치는 59.8%에 불과해 전국대비 충남의 고용률이 4.7%p 높게 나타난다.

〈그림 15〉 충남의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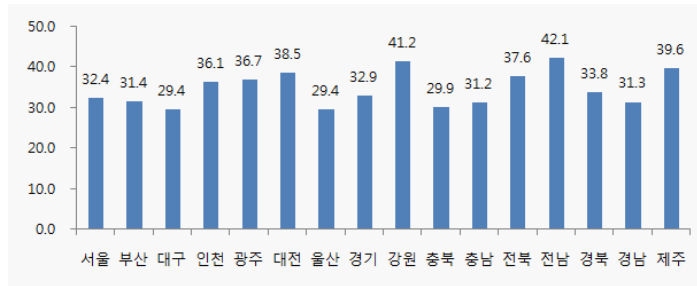
충남의 2011년 실업률은 2.3%로, 이는 제주(1.7%), 전남(2.0%), 강원과 경남(2.2%) 다음으로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2000~2011년의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동 기간에 충남의 연도별 실업률은 전국의 수치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추세는 전국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2004년에 전국의 수치는 전년대비 다소 상승한 반면 충남의 수치는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일 볼 수 있다.

〈그림 16〉 충남의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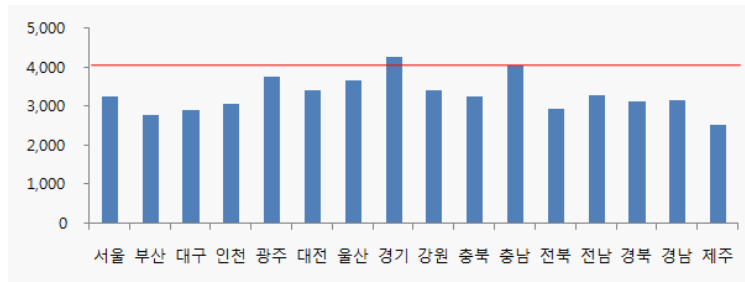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기준 충남은 31.2%로 전국의 33.3%에 비해 낮으며 타 시도와 비교해 대구와 울산(29.4%), 충북(29.9%)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반적인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충남이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형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7〉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



2008년 기준 3년차 1인 연간 급여액을 광역시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충남은 경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3년차 임금노동자들의 개인적 특성-즉, 학력, 숙련도 등과 지역 간 산업적 분포와 기업규모 분포의 차이 등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상에 한계가 있기는 하나 충남의 직장이 근로소득 측면에서는 타 지역에 뒤지지 않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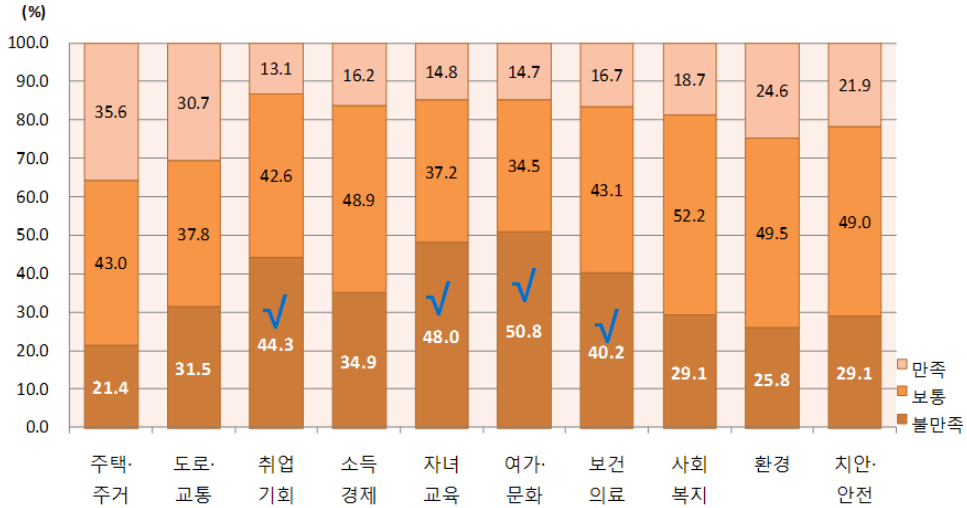
〈그림 18〉 3년차 1인 연간 급여액



② 일자리 · 소득 · 소비의 주관적 요소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수립을 위한 도민의식조사(2010년 7월)의 결과에 따르면, 취업기회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의 비중이 44.3%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만족하는 경우는 단지 13.1%에 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업기회의 불만족 비중은 여가문화시설(50.8%), 자녀교육(48.0%) 다음으로 높아 분야 간 상대적 비교에서도 취업기회에 대한 불만족이 심각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9〉 삶의 질 관련 도민만족도(2010)



이러한 결과는, 비록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연간 급여액 등에서 충남의 수치가 타 시도에 비해 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자리 영역에서 도민의 높은 기대수준으로 인해 도민의 행복감은 오히려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어떻게 일자리·소득·소비를 측정할 것인가?

행복지수에 포함되는 일자리에 대한 지표는 적정성·대표성·보편성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행복지수가 도출되고 이에 기초한 충남도민의 행복도 제고를 위한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에 대한 이상적인 지표는 일자리의 수(quantity)와 더불어 질(quality), 그리고 근로조건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expectation) 간 부합여부에 의존한다. 일자리의 수에 대한 이상적인 지표는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일자리의 수뿐만 아니라 원하는 근로시간과 연관된 노동시장참여의 실제 강도를 측정해야 한다. 고용과 실업은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전통적인 측정치이지만, 고용률은 사람들이 과소·고

용되었는지(즉, 원하는 시간보다 적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 강도의 대략적인 그림만을 제시한다.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UNECE-ILO-Eurostat Taskforce의 권고를 따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 혹은 내용을 포함한다 :

- 일자리의 안정성, 작업장에서의 상해, 불공정한 대우
- 근로소득과 혜택(fringe benefit). 이는 노동투입에 비해 합당하고 공정하게 (임금을) 지불 받는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수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생활기준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는가를 측정
- 고용의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 이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정규적인 고용에 의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언제 적절한 사회적 보호에 의존할 수 있으며 빈곤을 회피할 수 있는가를 측정

이와 같은 객관적 혹은 상대적 기준과 더불어 개인의 직장에 대한 주관적 혹은 절대적 만족도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3) 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1) 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에서의 선행연구 사례

관련 선행연구에서 일자리 영역 세부지표의 해외 사례는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 캐나다의 웰빙지수,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홍콩의 삶의 질 지수, OECD의 삶의 질 지수, Clavert-Henderson의 삶의 질 지수, Keizer et al.(2003)의 사회경제적 보장지표 등이 있다.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에서는 임금, 노동시간, 취업기회, 노동환경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 캐나다의 웰빙지수에서는 일자리 영역관련 지표가 생활수준과 여가시간 사용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소득과 부의 분배, 빈곤, 소득변화, 경제적 안정, 직업 안정성을 포함하고 후자는 유급노동·무급노동·여가의 균형,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는 시간활

용과 생활수준을 통해 일자리 영역관련 지표들을 포함하는데, 전자는 총 근로시간 지표로 후자는 가구소득, 일상생활의 소득충분도를 포함한다. 홍콩의 삶의 질 지수는 실업률, 현재 경제상황지수, 실질임금지수를 포함한다.

반면,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OECD의 삶의 질 지수는 고용률, 장기실업률, 비자발적 비상용직 고용, 상용직 고용의 평균 연간 근로소득, 임시직 고용, 작업장 내 사고를 일자리 영역관련 지표로 포함한다. Calvert-Henderson의 삶의 질 지수는 OECD와 마찬가지로 실업률, 시간제 노동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등을 포함하며, 이에 더불어 평균 실업기간, 실업사유 등을 포함하여 고용의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지표에 반영한다. Keizer et al.(2003)의 사회경제적 보장지표는 세부지표들을 고용보장과 노동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고용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고용계약의 만료 전 공지기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포함하고 후자는 사고의 횟수나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고용자의 수 등을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영역의 세부지표에는 고용률,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취업기회 등이 포함됨을 볼 수 있다.

<표 73> 일자리 영역 세부지표 구성의 해외 사례

구분		영역 및 지표 제안
국 가	일본의 신국민 생활지표 (1992년~)	임금, 노동시간, 취업기회, 노동환경 등의 상황
	캐나다의 웰빙 지수 (1999년~)	생활수준(소득과 부의 분배, 빈곤, 소득변화, 경제적 안정, 직업안정성), 여가시간사용(유급노동·무급노동·여가의 균형,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1998년~)	시간활용(총 근로시간 지표), 생활수준(가구소득, 일상생활의 소득충분도)
	홍콩의 삶의 질 지수 (2007)	경제영역(실업률, 현재 경제상황지수, 실질임금지수)
	OECD의 삶의 질 지수	고용률, 장기실업률, 비자발적 비상용직 고용, 상용직 고용의 평균 연간 근로소득, 임시직 고용, 작업장 내 사고

구분		영역 및 지표 제안
국제기관	Calvert-Henderson QoL Indicators	고용(노동인구, 실업률, 평균 실업기간, 실업사유, 시간제 노동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2개 이상 직업보유자수)
	Keizer et al.(2003)의 “사회경제적 보장의 지표들”	고용보장(고용주가 노동관계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기 전에 공지해야 하는 기간의 길이, 고용계약 종료 전에 공지하는 기간의 길이, 임시직·계약직으로 고용된 사람의 비율), 노동조건(육아휴직·친척 간병·병가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든 고용자의 수, 고용인 100,000명당 노동 주 사고의 횟수, 전임 고용자의 주중 노동시간)

국내 사례 가운데 통계개발원(2011)의 삶의 질 지수는 일자리 영역 관련 세부지표들을 고용 상태와 근무환경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비농가 실업률, 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 비중, 실업급여 수혜율을 포함하고, 후자는 주당 근로시간, 실질임금총액, 성별 임금격차, 산업 재해율, 일자리 만족도를 포함한다.

윤강재·김계연에 의한 OECD국가의 행복지수산정 및 비교에서는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에 가구 가처분소득과 여가시간이 포함되고, 사회적 요인 가운데 자립측면에서는 고용률과 미취업가구원 비율을 포함하며, 형평성 측면에서는 성별 임금격차를 포함한다.

<표 74> 일자리 영역 세부지표 구성의 국내 사례

구분		세부지표
통계개발원의 “삶의 질 지수”(2011)	고용상태	비농가 실업률, 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 비중, 실업급여 수혜율
	근무환경	주당 근로시간, 실질임금총액, 성별 임금격차, 산업재해율, 일자리 만족도
윤강재·김계연의 “OECD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경제적 자원 연관 요인	가구 가처분소득, 여가시간
	사회적 요인 - 자립	고용률, 미취업가구원 비율
	사회적 요인 - 형평성	성별 임금격차

두 연구에서는 고용률과 성별 임금격차가 공통적으로 일자리 영역에서의 세부지표로 포함됨을 볼 수 있다.

(2) 일자리·소득·소비영역에서의 행복지표 체계의 구축

충남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일자리/소득/소비 영역에서의 세부 객관적 지표는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에 기초하여 고용률, 청년층 고용률, 고령층 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실질임금,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변수가 실제 충남 행복지수의 세부지표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다양한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일례로 OECD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는 해당 지표가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이 아닌 성과(outcome)이어야 함을 제기한다.

<표 75> 일자리/소득/소비 영역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지표명	선정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고용률	◎	◎	△	◎	◎	○	◎
청년층 고용률	◎	◎	○	◎	◎	○	◎
고령층 고용률	◎	◎	○	◎	◎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	◎	○	◎	◎
여성실업률	◎	◎	△	○	○	○	◎
비정규직 비중	◎	◎	△	○	◎	◎	◎
실질임금	◎	x	△	◎	◎	◎	x
성별 임금격차	◎	x	△	◎	◎	◎	x

- 주 : 1) 결과(outcome)지표는 해당 지표가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이 아닌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여부
 2) 시계열 측정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로 측정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3) 가변성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여부
 4) 보편성은 해당 지표가 삶의 질이나 웰빙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5) 영역 간 중복은 해당 지표가 타 영역에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6) 간접성은 해당 지표가 일반인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7) 적용성은 해당 지표가 충남에 대해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8) 선정기준에 대한 부합성은 ◎ : 기준에 매우 부합함, ○ : 대체로 부합함, △ : 보통, x : 부적합으로 구분

더불어, 충남의 행복지수관련 세부지표는 시계열 측정이 가능하고, 적어도 연도별로 변화를 보이며(가변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포함되고(보편성), 영역 간 중복되지 않으며, 일반인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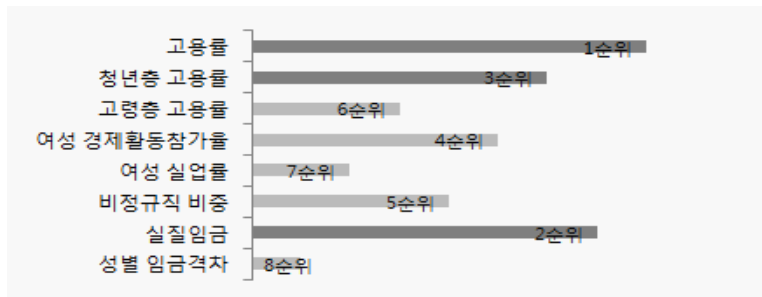
상에서 접할 수 있고(간결성), 충남이라는 지리적 단위에서 측정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적용성).

고용률, 청년층 고용률, 그리고 고령층 고용률은 모두 결과지표에 해당하며, 시계열 측정이 가능하고, 보편성, 영역 간 중복성, 그리고 적용성에서 지표로서 부합하나 가변성이나 간결성에서 다소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실업률은 기혼여성에 한해 가족/공동체 영역과 다소 중복의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임금과 성별 임금격차는 적용성과 시계열 측정 가능성에서 지표로서의 부합성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3)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지표 검토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일자리/소득/소비 영역에서 행복지수의 객관적 세부지표에 대한 우선순위는 고용률, 실질임금, 청년층 고용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 비중, 고령층 고용률, 여성 실업률, 성별 임금격차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20> 충남의 일자리/소득/소비 영역 객관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상대적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청년층 실업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취업시장에서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저평가된 인식과 지방에서의 청년층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해 도민의 청년층 고용률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을 추측할 수 있다. 고용률과 실질임금 간 우선순위에서 고용률이 높다는 사실은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자체보다는 일을 함으로 인한 자아감이나 자아성취 혹은 직장 내 대인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감이 적어도 충남도민에 있어서는 보다 중요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4순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 일부 기인할 것이다.

<표 76> 충남의 일자리/소득/소비에 대한 도민 만족도(%)

구분		구성비율(%)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만족	2.27
	약간 만족	12.24
	보통	53.11
	다소 불만족	25.58
	매우 불만족	6.75
직장 내 스트레스 정도	전혀 없음	2.32
	거의 없음	9.79
	보통	38.20
	다소 있음	36.67
	매우 많음	13.02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3.59
	약간 만족	14.99
	보통	48.57
	다소 불만족	24.59
	매우 불만족	8.20

충남의 일자리 여건에 대한 도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2.27%, ‘약간 만족’ 12.24%, ‘보통’ 53.11%, ‘다소 불만족’ 25.58%, ‘매우 불만족’ 6.75%로 나타났으며, 이는 만족하는 경우의 비중이 단지 14.51%인데 반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의 두 배가 넘는 32.33%에 달해 충남도민은 일자리에 대한 충남의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체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일을 하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스트레스의 정도에 관한 질문에는 ‘전혀 없음’ 2.32%, ‘거의 없음’ 9.79%, ‘보통’ 38.20%, ‘다소 있음’ 36.67%, ‘매우 많음’ 13.02%로 답하여, 직장 내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3.59%, ‘약간 만족’ 14.99%, ‘보통’ 48.57%,

‘다소 불만족’ 24.59%, ‘매우 불만족’ 8.20%로 나타난다. 충남도민의 경우 실질임금이 일자리/소득/소비 영역에서 고용률 다음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에 비해 불만족의 비중이 훨씬 높아 경제적 이유에 의한 행복지수 저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충남의 행복지수관련 일자리/소득/소비 영역에서의 세부지표는 고용상태와 근무환경으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상태에 관한 세부지표를 다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다시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긍정적 지표로는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는 고용률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객관적/부정적 지표로는 비농가 실업률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긍정적 지표로는 일 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고려할 수 있다.

<표 77> 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의 지표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일자리 소득 소비 부문	고용 상태	고용률(청년층, 고령층),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실업률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비농가 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근무 환경	실질임금 총액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성별 임금격차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

반면, 근무환경관련해서는 객관적/긍정적 지표로 실질임금총액, 객관적/부정적 지표로 성별 임금격차, 주관적/긍정적 지표로는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주관적/부정적 지표로는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질 수 있으나,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가 표본의 거주지에 충분한 정보-즉, 표본의 충남 거주여부-가 제공되지 않아 적용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충남 행복지수의 세부지표는 관련 선행연구나 기존 사례, 다양한 선정기준-결과지표 여부, 시계열 측정 가능성, 가변성, 보편성, 영역 간 비중복성, 간결성, 적용성-에 대한 충족 여부,

그리고 도민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충남 행복지수 일자리/소득/소비 영역의 세부지표는 객관적 지표로서 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비정규직 비중을 포함하고 주관적 지표로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직장 내 대인관계 만족도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4) 일자리 · 소득 · 소비영역에서의 정책방향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충남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의 정책목록에서 최상위에 위치해 오고 있다. 특히, 사회적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육성, 구인과 구직 간 미스매치(mismatch)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의 도입, 청년인턴제, 임금피크제, 기업유치 등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에서의 노력들이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들의 소비를 가능케 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기능 이외에 일을 통한 자아성취나 직장 내 대인관계의 형성을 통해 2차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충분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충남의 일자리 가운데 상당수는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은 구인의 어려움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생산직 일자리에 대한 회피일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이 기존 구인구직 연결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다.

또한, 일자리는 있으나 정주여건의 열악성으로 근무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시범사업을 예산군에 시행하고 있고 충남도가 상생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자인 근로자와 기업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일자리가 경기변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으로써 정책에 의한 일자리 창출-특히,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성 있는 일자리의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등을 포함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의 창출에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일자리와 더불어 도민의 관심은 근로를 통한 실질소득에 높게 나타나고 현재의 소득수준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정책을 통한 명목소득의 상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도내 생활물가-이러테면, 주택가격-의 안정성에 대한 관리를 통해 도민의 실질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가족 및 공동체 부문

1) 행복에 있어 가족 및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1)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필요성

① 삶의 질

삶의 질은 경제적 상태를 중심으로 개인과 사회의 상태를 파악하려는 시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제시되었다. 경제적 자원의 소유만으로는 다른 삶의 측면 - 행복, 만족감, 형평, 자유 등 - 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 ‘삶의 질’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Cummins, 2000). 학문적 개념으로 시작한 삶의 질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많은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행정을 이끄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Diener, Lucas, Schimmack and Helliwell, 2009).

‘삶의 질’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때문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개념이 개인의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평가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고 있다(Diener and Suh, 1997). 또한 ‘삶의 질’은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상황까지 포함하는 규범적 측면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이 개념은 사회 구성원의 목표, 열망, 태도 등을 함께 포함한다. 그래서 삶의 질은 구성원 개인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 이것이 개인의 삶에 여러 방식으로 연관이 된 공평(equality), 형평(equity), 자유, 유대감 등이 자연스럽게 삶의 질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이다.

② 가족 및 공동체의 의의

가족은 개인이 출생 후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1차적인 집단이다. 모든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근본적 원천이다. 구체적으로 구성원 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은 개인의 삶의 질에 너무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만족도나 부모 자식간 만족도는 전체 삶의 만족도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가구형태(living arrangement)에 따라 육

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차이가 난다(이민아, 2010). 나이든 부모의 건강상태는 장기적으로 중년인 자녀의 경제적 상황과 삶의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이윤석, 2011). 때문에 가족 영역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언제나 살펴봐야 하는 분야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의 가족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저출산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늘어가고 있다(한국인구학회 2011). 더 이상 여성들은 가족에 안주하고 있지 않고 경제적 안정과 자아의 실현을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성지미·안주엽, 2006). 자녀양육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앞 세대에 비해 너무나 커져 버렸다(김지경·송은경, 2004). 최근 청년들은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성인으로의 이행기(transition into adulthood)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가족구성원의 역할구조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 방식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가족 영역을 살펴볼 때 최근 변화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웃공동체와 친구공동체는 사회적 연결(connection)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다. 이웃이나 친구 등 공동체 소속감과 더불어 사회신뢰, 사회참여 등에 대한 부분으로 삶의 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사회학적 연구들은 개인의 특성과 함께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삶의 기회와 방식을 구성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 중 이웃이나 친구 등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s)는 특히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친밀한 관계의 조언이나 도움은 건강의 유지와 일상의 구성에 주요한 사회적 통제 기제(social control mechanism)이다. 이웃,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 의해 유지 또는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삶의 질에 매우 큰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는 이렇게 삶의 질에 대한 근본적 연관을 갖고 있다.

최근 현대 사회는 급격한 개인주의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고 가족이나 지역 등 1차적 관계가 갖는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있다(Coontz, 1997).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삶의 질에서 공동체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친밀한 관계의 패턴은 개인을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사회지표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가족 및 공동체의 현황

충청남도의 행복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일반적 모습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을 대부분 전국조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특정 도 지역만 연구하기에는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이에 충청남도만 관찰하기에 충분한 전국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충청남도의 가족과 공동체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통계청은 2010년 전국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각 광역단체의 특징을 보고하였다. 또 2010년과 2006년 사회조사에는 가족과 사회참여에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충청남도의 여러 모습 중 가족과 공동체와 관련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자.

① 충청남도의 인구

다음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현황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표 78〉 지역별 인구규모 및 인구밀도

시 도	2005년			2010년			증감(B-A)	
	인 구 (A)	구성비	인구밀도	인 구 (B)	구성비	인구밀도	인 구	증감률
전 국	47,279	100.0	474	48,580	100.0	486	1,301	2.8
특·광역시	22,249	47.1	4,161	22,378	46.1	4,158	129	0.6
서울	9,820	20.8	16,221	9,794	20.2	16,182	-26	-0.3
부산	3,524	7.5	4,609	3,415	7.0	4,457	-109	-3.1
대구	2,465	5.2	2,787	2,446	5.0	2,767	-18	-0.7
인천	2,531	5.4	2,546	2,663	5.5	2,592	131	5.2
광주	1,418	3.0	2,827	1,476	3.0	2,944	58	4.1
대전	1,443	3.1	2,673	1,502	3.1	2,782	59	4.1
울산	1,049	2.2	992	1,083	2.2	1,023	33	3.2
도지역	25,030	52.9	265	26,202	53.9	277	1,172	4.7
경기	10,415	22.0	1,028	11,379	23.4	1,123	964	9.3
강원	1,465	3.1	88	1,472	3.0	89	7	0.5
충북	1,460	3.1	197	1,512	3.1	203	52	3.5
충남	1,889	4.0	220	2,028	4.2	235	139	7.3
전북	1,784	3.8	221	1,777	3.7	220	-7	-0.4
전남	1,820	3.8	151	1,741	3.6	142	-78	-4.3
경북	2,608	5.5	137	2,600	5.4	137	-8	-0.3
경남	3,056	6.5	291	3,160	6.5	300	104	3.4
제주	532	1.1	288	532	1.1	288	0	0.0

자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총인구는 2,028천명으로 전체 48,580천명 중 4.2%에 해당한다(통계청 2011). 충청남도의 인구밀도는 235명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밀도 486명 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다. 그만큼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한다. 그래도 같은 도 지역 중 경상남도(300명)와 제주(288명)를 제외하고는 제일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나 2005년에 비해 139만명이 증가했으며 증감률은 7.3%이다. 이는 9개 도 중 증감률이 9.3%인 경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 유지 및 증가가 도정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농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 지역 중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의 고령인구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79〉 지역별 고령인구 규모

시 도	2005년			2010년			증감(B-A)	
	인구	65세 이상 인구(A)	비율	인구	65세 이상 인구(B)	비율	인구	증감률
전 국	47,041	4,365	9.3	47,991	5,425	11.3	1,059	24.3
서 울	9,763	711	7.3	9,631	929	9.6	218	30.7
부 산	3,513	304	8.7	3,393	397	11.7	93	30.7
대 구	2,456	197	8.0	2,432	252	10.3	55	28.0
인 천	2,518	179	7.1	2,632	232	8.8	53	29.9
광 주	1,414	101	7.2	1,466	133	9.1	32	31.6
대 전	1,439	101	7.0	1,490	131	8.8	30	29.8
울 산	1,045	56	5.3	1,072	75	7.0	19	34.5
경 기	10,341	753	7.3	11,196	999	8.9	246	32.7
강 원	1,461	188	12.9	1,464	226	15.5	38	20.4
충 북	1,454	176	12.1	1,496	208	13.9	32	18.4
충 남	1,879	268	14.2	2,000	310	15.5	43	15.9
전 북	1,779	253	14.2	1,766	290	16.4	37	14.5
전 남	1,815	321	17.7	1,729	353	20.4	32	10.0
경 북	2,595	374	14.4	2,575	430	16.7	56	15.0
경 남	3,041	330	10.8	3,120	391	12.5	62	18.7
제 주	531	55	10.4	528	68	12.8	12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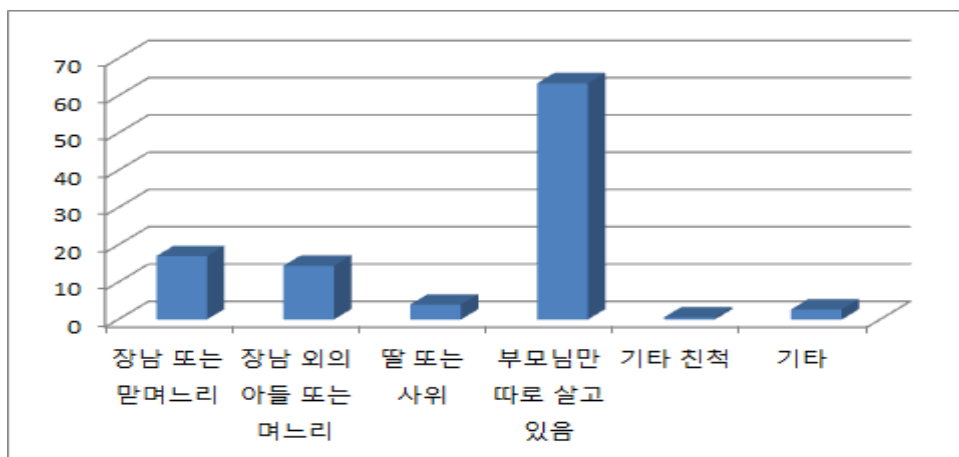
자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충청남도는 2010년 전체 인구는 65세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 중 15.5%이다. 이 비율은 전체 도 지역 중에서는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는 각각 20.4% 16.4%이고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경상남도과 충청북도는 12.5%와 13.9%이다. 높은 고령화 수준은 농촌지역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이들은 많은 경우 1인가구를 형성하여 가족의 도움을 필요할 때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성질병에 많이 시달려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예산의 부족 등 많은 이유로 충분한 정책적 배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② 충청남도의 가구구성

현재 한국의 가장 주요한 가구형태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다(통계청 2011). 즉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것이 가장 평균적인 모습이다. 그러면 그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지낼까? 충청남도 각 가구주 중 부모가 생존한 경우는 53.3%이다(통계청 2010). 부모가 생존한 가구주 중 부모와 같이 사는 가구주는 14.7%이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가구주 중 부모가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와 떨어져 사는 셈이다. 그럼 그 떨어져 사는 부모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림 21〉 가구주와 따로 사는 부모의 주거방식



자료: 사회조사 2010

따로 살고 있는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와 살지 않고 어른끼리만 사신다. 201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따로 살고 있는 부모 중 63.4%는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17.0%가 장남과 살고 계시며 14.4%는 차남 이하 아들과 사시고 계시다. 딸 또는 사위와 사는 비율은 4.0%에 불과하다. 한국의 노부모들은 이전에는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령의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가능하면 독립해서 부부끼리 살고 싶어한다(통계청 2008). 현재 충청남도 가구주들의 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선호에 맞게 살고 있는 듯 하다.

③ 충청남도의 사회참여

그러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도민들의 사회참여 정도를 살펴보자. 조사 결과 충청남도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 보다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15세 이상 사람들에게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 물어보았다.

〈표 80〉 사회활동 참여 현황

(단위 : 천명, %)

	15세이상	사회 활동 미참여	사회 활동 참여									
				사회 분야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정치 분야	종교 분야	지역 단체	친목 단체	교육 단체	기타
전 국	39,692 (100.0)	26,967 (67.9)	12,725 (32.1)	1,079 (2.7)	820 (2.1)	2,225 (5.6)	119 (0.3)	4,069 (10.3)	672 (1.7)	6,605 (16.6)	825 (2.1)	81 (0.2)
서 울	8,192 (100.0)	5,500 (67.1)	2,692 (32.9)	200 (2.4)	173 (2.1)	506 (6.2)	26 (0.3)	1,032 (12.6)	99 (1.2)	1,254 (15.3)	179 (2.2)	22 (0.3)
부 산	2,889 (100.0)	1,981 (68.6)	909 (31.4)	69 (2.4)	59 (2.0)	149 (5.2)	7 (0.2)	230 (8.0)	42 (1.5)	529 (18.3)	53 (1.8)	5 (0.2)
대 구	2,011 (100.0)	1,423 (70.8)	588 (29.2)	54 (2.7)	41 (2.0)	111 (5.5)	4 (0.2)	156 (7.8)	25 (1.3)	319 (15.9)	41 (2.0)	3 (0.1)
인 천	2,166 (100.0)	1,523 (70.3)	643 (29.7)	46 (2.1)	42 (2.0)	103 (4.7)	5 (0.2)	241 (11.1)	27 (1.2)	296 (13.6)	42 (1.9)	4 (0.2)
광 주	1,181 (100.0)	802 (68.0)	378 (32.0)	31 (2.7)	28 (2.4)	65 (5.5)	5 (0.4)	126 (10.6)	15 (1.2)	192 (16.3)	28 (2.4)	2 (0.2)
대 전	1,216 (100.0)	811 (66.7)	404 (33.3)	35 (2.9)	26 (2.1)	71 (5.8)	3 (0.3)	135 (11.1)	17 (1.4)	204 (16.8)	30 (2.5)	3 (0.2)
울 산	864 (100.0)	574 (66.4)	290 (33.6)	31 (3.6)	22 (2.5)	61 (7.1)	3 (0.4)	62 (7.2)	16 (1.9)	173 (20.1)	19 (2.2)	1 (0.2)
경 기	9,058 (100.0)	6,283 (69.4)	2,775 (30.6)	209 (2.3)	180 (2.0)	500 (5.5)	26 (0.3)	993 (11.0)	137 (1.5)	1,294 (14.3)	190 (2.1)	18 (0.2)
강 원	1,206 (100.0)	772 (64.0)	434 (36.0)	45 (3.7)	24 (2.0)	76 (6.3)	4 (0.3)	114 (9.5)	35 (2.9)	253 (21.0)	28 (2.3)	2 (0.2)
충 북	1,233 (100.0)	830 (67.3)	403 (32.7)	39 (3.2)	24 (2.0)	66 (5.3)	3 (0.3)	105 (8.5)	29 (2.3)	236 (19.1)	28 (2.3)	2 (0.2)
충 남	1,654 (100.0)	1,074 (64.9)	581 (35.1)	49 (3.0)	33 (2.0)	85 (5.2)	4 (0.2)	166 (10.0)	41 (2.5)	341 (20.6)	33 (2.0)	4 (0.2)
전 북	1,458 (100.0)	967 (66.3)	491 (33.7)	43 (3.0)	31 (2.1)	77 (5.3)	5 (0.4)	182 (12.5)	27 (1.9)	245 (16.8)	31 (2.1)	3 (0.2)
전 남	1,435 (100.0)	964 (67.1)	472 (32.9)	47 (3.3)	30 (2.1)	67 (4.6)	5 (0.4)	151 (10.5)	30 (2.1)	261 (18.2)	24 (1.7)	2 (0.2)
경 북	2,161 (100.0)	1,483 (68.6)	678 (31.4)	73 (3.4)	42 (1.9)	113 (5.2)	7 (0.3)	169 (7.8)	56 (2.6)	398 (18.4)	38 (1.7)	4 (0.2)
경 남	2,546 (100.0)	1,707 (67.1)	838 (32.9)	89 (3.5)	54 (2.1)	151 (5.9)	9 (0.3)	176 (6.9)	62 (2.4)	516 (20.3)	50 (1.9)	6 (0.2)
제 주	422 (100.0)	273 (64.6)	150 (35.4)	18 (4.3)	11 (2.7)	24 (5.7)	2 (0.4)	30 (7.0)	14 (3.3)	95 (22.5)	10 (2.4)	1 (0.2)

자료 : 2010년 전국인구주택총조사 (사회활동은 다중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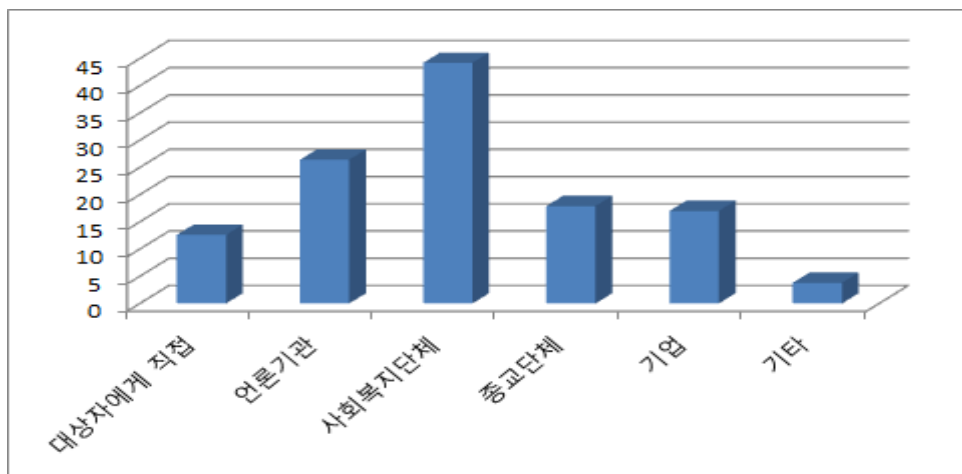
사회활동 참여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32.1%였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강원도와 제주도와 함께 사회활동 참여율이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충청남도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35.1%이다. 이를 활동별로 나눠서 보면 친목단체 참여율이 20.6%로 가장 높다. 살면서 다양한 경우에 따라 알게 된 사람들끼리 만든 모임이 가장 비율이 높다. 다음으로는 10.0%로 그 다음이다. 교회

나 사찰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 도민들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 사회 분야 활동은 물론 지역이나 침묵 활동조차 하지 않은 도민의 비율도 64.9%나 된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변변한 사회활동을 가지 못하면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려워진다.

참여와 함께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 기부 등 사회적 환원 행위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재능을 사회에 나눠줌으로써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행위이다. 충청남도 도민은 후원이나 기부를 얼마나 할까. 2006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 도민은 전체 인구 중 31.9%만이 후원이나 기부를 했다고 한다. 이는 24.2%인 광주나 27.9%인 대전보다는 높은 비율이지만 37.5%인 강원도나 35.5%인 경상북도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 일단 기부를 하는 충청남도 도민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림 22〉 사회활동 참여 현황



자료 : 2006년 사회통계조사

가장 많은 경우는 44.2%인 사회복지단체를 통해서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언론기관으로 26.4%이다. 아마도 연말, 설날, 추석 등 주요한 때에 언론기관에서 실시하는 모금행사를 통해 기부 및 후원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어떻게 가족 및 공동체를 측정할 것인가?

지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서은국·구재선 2011). 그래야지 지표의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정책의 목표 및 타깃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행복과 관련해서 가족 및 공동체 부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다양한 측면 중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과 직접인 관련이 있는 측면을 선정해야 한다. 가족과 공동체의 매 시기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어떤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각 지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잘 종합되어야 한다(Schneider, 1976).

또한 각 지표는 정책 방향 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Sen, 1985). 이를 위해 시계열적으로 자료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간적 추이를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시된 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수정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

3)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1)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선행연구 사례

① 일본의 사회지표

일본은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의 통계적 지표로서 GDP가 지닌 양적 단일경제지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생활의 다면적이고 풍부한 질적 측면을 측정하여 사회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지표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1986년 신사회지표(new social indicators: NSI), 1992년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icators: PLI) 그리고 2002년 생활개혁지수(life reform index: LRI) 등으로 이름과 체계, 추산방법 등이 바뀌면서 이어졌다. 이중 가족과 공동체와 관련 있는 지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1〉 일본의 생활개혁지수 중 가족과 공동체 관련 지표(2004년)

구조개혁측면	관련정책(평가포인트)	개별 지표
애키우기 좋은사회	애키우는 가정지원	패밀리서포트센터수(+) 보육원아동수(0~5세인구만명대비: +) 유치원재적율(3~5세인구만명대비: +) 아동관수(3~11세인구만명대비: +) 아동학대상담처리건수(-)
여성이 활약하기 좋은사회	맞벌이 가정지원 여성의 취업지원 여성의 사회진출	보육원아동수(0~5세인구만명대비: +) 연장보육실시시설수(대상천세대당: +) 방과후아동학급설치수(6~10세인구만명대비: +) 여성고용취업율(+) 여성관리직비율(+) 여성의자원봉사활동참여율(+)
고령자가 활기넘치는 사회	고령자의 취업지원 시설의 확충 개호서비스의 충실 사회참여의 촉진	65세이상취업율(+) 실버인재센터등록자수(+) 특별요양노인흡정원수(65세이상인구만명당: +) 경비노인흡정원수(65세이상인구만명대비: +) 주간서비스시설수(65세이상인구만명대비: +) 고령자의자원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시간(+)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지수들은 주로 관청 기록이나 통계 자료 등 기존 자료들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지표들을 위해 따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생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리고 지표에 근거한 정책 목표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패밀리서포트센터의 수라든지 실버인재센터 등록자의 수 등은 개념이 분명해서 매년 추이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약 지역 및 대상도 비교적 용이하게 알아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지표를 올리기 위한 정책 방향도 명확하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측면에 대한 지표로는 실재 국민의 주관적 측면을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여성의 취업률이나 관리직비율 등은 직장에서 여성들의 객관적 위치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즐거움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수치 중심의 지표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정책을 찾아내기 난망하다.

② 캐나다 웰빙지수

캐나다 웰빙 지수(이하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는 인간의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다차원적 척도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CIW는 생활수준(Living Standards), 건강(Health), 공동체 활력(Community Vitality), 민주적 참여(Democratic Engagement), 여가와 문화(Leisure and Culture), 시간사용(Time Use), 교육(Education), 환경(Environment) 등 모두 여덟 개 하부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CIW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캐나다인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단일한 지수와 각 하부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한 지수(Headline indicators)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중 가족과 공동체 부문은 공동체 활력과 시간사용 영역에 들어가 있다.

〈표 82〉 연령/생애단계별 잠재적 시간이용 지표 및 웰빙과의 연관성

연령/생애단계	유형	웰빙과의 연관성	잠재 시간이용 지표
아동/청소년	객관적	+	미취학/취학 아동을 위한 독서시간
	객관적	+	청소년을 위한 숙제도와주기 시간
	객관적	-	아동/청소년의 TV시청 시간
	객관적	-	아동/청소년의 비교육적 컴퓨터 이용시간
	객관적	+	아동/청소년의 체계적인 특별활동시간
	객관적	-	청소년의 비체계적인 활동시간
	객관적	-	학생의 근로시간
	객관적	+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시간
	객관적	+	부모와 보내는 시간
	객관적	+	가정내에서 부모와의 식사시간
	객관적	-	부모의 근무제(오랜 근무시간)
	객관적	-	부모의 근무제(비정기적 근무시간)

〈표 83〉 공동체 활력 영역의 지표들

구분	개념	지표
사회 참여	사회 참여	· 집단활동 참여
		· 자원봉사
		· 자선기부
	시민 참여	*민주적 참여 영역에 포함
	경제적 참여	*생활수준 영역에 포함
사회적 지원	사회 연결망 규모	· 가까운 친척의 수
		· 가까운 친구의 수
		· 가까운 이웃의 수
		· 독거 여부
	호혜성	· 타인 돕기
		· 도움 수혜여부
지역사회 안전	신뢰	· 사람들에 대한 신뢰
	다양성 존중	· 연결 유대
		· 차별 경험
	이타주의	· 타자에 대한 배려
	소속감	·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 고립감

캐나다 웰빙 지수는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시간사용(time-use) 자료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숙제 도와주기와 같이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측정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같이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가족간 관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가족구성원 간 관계는 함께 보내는 시간 못지않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인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관계의 주관적 측면은 같이 보내는 시간을 통해 포착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시간 사용 자료는 도 단위 조사에서 모으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해야 한다. 응답자에게 매우 큰 기억 부담을 안겨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 수준에서 모을 수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지역 단위에서 시도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생활시간자료를 모이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대부분 국가 단위에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공동체 부문 지표들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개념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를 포착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표와도 잘 부합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측면을 조사하기에 차용을 할 만한 설문 문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2)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행복지표체계의 구축

① 범주 설정

많은 연구들이 가족과 공동체는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통해 삶의 질에 긍정적인 기여한다(박대식 외 2인, 2005; 심수진·이희길 2009). 그러나 몇몇 지수(예, 캐나다 웰빙 지수(CIW))에는 공동체 활력 영역에 독거여부나 친척 수 등 몇몇 가족 관련 지표들을 포함시키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몇몇 지표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분리하여 각각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신생활국민지표는 양육, 교제/관계 영역을 따로 두고 각각의 영역에서 육아와 교육 그리고 지역교류와 사회활동 상황과 관련된 지표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과 공동체를 구분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 문화권마다 가족과 공동체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두 영역을 굳이 하나로 통합해 다룰 필요가 없는 사회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정부의 정책 서비스들이 가족과 공동체에 의해 보완되거나 또는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복지체제에서 두 영역의 중첩과 교차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할 때 두 분야를 분리하면 우리의 행복에 대해 불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교육과 전수가 자주 가족과 공동체의 상호관계에 의해 실현된다. 때문에 두 영역을 별개로 취급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삶의 질 논의에서 가족과 공동체는 하나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가족과 공동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돌봄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주요 기제로 파악한다. 한국인은 가족 내에서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받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 결국 이러한 가족과 공동체의 기능에 의해 삶의 질이 결정된다.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두 영역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개인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통하여 보살핌, 지원, 안전을 제공받으며, 교육, 의료, 여가, 교제 등의 기회들을 누린다. 또한 정체감, 소속감, 사회적 가치 및 규범은 이 기관들을 통해 재생산된다.

이러한 가족과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사회지표는 “가족관계” “가족형태” “일 가족 양립” “사회적 관계” “공동체 참여” “사회적 신뢰” 등 중분류 범주로 구성한다. 가족관계는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족 구성원과의 친밀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양한 감정적 자원 역할을 한다. 특히나 일상에서 또는 삶에서 경험하

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의 자양분 역할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효과적 전달자 역할을 한다. 행복에 미치는 가족관계의 특성은 다양한 형태 가족 상호작용(대화 등 접촉,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갈등, 구성원 간 폭력), 그리고 각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주관적 전체적 만족도 등을 통해 측정한다(박혜경 외 3인, 2004).

최근 가족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반 핵가족에 비해 소년소녀가장가구, 한 부모 가족, 독거노인 가족이 보살핌과 정서적 만족을 훨씬 덜 느낀다고 한다. 가령 늘어나는 이혼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조손가족은 그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아동은 성장기 사회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삶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김혜영 외 2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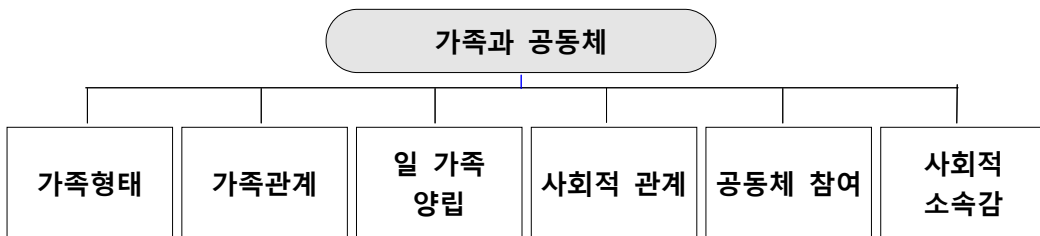
일 가족 양립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관심 분야이다. 남편의 경제적 위치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은데다가 여성들도 직장에서 자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커짐에 따라 기혼여성들도 기회만 있으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이 존재하는 전통적 역할 수행 방식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력을 잘 이용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기혼 남녀가 일과 가족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여부는 각 부부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전체의 번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일 가족 양립 정도는 행복을 측정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다(이윤석, 2010).

다음으로 공동체 부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족과 공동체가 제공하는 물질적 및 심리적 지원에 대해 살펴보자.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외로움은 어느 개인이든지 피해갈 수 없다. 이때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지지는 고통과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주요한 원천이다. 사회적 지지는 친밀한 관계속 상호작용, 배려나 관심, 소속감 등 개인 간의 구체적 상호작용에서부터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정서적 물질적 도움을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영향에 대해 비공식적 관계, 소속감, 공식적 제도 등이 강조된다.

기존 연구들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지역공동체 등으로부터 받는 도구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 즉 사회적 지지를 강조한다. 도구적 지지는 실질적인 원조를, 정보적 지지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친밀감, 밀착, 동정, 관심이나 배려 등을 포함한다. 개인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며 이에 접근하기 위해 비공식적 및 공식적 관계를 활용한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참여의 수준을 관찰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는 결혼, 우정, 가족, 친구 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타인이나 공동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서비스의 원천이다. 공동체 참여는 사회적 관계가 작동하여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객관적 및 주관적 결속 수준을 의미한다. 덧붙여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행복 증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과 공동체” 영역의 지원 관련 중범위 요인들로 “사회적 관계” “공동체 참여” “사회적 신뢰”를 선정하였다.

〈그림 23〉 가족과 공동체



② 지표 설명

가족이나 공동체는 모두 쉽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실제 정의는 매우 까다롭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거부부나 혼인을 했지만 교육이나 직업 때문에 따로 사는 분거부부 등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생겨남에 따라 가족에 대한 조차적 정의는 매우 어려워졌다. 또한 공동체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만나지도 않지만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 등 관계 형성 방식도 이전과 많이 달라짐에 따라 그 범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 가족은 “혈연이나 결혼, 입양, 계부모 관계 또는 대리양육을 통해 관계를 맺고 통상 같은 가구에 거주 하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 사람들”로 가족을 이해한다. 공동체는 일차적 관계를 포함해서 통상 핵심 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포괄하는 것을 정의한다. 여기서 지역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한다.

“가족관계” “가족형태” “일 가족 양립” “사회적 관계” “공동체 참여” “사회적 신뢰” 등 여섯 가지 중분류 범주로 구성된 가족과 공동체 영역은 총 개의 하위 세부지표를

가진다. 이 분야는 정부의 사회지표 영역 중 가족과 공동체 영역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각 사항들을 지역의 틀 속에서 파악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다음 표는 “가족과 공동체” 영역의 세부 지표들을 보여준다.

가. 가족관계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가족접촉빈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갈등, 가족폭력에 대해 측정한다.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 간(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얼마나 자주 접촉을 하는지 살펴본다. 접촉빈도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고 동시에 그 자체로 관계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 자주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모두 공원에 놀러가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관계의 깊이도 더해진다. 그리고 주관적 만족도를 확인한다. 가족 간에 서로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나도 다르다. 예를 들어 모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은 부부마다 또 부부끼리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빈도와 같은 객관적 측면과 상관없이 만족도를 다룰 수 있다. 그래서 관계만족도에 대한 문항이 필요하다. 가족갈등과 가족폭력은 최근 언론과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관계의 개인화 경향이 널리 퍼져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 중 하나로 감정을 과거에 비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불만도가 높거나 좌절감이 크면 조용히 삭히기 보다는 겉으로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 가족구성원 간 싸우거나 때로는 폭력이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갈등 빈도와 폭력 횟수 등을 확인하여 과연 충청남도의 가족이 건강한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나. 가족형태

가족형태에는 한 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비율,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가구의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한 부모 가구는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가족해체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결과이다. 한 부모 가구는 대부분 가족해체에 의해 형성된다. 가족의 해체는 사회적 불안감의 증대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증대라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가족원의 불행이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의 해체 현상은 자라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고 성인이 돼서 빈곤층에 편입될 가능성도 크다(김혜란 외, 2004). 때문에 지역에 한 부모 가구의 추이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해 사회적 관심

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이 삶의 질은 동거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한다(Dean et al., 1992). 특히 독거는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들은 우울, 고독, 스트레스 정도는 물론, 자살 충동도 상대적으로 높다(Klinenberg, 2001; 이봉재 · 오윤지, 2008; 최영, 2005; 한혜경 · 이유리, 2009). 이러한 정신건강의 측면과 더불어, 독거노인들은 영양섭취가 충분하지 못하고, 음주 · 흡연 등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가족성원의 부재로 인해 신체건강이 악화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들 역시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장가구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혼과 미혼모가 늘어남에 따라 어린 나이에 경제적 책임을 져야할 아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 주어진 취업의 기회는 단순한 알바 수준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다른 가구구성원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 게다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 처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직업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지역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다. 일 가족 양립

일 가족 양립은 부정적 일-가족 전이와 부정적 가족-일 전이 설문을 통해 측정한다. 맞벌이 부부가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으면서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갈등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 모델에서는 여성들은 집과 가정을 남성들은 직장을 책임졌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전통적 모델은 사회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성도 이전 남성들이 독점하던 경제적 책임을 분담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정적 역할에 남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성들의 부담을 많은 남성들이 덜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결혼 또는 출산을 전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여성들도 두 가지 역할 간 갈등으로 힘겨워 하고 있다. 정부는 무조건 늦게까지 일 하는 모습을 장려하는 직장 문화를 지양하고 가족친화정책을 기업들에게 장려하는 등 여성들이 직장에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직장취업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기에 취업여성들이 겪는 갈등의 최소화는 좋은 사회가 지향해야할 주요한 목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라.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친구수, 주요 관계망, 자살율을 통해 측정한다. 가족, 친구, 친인척 그리고 지역공동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Cohen & Syme, 1985; Murell, Morris, and Chipley, 1992). 이런 친밀한 관계에 의한 행복 증진 효과는 경제적 상황과 계층적 입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에게 중요한 타자 -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친인척 - 등과 얼마나 접촉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무엇을 교환하는지는 행복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각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 보호망으로서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살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인이다. 관계의 개인화 따라 어렵고 괴로운 상황과 심정을 이해받고 배려 받을 사람들을 점점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찍이 뒤르켐부터 자살은 사회적 망의 넓이와 깊이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자살은 사회의 감정적 사회적 취약계층이 분포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로 여겨졌다. 이 자살율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망 관련 자료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마. 공동체 참여

공동체 참여 부문은 사회단체 참여율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으로 측정한다. 공동체 참여와 관련해서 꼭 이해해야 할 개념이 사회의 질이다(Walker and Van der Maesen, 2003: 16). 사회의 질이란 구성원들이 복지와 잠재력을 향상시키면서 공동체의 사회적 삶과 발전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개인들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즉 공동체에 대한 공헌과 헌신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이 고양되는 것이다. 최근 행복을 증진시키는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소속감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개인의 삶에서 소속된 조직이나 공동체에 대한 공헌은 개인의 존재 의의를 명확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에서는 직장 등 수입을 얻는 조직에 도움을 주고 그를 임금이나 승진 등 방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게 전통적 방식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대상이 되는 조직 범위가 더욱 확장된다. 이에 학교, 친족 또는 지역 등과 관련된 연고집단 참여정도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참여 비율이 주요 지표로 고려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들이 지역사회를 가깝게 느끼는 정도 즉 소속감이 주관적 지표로 포함되었다.

바. 사회적 신뢰

사회적 신뢰 부문은 일반 사회와 지역 사회 리더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통해 측정한다. 최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잘못된 사회지도층의 행태가 공공의 공분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치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아는 사람에게 챙겨주는 행위는 사회 구성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뻥’이 없으면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는 믿음은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개인들에게 한번 해보자는 의욕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측면을 학자들은 ‘신뢰’(trust)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는 사회는 필요없는 안정장치를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cost)이 크게 늘어난다.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된다. 때문에 이 신뢰는 많은 정부가 추구해야할 주요 시정 방향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 사회지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도민들이 지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지 정도와 추이를 확인해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충남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세부 객관적 지표는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에 기초하여 결과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등 7개의 지표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접촉빈도,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적관계망, 자살률, 사회단체참여율, 지방정부 신뢰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족관계만족도는 결과지표, 시계열측정, 보편성에서 지표로 적합하나 가변성, 영역간 중복에서 다소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접촉빈도,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은 시계열 측정, 보편성, 간결성, 적용성에서 부합하나 결과지표, 가변성, 영역간 중복에서 다소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관계망, 자살률, 지방정부신뢰도는 결과지표, 시계열측정, 적용성에서 지표로 부합하나 가변성, 영역간 중복에서 부합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단체참여율은 시계열 측정, 보편성, 적용성에서 지표로 적합하나 결과지표, 가변성, 영역간 중복, 간결성에서 부합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표 84〉 가족 및 공동체 영역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지표명	선정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가족관계만족도	◎	◎	○	◎	△	◎	◎
가족접촉빈도	○	◎	○	◎	△	◎	◎
한부모가구비율	○	◎	○	◎	△	◎	◎
독거노인비율	○	◎	○	◎	△	◎	◎
사회적관계망	◎	◎	○	◎	△	◎	◎
자살률	◎	◎	○	◎	○	◎	◎
사회단체참여율	○	◎	○	◎	△	○	◎
지방정부 신뢰도	◎	◎	○	○	○	○	◎

- 주 : 1) 결과(outcome)지표는 해당 지표가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이 아닌 결과를 나타내는데 대한 여부
 2) 시계열 측정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로 측정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3) 가변성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여부
 4) 보편성은 해당 지표가 삶의 질이나 웰빙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5) 영역 간 중복은 해당 지표가 타 영역에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6) 간결성은 해당 지표가 일반인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7) 적용성은 해당 지표가 충남에 대해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8) 선정기준에 대한 부합성은 ◎ : 기준에 매우 부합함, ○ : 대체로 부합함, △ : 보통, x : 부적합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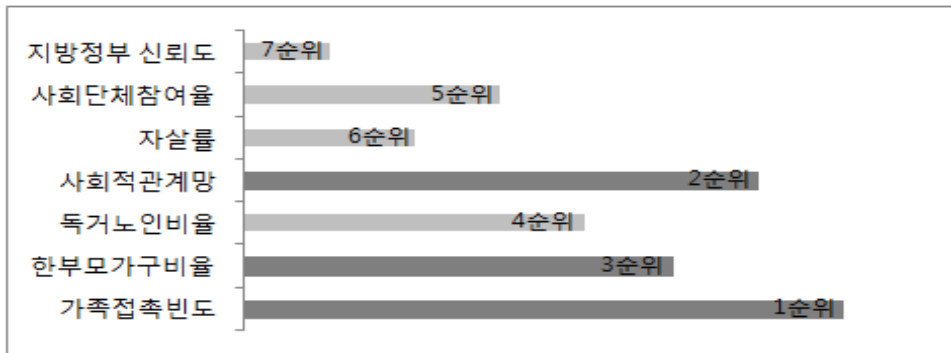
(3)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지표 검토

제시된 7가지 지표 중 중요도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가족 지표인 가족접촉빈도가 1위를 차지하였다. 삶의 질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면서 가족과 지내는 시간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아버지는 늦게까지 직장 에서 일하면서 승진과 수입을 추구하는 삶이 아버지 역할의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고 있다. 어머니는 학원을 오가는 자녀들에게 저녁이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많은 응답자들이 행복을 측정하는 데 가족접촉빈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때문에 가족접촉빈도는 행복지표에 꼭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나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인이나 친구를 묻는 사회적 관계망이 2위를 차지하였다. 열거한 세 가지는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곤란한 경우로 주위의 도움 없이는 해쳐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개인의 행복 유지에 매우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이해타산적 인간관계가 부각되고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고 이타적 관계는 약화된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은 충남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데에도 꼭 필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 가족 및 공동체 부문 지표 우선순위 결과



한부모가구비율과 독거노인비율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였다. 한부모 가구와 독거노인 가구는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한부모 가족에서 유일한 성인은 경제적 책임과 부양 책임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대부분 여자인 한부모는 제한된 취업 기회 때문에 낮은 임금과 불안한 지위에 시달리며 한부모의 자녀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쉽다. 혼자 사는 노인은 별다른 취업 기회가 없어서 복지정책에 삶을 의존하며 만성질병에 시달려도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한부모가 구와 독거노인은 복지정책의 주요 수혜자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두 집단의 증가 또는 감소는 사회적 수준을 측정하는데 꼭 살펴봐야 하는 지표이다.

자살률은 6위를 차지하였다. 비록 등수는 그리 높지는 않지만 자살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지표이다. 현대인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과거보다 훨씬 많이 느끼고 산다. 어려움이나 곤란함을 느낄 때 의지하고 조언을 구할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떨어진 사람이 매우 많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다. IMF외환위기 이 후 한국인에게 자살은 매우 큰 사망원인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가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게다가 충남은 노인의 자살률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자살률은 지표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표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평가는 주민참여 부분에서 또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본 문항은 제외해도 좋을 듯하다.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체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열 명 중 다섯 명(52.76%) 정도가 2시간 이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75.82%)가 1시간 이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는 일상을 가족과 거의 나누지 않는다. 전체 중 11.77%가 가족과 30분미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삶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의미가 점점 퇴색될 수도 있다.

다음은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결과이다.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전체 응답자 중 65.48%, 74.66%, 64.70%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하는 편이다. 가족구성원들과 가족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높은 만족도 수준은 곧 높은 삶의 질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6.74%, 3.30%, 4.78%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생활전반에 다소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대답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응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통이라는 응답도 어느 정도는 불만이 섞여 있는 경우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한 결과이다. 안타깝게도 충남도민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대체로 낮다.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이 31.51%나 되는데 비해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20.51%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응답자의 반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사회에 대해 불안감이 크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편이다.

<표 85> 가족 및 공동체 영역 도민 만족도

구분	구성비율(%)
가족생활 전반 만족도	매우 만족
	26.91
	약간 만족
	37.79
	보통
배우자와의 관계	30.52
	다소 불만족
	4.46
	매우 불만족
	0.32
자녀와의 관계	매우 만족
	35.87
	약간 만족
	29.61
	보통
사회에 대한 신뢰	27.72
	다소 불만족
	4.61
	매우 불만족
	2.13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매우 만족
	40.13
	약간 만족
	34.53
	보통
	22.04
	다소 불만족
	3.12
	매우 불만족
	0.18
	매우 믿을 수 있음
	1.38
	대체로 믿을 수 있음
	19.13
	보통
	47.98
	대체로 믿을 수 없음
	26.99
	매우 믿을 수 없음
	4.52
	없음
	6.05
	30분 미만
	5.72
	30분 ~ 1시간
	12.25
	1시간 ~ 2시간
	23.06
	2시간 이상
	52.76

충남의 행복지수관련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지표는 가족관계, 가족형태, 일가족 양립, 사회적 관계, 공동체 참여, 사회적 신뢰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는 가족 접촉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갈등, 가족폭력이 주관적 지표로 포함되며 가족형태는 한부모 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소년소녀 가장비율 객관적 지표가 포함된다. 일가족 양립은 부정적 일가족 전이, 부정적 가족 전이가 주관적 지표로 포함되며, 사회적 관계는 가까운 친구수, 자살률이 객관적지표로 사회적 관계망이 주관적 지표로 포함된다. 공동체 참여는 사회단체 참여율이 객관적 지표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주관적 지표로 포함된다. 사회적 신뢰 부문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주관적 지표로 포함된다.

〈표 86〉 충남 행복지수 가족 및 공동체 영역 지표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가족 · 공동체 부문	가족 관계	-	가족접촉 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 갈등
			가족 폭력
	가족 형태	한부모 가구 비율	-
		독거 노인 비율	
		소년 소녀 가장 비율	
	일·가족 양립	-	부정적 일가족 전이
			부정적 가족 전이
	사회적 관계	가까운 친구 수	사회적 관계망
		자살률	
	공동체 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신뢰	-	사회적 신뢰

4)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정책 방향

가족 및 공동체 지표 측정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지표란 특정 사회의 대표적 모습을 시계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사회지표는 지역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때문에 사회지표는 포착하고자 하는 측면이 무엇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수는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충청남도의 가족 및 공동체 관련 지표를 위해 본 연구는 각각 세 하위범주를 선정하여 각 범주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소개하였다. 각 문항 중 일부는 통계청이나 중앙정부 등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도민 대상의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가족 및 공동체는 1차적 관계망으로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과 미래를 위한 휴식을 제공한다. 때문에 삶의 질 또는 행복 등 개인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가족이나 공동체는 가장 관심

을 갖고 지켜봐야할 대상이다. 한국사회는 과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걱정’을 벗어나 더욱 큰 도약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신적 만족감이나 사회적 신뢰감은 먹고 사는 걱정을 넘어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꼭 추구해야할 가치이다. 이에 가족 및 공동체 부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및 공동체의 변화상을 추적하기 위해 몇 지표를 추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자료를 꾸준히 구축해야한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경제활동연구 등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전체적 개괄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매년 생성해내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도자료를 위해 전국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결론을 내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분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풍부한 자료의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충청남도를 포함한 각도는 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료들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시정 방향과 맞는 문항을 개발하여 꾸준히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워딩을 포함해서 되도록 바꾸지 말아서 오래 시간 동안의 추이를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지표를 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왜 여전히 많은 도민들이 자살을 하는지 왜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지 등을 고민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를 보면 대체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그렇지만 일부는 일상을 가족과 거의 나누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삶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의미가 점점 퇴색될 수도 있다. 행복 유지와 증진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여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들이 야근과 주말근무를 줄이는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도와줘야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스스로가 근무시간을 명확히 하고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등 공무원들의 가족지키기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면 많은 기업이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가족구성원들과 가족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높은 만족도 수준은 곧 높은 삶의 질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6.74%, 3.30%, 4.78%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생활전반에 다소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대답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응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통이라는 응답도 어느 정도는 불만이 섞여 있는 경우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조사의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아주 핑크빛은 아님을 인지해야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개입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몇몇 가족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한부모가족과 독거노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다. 또 최근 잇달아 보도되는 여성 성폭력에 대비해서 치안을 강력하게 유지해서 여성들이 밤에도 편안하게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예가 보여주듯 정부는 가족생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발굴내해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한 결과이다. 안타깝게도 충남도민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대체로 낮다. 이렇게 낮은 신뢰도에 정부의 책임은 대체로 크다. 사회기관별 신뢰도 결과를 보면 정부나 국회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언제나 낮은 편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 낮은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고 공공정책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해야할 것이다. 사실 많은 의원 또는 기관장은 선거 때는 당선을 위해 무리한 약속을 마다하지 않다가 막상 당선이 되면 나몰라 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게다가 선거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굽실거리고 일단 당선이 되면 국민들 머리위에서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치가도 많다. 이러한 행태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회 불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4. 교육 부문

1) 행복에 있어 교육이 왜 중요한가?

(1) 교육영역의 필요성

① 행복과 교육의 관계

충청남도 행복지수 산출에 있어서 교육 부문이 포함되려면 먼저 행복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간략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며, 이렇게 정의된 행복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사회 체제와 결합되어 있으며 과연 교육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행복의 개념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에피쿠로스 등의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이 곧 행복이라고 보았고 쇼펜하우어는 명량한 정서, 건강, 정신적 평온과 더불어 약간의 재산이 행복의 필수요소라고 보았다. 반면 러셀은 인간 본성으로서의 열정 때문에 행복이 생긴다고 주장하여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순희 역, 2005).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재정상황, 일, 공동체와 친구, 건강, 개인적 자유와 개인적 가치를 들고 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성숙한 사람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동경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 여기기도 한다(Allport, 1968; Schultz, 1977; 이혜성, 2001). 이들 주장들은 상대적으로 시민적 권리가 보편화된 근대화된 세계를 전제할 때 개인의 행복에 관한 논의였다.

한편 인간을 정치적(사회적) 존재로 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이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홍병선, 2011). 그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행복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라고 보았고, 행복은 개인적 쾌락이나 부, 명예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고유한 본성과 기능을 고려해 인간 고유의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활동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손명현 역, 2007).

한편 근대 시장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의 행복에 관한 담론은 매우 단순하다. 아담 스미스는 행복은 평온함과 즐거움에서 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물질적 재화의 소유나 추구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았다. 많은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노력은 사람들의 평온함을 깨는 것으로 본 까닭이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행복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는 물질적 조건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봉건적 사회보다 상업사회를 지지했는데 어일과 라스무센(Uyl & Rasmussen, 2010)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는 상업의 긍정적인 효과, 즉 의존과 불안정(dependence and insecurity)이라는 행복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서 상업사회에서의 개인이 더 평온하고 더 행복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담 스미스는 자립과 안정, 공동체 전체의 빈곤의 완화 등 경제적 여건을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라본 학자들도 있다. 도알과 도알(Len Doyal & Ian Doyal, 1991)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확대하여 모든 인간 존재에게 적용하고 있는 좋은 삶에의 참여를 위한 보편적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물리적 건강(physical health)과 개인적 자율성(individual autonomy)이 그것이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물리적·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함은 깊이 논의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수용가능하다. 한편 개인적 자율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행복, 스미스의 평온함과 더불어 주관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이 그들 삶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그들 삶에서의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중간단계로서 보편적인 만족자의 특성(universal satisfier characteristics)을 제시하고, 또한 중간단계의 필요로서 ‘충분한 영양과 물,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 해롭지 않은 일자리와 물리적 환경, 적절한 보건, 어린 시절의 안전, 중요한 기본적 관계, 물리적·경제적 안전, 안전한 산아제한 및 출산, 적절하고 기본적인 다문화적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적절하고 기본적인 다문화적 교육’이 행복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의 행복 개념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통해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물질(리)적인 조건 뿐 아니라 주관(체)적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처음에 강조하였듯이, 우리는 이와 같은 행복의 원리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원리와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민주주의 원리가 실현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경제적 영역에서 시장경제에서 거래에 참여하고 생산하고 적절한 분배를 받으며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물질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개인적 집단적 자유를 누리면서, 동등한 정치적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들은 그가 속한 특정한 민족과 국가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전통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역량을 갖추는 때 가족과 사회적 관계(직장, 학교, 지역사회, 동아리, 종교단체)에서 보다 잘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들과 사회는 물리적 환경의 하나로서 자연환경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연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시장과 민주주의 정체가 전통과 문화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사회에 자리잡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주관적으로도 또한 객관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돕기 위해 교육은 어떻게 기능해야 하며, 또한 교육 자체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위의 논의로부터 교육에서의 행복을 위한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들은 자신의 개인적 생활과 공동체의 생활에서 자율성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은 개인들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나 가족을 통한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특히 학교 교육을 자율성 신장에 크게 집중해야 한다. 학생들의 개성, 자발성과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스스로 내리는 의사결정과 판단,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들은 자신과 가족의 물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교육이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일정한 수입을 획득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시장경제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경쟁함으로써 경제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개인들이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⁵⁴⁾ 그리하여 성인에 된 개인들이 자신과 가족의 물리적 여건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책임감을 갖는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

54) 물론 시장 실패나 개인의 장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교육제도와 체계는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추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받은 과정, 특히 초·중등 교육과정은 정치체제와 과정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정치적 결정이 자신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이 되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학교의 교육과 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갈 것인가를 함께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또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서 전통과 문화를 창조할 수 있고 자연에 대한 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현대의 삶에서 개인들의 교육과정은 매우 긴 유아에서부터 성인시기에 이르는 긴 기간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평생학습 사회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는 동안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비록 그것이 이후의 경제적·정치적 삶에서 활동적이어서 행복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교육과 학습의 과정에서 불행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 그 자체에서도 복지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환경(여건)과 교육에서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② 교육 영역에 대해 이해와 그 중요성 인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립되기 전인 산업화 시대 이전의 과거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교육이란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였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활 및 윤리 강령과 같은 지배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이 전부였을 뿐이다. 그러나 산업화를 통해 사람들, 좀 더 산업적인 면에서 보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받는 것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보통교육이 시작되었고, 20세기 들어서는 민주화 흐름과 맞물려 교육받을 권리가 확산되고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운영하는데 시민들의 교육수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현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양을 갖추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교육이 공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확장되고 학습대상이 되는 지식과 숙련의 내용이 고도화되면서

한 사람의 개인 생애에서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사회적 투자도 늘어났다. 어느 정도의 발전 수준을 갖춘 국가들은 다 마찬가지겠으나, 우리나라에서도 한 개인의 출생과 동시에 가정교육,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거쳐 고등교육까지 이어지는 평균적으로 12년에서 16년 정도의 생애 초기를 대부분 교육받고 학습하면 보낸다. 이러한 학교교육을 마치고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직업교육과 재교육 등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어떤 이들은 실직으로 인한 재취업을 위해, 또한 어떤 이들은 더 나은 직장을 찾는 일로 새로운 교육을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각 개인들이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면에서도 교육에 들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 밖에도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년, 노년을 가릴 것 없이 새로운 교육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교육이 생활의 전 영역에서 그리고 생애의 전 주기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한 개인의 일생을 따라가며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꼼꼼이 따져 보면, 교육은 매우 다양한 속성을 지닌 재화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한다는 점에서 가치재(merit goods), 직업적 능력을 함양시키고 소득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재(capital goods) 혹은 투자재(investment goods), 개인의 취미 혹은 교양을 위해 교육을 소비한다는 점에서 소비재(consumption goods)가 된다. 이렇듯 교육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지닌다는 것은 교육이 각 개인의 삶과 다양한 시점에 다양한 영역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영향력도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역시 유아교육부터 시작해 고등교육에 이르는 이른바 정규교육인데, 그 자체로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이 평생을 거쳐 지속됨은 물론이고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개인의 삶과 교육 간의 밀접한 연관성, 그리고 돌이킬 수 없으면서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측면으로부터 교육 영역은 충청남도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은 한 사람의 생애에만 중요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재생산에도 중요하고 그 강한 외부효과로 인하여 공공재(public good)적 성격을 갖거나 또는 공공선(common good)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공재적 성격은 공동체의 인적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개발, 민주주의 운영,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공동체가 개인

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수준과 사회가 교육에 투자하는 수준이 또한 중요하다.

③ 교육의 구성요소와 행복

교육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이 상호작용하며 배움을 형성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에 학습내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과 원활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여건 요소가 개입된다. 이러한 복잡한 투입물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소정의 교육결과가 도출되며 교육의 과정과 결과는 모두 개인의 행복과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학습의 주체로서의 학생과 이를 돕는 역할로서의 교사의 상호작용이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원만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교육의 성과는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학생이 느끼는 행복감은 상승할 것이다. 또한 원활한 상호작용, 그 자체로부터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더불어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학생과 학생의 관계도 중요하다. 비슷한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는 또래 집단으로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줌으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서로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학습의 보조자로서도 또한 이에 따른 학업성취의 향상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개인의 행복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기본 골격을 이루는 학생과 교사 간 관계에 더불어 학습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curriculum)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회의 미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을 얼마나 잘 준비시키고 있는가는 장래 학생들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육과정에는 단순히 학습내용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가치와 문화 또한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교육과정이 학생들을 사회의 미래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얼마나 잘 함양시키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내용이 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은 추후 교육결과로 드러나게 된다. 교육결과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거론되는 것은 학업성취도이다.⁵⁵⁾

55) 학업성취도가 유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교육결과라는 의미는 아니다. 분명히 학업성취도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학업성취도는 한 개인이 교육을 통해 쌓아온 인적자본의 대리지표라는 점에서 미래의 소득 창출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이다. 또한 인지역량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열이나 점수라는 의미의 좁은 학업성취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학업성취도가 높으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서의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자율성과 행복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동 투입을 늘리면 중국에는 한계생산물의 증가가 체감하다 결국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 역시 공부시간에 비례해 증가하나 중국에는 체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몇 점차이로 명문대학에 입학이 결정되고 노동시장에서의 평가가 달라지는 선별적 요소가 강함으로써 단위시간당 학업성취도는 줄어들 수 있고 비효율적이며, 학생들 인격과 신체의 전인적 발달과 개인의 삶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또는 공공생활을 위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해로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학습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curricula)과 교육방법을 포함한 교육의 과정(process)도 교육의 질적 내용과 교육을 받는 동안의 만족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학생 상호 간의 작용 등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이 평생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즐거움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에서의 삶의 만족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지속성 또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교육의 과정은 좋은 환경 및 좋은 교육 여건과 결합될 때 가장 원활히 기능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해도 가정으로부터 지나치게 멀어서 다니기가 불편하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교사 1명이 70~80명의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면 원활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육여건에 대한 지표도 포함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이나 공공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볼 때 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수준은 개인의 공동체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다. GDP 대비 교육비 투자와 공공투자의 비율 등은 이러한 요소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성과(성취(performance)나 결과(outcome))는 개인의 자율적 삶, 미래의

교육결과 중 하나이지만, 학업성취도로 교육결과를 모두 측정할 수는 없다.

경제적 활동, 사회적 참여에 대한 역량으로 나타날 것이다. 교육을 통해 자율적 역량이 얼마나 축적되었으며,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역량이 누적되었는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시민 의식과 시민적 자질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의 교육의 결과 또는 성취에 관한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순한 학업성취도가 아닌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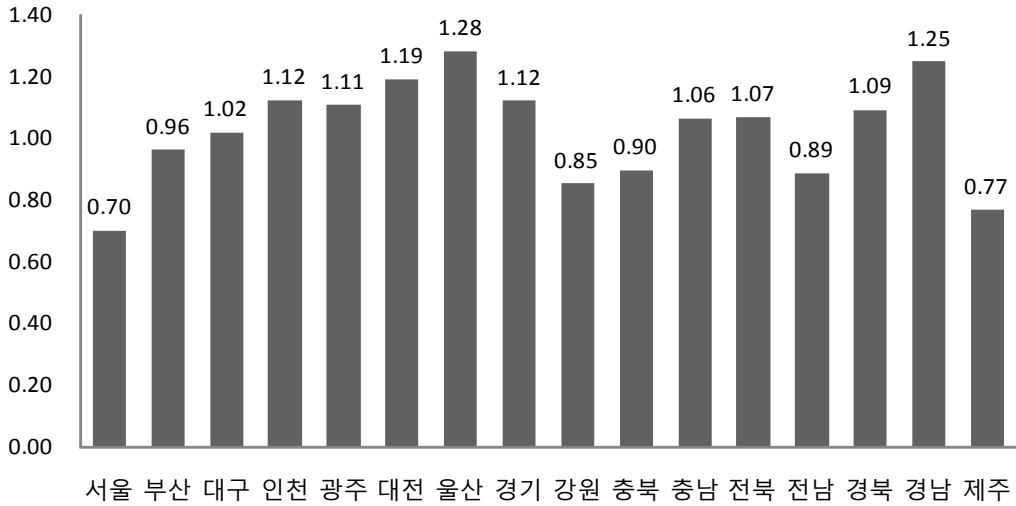
객관적인 교육 지표로 충청남도의 교육 영역에서의 현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는, 누차 강조하였듯이 교육은 삶의 전 영역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아야 할 객관적 지표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섹션에서는 정규교육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유치원

초·중등(전기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보편화되었으나 오히려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도 아니고 국가 보조도 부족하여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에는 양질의 보육 및 유아교육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도별 인구와 유치원 학생 수, 유치원 교사 수를 비교하여 충청남도 유치원 교육의 품질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어떠한지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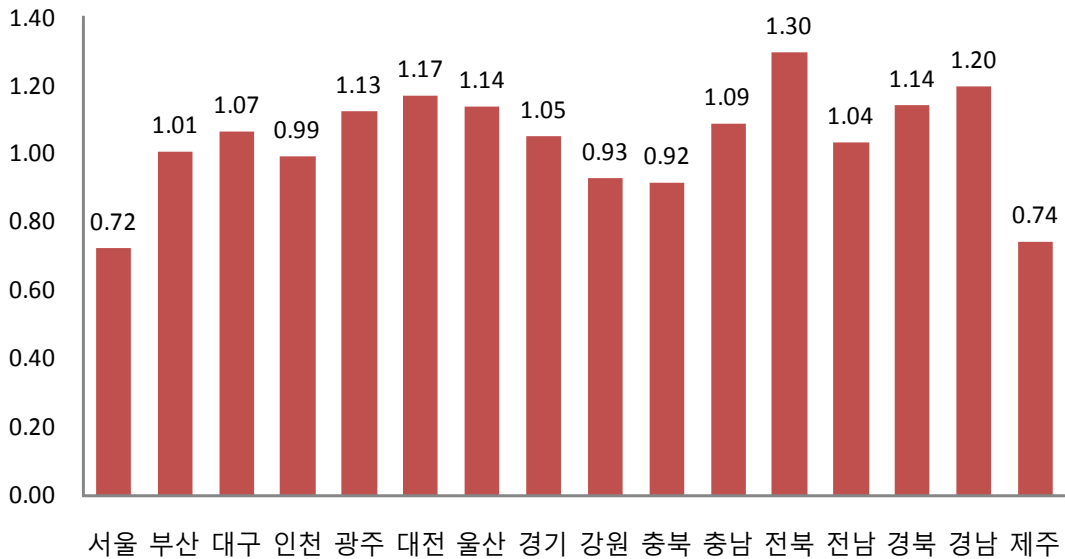
〈그림 25〉는 전국 인구에서 각 시도가 차지하는 인구비율로 전체 유치원생 중 각 시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눈 것이다. 값이 1이 넘으면 인구 비중에 비해 유치원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유치원 취학률이 높은 것이다. 〈그림 26〉은 유치원 교사 비중을 같은 방식으로 구한 것으로서 역시 1이 넘으면 인구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치원 교사가 많은 것이다.

〈그림 25〉 인구 비중 대비 유치원 학생 비중



자료: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11), 시도별 인구현황(e-나라지표)

〈그림 26〉 인구 비중 대비 유치원 교사 비중



자료: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11), 시도별 인구현황(e-나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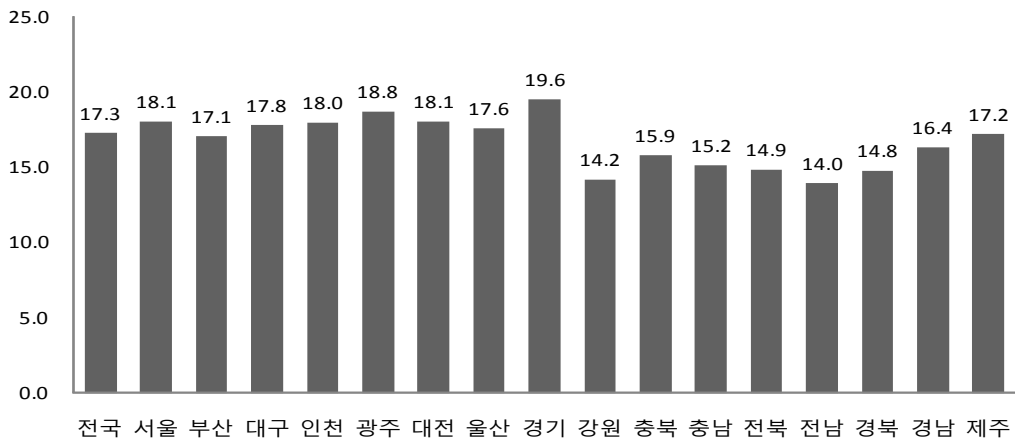
〈그림 25〉를 살펴보면 울산과 경남이 가장 높고 서울과 제주가 가장 낮으며, 충남은 1.06으

로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접 시도인 대전 1.19보다는 조금 낮으나 충북 0.90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이다. <그림 26>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역시 서울과 제주가 가장 낮다. 충남은 1.09로서 역시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전 1.17보다는 조금 낮고, 충북 0.92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충남의 유치원 교육의 질은 타 시도보다 특별히 낮거나 못할 것도 없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② 초 · 중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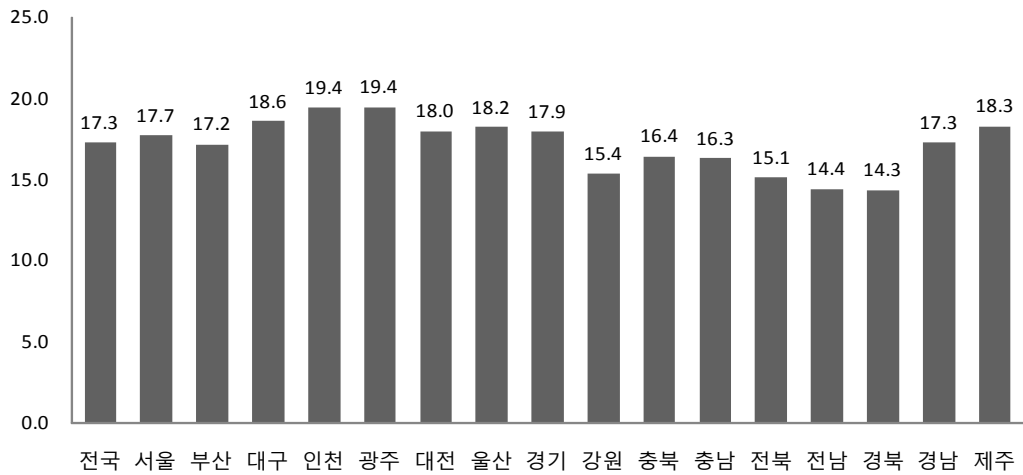
한편 <그림 27> ~ <그림 29>는 초·중·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시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충남은 초·중·고등학교 순으로 15.2명, 16.3명, 14.7명을 기록하여 전국 평균치인 17.3명, 17.3명, 14.8명보다는 모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남 교육여건이 다른 시도보다 더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인접 시도인 충북이 15.9명, 16.4명, 15.7명 수준인 것에 비하면 교육여건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그림 27〉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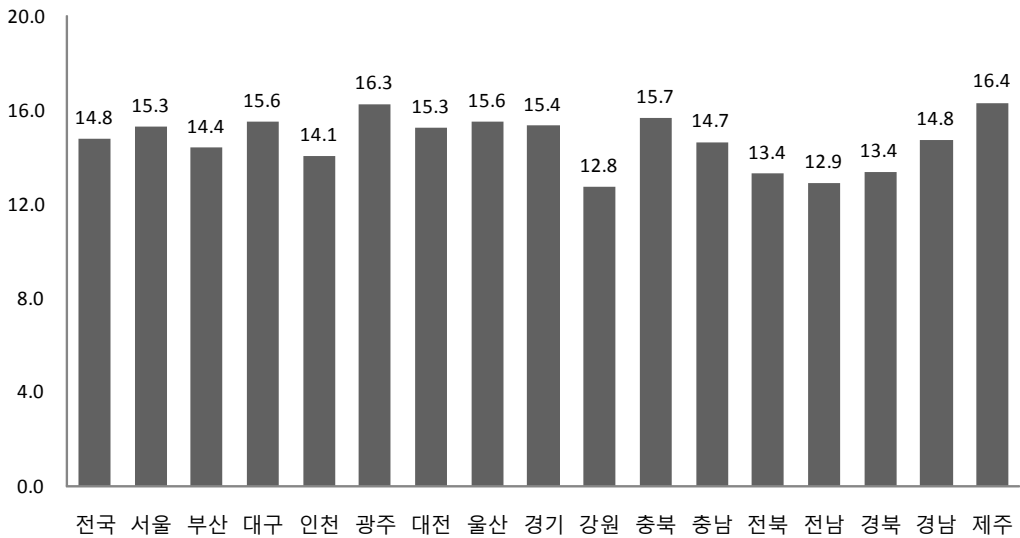
자료: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11)

〈그림 28〉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자료: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11)

〈그림 29〉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자료: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11)

③ 공공도서관

도서관은 학습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서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그 수나 보유 장서에 있어 선진국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형편이다.⁵⁶⁾ 하지만 최근 공공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덕분에 지역별 차이를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공공도서관 역시 학교와 마찬가지로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할 수밖에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표 86>에 지역별 도서관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56)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와 1인당 장서수가 대표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약 7만 6천명이다. 미국은 약 3.2만명, 영국 1.3만, 일본 4.0만, 독일은 0.9만인 것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1인당 장서수는 역시 2008년 기준으로 1.2권이다. 반면 독일은 1.5권, 영국은 1.7권, 미국은 2.8권, 일본은 2.9권에 달한다. 이와 같이 국가 전체적으로 아직 공공도서관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같은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충남의 여건이 어떠한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지역	공공도서관 수	사서 수	장서 수	자료구입비 (천원)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	사서 당 인구	1인당 장서	1인당 자료구입비(천원)
서울	97	875	8,329,942	8,596,291	105,683	11,716	0.81	0.839
부산	29	279	3,516,872	3,702,384	122,367	12,719	0.99	1.043
대구	23	182	2,762,505	2,212,761	109,068	13,783	1.10	0.882
인천	21	219	2,396,288	2,578,393	133,728	12,823	0.85	0.918
광주	15	103	1,794,391	1,196,955	97,768	14,238	1.22	0.816
대전	21	149	2,033,139	1,368,283	72,317	10,192	1.34	0.901
울산	10	76	1,090,762	976,510	113,695	14,960	0.96	0.859
경기	144	855	17,752,889	20,019,265	83,066	13,990	1.48	1.674
강원	46	148	3,746,210	4,022,543	33,355	10,367	2.44	2.622
충북	30	104	2,299,616	1,885,978	52,103	15,030	1.47	1.207
충남	49	127	3,646,239	3,173,112	42,984	16,584	1.73	1.507
전북	47	131	3,086,301	2,928,218	39,850	14,297	1.65	1.563
전남	56	181	4,200,504	4,679,473	34,119	10,556	2.20	2.449
경북	60	222	4,346,613	3,509,136	44,913	12,139	1.61	1.302
경남	50	299	4,714,109	4,634,959	66,176	11,066	1.42	1.401
제주	19	63	1,771,212	1,457,762	30,373	9,160	3.07	2.526
합계	717	4,013	67,487,592	66,942,023	70,807	12,651	1.33	1.319

〈표 86〉에서 알 수 있듯이 충남은 인구대비 도서관이 많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도서관이 적은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감안하여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끼리만 비교하면 중간 수준이다. 다른 지표들, 즉 1인당 도서관입비, 사서 1인당 인구 수 등도 도 지역끼리의 비교에서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인접지역인 충북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서관 접근성이 더 우수했다. 도서관 1관 당 인구는 1만 명 가까이 적으며 1인당 장서는 0.26권이 더 많고, 1인당 도서관입비는 300원이 더 많았다.

2) 어떻게 교육을 측정할 것인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학습의 주체로서의 학생과 이를 돕는 역할로서의 교사의 상호작용이다. 또한 학생과 학생의 관계도 중요하다. 비슷한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는 또래 집단으로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줌으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서로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학습의 보조자로서도 또한 이에 따른 학업성취의 향상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내용이 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은 추후 교육결과로 드러나게 된다. 교육결과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거론되는 것은 학업성취도이다. 교육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curricula)과 교육방법을 포함한 교육의 과정(process)도 교육의 질적 내용과 교육을 받는 동안의 만족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교육의 과정은 좋은 환경 및 좋은 교육 여건과 결합될 때 가장 원활히 기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성과는 개인의 자율적 삶, 미래의 경제적 활동, 사회적 참여에 대한 역량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의 교육의 결과 또는 성취에 관한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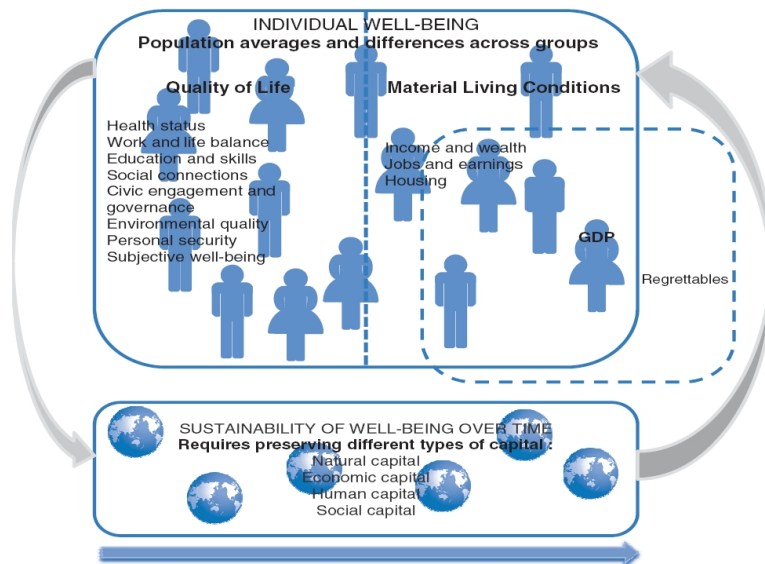
교육과 관련된 몇몇 지표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충남도민이 타 지역민에 비해 더 행복하거나 덜 행복하다고 느낄 특별한 요인을 도출해 낼 수는 없었다. 아마도 지금까지 검토한 지표를 포함하여 교육 영역이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국가주도로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다양한 객관적 지표를 검토함과 동시에 주관적 지표 역시 고려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 교육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1) 교육영역에서의 선행연구 사례

OECD(2011)에서 수행한 ‘사는 것이 어떠세요?(How’s life?)’ 연구에서 개인의 복지(well-being)를 측정하였다. 먼저 행복을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물질적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 행복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of well-being over time)의 3영역으로 나누었다. 각 영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지표는 <그림 30>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앞서 기술한 민주주의, (노동)시장,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자연적 환경에서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0> ‘사는 것이 어떠세요?’ 연구의 행복과 진보의 측정 틀



출처: OECD(2011)

교육 관련 지표는 교육과 숙련(education and skills)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질 영역과 그리고 인적자본, 사회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의 지속가능성 영역 양쪽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의 광범위함에 기인하여, 전자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은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조건만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표 93>에 제시되어 있다.

〈표 88〉 OECD(2011)의 교육과 숙련 지표

지표	기호	사용 변수
교육적 성취	ES I	25~64세 인구의 후기 중등교육 이수자 비율
교육적 기대	es 1	15~29세 인구의 기대 교육연수
평생 학습	es 2	형식(formal), 무형식(non-formal) 교육 참가율
학생의 인지적 숙련	ES II	PISA의 읽기(reading) 영역 점수
학생의 시민적 숙련	es 3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점수

출처: OECD(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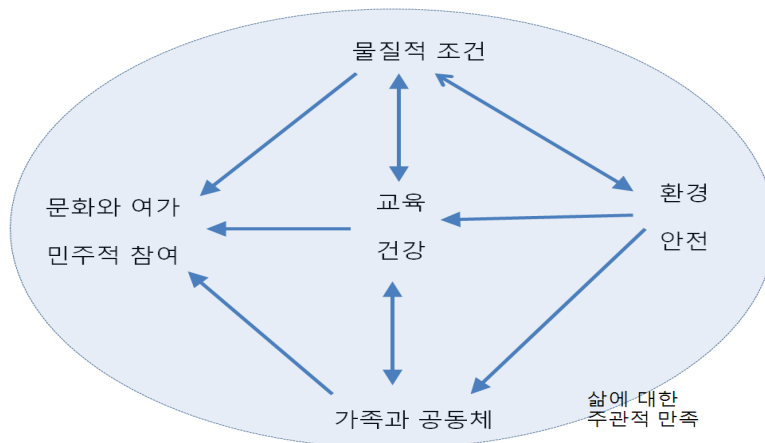
OECD(2011)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행복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여러 측면을 지속시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본스톡(경제적, 환경적, 인적, 사회적)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자본스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도 인적자본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자본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가 차후 세대의 삶의 질과 복지를 지속시키는데 인적자본 즉, 지식, 의사소통능력, 지적 사회적 역량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대 간 행복의 지속성의 핵심고리가 인적자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하지 못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자원 과소비나 부적절한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OECD, 2011).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사교육은 좋은 대학입학의 선별 자격을 위해 자녀의 당장의 학업성취도를 위한 것으로 가정의 경제자본을 지나치게 소모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지나치게 늘려서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현재의 행복도와 더불어 행복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행복의 지속가능성도 충청남도 행복지수의 산출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될 것이다.

한편 한 준 외(2011)는 ‘국민 삶의 질 측정 2011’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틀은 OECD(2011)의 연구와 유사하며 이는 <그림 31>에 제시되어 있다. 한 준외(2011)외는 노동시장에서의 기준들을 명시적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 조건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독특한 점은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을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각 영역 안에서 고려하고 있으나 측정은 따로 떼어서 실시한다는 점이다.

<그림 31> 삶의 질 영역 간의 영향 관계



출처: 한 준 외(2011)

<표 89>는 한 준 외(2011)가 작성한 삶의 질 측정 지표 중 교육 부분만을 발췌하여 제시한 것이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교육 영역을 대분류로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효과의 3개 중분류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중분류 항목마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주관적 지표는 따로 떼어 9번째 대분류 영역에서 따로 측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실제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표 90>에 제시되어 있다.

〈표 89〉 한 준 외(2011)가 제시한 삶의 질 지수를 구성하는 교육 부문 지표

대분류	중분류	객관적/주관적	세부지표
교육	교육기회	객관적	고등교육기관 이수율, 유치원 취학률,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및 취업률, 평생교육참여율
		주관적	교육기회 충족도
	교육자원	객관적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1인당 장서수,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GDP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주관적	교육비 부담
	교육효과	주관적	학교생활 만족도

출처: 한 준 외(2011)

〈표 90〉에서 제시되었던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 및 취업률,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빠지고 각급 학교 중단율 및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사용 변수로 제시되었다. 또한 교육효과 측면에서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만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객관적 지표로서 교육 년수 1년당 추가소득이 제시되었다.

〈표 90〉 한 준 외(2011)가 제시한 삶의 질 측정에서 교육 부문의 세부지표

구분	중분류	항목	방향성
1	교육기회	유치원 취학률	+
2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3		평생교육 참여율	+
4		각급 학교 중단율	-
5	교육자원	교원 1인당 학생수	-
6		학생 1인당 교육비	+
7		GDP 대비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중	+
8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9	교육성과	교육 년수 1년당 추가소득	+

출처: 한 준 외(2011)

이상으로 행복 혹은 삶의 질 지수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교육 부문의 세부 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2) 교육영역에서의 행복지표체계의 구축

충남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교육영역에서의 세부 객관적 지표는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에 기초하여 결과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등 7개의 지표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유치원 접근성, 고등교육 접근성, 평생교육 접근성, 교사/학생 비율, 1인당 장서 수, 학교폭력 경험비율,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학습시간의 적정성과 성취도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유치원 접근성, 고등교육 접근성, 평생교육 접근성, 교사/학생 비율은 결과지표,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에서 지표로 적합하나 가변성에서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학습시간의 적정성과 성취도는 결과지표, 영역간 중복성에서 부합하나 시계열 측정, 적용성에서 부합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표 91〉 충남 행복지수 교육 영역별 객관적 지표 자가 점검표

지표명	선정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 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유치원 접근성	○	○	△	○	○	○	○
고등교육 접근성	○	○	○	○	○	○	○
평생교육 접근성	○	○	○	○	○	○	○
교사/학생 비율	○	○	○	○	○	○	○
1인당 장서 수	○	△	○	○	○	○	○
학교폭력(왕따) 경험 비율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	△	○	○	○	○	○
학습시간의 적정성과 성취도(단위학습시간당 학업성취도)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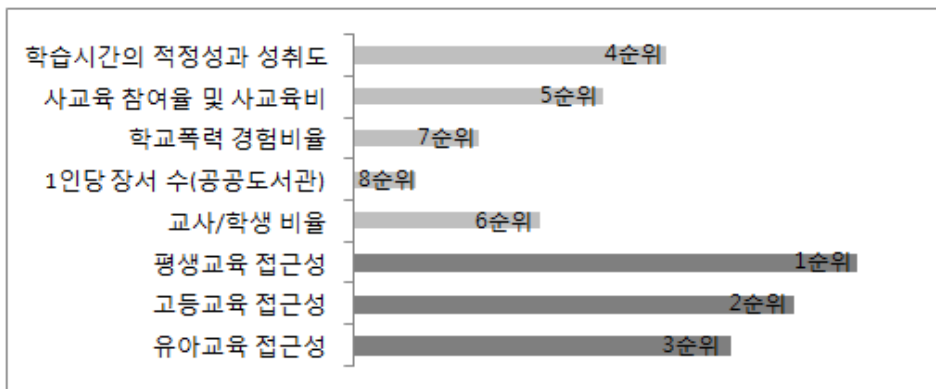
- 주 : 1) 결과(outcome)지표는 해당 지표가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이 아닌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여부
 2) 시계열 측정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로 측정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3) 가변성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여부
 4) 보편성은 해당 지표가 삶의 질이나 웰빙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5) 영역 간 중복은 해당 지표가 타 영역에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6) 간결성은 해당 지표가 일반인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7) 적용성은 해당 지표가 충남에 대해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8) 선정기준에 대한 부합성은 ○ : 기준에 매우 부합함, ○ : 대체로 부합함, △ : 보통, x : 부적합으로 구분

(3)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지표 검토

OECD(2011)의 선행연구는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여 가장 광범위한 수준으로 수행되었으며, 한 준 외(2011)의 연구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는 충청남도 도민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검토된 세부지표들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따른다. 예를 들면, 교육 연수 1년당 추가소득과 같은 지표는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 교육을 받다가 타 시도로 이주해버리거나, 실질적인 교육은 타 시도에서 받았으나 충청남도에서 직장을 얻는 경우와 같이 측정하기 복잡한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인당 장서수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도서관에의 접근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행복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주관적 지표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실제 충남도민들의 교육 영역에서의 행복감이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 섹션에서는 먼저 충남도민들의 교육 영역에서의 행복 지표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반영하여 최종적인 행복지수 구성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32>에 객관적 지표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 교육 영역의 객관적 행복 지표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평생교육, 고등교육, 유아교육 접근성이 1, 2, 3위를 차지했다. 초·중등교육은 일찌감치 보편화⁵⁷⁾되었으므로 다른 단계에서의 교육 기회를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두 직접적으로 교육기회를 측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다음은 학습 시간의 적정성과 성취도,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가 4, 5위로 나타났다. 교육기회 다음으로 교육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학생 비율, 학교폭력 경험비율, 1인당 장서 수는 6~8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최근 학교폭력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도 실제로 충남도민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약간 의외의 결과지만, 학교폭력 피해가 소수에게 집중⁵⁸⁾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로 보인다.

한편 <표 92>에는 주관적 지표 설문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인 교육여건, 자신의 전공, 학생과 교사의 친밀도, 교우 관계, 학습 내용, 학습 결과의 6가지 지표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모두 50%가 넘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만족’과 ‘불만족’ 비율을 보면 차이가 드러나는데 교육여건 전반, 전공, 학생과 교사 친밀도, 학습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족 비율이 높고 교우 관계와 학습 내용에 있어서는 만족 비율이 더 높았다.

57) 취학을 90%를 기준으로 보편화 달성 정도를 판단한다면, 초등학교는 1957년, 중학교는 1979년에 이미 보편화되었다.

58) 학교폭력이 소수의 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해서 학교폭력의 심각함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수의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만큼,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전체 학생에 비하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남의 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92> 교육 영역의 도민 만족도

구분		구성비율(%)
충남의 교육여건 기반	매우 만족	1.12
	약간 만족	14.39
	보통	57.94
	다소 불만족	21.88
	매우 불만족	4.62
계열 혹은 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	1.49
	약간 만족	14.70
	보통	53.94
	다소 불만족	24.65
	매우 불만족	5.17
학생화 교사 간 친밀도	매우 친밀	1.98
	약간 친밀	15.96
	보통	53.50
	다소 친밀하지 않음	24.24
	전혀 친밀하지 않음	4.32
교우 간 관계	매우 원만	7.05
	약간 원만	29.91
	보통	50.96
	다소 원만하지 않음	11.70
	전혀 원만하지 않음	0.37
학습내용	매우 만족	2.79
	약간 만족	20.44
	보통	56.28
	다소 불만족	17.97
	매우 불만족	2.52
학습의 결과	매우 만족	1.77
	약간 만족	14.61
	보통	53.91
	다소 불만족	24.41
	매우 불만족	5.30

〈표 93〉는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충청남도 행복지수 측정에서의 교육부문 세부지표를 제안한 것이다. 교육기회, 교육여건, 교육성으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되 주관적, 객관적 지표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표 93〉 교육 영역의 최종 지표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교육 부문	교육 기회	영유아교육 접근성 고등교육 접근성 평생교육 접근성	계열 혹은 전공 만족도
	교육 여건	교원 1인당 학생수 1인당 장서 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효과성
	교육 성과	성적 학습시간	학습내용 만족도 학습결과 만족도

평생교육 접근성, 고등교육 접근성, 영유아교육 접근성은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 1~3위로 선정된 지표들이다. 평생교육 접근성은 준형식·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당 인구 수로 측정이 가능하고, 고등교육 접근성은 충남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에 설치된 학과 수 및 정원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며, 영유아교육 접근성 역시 지역 내 영유아교육 기관 설치 현황을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다. 한편 주관적 지표로는 계열 혹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사용해 측정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교육여건 부문의 세부지표 제안안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중등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이고, 공공도서관 1인당 장서 수는 공공도서관 접근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주관적 지표로는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효과성이 포함된다. 설문조사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학교폭력은 넓게 보면 교우관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교육비는 단지 액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교육 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하므로 사교육 효과성을 함께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교육성과 영역의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성과 부문의 세부지표 제안안이다. 성적은 가장 대표적인 교육성과로서 포함되었다. 사교육 시간과 학교 학습시간은 엄밀히 보아 교육성과라고 볼 수는 없으나 교육성과를 생산하는 투입물이고, 성적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성과로 포함시켰다. 노동시장 성과를 평가할 때, 월 임금보다는 시간당 임금이 더 유용한 지표가 되듯이 성적만 고려하는 것 보다는 학습에 투입한 시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학습시간이 긴 편으로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도 많다. 학습내용 만족도와 학습결과 만족도는 종합적인 학교 수업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 지표로서 선정되었다.

4) 교육영역에서의 정책 방향

교육영역의 정책방향을 앞서의 원론적 논의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화된 초·중등 교육의 질적인 측면이다. 교육의 객관적 행복지표 우선순위 설문조사에서 이 분야의 접근성(교육기회의 형평성)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교육의 핵심적인 이 분야에서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과 입학 스트레스, 장시간의 학습시간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행복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영역의 주관적 지표에서 계열 또는 전공, 교육여건, 학생-교사관계의 불만이 많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초중등의 교육기회의 접근보다 질적 차원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본다. 학교와 수업의 이루어지는 혁신들을 참조하여 이 부문의 질적 차원의 객관적 지표를 교육의 행복지수로 포함해야하며, 이를 높이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교육의 공교육에 영향과 사교육비 부담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효과가 없거나 단기적으로만 나타날 때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도와 도 교육청의 협력과 더불어 학교의 교사와 지역의 주민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민주적 방향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영·유아의 교육 접근성을 객관적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의 접근성은 전통가족의 해체, 일인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일과 가사의 공존의 부재, 높

은 교육비 등의 이유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영·유아 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대적 투자의 부족, 현 정부 하에서의 무상보육 실시 등으로 이에 대한 접근기회를 늘리라는 요구로 보인다. 지표에는 단순한 접근성, 공교육기관의 비율, 1인당 교육비와 공교육비 등을 조정해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양질의 공공보육기관을 확충하는데 전국을 통일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질의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과 공공투자(와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보육이 영리성을 강조하는 원리로 진행해 왔던 관행과 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고등교육의 접근성이 객관적 기준으로 충남도민이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충남도의 대학정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 분야는 높은 등록금 수준과 명문대학 또는 양질의 대학에 대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양질의 값싼 공공대학이 크게 적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제, 문화, 정치권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분야의 객관적 기준으로 세부항목에서는 공공대학의 정원비율, 교육비에서 국가부담의 비율, 가계소득 대비 등록금 수준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책방안으로도 양질의 대학체제의 형성, 공공대학의 비율의 확대, 그리고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 정책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교육기회의 기준으로 선택된 평생교육의 접근성은 주민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평생교육센터 등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처럼, 초·중·등 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서 무료나 싼값에 양질의 교육 내용을 신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진로개발과 진로교육을 생애 단계별 맞춤형으로 실시하여 계열과 전공에 대한 불만족을 개선해야 한다. 계열과 전공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교육투자가 생산적 인적자본으로 이어지지 않고 학습에서의 행복감의 지속성을 낮추고 삶의 문제를 더 얹히게 만드는 것으로 된다. 이는 도 차원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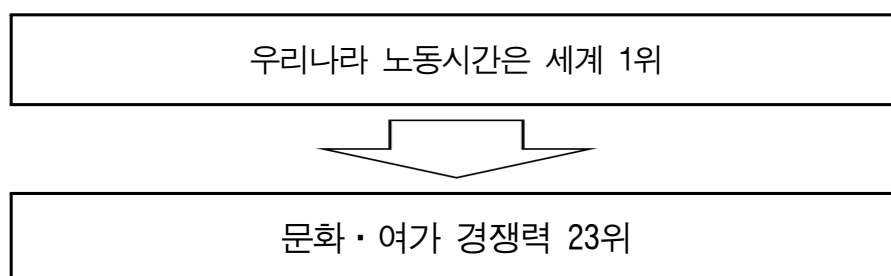
의 사회자본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화와 예술, 독서와 토론을 통하여 지역 사회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충남의 경우 도 차원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도 차원의 도서 정책과 문화정책을 주도할 책임 도서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5. 문화 및 여가 부문

1) 행복에 있어 문화 및 여가가 왜 중요한가?

(1) 문화 및 여가영역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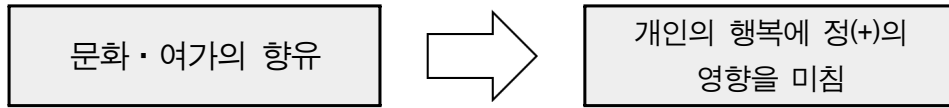
〈그림 33〉 우리나라 문화·여가 생활의 현실



문화와 여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소득이나 건강, 주거와 같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삶의 활력과 휴식, 재충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가의 개념은 산업화 이후 집을 떠나 휴식이 없는 노동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자유시간의 개념으로 발생하였다. 즉 여가는 필수적이거나 의무적인 활동이 아닌 그 외의 자유시간 활동과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다(Trewin, 2001). 문화와 여가 생활은 직업적인 문화활동이 아닌 경우 개인에게는 비경제적 활동이지만,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며, 여가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시켜줌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통계개발원, 2011).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를 논하지 않더라도 문화·여가가 개인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화·여가는 전통적으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노동에 대해 대비되는 것으로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개인이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4〉 문화·여가와 행복과의 관계설정



문화·여가의 향유가 개인의 행복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람의 생활만족도에 비해 여가, 가족, 종교 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더 높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이동원, 2007).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삶에서 여가나 가족 등과 같은 일 이외의 삶의 영역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인간의 생활에서 행복과 연관된 삶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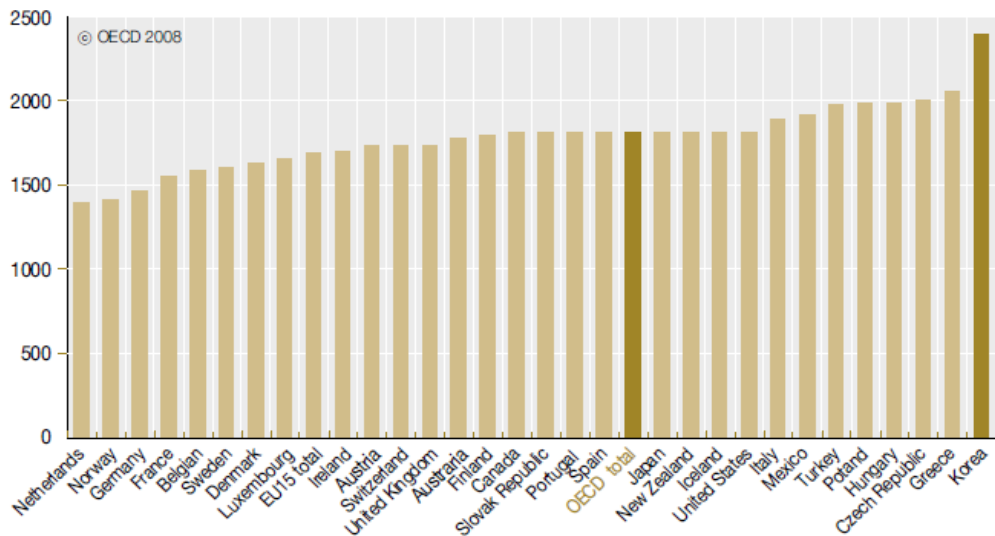
결국 행복한 생활은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며, 재미있는 활동에 열중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예를 들어 일, 가족, 여가 등)에서 균형을 이루어 가능하게 된다. 여가적인 용어로 재해석 하자면, 행복한 생활은 자기 결정적이고 내적 동기화된 여가활동을 통해 생활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여가활동의 재미적 요소를 통해 몰입하여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즐겁고 유쾌한 상태로 유지하여 얻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통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만족스런 수준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여가적 경험과 나눔의 가치실현을 통한 행복은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일-삶의 조화(Work-Life Balance)’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윤소영, 2009).

이처럼 단순히 경제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행복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되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여가 또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없다면 개인의 행복은 반감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돈은 행복의 필요조건이겠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선행연구들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면 행복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문화·여가 등 외적 요인의 비중이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을 논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문화·여가는 개인의 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본 절에서는 문화·여가의 역할과 행복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2) 문화 및 여가의 현황

최근 문화·여가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되고 주5일제의 확대로 다양한 문화·여가를 즐기려는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세계 1위이며 관련 정책 또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림 35〉 Average hours actually worked
Hours per year per person in employment, 2006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1주 48시간이었다가 1989년에 1주 44시간으로 변경되었고, 2004년부터는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위해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개정한 것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의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다. OECD의 200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357시간이며, 이를 주간으로 계산하면 45.2시간이다. OECD 국가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77시간이며 주간으로 계산하면 34시간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무려 연간 580시간, 1주일에 약 11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5년 2,354시간으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2006에도 1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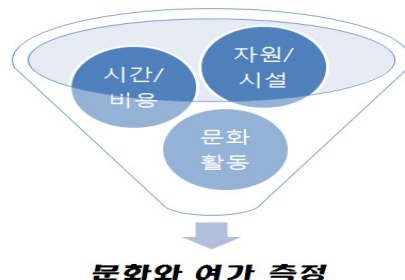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 중심적’인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생존권, 재산권 보장이외에 삶의 질을 높 이려는 행복추구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단순 노동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중심, 여가 중심 사회로서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여가경쟁력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순위이다. 산업정책연구원(IPS)과 국가경쟁력연구원 (IPS-NaC)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세계 각 국의 여가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2007년 기준 한국은 23위로 나타났다. 여가 가격경쟁력 지수는 여가생산 조건, 여가수요의 질, 여가연관 산업 및 인프라, 정치 사회적 기반 등의 4가지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IPS 국가경쟁력 연구보고서의 국가군 분류에서 강중국에 속하는데, 한국과 비교된 7개국 중 여가경쟁력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스웨덴이 4위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6위), 프랑스(9위), 노르웨이(11위), 뉴질랜드(13위), 핀란드(17위), 대 만(22위) 순이었다(여가백서, 2008).

2) 어떻게 문화 및 여가를 측정할 것인가?

문화·여가 영역에서의 행복의 측정은 개인들이 충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간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자원이나 기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화생활 또는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6〉 문화·여가 측정의 기본개념



문화는 한 집단 성원들의 집합적 행동양태, 즉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이해된다. 이때 문화는 상대주의적이며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문화는 동시에 정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예술적 활동 및 그 산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경우 문화는 민속문화와 대중문화, 고급문화로 구성된다.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사회의 다른 영역들 즉 정치, 경제, 사회와 달리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또한 정신적 고양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활동 및 산물 역시도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것은 문화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늘어나는 동시에 문화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욕구의 면에서도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증가한다고 한다.

문화에 대한 전통적 접근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엄격히 구분하고 인간의 정신가치를 높이는 것은 고급문화이기 때문에 고급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인식을 높임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이다. 결국 문화자본은 고급문화자본으로부터 다문화자본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통계개발원, 2011).

이처럼 문화 개념의 외연은 그 폭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레이몽 윌리엄즈(1982)에 의하면 1790~1850년 사이에 문화개념이 ‘정신활동의 소산’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삶의 양식의 총체’라는 넓은 의미로 확대되었다. 19세기 후반 나타난 ‘삶의 양식의 총체’라는 문화 개념은 제국주의의 확산에 따라 여러 식민지 사회의 문화를 비교연구하기 위한 인류학적인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20세기 중후반 민주화가 진전되고 노동자들의 일상문화와 대중문화의 가치가 문화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삶의 양식의 총체’라는 문화개념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다. 이런 역사적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구화 과정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만들어내는 물결들의 중첩으로 인해 윌리엄즈가 말하는 잔여하는 문화, 지배적인 문화, 대두하는 문화 간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고 그 분화의 속도도 심화되고 있다. 새롭게 대두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네티즌문화, 게임문화, 여가관광 문화 등의 위상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텔레비전과 영화 중심의 대중문화와 경합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다양한 문화 장르들 간의 융합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 개념의 외연적 신축성으로 인해 문화 개념의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문화 개념의 외연은 좁게는 예술이나 학문과 같은 정신활동의 정수로부터 넓게는 집단적으로 전승되는 삶의 양식의 총체이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 그 외연을 최대한 확대할 경우 자연 상태가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와 산물을 포함하며, 다소 좁히면 사회적인 수준에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문화하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의 개념은 그 외연과 내포가 넓고 다양하며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갈등적 개념이므로, 문화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정책적 접근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떤 지향과 강조점을 갖고 사용할 것인지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개인들, 그룹들, 공동체들, 사회들 간의 신뢰, 우정, 사랑, 정체성, 공감 등의 가치들이 증진되는 데에 있어서 각 단위들의 다양한 문화적 습속, 제도, 신념, 활동과 산물들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총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인간 주체의 다중 지능적 잠재력의 육성으로서의 문화라는 관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협소한 것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간 주체의 다양한 잠재력을 상호작용에 입각한 문화적 육성과 계발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더 확장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양현미 외, 2007).

여가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컨대 여가 활동은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여가에 대한 주관적 접근이며 객관적 관점에서 여가는 자유로운 시간 즉 일하는 시간이나 삶에 필수적인 시간(예컨대 가사활동) 이외의 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유시간으로서 여가는 사회성원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주로 즐거움이나 휴식, 활력의 공급, 재충전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이 높아 지려면 양적 측면에서 여가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질적 측면에서도 확보된 여가시간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가치와 행동은 모든 수준에서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 요인은 또한 개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배경이 되는 의미의 체계와 전통을 제공한다. 또한 문화 예술 활동은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무엇보다 문화예술이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감성적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여가시간을 스포츠와 같은 신체적 활동이나 문화예술과 같은 정신적 활동으로 잘 활용하면 일이나 그 밖의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

준다. 또한 스포츠나 문화예술 활동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과의 결속을 다지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 수준에서 볼 때 예술 및 문화적 산물은 사회적 상황과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것을 비판적 안목에서 바라보고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와 여가는 사회적 성찰의 거울인 동시에 사회적 비전을 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문화와 여가에 관련된 활동은 일종의 성장산업이다. 물질적 생산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하게 된 상징적 생산의 분야로서 문화예술은 정신적 가치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결국 여가 및 문화는 다른 영역 특히 경제적 생산의 영역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고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는 소극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창의성과 혁신의 원천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문화와 여가활동은 또한 국가적 정체감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에 핵심적인 공동체 연결망과 유대 형성에 도움을 준다.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과 취향을 가진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조화와 통합을 이루려면 문화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문화적 감수성에 입각한 문화적 소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통계개발원, 2011).

지속가능한 새로운 경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물질적인 요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개인의 소득으로 귀결되는 경제적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네트워크나 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행복을 논할 때 문화·여가의 가치를 빼놓을 수 없다. 돈보다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가 더 행복하다고 한다. European Social Survey(2004)에 따르면, 삶의 만족은 가치관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강한 정부, 부, 안전보다 모험, 성실, 창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와 물질적 소비를 강조하는 가치관은 삶의 만족을 저해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가치관은 이를 증진시킨다. 특히 물질주의는 사회적 관계를 저해하고 소득과 물질적 욕망간의 격차를 벌리기 때문에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여가는 행복의 주요 결정요인이므로 국가정책목표의 재정립과 새로운 사회발전지표의 개발에 있어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양현미 외, 2007).

행복연구에서 문화·여가는 우리가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시적인 문화가 아니라 비가

시적인 문화, 즉 가치관을 의미한다.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복이 다르게 나타난다.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문화·여가는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문화로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지지하면서도 다양성을 포용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높은 특성을 띠고 있다. 문화·여가 영역은 시간사용과 관련된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영역이다. 선행연구에 포함되었던 지표들은 여가시간, 시간사용에 대한 결정권, 문화시설, 여가활동 및 시설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화·여가 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여가 시간 등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만족도·중요도 등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였다. 둘째, 문화·여가 지표의 영역을 4개영역으로 단순화하여 향후 통계분석과 시계열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순 나열식 지표가 아니라 충남도민의 행복을 고취시키는 방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3) 문화 및 여가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1) 문화 및 여가영역에서의 선행연구 사례

행복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행복측정에 대한 연구로 구체화된다. 일반적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안은 객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과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것이다(방영준, 2008).

주관적 삶의 질 측정은 개인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개념정의나 측정이 어렵지만, 1970년대는 삶의 하위 영역들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개인의 체험하는 삶의 주관적 안녕에 대해 인지적 측면에서 냉철하게 평가하는 만족보다는 감정적으로 행복한 상태라는 견해에서 행복감 측정으로 옮겨갔다.

객관적 삶의 질 측정은 보다 여러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 교육, 문화, 사회복지, 건강 등의 객관적 삶의 측정치들이 GNP를 떠나 어떤 국가가 보다 질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반영해 준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은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지표 그 자체에 보다 큰 관심이 있으나, 주관적 안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객관적 삶의 질 보다는 그것이 주관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행복 측정을 위해 포함된 지수 가운데는 시간사용이나 시간배분,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시간활용에 대한 재량, 업무스트레스, 시간균형, 스포츠활동이나 문화예술 참여율 등이 있다. 특히 행복측정에서 시간량이나 분배 또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

몇 명 연구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시간압박감이 어떻게 감정적인 웰빙이나 주관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지 밝히고 있다. 연구결과들은 과중한 업무량과 시간부족감이 웰빙이나 행복수준에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노동시간이 길수록 일과 일 이외의 삶의 영역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이나 노동량을 자유의사로 선택하였고 그것에 흥미를 느낀다면 시간 부족감 없이 장시간 일할 수 있으며, 반대로 단시간 일하더라도 자신의 일에 흥미가 없고 작업에 대한 통제권이 부족하다면 시간부족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웰빙이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시간관련 변인은 노동시간량 보다는 시간부족에 대한 감정상태에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길이가 삶의 균형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노동시간량 또는 여가시간량도 유의한 영향변수임을 알 수 있다(윤소영, 2009).

〈표 94〉 문화·여가 지표를 포함한 웰빙지표 사례

행복지수	구성요소 중 문화·여가요인
부탄 국민총행복지수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 문화 활성화 및 다양성 - 시간 사용 및 균형
캐나다 웰빙지수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 시간배분(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균형, 시간 활용에 대한 재량, 업무스트레스)
뉴질랜드 사회적 웰빙지수 (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 문화 정체성(TV의 지방 편성 프로그램, 마오리 언어 사용자, 언어보존) -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여가 시간에 대한 만족도, 스포츠 활동 참여율,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경우 웰빙지표에 문화·여가지표가 반영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문화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균형이라는 지표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갖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뉴질랜드의 경우,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영역에 포함된 지표들(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스포츠 활동 참여율,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역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표로 판단된다.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문화정책 성 영역에 대한 지표들(TV의 지방편성 프로그램, 마오리 언어 사용자, 언어 보존)은 문화정책 성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표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양현미 외 2007).

따라서 충남의 현실을 반영하여 행복지표로서 문화·여가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여가가 충남도민의 행복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행복지표에서 문화·여가지표를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여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문화 및 여가영역에서의 행복지표 체계의 구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표와는 차별성을 두어 문화·여가 행복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며, 문화·여가 지표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문화·여가지표는 기존지표의 활용 외 4개영역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와 여가 영역은 문화·여가 시간, 문화·여가 지출, 문화자원 및 문화활동, 만족도·중요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존 연구에서 문화는 주로 문화시설, 여가 활용, 시간사용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생활과 여가는 개인에게 있어서 직업과는 다른 자기개발이나 휴식과 연관된 개념으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황명진 외, 2007).

〈표 95〉 문화·여가 행복지표 영역

영역	세부영역	비고
기존지표활용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객관적 지표
	레저시설 이용 여부	객관적 지표
	국내관광여행 여부	객관적 지표
	해외여행 경험 및 여부	객관적 지표
문화·여가 시간	문화·여가활동 여부	주관적 지표
	문화·여가활동 시간	객관적 지표
문화·여가 지출	지출비중	객관적 지표
문화자원 및 문화활동	문화에 대한 인식	주관적 지표
	지역 자원파악	주관적 지표
	지역 자원활용 여부	주관적 지표
	지역 자원활용 애로사항	주관적 지표
	지역자원 변화	주관적 지표
	문화 만족도	주관적 지표
만족도·중요도 조사	삶의 만족도 변화	주관적 지표
	문화·여가시간 만족도	주관적 지표
	문화·여가시간 중요도	주관적 지표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주관적 지표
	문화·여가활동 중요도	주관적 지표

기존지표의 결과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의 경우 충청도민은 45.8% 만이 경험을 하여 16개 시도 중 16위로 나타나 충남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저시설 이용여부의 경우도 충청도민은 62.3%만이 경험하여 16개 시도 중 12위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관광여부의 경우 충청도민은 62.7% 만이 경험을 하여 16개 시도 중 10위로 나타났다, 해외 관광여부의 경우 충청도민은 11.8%만이 경험하여 16개 시도 중 9위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충남의 문화·여가 경험은 16개 시도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표 96〉 문화·여가 기존지표 분석결과

행정구역 (시도)별	201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경험	레저시설이용 경험	국내여행 경험	해외여행 경험
전국	58.6	65.8	63.2	15.9
서울	67.0	67.8	65.3	22.9
부산	56.3	57.9	53.9	15.2
대구	56.3	71.7	69.0	10.5
인천	60.0	62.7	61.3	15.4
광주	61.4	71.3	68.8	11.4
대전	61.5	67.8	64.1	14.9
울산	60.3	65.0	57.0	15.9
경기	63.6	69.5	64.6	18.1
강원	46.2	52.2	52.1	9.9
충북	47.7	60.6	64.0	11.8
충남	45.8	62.3	62.7	11.8
전북	49.7	67.7	66.1	9.9
전남	46.5	64.5	64.2	10.9
경북	49.3	63.8	61.3	10.7
경남	51.5	61.5	63.5	10.2
제주	51.0	64.0	55.5	14.3

자료: 통계청 사회지표(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충남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문화 및 여가영역에서의 세부 객관적 지표는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에 기초하여 결과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등 7개의 지표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레저시설 이용여부, 독서여부, 일반신문구독 여부, 국내관광여행 여부, 해외여행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레저시설 이용여부, 국내관광여행 여부, 해외여행 여부는 결과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영역 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에서 지표로 적합하나 보편성에서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서여부, 일반신문구독 여부는 시계열 측정, 가변성, 영역 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에서 지표로 적합하나 결과지표와 보편성에서 다소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7〉 문화 및 여가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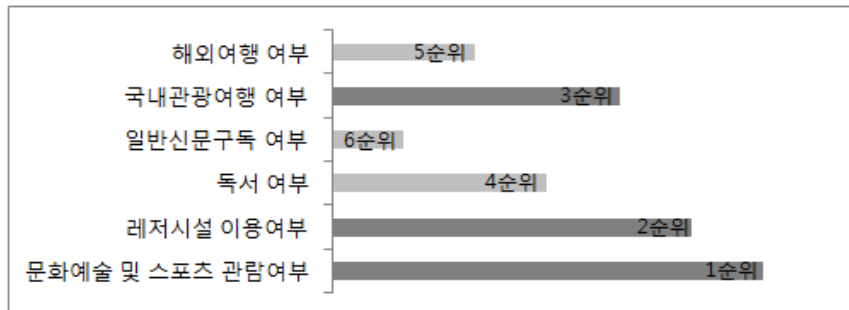
지표명	선정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 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	◎	◎	△	◎	◎	◎
레저시설 이용여부	◎	◎	◎	△	◎	◎	◎
독서 여부	○	◎	◎	△	◎	◎	◎
일반신문구독 여부	○	◎	◎	△	◎	◎	◎
국내관광여행 여부	◎	◎	◎	△	◎	◎	◎
해외여행 여부	◎	◎	◎	△	◎	◎	◎

- 주 : 1) 결과(outcome)지표는 해당 지표가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이 아닌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여부
 2) 시계열 측정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로 측정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3) 가변성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여부
 4) 보편성은 해당 지표가 삶의 질이나 웰빙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5) 영역 간 중복은 해당 지표가 타 영역에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6) 간결성은 해당 지표가 일반인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7) 적용성은 해당 지표가 충남에 대해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8) 선정기준에 대한 부합성은 ◎ : 기준에 매우 부합함, ○ : 대체로 부합함, △ : 보통, x : 부적합으로 구분

(3)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지표 검토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항목은 문화 및 여가영역 지표 중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재수정 하였으며 최종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7〉 문화·여가 객관적 지표 순위



먼저 객관적 지표의 우선순위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가 1순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레저시설 이용여부로 나타났으며, 국내관광여행여부, 독서여부, 해외여행 여부, 일반신문 구독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객관적 지표는 통계청에서 시도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충남의 문화·여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신문구독여부와 독서여부의 경우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기사와 소설 등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 연구의 행복관련 지표로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레저시설 이용여부, 국내관광여행 여부, 해외관광여행 여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충남의 문화·여가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불만족이 28.32%로 다음 순위였다. 충남도민들은 전반적으로 충남의 문화·여가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하는 지역에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문화유적, 공연, 축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그렇지 않음이 28.20%로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충남에는 다양한 문화유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98〉 문화·여가 도민 만족도

구분		구성비율(%)
충남의 문화/여가 전반적 만족도	매우 만족	1.15
	약간 만족	15.18
	보통	48.53
	다소 불만족	28.32
	매우 불만족	6.81
대표적인 지역문화 존재여부	매우 그러함	3.51
	다소 그러함	21.12
	보통	40.99
	다소 그렇지 않음	28.20
	매우 그렇지 못함	6.18
지역문화에 대한 향유여부	매우 그러함	1.99
	다소 그러함	17.16
	보통	40.66
	다소 그렇지 않음	33.79
	매우 그렇지 못함	6.40
문화·여가 시설의 질적 변화 여부	매우 좋아짐	3.20
	다소 좋아짐	37.68
	보통	48.53
	다소 나빠짐	8.28
	매우 나빠짐	2.31
자신의 삶	매우 그러함	5.56
	다소 그러함	32.86
	보통	46.65
	다소 그렇지 않음	12.63
	매우 그렇지 못함	2.25

아울러 이와 같은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0.6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소 그러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3.79%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은 지역문화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도민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하며, 공연, 축제 등에 있어 지역의 예술인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역의 문화·여가시설이 질적으로 좋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4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소 좋아졌다는 의견도 37.68%로 높게 나타나 충남이 문화·여가 시설의 질 개선에는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한 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질문

에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4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그러하다’는 의견도 32.86%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여가활동이 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분명히 기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충남은 충남도민의 문화·여가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의 문화에 대한 홍보와 이용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 예술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 및 여가 영역의 최종지표는 기존지표 활용, 문화자원 및 문화활동, 만족도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지표는 문화 및 스포츠 관람여부, 레저시설 이용여부, 국내관광여행 여부, 해외여행 경험 및 여부를 활용하며 객관적 지표로 포함한다. 문화자원 및 문화활동은 지역 자원파악, 지역 자원활용 여부, 지역자원(시설) 변화를 주관적 지표로 포함하며 삶의 만족도 변화와 문화·여가활동 만족도를 만족도 조사의 주관적 지표로 포함한다.

〈표 99〉 문화 및 여가 영역의 최종 지표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기존지표활용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
	레저시설 이용 여부	
	국내관광여행 여부	
	해외여행 경험 및 여부	
문화자원 및 문화활동	-	지역 자원파악
		지역 자원활용 여부
		지역자원(시설) 변화
만족도 조사	-	삶의 만족도 변화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3) 문화 및 여가영역에서의 정책 방향

지역의 행복·여가 지표 측정시 주의점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2004년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사회 구성원들이 일 이외의 영역이 삶에서 불가결한 부분이자 삶의 보람과 기쁨을 배로 만들 수 있는 요소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일과 여가의 조화가

실현되는 사회가 국민의 삶의 질 또는 웰빙 지수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일과 여가의 조화가 실현되는 사회에서 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고, 휴식을 통해 안정감을 찾고, 자기계발을 통해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며, 생산적 여가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아 만족감을 극대 시켜 행복 지수를 높이게 된다(윤소영, 2007).

따라서 지표를 선정하고 측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문화정책은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문화를 완화하면서 시민적·정치적 자유, 공공적 표현, 다양성, 자율성, 인간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문화정책은 문화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양현미외, 2007). 즉 충남도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시키고 여가 활동의 참여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는 무엇보다 인간의 지적 창의력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회이므로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예술 토양을 가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기량을 닦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시 및 공연 공간을 조성·지원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 문화·여가 분야의 행복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여가 향유 기회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소외계층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 확대는 충남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계층간 불균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책방향과도 상통한다. 정부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정서적·문화적 욕구충족,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사회적 유대감의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큰 방향을 선택한바 있다.

문화소외계층은 소득수준, 거주지역 및 사회적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 농어촌, 공단지역 주민 등 지리적 소외계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충남은 이 모든 계층을 포함하고 있다. 충남은 타지역보다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많다. 아울러 충남은 대표적인 농업도로서 농어촌지역이 많고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공단 또한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은 소외계층의 문화적 접근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외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지역의 예술가나 지자체 및 자원봉사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충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충남이 도민의 문화·여가의 질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과 전략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목표는 계층간 문화격차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여가를 위한 기반조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표 100〉 충남 문화·여가 정책 방향 및 전략

목표	충남도민의 문화·여가의 질 제고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건설한 문화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문화 확산
정책방향	문화·여가 기회 확대	문화·여가 인식의 저변 확대	문화·여가 기반조성
전략	문화·여가 소외계층 지원	지역 문화예술 단체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여가 인프라 확대

첫째, 문화·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화·여가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노인층의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세대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 문화·여가에 대한 친밀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가정이 이질적인 문화를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때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충남의 농촌지역은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지원의 홍보효과가 미약하여 정책지원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공연이 많은 대도시로 버스를 대절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팀을 직접 농어촌마을에 보내는 프로그램도 개발도 필요하다. 아울러 거점별로 상설공연을 육성하거나 순회공연을 정례화 하는 등 대도시와 차별화된 공급측면의 문화

복지정책이 농촌지역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 문화예술 단체 네트워크 강화이다. 충남은 지역 예술인, 체육인,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이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예술단체 우수 공연프로그램의 지방문예회관 공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들과의 유대감과 교류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

지역 예술가 및 스포츠선수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정부지원, 재능기부, 문화소비가 선순환되는 견실한 문화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충남도민의 문화·여가 영역의 행복도는 높아질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여가의 인프라 확충이다. 경로당, 양로원, 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용품 및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인층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속적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관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조적 고령층을 양성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사고력 및 창의성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

충남의 문화·여가 시설의 질적 개선은 설문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계층별 프로그램개발과 인프라의 확충에 보다 노력하여 지속가능한 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충남의 문화·여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 충남도 자체적인 문화·여가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혜자의 수와 관련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복지 업무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문화복지 매개인력을 문화복지 현장에 배치하여 문화복지 업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예술인, 체육인, 문화예술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재능기부 및 나눔의 문화가 정책되어야 한다. 지역 예술인이 많아지면 그만큼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지자체는 지역 예술인과 체육인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술가 등의 재능기부, 정부 및 민간의 후원, 자원봉사 활동 등이 연계되어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충남도가 바라는 도민의 행복도는 높아질 것이다.

6. 환경 부문

1) 행복에 있어서 왜 환경이 중요한가?

(1) 환경영역의 필요성

환경이란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존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상태를 일컫는다. 일정한 범위에 있는 모든 생물은 무기적 환경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생물의 다양성 및 물질 순환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과도한 생산 활동 결과에 의한 환경오염은 수많은 동·식물 서식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인간의 행복은 보장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환경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구성하는 3대 축(경제 성장, 환경 보전, 사회 발전)의 하나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인류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이로 인한 각종 재앙이 20세기부터 서서히 나타나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과도한 활동으로 나타나는 환경오염의 피해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특징이 있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생태계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항상 평형이 유지될 때 인간의 건강한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는 개념 하에 인간과 환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써 인간이 살고 있는 주변요소 모두를 포함하려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환경에 대한 체감지수가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며, 개인의 환경과 공동체의 생존기반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환경보호 요구와 환경적 가치는 더욱더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가치’의 관심사는 환경 질 그 자체 또는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기능의 역할 및 중요성을 밝혀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가치는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지만 개인의 선호(preference)로부터 가치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가치는 개인의 선호체계와 환경서비스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치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환경영역의 행복지수를 적용하는 개념적 틀이기도

하다.

(2) 환경영역의 현황

첫째, 물환경은 깨끗하고 이수목적에 적합한 공공수역의 수질관리는 환경부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환경 분야의 가장 큰 정책 목표의 하나로서 환경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이기도 하다. 물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깨끗한 물을 확보하여 하천환경을 보호하며 맑은 물을 모든 도민에게 적절히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물 범주에서는 전자를 대표하는 지표로서 하천수 오염도, 호소수 오염도를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는 환경보건은 인체 건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 화학적 및 생물학적 환경요인의 평가와 관리를 다루는 분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5조에서 환경권 구현을 강조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 4에서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보건의 분야는 다양하다. 미세먼지, 황사피해, 오존, 천식 등 대기오염을 비롯하여 중금속오염, 지하수오염 등 토양환경오염, 자외선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홍수와 가뭄, 식수오염 등 수질환경오염, 자동차, 소각장, 원자력발전소 등 생활 및 산업폐기물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최근 환경오염과 화학물질노출에 따른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더불어 웰빙, 로하스(LOHAS) 등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 확산 등 환경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인구수를 최소화시켜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산모와 어린이 등 민감계층 및 산단 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등 사전예방원칙에 기초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폐기물 정책에 있어 지난 90년대 이래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이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는 우리 국민의 삶의 일부로서 사실상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얼마나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실질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재활용 율이 높아질수록 일정 정도의 환경오염이 불가피한 매립과 소각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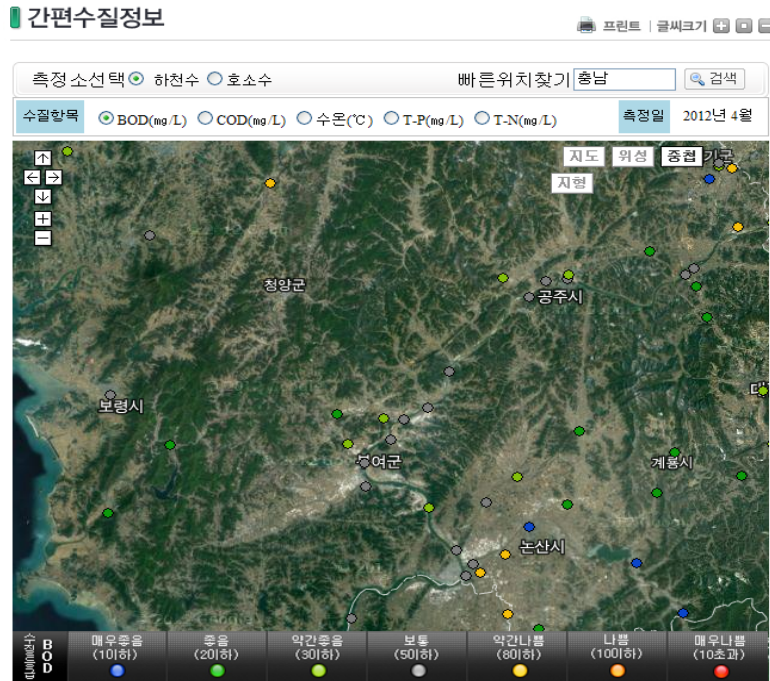
2) 어떻게 환경을 측정할 것인가?

환경기준에 따른 환경관리 상태는 오염물질과 건강에 대한 영향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거나 하면 영향의 정략적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도 적지 않다. 환경기준이 엄격하면 그 달성을 위한 오염방지 비용은 급격하게 증대하고 사회경제에 주는 영향도 그 만큼 커지게 된다. 더욱이 환경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각각 설정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영역의 지표를 정량화 할 수 있는 환경기준은 국가 또는 일정지역 내에서 환경개선 노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환경보전 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자치단체 들은 정책목표로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물질을 기준항목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할 것인지의 전문성과 측정 자료의 부족 등으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국가의 환경기준에 의존적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형식에 따라서 크게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된다. 객관적 지표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지표, 그리고 태도나 가치가 아닌 현재의 사실을 측정하거나 조사한 통계적 자료 등이며,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객관적 지표는 사회의 전반적인 상태나 상황, 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수치를 보여주며, 주관적 지표는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나 평가, 태도 등을 보여준다. 주관적 지표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도민들의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여 객관화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체감만족도와 환경문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정도 등 주관적 지표 또한 포함하였다.

물환경은 하천과 호소의 수질현황은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으로부터 월별 수질항목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및 지역단위의 시계열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38〉 물환경정보 시스템



충청남도 환경보건은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폐금속광산 등 많은 위해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환경위해성과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증가, 수인성 질병 등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보건문제를 지표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데이터는 국민보험공단, 환경보건포털 등에서 획득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율은 발생폐기물 대비 처리되는 양이 백분율로 계산되며 환경부의 환경통계포털(환경통계연감)으로 부터 얻을 수 있다. 확보된 자료분석을 통하여 시도별 시·군구 시계열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39> 환경통계 연감2

환경통계연감

홈 > 통계 조회 > 환경통계연감

환경통계연감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검색

국민경제활동

환경상태

환경관리

상세분야검색

환경관리

환경분쟁 조정 현황

환경오염방지투자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환경관리구역

국제환경협약

기타

환경산업 현황

기후변화대응

수질관리

검색결과

번호	통계표명
11	하수도 보급현황(1997)
12	하수도 보급을 변화추이
13	상수도 요금현황
14	하수도 요금현황
15	하수처리장 현황
16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
17	하수처리구역내 인구현황
18	소음·진동 배출시설 현황(허가...
19	처리방법별 일반폐기물 처리현황
20	처리방법별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1 | 2 | 3 | 4 | 5 | >

3) 환경 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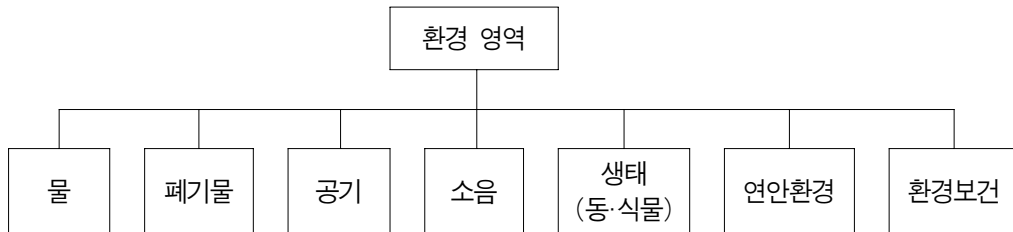
(1) 환경 영역에서의 선행연구 사례

환경지표의 방향성에 있어서 규범적인 지수로써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 공통된 목적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지표항목은 가급적 시계열측정이 가능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며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간결한 속성과 세분화가 가능하고, 대다수의 도민이 알기 쉽게 인지할 있는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를 보면 통계청 연구(2009)는 전체 환경 영역에서 총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본 지표체계가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OECD 연구(2010)에서는 OECD 국가들은 물론, 남미, 중동, BRIICS 등 다양한 경제 여건과 삶의 질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범주의 환경영역을 지표로 설정하여 도민의 행복지수와 연결시켜 측정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

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영역을 가장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화된 범주를 먼저 설정하고자 하였다. 환경영역에서 도민의 삶의 질, 즉 행복과 관련된 지표의 분류로는 체감성 및 현안성에 따라 물, 폐기물, 공기(악취 포함), 소음, 생태(동·식물), 연안환경, 환경보건 등 총 7개로 분류하여 정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환경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환경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표분류의 범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40>와 같다.

〈그림 40〉 물환경정보 시스템



(2) 환경 영역에서의 행복지표체계의 구축

① 환경영역의 개요

환경문제는 위해 물질 배출로 인한 공기 및 물의 오염, 산업화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등이며, 간접적인 요소로는 기후 변화, 탄소 및 수질 사이클의 변환, 생물다양성 손실은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생태계 건강성을 위협하는 자연 재해 등으로 영향을 미친다. 생활과정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 나타나기도 하고,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지만 그 위험에 대한 대책수립 및 대응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인간은 환경적인 쾌적함과 불쾌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람들의 생활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인간은 생활과정과 활동공간의 편리성을 위한 여러 형태의 유형으로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개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공기질 저하, 수질 오염, 소음·진동 발생, 연안 환경 훼손, 생태면적 감소 등)는 인정하지 않고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 도민의 생활 및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간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던 지난 세대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중심적이던 가치관이 인간도 자연환경의 일부분이라는 환경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즉, 생태계의 균형적관리가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나아가서는 인류 존재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각종 개발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항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보호에 관한 도민의 의식은 국가와 지방정부인 충청남도에 환경보호를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가치를 기대하는 것이다. 즉, 도민은 국가와 충청남도에 대해서 생태적 환경에 대한 지속적 보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기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국지적 또는 일부지역 전체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환경오염은 단기간에 치유되기 어려우며, 지금도 다양한 환경 침해요인이 산재하고 있어 현재의 환경상태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다. 또한, 부분적이지만 지역발전의 요인들이 점차 환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도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행복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② 환경영역의 지표분류

물 오염(water pollution)현상은 오염물질이 물의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자연수체에 배출되어 해당 수체가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유기물 과다하게 유입하여 용존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 중금속에 물에 과다 함유된 상태, 호소 등의 정체수역에 질소나 인과 같은 무기물이 다량 함유된 상태, 전염성 세균의 유입으로 수인성질병 유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깨끗한 물과 양을 확보하여 하천과 호소환경을 보호하며 맑은 물을 도민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폐기물 정책에 있어 지난 1990년대 이래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는 도민의 삶의 일부로서 사실상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얼마나 폐기물 재활용이 실질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아닐 수 없다. 재활용율이 높아질수록 일정 정도의 환경오염이 불가피한 매립과 소각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기의 범주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고, 공기의 쾌적성 및 호흡기 질환과 얼마나 많은 관련성이 있는가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인체에 해롭지 않다하더라도 악취 등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특히, 공기오염은 주민들의 체감적인 건강 상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광역적이란 특징 때문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음은 환경관련 민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생활수준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보편화, 도로와 대형 건축물의 건설 대형 산업설비의 사용에 따라 소음진동 발생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음은 난청, 청력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교감신경계가 긴장하게 되어 혈압상승 등의 영향이 발현되기도 하고, 내분기계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영향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도민의 생활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급속히 요구되고 있지만, 정서적인 문화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주거지역에 소규모 공장 및 각종사업장 등이 주택가에 혼재되어 있고, 확성기 소음, 작업소음, 자동차 소음, 유흥업소의 심야소음 등 다양한 음원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

도민의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연녹지나 자연생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성장과 대규모 개발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총량이 갈수록 희소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생태계가 양호한 지역감소, 녹지면적의 감소는 동식물의 다양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공기정화 물의 자정작용 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국립공원과 도심 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과 갯벌이나 습지 등 자연에 의해 제공된 동식물은 생활주변의 휴식처로 활용되는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안(沿岸)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해역을 총칭한다. 연안은 해변, 갯벌, 만, 삼각주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양생물 및 철새에는 산란장과 서식지이자, 사람들에게는 항만, 임해공단, 어항 및 어촌, 관광지 등이 되고 있다. 최근 연안을 이용하는 행위가 서로 상충되고, 연안 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연안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갯벌이나 바다를 매립하여 육지로 만드는 경우와 육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을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경우이다. 충남의 연안환경은 금강 하구언 해수유통,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담수호의 해수유통 등의 큰 주제 들을 담고 있는 문제에서 부터 지역적으로는 연안습지 및 사구보전, 갯벌보전, 연안환경 수질오염 등 크고 작은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의 요소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보건의 범주는 사람의 건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 화학적 및 생물학적인 환경요인에 의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화학적 환경요인으로는 공기오염, 토양, 광선, 소음, 물 오염, 폐기물 등이 있으며, 생물학적 환경요인으로는 동물, 위생곤충, 병원성미생물 등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즉 중금속 중독, 암 발생,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급증 등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인간생활의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의 범주는 최종수요자인 도민의 건강 및 생태계 안전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관련 오염매체 관리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 민감 계층에 기반을 둔 환경기준 설정, 환경성 질환의 조사 및 예방·관리 활동이 도민의 행복지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환경지표의 세부분류

환경지표의 세부 선정 기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표의 증감이 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이 지표들의 신뢰성(reliability)을 고려하였다. 가능하면 지표의 환경 질에 대해 영향이 분명한 방향을 보이는 즉, 지표의 변화에 따라 환경이 개선 혹은 악화되는 명확한 관계를 갖는 지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환경의 질 측정에서 아무리 중요한 지표라고 하더라도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되면 사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환경의 질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때 지표가 신뢰성이 낮다면 시계열적 비교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자료보다는 포괄범위가 넓은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표하는 부문별 정보시스템 자료와 매년 발간되는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환경의 질은 그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들이 살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료보다는 한국적 현실의 특성과 함께 충청남도 환경특징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 외 지표자료를 손쉽게 확보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환경영역의 세부적인 지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하였으며 총 8개 분류 범주에 50여개 세분류 지표(안)로 구성하였다. 지표들은 최대한 방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지역별 격차와 같은 형평성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 각각 세분류의 지표를 평가하는 방법은 <표 101>에 제시하였다.

이들 지표의 범주를 다시 충청남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충남도)지표, 도시지표, 비도시지표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행복지수에 적합한 지표를 선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표 101> 환경지표의 세분류 현황

종류	인체영향	객/주관지표	세부지표명	지표설명	자료확보
종합	간접적	주관적지표	환경만족	- 생활권 지역에서 환경으로 인한 불쾌한 사항 경험 유무	설문조사
물	직접적	객관지표	하천수질	- 지방하천의 유기물(BOD)농도측정 * 2등급 이하 비율	환경부 및 충청남도 환경통계
			호소수질	- 만수면적 0.5km ² 이상 호소의 유기물(COD) 및 T-P 측정 * 4등급 이하 비율	
			지하수질	- 지하수관측공의 수질측정분석 * 지하수오염기준 만족율	
			상수도 보급률	- 광역, 지방, 마을상수도 보급률 측정	
			공공하수 처리율	- 공공하수처리시설내 인구율	
			수서생물종	- 하천 수서 생물 종다양성(복원목표종) 조사	
			1인당1일물 소비량	- 상수급수량(ℓ)/구인구(명)	
			자연형하천복원비율	- (복원된 자연형 하천길이m÷총하천길이m)×100	
			빗물활용도	- 빗물저류조 설치 총용량	

		주관 지표	수질만족도	- 먹는물 수질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폐기물	직접적	객관 지표	1인당 1일 생활폐기물량	- 연간 총 생활폐기물량÷(지자체 인구수×365)	환경부 및 충청남도 환경통계
			생활폐기물 처리율	-(생활폐기물 총처리량÷생활폐기물 총배출량)×100	
			톤당 폐기물 처리비용	- 폐기물 처리 비용 총액÷폐기물발생량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 연간 총 음식물 폐기물발생량÷(지자체 인구수×365)	
		주관 지표	주변 청결상태	- 생활주변 청결상태 만족도	설문조사
공기	직접적	객관 지표	미세먼지 (PM10) 농도	- 호흡기계 질병의 악화,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 시정을 악화시키는 물질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주거지역에서 평균 연간농도(micrograms/cubic meter)	환경부 및 충청남도 환경통계
			오존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횟수	- 연간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총 횟수 · 오존주의보: 1시간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 오존경보: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 이상일 때	
			통합대기환경 지수(CAI)	- 건강영향에 따라 대기오염농도를 6단계의 지수와 색상으로 표현	
			1인당온실가 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량(CO2)÷인구수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염도	- VOC 측정 농도	
			친환경버스비 율	- (친환경버스대수÷총버스대수)×100	
			평균온도	- 연간평균온도	
		주관 지표	공기질 만족도	- 공기질 만족도	설문조사
소음	직접적	객관 지표	소음도	- 주거지역 소음도(도로변, 야간) * 환경기준 55dB	환경부 및 충청남도 환경통계

		주관 지표	소음피해	- 소음으로 인한 건강피해	설문조사
생태 (동식물)	간접적	객관적 지표	자연공원 면적과 수	- 자연공원 지정면적/지자체 행정구역면적×100 - 자연공원 지정수	환경부 및 충청남도 환경통계
			법정자연환경 보호구역비율	- 법정 자연환경 보호구역 면적 /해당 지자체행정구역면적×100	
			녹지면적 (1천인당 녹지면적)	- 임야, 초지 등 녹지총면적/해당 지자체행정 구역면적×100	
			1인당주거면 적	- 주택건물면적÷인구수	
			지하수오염 기준치 초과 비율	- 환경부의 지하수 오염조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된 항목의 수 산출 기준치 초과 건수÷(조사지점 x 조사 항목)	
			토양 오염 기준치 초과 비율	- 환경부의 토양 오염조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된 항목의 수 산출 기준치 초과 건수÷(조사지점x조사 항목)	
		주관적 지표	환경생태	- 생활 반경 내 아름다운 환경생태 경험유무	설문조사
연안 환경	간접적	객관적 지표	연안해양보전 구역지정	-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역면적 비율 * 연안 해양보전구역/연안과 접해있는 시·군 면적×100	국토해양부 및 충청남도 통계
			연안수질도	- 연안의 수질오염도	
환경 보건	직접적	객관적 지표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율	- 공기, 물, 폐기물 토양, 소음진동관련 질환 발 생수 /전체인구×100	환경부, 환경보건 통계
			화학비료 사용량	- 화학비료소비량÷총경작지면적	
			농약사용량	- 농약소비량÷총경작지면적	
		주관적 지표	건강위협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위협정도	설문조사

충남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환경영역에서의 세부 객관적 지표는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결과

에 기초하여 결과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등 7개의 지표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하천 및 호소수질, 통합대기환경지수, 주거지역 야간소음도, 환경오염 질환 발생지수, 친환경축산농가율, 야생 동식물 다양성, 환경 민원 해소율, 폐기물 관리 등이 포함된다.

하천 및 호소수질, 통합대기환경지수, 주거지역 야간 소음도, 환경오염 질환 발생자수는 결과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적용성에서 지표로 적합하나 영역 간 중복에서 다소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축산농가율은 가변성, 영역 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에서 지표로 적합하나 보편성, 결과지표, 시계열 측정에서 다소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민원 해소율은 결과지표, 가변성에서 지표로 적합하나 보편성, 시계열 측정, 영역 간 중복에서 다소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관리는 결과지표, 시계열 측정, 간결성에서 지표로 적합하나 보편성, 영역 간 중복에서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2〉 환경 영역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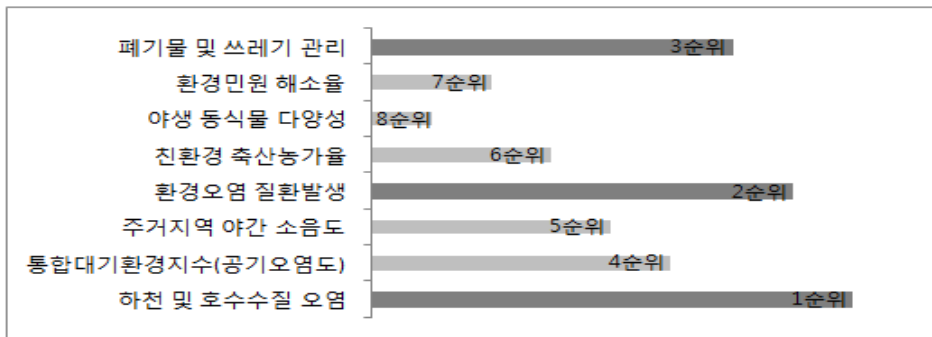
지표명	선정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 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하천 및 호소수질	○	○	○	○	x	○	○
통합대기환경지수(CAI)	○	○	○	○	x	○	○
주거지역 야간소음도	○	○	○	△	x	○	○
환경오염 질환 발생자수	○	○	○	x	○	○	○
친환경축산농가율	△	△	○	x	○	○	○
야생 동식물 다양성	x	x	x	x	○	○	x
환경 민원 해소율	○	△	○	x	△	○	○
폐기물 관리	○	○	○	x	△	○	○

- 주 : 1) 결과(outcome)지표는 해당 지표가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이 아닌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여부
 2) 시계열 측정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로 측정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3) 가변성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여부
 4) 보편성은 해당 지표가 삶의 질이나 웰빙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5) 영역 간 중복은 해당 지표가 타 영역에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6) 간결성은 해당 지표가 일반인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7) 적용성은 해당 지표가 충남에 대해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8) 선정기준에 대한 부합성은 ○ : 기준에 매우 부합함, ○ : 대체로 부합함, △ : 보통, x : 부적합으로 구분

(3)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지표 검토

환경분야 객관적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도내 주민 2,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환경영역에서 지표로 설정하여야 할 항목으로는 하천 및 호소수 수질 오염이 1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발생 2위, 폐기물 및 쓰레기 관리 3위, 통합대기환경지수(공기의 오염) 4위,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도 5위, 친환경 축산농가율 6위, 환경민원 해소율 7위, 야생 동·식물 다양성 8위로 나타났다.

<그림 41> 충남의 환경 영역 객관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한편, 충남의 환경전반에 대한 관리상태를 설문한 결과 81%가 ‘보통’ 이거나 ‘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문별 관리상태로는 하천 및 호소의 수질관리 상태가 84%,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 위협을 느끼는 정도 83%, 폐기물관리 등 청결상태 71%, 공기오염 정도는 83%가 보통 이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충남도민이 느끼는 행복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정책에서 우선되어야 할 지표로는 하천 및 호소수 수질오염 관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예방, 폐기물 및 청결관리의 3대 정책에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

〈표 103〉 충남의 환경 영역 도민 만족도

구분	구성비율(%)
충남의 환경 전반적 만족도	매우 만족
	2.27
	약간 만족
	22.85
	보통
건강상 위협	56.00
	다소 불만족
	16.18
	매우 불만족
	2.70
공기	매우 안전
	3.91
	다소 안전
	32.79
	보통
수질	46.11
	다소 위험
	15.39
	매우 위험
	1.80
청결	매우 좋아짐
	6.03
	약간 좋아짐
	25.59
	보통
	51.40
	다소 나빠짐
	14.70
	매우 나빠짐
	2.27
	매우 좋아짐
	3.38
	약간 좋아짐
	21.51
	보통
	58.56
	다소 나빠짐
	13.90
	매우 나빠짐
	2.64
	매우 만족
	3.75
	약간 만족
	21.05
	보통
	46.64
	다소 불만족
	23.37
	매우 불만족
	5.13

물환경분야의 객관적인 지표로는 주요 하천의 경우 유기물, 호소의 경우는 유기물과 총인 항목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고, 먹는물에 대한 만족도를 주관적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건 분야의 객관적 지표로는 물, 공기, 폐기물, 토양오염, 지하수,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질환의 유병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주관적인 지표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위협정도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폐기물 분야의 사업장폐기물은 제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생활폐기물이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변 청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발생량 대비 처리량을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관적 지표로 설정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청결도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주관적 지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표 104〉 충남의 환경영역 지표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환경 부문	물	하천수질	수질만족도
		호소수질	
	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율	주변 청결상태
	환경 보건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률	건강위협

4) 환경 영역에서의 정책 방향

충청남도 도민이 느끼는 행복도 향상을 위한 환경영역의 적절한 지표 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나 충청남도 상위 계획에 포함된 환경지표들은 환경의 전 영역을 포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표의 관리체계도 명확하지 않다. 환경지수를 운용하게 되면 지표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과 정책의 수정을 하여야 한다. 매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해당 지표평가를 통해 악화된 지표의 회복을 위하여, 또는 개선지표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환경 지표들은 도민의 바라고 체감하고 있는 행복이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와 연계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여건에 맞추어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고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도민이 느끼는 행복과 연계된 환경정책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새로운 지표체계는 각 환경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의 성과지표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서 실제 업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아지는 도민들의 행복에 대한 욕구와 환경에 대한 요구를 도정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전략 및 중장기 계획들과도 환경분야 지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각 부서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적 지표들은 충남도의 목표, 또는 부서 간의 지표들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물 분야의 지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물관리에서 수량과 수질, 유역을 함께 고려하는 유역중심적인 통합적인 관리정책을 추진하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건전한 물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농촌지역에서는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도시지역은 생활하수관리와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도심의 하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지속적으로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폐공을 찾아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기, 물, 지하수 등 환경의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환경성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아이들의 아토피는 환경보건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성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시 신속한 민관 합동의 역학조사와 선조치, 후원인분석 등 매뉴얼을 정립해 놓는 방안도 필요하다.

폐기물의 과학적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확립과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하여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특히 도심 집단주거지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참여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규모 소각장 건설 등 하드웨어에 투자하기 보다는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재사용과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생활패턴의 변화를 추구하고 청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건강 및 보건 부문

1) 행복에 있어서 건강 및 보건의 왜 중요한가?

(1) 건강 · 보건 영역의 필요성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대로 건강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아프지 않고 신체적인 장애 없이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본연적인 가치(*intrinsic value*)에 해당한다.⁵⁹⁾ 건강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과 훈련 그리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를 지닌다. 보다 나은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지닌 국가일수록, 평균 소득과 부(*wealth*), 고용률, 정치활동참가율,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34개 OECD 회원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Boarini *et al.*(2012)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분석결과에 의하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건강상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 감소하는 삶의 만족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여덟 배만큼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에서 건강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헤도닉 적응(*Hedonic adaptation*)가설에 의하면, 생활여건에서 변화를 겪는 경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행복감은 과거의 수준을 회복한다. 하지만, Lucas(2007)는 두 국가의 개인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후천적으로 장기 장애(*long-term disability*)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적응은 아주 조금밖에 이뤄지지 않아 행복감의 감소는 상당히 큼을 보여 준다. German Socio-Economic Panel(1984-1989)을 이용하는 Winkelmann and Winkelmann(1998)의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만성질환이나 장애의 부재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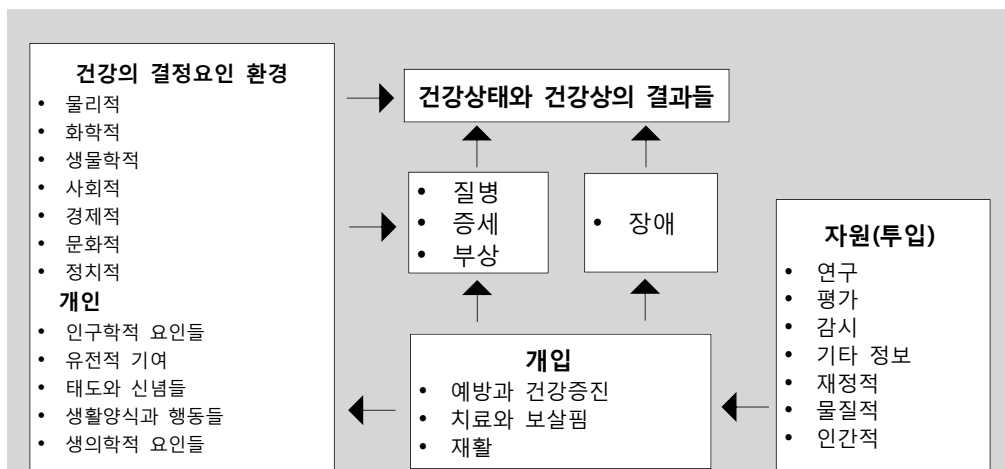
59)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건강은 직장을 갖는 것과 함께 삶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건강은 유전적 구성이나 생활습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삶의 유형에도 영향을 받으며 이들 대부분은 보건이나 이와 연관된 정책들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WTO(1948)는 건강한 상태를 완전한 물리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웰빙(well-being)의 상태라고 광의적으로 정의하며, 이는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의는 객관적인 건강 상태와 건강의 주관적인 측면이 모두에게 있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건강상태는 본연적인 가치와 함께 수단적인 가치 두 측면 모두에서 행복과 깊은 관계를 나타내고 지역 내 의료시설 혹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나 질은 이러한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보건 영역을 충남 행복지수에 포함함으로써 보건관련 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우선 수단을 찾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건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건강/보건관련 연구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 부문-즉, 건강 결정요인들 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건강상태 또는 건강상의 결과들, 치료를 위한 개입 또는 보건체계의 역할을 포함한다. 건강상태나 건강상의 결과들은 질병이나 장애 등의 유무나 정도에 의해 나타나고 이러한 상태나 결과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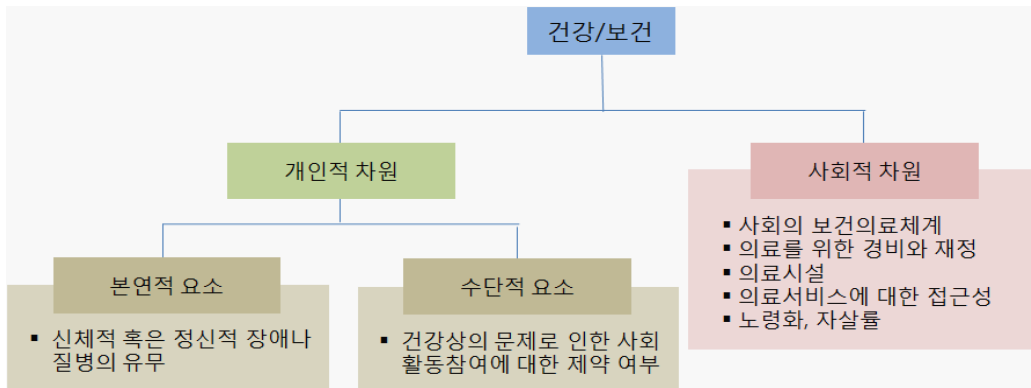
〈그림 42〉 건강/보건관련 분석틀



출처 : 호주의 사회통계를 위한 분석틀

행복과 관련하여 건강/보건의 구성요소는 일차적으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은 다시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연적인 측면과 수단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려될 수 있다. 본연적인 측면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나 질병 혹은 질환의 유무를 포함하고, 수단적인 측면은 이러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사회활동에서의 제약이 따르는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검토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건강/보건은 사회의 보건의료체계, 의료시설이나 의료서비스를 위한 집행예산과 재정, 의료시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노령화나 자살률 등에 의해 구성된다.

〈그림 43〉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건의 구성요소



(2) 건강 및 보건의 현황

① 객관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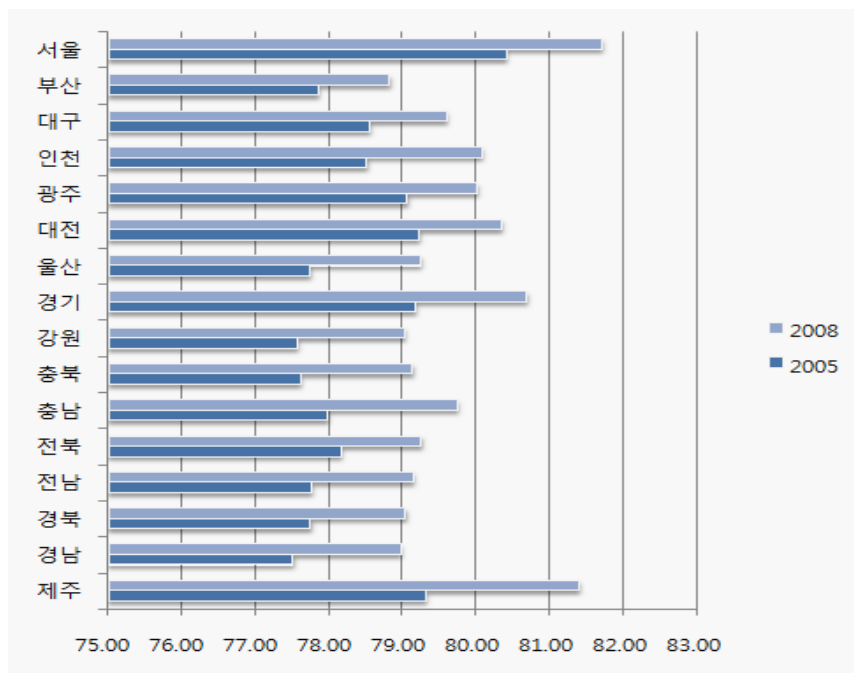
오래 사는 것은 고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항들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물론 이는 건강하게 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나타내는 기대수명을 삶의 질이나 행복지표에 포함하고 있다.⁶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9년 기준 80.4세로 OECD 회원국의 기대수

60) 기대수명은 연령별로 상이하며, 여기서는 출생시 기대수명을 지칭하여 평균수명 혹은 출생시 기대여명으로도 일컬어진다.

명 79.5세 보다 0.9세 높은 반면 일본(83.0세)이나 스위스(82.3세)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해당한다(OECD, 2011).⁶¹⁾

충남의 기대수명은 2008년에 79.7세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수치인 80.1세에 비해 낮고 서울(81.7세), 제주(81.4세), 경기(80.7세), 대전(80.3세), 인천(80.1세), 광주(80.0세) 다음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2005년과 2008년 사이 기대수명의 변화를 살펴보면 충남은 1.76세 증가하여 제주(2.08세) 다음으로 크게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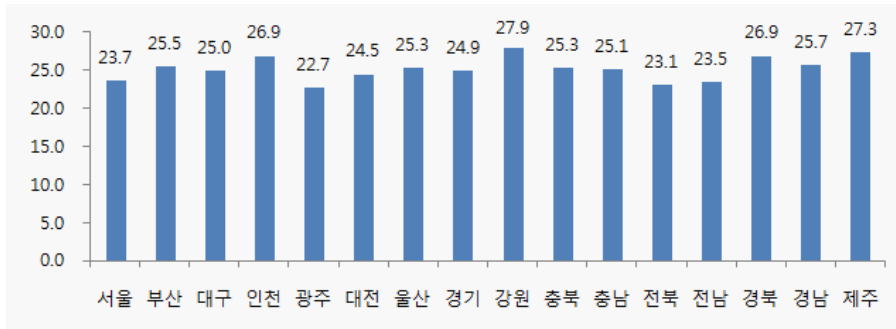
〈그림 44〉 기대수명(년)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로 정의되는 흡연률을 광역시도 간 비교하면, 충남은 25.1%로 강원(27.9%)이나 제주(27.3%)에 비해서는 낮으나 광주(22.7%)나 전북(23.1%)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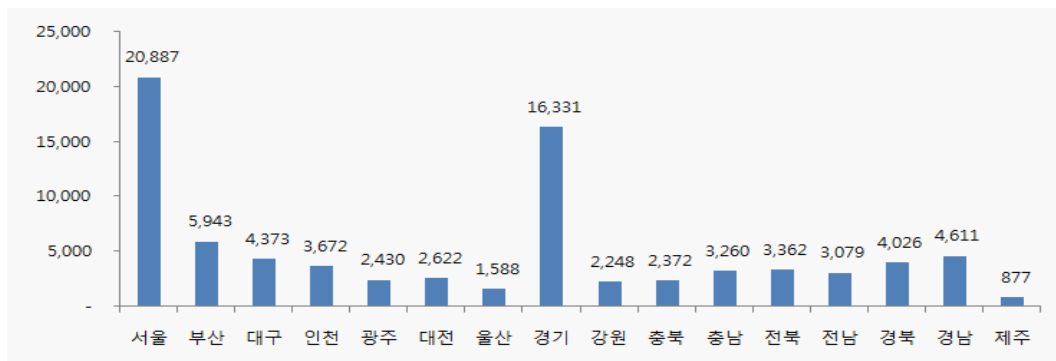
61) 이러한 기대수명과는 달리,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나타내는 건강수명은 71세로 일본(76세), 스위스(75세), 독일(73세), 영국(72세)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그림 45〉 흡연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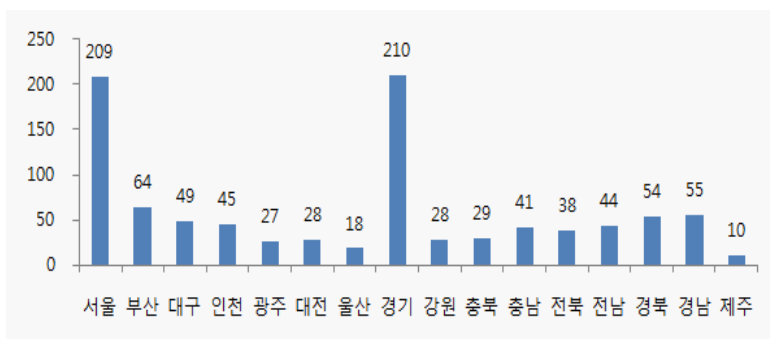
보건진료소부터 상급 종합병원, 한의원과 한방병원, 그리고 약국을 포함하는 요양기관이 2010년 기준 충남에 3,260개소가 존재하여, 제주, 울산, 강원, 충북, 광주, 대전, 전남에 비해서는 절대적 수에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기준 전국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중은 4.17%인 반면 요양기관수의 비중은 3.99%로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특히 조산원, 치과 의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의원, 약국 등의 순으로 이들의 전국대비 충남의 비중이 인구비중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그림 46〉 요양기관수(개소)



중증 암환자의 수는 2010년 기준 충남에 41,390명이 있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인천, 전남 다음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인구대비 비율로 보면, 충남의 수치는 2.07%로 전남(2.52%), 서울(2.17%), 전북(2.12%), 경북(2.10%)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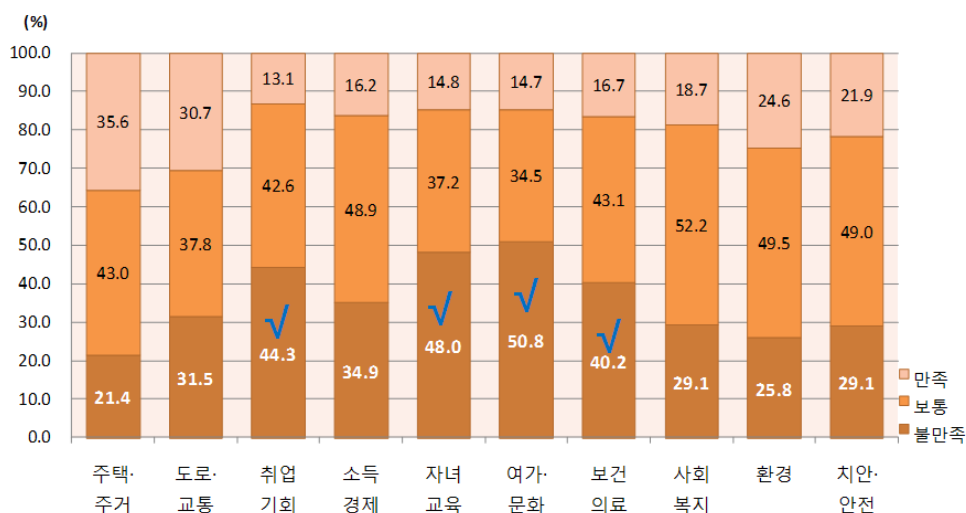
〈그림 47〉 중증 암환자 수(천명)



② 주관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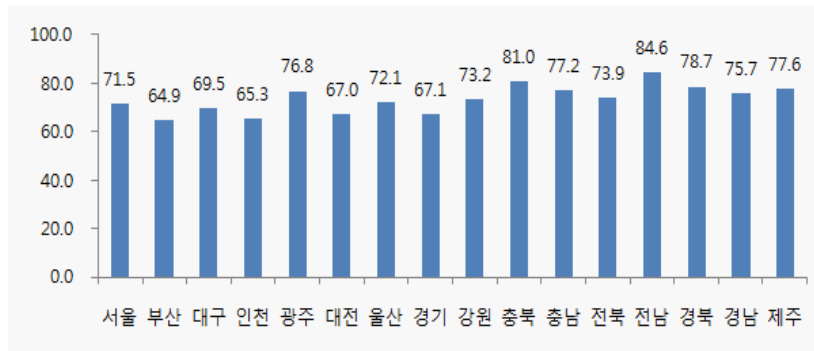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수립을 위해 2010년 7월 도민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건/의료분야에서 불만족하는 경우는 40.2%에 이르는 반면 만족하는 경우는 16.7%에 그쳐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도민 만족도가 상당히 낮아 이 분야에서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볼 수 있다.

〈그림 48〉 삶의 질 관련 도민만족도(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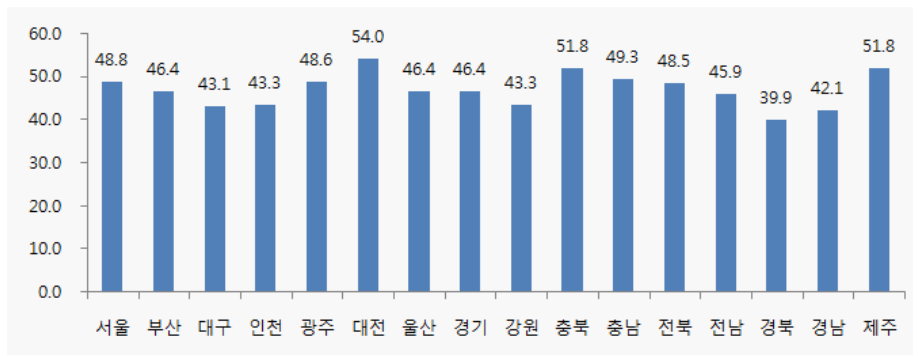
보육기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료(2010년 기준)에 의하면, 충남의 경우 ‘대단히 만족한다’ 혹은 ‘만족한 편이다’ 라고 응답한 사례의 비중은 77.2%로 전남(84.6%), 충북(81.0%), 경북(78.7%), 제주(77.6%)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49〉 보건기관 서비스 만족도(%)



당사자의 주관에 의한 건강수준에 대해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충남이 49.3%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전(54.0%), 충북(51.8%), 제주(51.8%) 다음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0〉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2) 어떻게 건강 및 보건을 측정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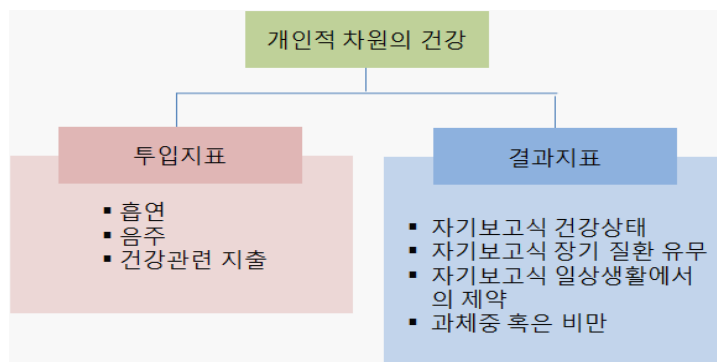
개인적 차원의 건강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건강상태와 더불어 건강의 결과에 대한 주요한 결정요인들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의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많은 요인들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상태에 대한 측정은 매우 복잡하다.

보건에 관한 지표가 이상적이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건강, 장애 또는 죽음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질병이나 조건들과 함께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다양한 건강에 대한 구성요소들과 건강의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이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질병이나 질환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병을 앓거나 단순한 통증과 같이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며, 질병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만성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시계열 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질환의 정도 또한 질병 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물리적 질병률에 대한 상대적인 지표들은 사망률을 측정하는 지표보다 덜 만족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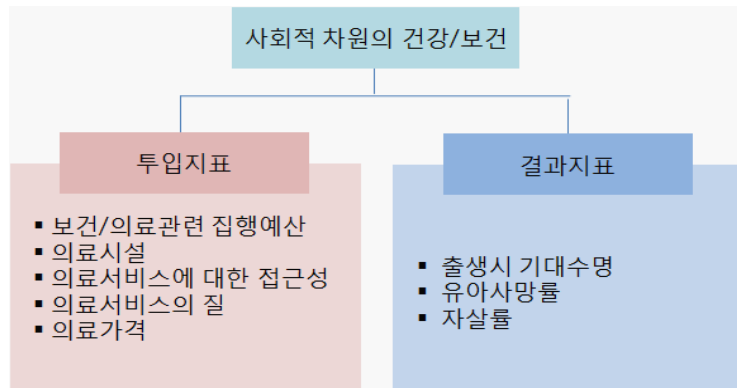
이러한 측정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측정지표로는 흡연, 음주, 건강관련 지출을 투입지표로 고려할 수 있고, 자기보고에 의한 전반적인 건강상태, 장기 질환 유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과체중 혹은 비만을 결과지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개인적 차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사회적 차원의 건강·보건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차원의 건강/보건에 대한 지표는 투입지표로 보건/의료관련 집행예산, 의료시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지표로는 출생시 기대수명, 유아사망률, 자살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 사회적 차원의 건강/보건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3) 건강 및 보건영역에서의 지표 선정

(1) 건강 및 보건영역에서의 선행연구 사례

행복이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건강/보건 영역의 세부지표는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일본의 신국민 생활지표는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지표로 포함한다. 캐나다의 웰빙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세부지표를 포함하는데, 이를 테면 자기보고식 건강상태, 건강수명, 신체 건강상태(저체중출생, 천식, 비만, 당뇨병), 우울증 비율, 상해와 같은 기능적 건강, 건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이 해당한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는 건강지식을 지표로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고, Calvert-Henderson의 삶의 질 지수는 산모의 교육수준별 영아사망률과 소득수준별 건강상태를 포함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기대수명, 자기보고식 건강상태, 사망률 등을 건강/보건 영역에서의 세부지표로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05〉 건강/보건 영역 세부지표의 구성에 대한 해외 사례

구분		영역 및 지표 제안
국 가	일본의 신국민 생활지표 (1992년~)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등의 상황
	캐나다의 웰빙 지수 (1999년~)	자가진단 건강상태, 건강수명, 저체중출생/천식/비만/당뇨병과 같은 신체 건강상태, 우울증 비율, 기능적 건강(상해), 흡연, 신체적 활동, 건강서 비스에 대한 전체 만족도
	EIU의 삶의 질 지수	수명
	부탄의 국민 총행복지수 (1998년~)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상태, BMI, 장애, 징난 30일간 건강한 일수), 건 강지식 지표(HIV/AIDS에 대한 지식), 보건장벽 지표(보건소까지 걷는 거리)
	홍콩의 삶의 질 지수	기대수명, 건강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중
	UNDP의 인간 개발지수(HDI)	출생시 기대수명
	EIU의 삶의 질 지수	기대수명
국 제 기 관	OECD의 삶의 질 지수	영유아사망률, 자기보고식 건강수준, 자기보고식 만성질환, 자기보고식 일상생활 제약, 과체중과 비만
	Calvert-Hend erson QoL Indicators	인종별 영아사망률, 산모교육수준별 영아사망률, 소득수준별 건강상태
	Keizer et al. (2003)의 “사회경제적 보장의 지표들”	건강제공의 보장(건강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사람의 비율), 건강서비스 (주민 10,000명당 의사의 수, 시간(분)으로 측정한 병원까지의 평균 거 리, 구급차의 평균 출동 시간), 보호서비스(유급과 무급에 따라 구분된 보호에 이용된 평균적 시간)

국내 연구에서의 건강/보건관련 세부지표의 사례를 보면, 통계개발원(2011)의 “삶의 질 지수”에서는 세부지표를 보건의식행태, 의료서비스, 건강상태로 구분하는데 보건의식행태는 생활체육참여율, 흡연율, 1인당 주류소비량 등으로 측정되고 의료서비스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십만명당 의료시설 병상수, 의료비 본인부담률로 측정되며 건강상태는 기대수명, 주요 만

성질환 사망률, 암 사망률,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로 측정된다.

이현송(1997)의 “한국인의 삶의 질”에서는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유아사망률, 65세 이상 인구비율, 의사 1명당 인구비율, 식수보급률이 세부지표로 포함된다. 반면, 김신영 외(2006)에 의한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에서는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청소년의 비율, 매우 건강한 청소년 비율, 불법약물 복용률과 같은 차별화된 세부지표를 포함한다.

〈표 106〉 건강/보건 영역 세부지표의 구성에 대한 국내 사례

구분		세부지표
통계개발원(2011)의 “삶의 질 지수”	보건의식행태	건강검진수검률, 생활체육참여비율, 흡연율, 1인당 주류소비량
	의료서비스	천명당 의사수, 십만명당 의료시설 병상수, 의료비 본인부담률
	건강상태	기대수명,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암 사망률,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이현송(1997)의 “한국인의 삶의 질”	보건	남성의 기대수명, 여성의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5세 미만 유아사망률, 65세 이상 인구비율, 의사 1명당 인구비율, 식수보급률
김신영 외(2006)의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	자신에 대한 만족	의료보험혜택 청소년의 비율, 사망률, 매우 건강한 청소년 비율, 활동제약 청소년의 비율, 과체중 청소년 비율, 흡연율, 음주율, 불법약물 복용률, 주관적 건강상태
윤강재·김계연의 “OECD국가의 행복 지수 산정 및 비교”	사회적 요인 - 사회적 연대	자살률

(2) 건강 및 보건 영역에서의 행복지표 체계의 구축

충남의 행복지수에서 건강·보건 영역의 세부지표는 객관적 지표로서 출생시 기대수명,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흡연율과 음주량,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의료비 본인부담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지표들에 대해 다양한 기준에 의해 최종지표로의 선정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기준은 이들이 투입지표나 산출(output)지표가 아닌 결과

(outcome)지표에 해당하는가, 시계열로 측정이 가능한가, 연도별 변화를 나타내는가, 기존 삶의 질이나 웰빙의 지표에 포함되었는가, 타 영역과의 중복가능성은 없는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충남에 대해 해당 지표가 산출될 수 있는가 등을 포함한다.⁶²⁾

먼저, 출생시 기대수명은 결과지표에 해당하고, 보편적이며, 타 영역과의 중복가능성이 없으며, 충남의 수치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변성이 낮고 간결성이 다소 떨어진다.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역시 출생시 기대수명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흡연율과 음주량은 결과지표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는 이러한 지표들 가운데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충남의 수치에 대한 기존 통계가 부재하고 일반인에 의한 이해가 용이치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표 107〉 건강/보건 영역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지표명	선정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출생시 기대수명	◎	○	x	◎	◎	△	◎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	○	x	◎	◎	○	◎
흡연율과 음주량	x	◎	○	◎	◎	○	◎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	◎	△	○	◎	◎	◎
의료비 본인부담률	○	◎	△	○	◎	△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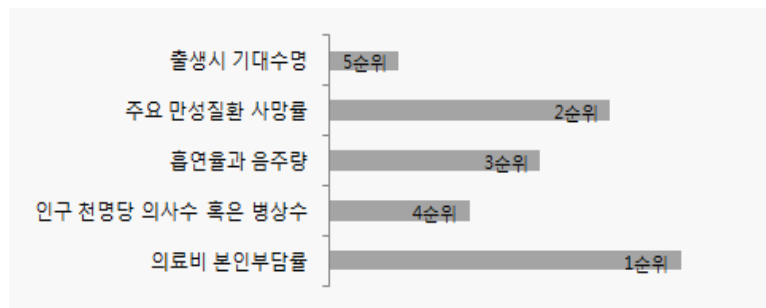
- 주 : 1) 결과(outcome)지표는 해당 지표가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이 아닌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여부
 2) 시계열 측정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로 측정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3) 가변성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여부
 4) 보편성은 해당 지표가 삶의 질이나 웰빙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5) 영역 간 중복은 해당 지표가 타 영역에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6) 간결성은 해당 지표가 일반인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7) 적용성은 해당 지표가 충남에 대해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8) 선정기준에 대한 부합성은 ◎ : 기준에 매우 부합함, ○ : 대체로 부합함, △ : 보통, x : 부적합으로 구분

62) 자살률은 정신적 건강과 깊은 관계를 지니지만, 충남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가족/공동체 영역에서의 연관성이 보다 크기 때문에 영역 간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 건강/보건 영역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다.

(3)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지표 검토

충남의 행복지수 세부지표에 대한 도민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건강/보건 영역에서 객관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는 의료비 본인부담률,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흡연율과 음주량,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출생시 기대수명으로 조사된다. 출생시 기대수명은 기존 관련 연구에서 건강관련 핵심지표로 간주되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습관의 개선으로 기대수명이 이미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충남도민은 이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공공에 의한 건강보험제도가 잘 갖춰져 건강보험료나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일반 서민이 체감하는 의료비의 본인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그림 53> 충남의 건강/보건 영역 객관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충남 건강/보건의 여건에 대한 도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1.62%, ‘약간 만족’ 18.85%, ‘보통’ 56.02%, ‘다소 불만족’ 18.95%, ‘매우 불만족’ 4.55%로 나타나, 만족하는 사람들에 비해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충남도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7.23%, ‘약간 만족’ 30.59%, ‘보통’ 47.88%, ‘다소 불만족’ 12.62%, ‘매우 불만족’ 1.68%로 나타나, 충남도민의 건강상태에 있어 만족하는 비율은 37.82%로 불만족하는 비율(14.30%)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볼 수 있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충남도민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2.04%, ‘약간 만족’

16.93%, ‘보통’ 47.54%, ‘다소 불만족’ 27.25%, ‘매우 불만족’ 6.24%로 조사되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중보건에 대한 충남도민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1.89%, ‘약간 만족’ 15.61%, ‘보통’ 57.62%, ‘다소 불만족’ 21.22%, ‘매우 불만족’ 3.67%로 조사되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만족에 비해 불만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충남의 행복지수에서 건강/보건 영역의 세부지표는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다. 전자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는 출생시 기대수명, 인구 천명당 중증 암환자수, 흡연을 등을 포함시키고, 주관적 지표로는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포함시킨다.

〈표 108〉 충남의 건강/보건 영역 도민 만족도

구분		구성비율(%)
충남의 건강/보건 전반적 만족도	매우 만족	1.62
	약간 만족	18.85
	보통	56.02
	다소 불만족	18.95
	매우 불만족	4.55
건강상태	매우 만족	7.23
	약간 만족	30.59
	보통	47.88
	다소 불만족	12.62
	매우 불만족	1.68
의료서비스 접근성	매우 만족	2.04
	약간 만족	16.93
	보통	47.54
	다소 불만족	27.25
	매우 불만족	6.24
공중보건	매우 만족	1.89
	약간 만족	15.61
	보통	57.62
	다소 불만족	21.22
	매우 불만족	3.67

<표 109> 충남 행복지수 건강/보건 영역 최종 지표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건강 보건 부문	건강 상태	출생시 기대수명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인구 천명당 중증 암환자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흡연율과 음주량	
	의료 서비스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 수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
		의료비 본인부담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반면 후자에 대한 객관적 지표는 인구 천명당 병상수를 포함시키고, 주관적 지표로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시킨다. 충남의 경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농촌에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지역주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더불어, 세부지표에 대한 도민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경우 건강/보건 영역의 객관적 지표는 의료비 본인부담률,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흡연율과 음주량,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출생시 기대수명의 순으로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검토한 다양한 선정기준을 고려할 경우 충남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건강/보건 영역의 객관적 지표는 지수의 측정 주기, 지리적 단위 등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상이해질 것이다. 잠정적으로, 행복지수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도민의 우선순위, 그리고 다양한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남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건강/보건 영역의 객관적 세부지표는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흡연율과 음주량,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4) 건강 및 보건에서의 정책 방향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이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이나 보전은 이러한 복지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따라서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충남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여 건강/보건 관련 정책의 대상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도민 대상 설문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농촌 지역에서의 고령층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충남도민의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건강/보건 영역에서의 세부지표들 모두에 대해 정책을 펴는 것은 예산의 제약뿐만 아니라 실효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조차도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건 영역에서 도민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이 선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의료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농촌지역 고령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나 다문화가정의 임신 및 출산 지원 등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의료비에 대한 본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충남 행복지수를 위한 건강/보건 영역의 세부지표로 공중보건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전염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민 대상 공중위생이나 예방법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8. 주민참여 부문

1) 행복에 있어 주민참여가 왜 중요한가?

(1) 주민참여 영역의 필요성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에 있어 주민의 이익에 냉담하다. 유권자는 “투표일에만 자유롭다”라는 경구처럼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대의제 정부는 일단 구성된 이후에는, 주민의 의사와 괴리되어 스스로의 권력 유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민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요구나 선호에 충실히 대응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사회나 시장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낮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효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자로서의 주민의 요구나 역할의 중요성은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강화되고 있다.

주민참여가 총합의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선정된 것은 기존 GDP가 사회와 개인의 삶의 조건과 수준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삶의 질에 대한 각종 논의에서 경제적, 물질적, 환경적 요소들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물질적, 환경적 요소는 개인 및 집단에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주관적 감정에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가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 또는 집단이 느끼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선정되었다.

주민참여는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주민참여는 공식적 행정조직의 외부에서 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행정조직의 목표설정과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 사회의 일반문제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주민참여는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하위 계층의 참여와 함께 참여행정의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 주민이란 특수계층의 엘리트나

지식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말한다.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다. 첫째 대표민주제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한다. 대표민주제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길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에 불충분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정치와 민의의 불일치 현상을 바로잡고 대표민주제의 비민주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책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그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국민의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정책과 집행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정책형성 과정과 집행에 주민참여가 요구된다. 셋째, 대중의 여망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다. 정치에의 무관심은 곧 민주정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더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 정치 혹은 행정, 정책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만족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주민운동이나 참여행위가 급증하면서 그 중요성의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의 제도적 장치와 지방 공무원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민주사회에서 주민의 욕구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책결정과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그러한 변화의 정도와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참여는 사람들이 표현하고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행복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와 사회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기여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이며 권리의 하나로서 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또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정책에 대한 수용도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주민참여는 개인의 삶에 대한 조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감각을 지니게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는 자신이 속해있

는 지역사회의 소속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높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 이외에도 주민참여는 공공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정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을 높인다. 주민들이 내는 정치적 목소리는 충돌과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고 향후 정책의 전망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이는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여 주민과 정부 간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정책결정자의 책임을 증가시켜 정책준수와 함께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참여는 정부권력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다. 법규를 제정하고 공공정책을 구현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인 정부구조는 공공부문의 신뢰를 높이며 이는 주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좋은 주민참여는 정부 간, 그리고, 주민, 그 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주민들이 정치와 주민활동을 통해 정부의 합법적인 권력에 동참하고 나아가 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참여는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체감하는 사회적 분위기이고 이는 개인들이 사회에 대해 갖게되는 신뢰, 자긍심, 결속감 등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보다 성숙한 주민사회와 자발적인 민주적 참여의 달성에 기인한다는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통계개발원, 2011).

정부에 따른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이래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비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과 주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정부 독점의 통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을 할 때 상향적 또는 수평적 결정 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확산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확산은 정부 이외의 시장과 주민사회의 정책 참여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주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참여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의 유형화 가운데, 정책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통해 정부의 반응성이 얼마나 담보되는가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주민 간의 상대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가 더욱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 참여 과정에서의 정부와 주민 간의 영향력 관계 내지는 결정권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민 참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첫째, 반응적(reactive) 참여다. 이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참여 제도다. 주민은 참여하지만 제도적 절차에 따라 소극적으로 반응하는데 그칠 뿐, 참여의결과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참여의 결과는 정부의 반응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참여 제도로는 민원실, 고충 처리, 정보 공개, 서베이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교호적(interactive) 참여다. 이는 정부와 주민 간의 대등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참여 제도이며, 공청회, 간담회, 자문위원회, 공사협동 등이 포함된다.

셋째, 통제적(controlling) 참여다. 이는 주민이 상당한 주도권을 소유하는 참여 제도로서 민주정치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유형에는 심의위원회, 지역수권, 직접민주제(주민발의, 소환, 투표), 토의민주제(deliberative democracy) 등이 포함된다.

참여의 유형화가 지니는 의미는 단지 여러 가지 참여 대안의 속성을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참여 유형에 대해 유의미한 정책 대응의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 차명 유형에 따른 정책 관심의 초점은 다음과 같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반응적 참여에서는 정부가 주민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에 정책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정부의 반응은 참여를 통해 표출된 주민의 의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서 문제가 된다. 만일 투입된 주민의 의사에 대해 정부가 냉담할 경우, 이 유형의 참여 기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정부에 대한 주민의 냉소주의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참여 기제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낭비적인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 유형의 참여 기제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투입된 주민 의사가 정부의 정책에 적절히 반응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 내부의 통제조정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은 공직자의 주민의 의사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연계시킬 내부기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직자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정책반영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쉽다.

둘째, 교호적 참여의 경우에는 정부와 주민간의 자유롭고 대등한 의사소통의 확보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즉, 진정한 공사 간의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유형의 참여는 자칫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것이 되기 쉬우며, 주민의 참여는 기껏해야 적응적 흡수(cooptation)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공청회가 편파적인 구성으로 개최되거나, 자문위원회가 친정부적인 주요인사로 구성되는 것 등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파행은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주민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이 같은 참여 형태를 보이기 쉬운데, 그것은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상당 기간에 걸쳐 민주정치에 대한 학습을 경험한 주민 사회의 성숙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서,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교호적 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형식적 대응 역시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교호적 참여의 확대를 통해 공직자와 주민의 교호작용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호적 참여의 확대를 통해 교호적 참여의 저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통제적 참여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민의 자율적 결정권 범위로 이양하느냐가 정책적 관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 수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참여 기제가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유에서 주민의 자율적 결정권이 단순히 원칙적 인정에만 머물고, 결정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당할 경우, 이 제도는 통제적 참여 제도가 될 수 없으며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전문가집단인 주민에게 무조건 정책결정권을 확대 부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참여 유형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정한 범위와 수준에서 주민의 결정권을 정하는 일이 주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의 책임 있는 결정권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주민참여 현황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제도화로서는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으로 대표되는 직접민주제와 토의민주주의 및 1970년대 이후 부각되는 지역 수권과 정보화 기반의 참여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가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점 가운데, 특히 참여의 제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부족은 주민 참여의 질적 측면을 고양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의 유형에서 살펴본 반응적 참여나 교호적 참여의 경우는, 정책 초점에 유의하면서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참여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의 경우 참여의 유형 가운데 통제적 참여 방식은 민주제의 이상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유용하고, 또한 주민에 대한 교육 효과가 탁월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가 가장 부진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권력의 이양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주민 참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특성을 구체적인 실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주민 참여 실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논의가 많은데, 그러한 논의는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참여 수준이 외국의 참여 수준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기존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참여 수준은 선진 외국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투표, 정치토론, 지역 문제를 위한 봉사, 공직자 접촉, 선거운동, 정치집회의 참석 등에서 한국의 주민들은 외국 주민과 대동소이한 참여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참여수준이 선진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공익적 영역에서의 주민 참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선거 참여 등 공적 참여의 영역에 비해, 공익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수준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교론적으로 볼 때 우리의 참여 정도가 반드시 저조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 외국과 같은 참여 수준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우리의 참여 수준이 적정함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좀 더 발전되어 있고 정부의 책임성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참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참여의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참여가 다양하지 못하고 미흡한가? 이러한 원인으로는 참여의식의 부족과 참여 제도의 불비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이를 전제로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인가 하는 데 모아진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서는 참여 의식보다는 참여 제도의 불비가 더 큰 문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적 영역의 경우는 정부에 의해 이미 마련된 제도를 통하므로 참여가 용이하지만, 공익적 영역의 경우는 아직 제대로 된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 제도

의 불비를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참여 제도의 요인이 부각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필요한 참여제도가 확충되어 온 선진국에 비해, 참여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이 미흡하거나 기존의 제도마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주민 참여를 둘러싼 내용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다. 즉,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이 높지 않으며 사적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책임 의식과 권리 의식의 불균형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참여 의식의 불건전성은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더욱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정치적 효능감이 증대되면서 주민 참여가 신장되기는 했으나 공익보다는 사익을, 전국적 이해보다는 지역적 이익 추구를 위한 참여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나 김포 쓰레기 매립지 건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집단과 지역 간의 갈등에서 보듯이 참여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마저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참여 제도의 확충을 통해, 이차적으로는 참여 의식의 제고를 통해 참여가 적정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가운데 특히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참여가 실질적으로 신장되기 어렵고, 정부의 책임성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 없이도 정부가 높은 책임성에 기초하여 공평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을 구사하면 굳이 주민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외적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정치적 책임성은 어디까지나 수사에 지나지 않음을 가르쳐 준다.

2) 어떻게 주민참여를 측정할 것인가?

주민참여는 민주사회에서 주민의 참여 형태 또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정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작동하는 기제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참여와 거버넌스는 필수이지만 이에 대한 측정과 평가는 매우 어렵다. 이에 주민참여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치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정책의 질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

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유권자의 투표율이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투명성 부분이다. 이에 대한 변화도 주민의 참여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이를 주민참여로 보고 있지는 못하다. 셋째, OECD 국가에서조차도 주민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적인 기관에서도 단점으로 지적되듯이 엘리트의 경우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능과 방법을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 주민들이 방법에 느끼는 체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주민참여와 정부는 다양한 측면을 지닌다. 따라서 이를 개념화하거나 측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측정지표의 매우 넓은 범위에 기인하며 모든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와 정부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는 주민으로서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하며 이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의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반 주민들의 이익과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와 정부를 측정하기 위한 이상적 지표는 주민들의 정치활동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질에 대한 지표는 공공정책이 목표를 달성하며 주민들이 신뢰하고 있는가이다. 실제로 주민참여를 측정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정부의 질은 효율성, 활동범위, 모든 주민의 수용도, 개방성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람들은 자원봉사 및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의 공통적 형태는 투표, 청원,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적 생각과 가치의 공유 등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측정을 위한 또 다른 형태는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지와 주민들이 이러한 기회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현재 주민참여의 측정지표의 가장 큰 문제는 통계적으로 그 기준과 표준 뿐 아니라 이를 표현할 통계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식적 통계보다는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주민참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식, 정치 및 정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 등의 요인들로 규정한다. 인식은 참여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및 각종 주요 정책들

에 대한 인식은 개인 혹은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을 때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투표를 비롯한 각종 정책에 대한 다양한 참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과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신뢰는 주민들이 지방 자치단체와 공무원들과의 상호이해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참여기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에서의 지표 선정

(1) 주민참여영역에서의 선행연구 사례

앞서 정부와 주민참여 영역은 3개의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이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조건과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정부와 주민참여의 지표들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측정지표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왔던 주민참여 영역에 대하여 지방수준에서 다룸으로써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정부에 대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통계개발원에서는 “주민사회와 민주적 참여” 영역을 5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캐나다 웰빙지수에 있어서는 개인수준의 참여와 정부수준의 참여로 나누어 측정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측정하고자 구성된 것인 만큼 충남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110〉 주민참여영역에서의 선행연구 사례

	요인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통계 개발원 “삶의 질 지수”	정치참여		- 투표율	- 개인의 행정/ 정치영향정도
	주민적 의무		- 자원봉사 참여율	- 개인의 의무에 대한 중요성 정도
	주민적 권리		- 부패인식지수	- 개인권리의 중요성 정도
	관용			- 이민자에 대한 의견
	신뢰			- 사람에 대한 신뢰 - 기관에 대한 신뢰
캐나다 “웰빙 지수”	개인수준 의 참여	선거참여	- 투표율	
		정치적 견해	- 정치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율	
		정치적 시각		- 정치에 대한 관심
		태도		- 투표의 중요성
	정부적 수준의 참여	참여	- 잠재투표자 대 투표 등록자 비율 - 여성국회의원비율	
		정당성		- 정부결정에 대한 견해 -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
		신뢰		- 국회에 대한 신뢰

(2) 주민참여영역에서의 행복지표체계의 구축

충남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세부 객관적 지표는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에 기초하여 결과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등 7개의 지표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투표율, 부패지수, 정보공개율, 자원봉사참여율, 주민참여위원회등이 포함될 수 있다.

투표율은 결과지표, 시계열 측정, 보편성, 간결성, 적용성에서 지표로 적합하나 가변성, 영역간 중복에서 다소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패지수는 시계열 측정에서 지표로 적합

하나 가변성, 보편성에서 부합성이 약하다고 나타났다. 정보공개율, 자원봉사 참여율은 시계열 측정, 적용성이 지표로 적합하나 결과지표, 가변성, 보편성, 간결성에서 부합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시계열 측정, 적용성에서 부합하나 결과지표, 보편성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주민참여 영역 객관적 지표 자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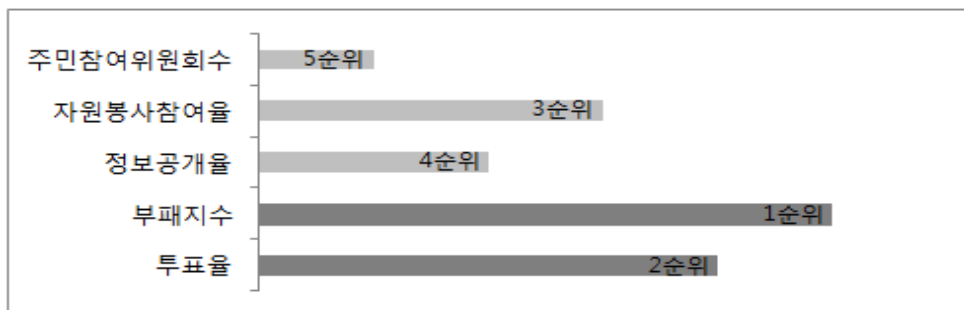
지표명	선정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 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투표율	◎	◎	○	◎	○	◎	◎
부패지수	○	◎	△	△	○	○	◎
정보공개율	△	◎	○	△	○	△	◎
자원봉사참여율	○	◎	△	◎	△	◎	◎
주민참여위원회	x	○	△	x	△	△	○

- 주 : 1) 결과(outcome)지표는 해당 지표가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이 아닌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여부
 2) 시계열 측정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로 측정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3) 가변성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여부
 4) 보편성은 해당 지표가 삶의 질이나 웰빙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5) 영역 간 중복은 해당 지표가 타 영역에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6) 간결성은 해당 지표가 일반인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7) 적용성은 해당 지표가 충남에 대해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8) 선정기준에 대한 부합성은 ◎ : 기준에 매우 부합함, ○ : 대체로 부합함, △ : 보통, x : 부적합으로 구분

(3)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지표 검토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패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투표율과 자원봉사 참여율, 정보공개율 등의 순으로 객관적 지표의 중요도를 응답하고 있다.

〈그림 54〉 충남의 주민참여 영역 객관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주관적 문항에 있어서도 도정에 대하여 ‘만족’ 하고 있는 수준이 약 12.4%인 반면 ‘불만족’ 이라 응답하고 있는 수준이 약 23.9% 수준으로 높았으며 도정정책에 대한 인지율도 약 15.9%로 낮았다. 개인이 도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하여도 28% 수준이었으며 도정에 대하여 신뢰하는지에 대하여도 약 17.6%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앞선 선행연구와 도민의 의식 등을 종합하여 주민참여기반에 대한 인식 요인에서는 충남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선정하였다.

주민참여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는 투표율을 선정하였다. 이는 정부 질의 한 단면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제도의 질과 주민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이다. 정치체제는 개별적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책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투표율은 개별참여를 측정하는 가장 근접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사람들의 최종선택을 알 수 있는 산출물이다. 투표는 주민들의 행복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주관적 지표로는 개인의 참여가 충남의 행정과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선정하였다. 이는 현재 참여정도와 향후 참여의사에 대한 지표로서 주민참여를 통한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이다. 참여는 청원 및 정치집단, 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도 공공정책에 대한 시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하에서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는 개인들이 중요한 결정자로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투표 이외에 정치활동에 참여는 정당 혹은 정치 및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에서의 활동 및 캠페인, 탄원 등의 행위에 참여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율은 공동에 영역과 중복성으로 제외시켰다.

〈표 112〉 주민참여 영역 도민 만족도

구분	구성비율(%)
충남의 도정전반 만족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정책에 대한 인지	매우 그러함
	약간 그러함
	보통
	다소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지 않음
도정에 대한 영향력	매우 그러함
	약간 그러함
	보통
	다소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지 않음
정보의 공개	매우 그러함
	약간 그러함
	보통
	다소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지 않음
도정에 대한 신뢰	매우 그러함
	약간 그러함
	보통
	다소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지 않음

좋은 정부는 일반적으로 접근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제도적 접근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좋은 정부로 발전시키는 핵심적 요소이다.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며 사람들의 신뢰는 기관과의 접촉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정책 및 제도를 만들기 위해 참여(조언)하는가에 대한 지표는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이다. 이는 정책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개방적으로 취합되고 반영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러한 지표는 조언(제언)에 대한 주민참여의 영향 또는 이러한 제도의 최종정책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과 협의과정은 정부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은 다양한 기관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부족으로 방해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사회안정과 민주기능,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신뢰와 투명성을 위해 제도적 규제를 사용한다. 따라서, 신뢰를 위한 객관적 지표로는 청렴도 수준과 정보공개율을 선정하였다. 기관의 부패는 신뢰수준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주관적 지표로는 전반적으로 도정을 신뢰하고 있는지 등을 선정하였다. 신뢰수준을 높이고 부패의 인식에 대한 문항이다. 모든 정책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으며 부패는, 법적보증의 효율성을 위태롭게 한다. 부패된 조직의 선출된 정치인들은 주민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며 정치성이 손상된 정치인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정책들의 성과를 기대할 뿐이다.

〈표 113〉 주민참여 영역 최종 지표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참여기반에 대한 인식	-	도정에 대한 만족도
		정책인지
참여	투표율	영향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청렴도	신뢰
	정보공개율	

4) 주민참여에서의 정책 방향

주민참여에 대한 측정지수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주민참여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과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지방 수준에서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재로 이해되고 있음과 동시에 보다 직접적인 의미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발현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주민참여지수 개발의 기본방향은 결국 주민(주민)들이 능동적이고 자발

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고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즉, 주민 참여지수에 따른 성공적인 주민참여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이를 촉진하거나 뒷받침하는 참여시스템 및 참여문화이다. 사실 주민참여제도가 갖추어진다고 해서 주민참여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과 함께 주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제도는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 사실상 그동안 주민참여제도를 제도화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참여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가운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거래비용과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제도 시행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공무원의 업무부담 증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해집단간 갈등과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편파적인 이해관계 투입, 지방재정의 압박 등의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성공적인 주민참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지방의원 등)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거버넌스는 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체제, 제도, 메커니즘 및 운영양식을 다루는 것으로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개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한편에서는 민과 관이 협력하는 좋은 토대라는 지지가, 다른 한편에서는 형식적인 참여로 주민들을 들러리로 만든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과연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무엇인지, 어떻게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촉진할 것인지, 책임성과 민주주의 체제의 돌출이 가능한지 무엇보다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라는 의문을 안고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지역거버넌스의 실현은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다만 참여민주주의는 권위적인 일방적 통치를 대체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주민의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신념과 리더십,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 동기부여와 함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의사결정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을 법제화한 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의 운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 공개의 내실화,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 변화, 역기능의 통제, 시간과 가용자원 제약조건의 극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및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9. 주관적 웰빙 부문

1) 행복에 있어 주관적 웰빙이 왜 중요한가?

(1) 주관적 웰빙영역의 필요성

사회통계 분야에서, 특히 ‘삶의 질’이나 ‘웰빙’ 측정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생활 영역 혹은 주제가 새롭게 국제기구나 국가통계(official statistics)에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행복(happiness) 혹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 칭해지는 영역이다.

기존의 GDP로 대표되는 경제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적으로서 ‘주관적 웰빙’의 중요성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 그 중요성은 최근 언론에서 자주 공표되는 각종 국제비교 행복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출발한 배경이자 동시에 ‘주관적 웰빙’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첫째, 주관적 지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신사회 운동’의 결과로, GDP와 같은 경제지표만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지표 운동이 추진되었다. 당시의 삶의 질과 웰빙, 혹은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사회지표는 객관적 지표가 근간이 되고 주관적 지표는 단지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좋은 삶의 개념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에서, 좋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일련의 구체적인 객관적 환경에 대해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최고의 판단자가 바로 개인이라는 사실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객관적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것으로, 주관적 웰빙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통해 사회발전을 이루었음에도 개인들의 만족도는 이에 상응해서 증가하지 않으며, 높은 자살률, 환경오염, 낮은 신뢰수준, 사회집단 간 첨예한 갈등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둘째, 주관적 웰빙에 대한 심리학에서의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행복이나 주관적 웰빙은 주로 철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1990년대 이후 최근 사회과학 영역인 심리학을 중심으로 주관적 웰빙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개인이 처한 객관적 조건, 즉 소득, 교육수준, 용모, 건강 등에 따라 주관적 웰빙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독립적인 삶의 질 측정 영역으로서 주관적 웰빙의 측정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주관적 웰빙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국가통계 차원에서 주관적 웰빙 측정에 대한 거부감이 급속히 완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이루어진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연구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9개 영역 중 하나로 ‘주관적 만족’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타인의 눈에 의해 관찰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삶의 질적 수준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삶을 바라보는 개인의 포괄적인 관점은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포섭하지 못하는 삶의 측면들을 담아주는 보완적인 측정장치로, 삶의 질 측정에 중요하고 필요한 지표이다(통계개발원, 2011).

국제 및 국가 단위에서 주관적 웰빙 측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웰빙과 사회발전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발전의 최종 목표가 경제성장이 아닌 ‘좋은 사회(good society)’, 개별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행복한 사회라고 한다면, 객관적 지표와 함께 평가주체인 구성원의 주관적 웰빙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의 행위가 객관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지만, 그런 객관적 조건에 대한 인간의 인식 및 평가과정을 거쳐 반응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주관적 웰빙’은 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주관적 웰빙에 대한 측정이 국가통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 생산과 함께 정책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주관적 웰빙의 현황

현대적인 개념의 주관적 웰빙은 넓은 의미로 성취에 대한 감정, 삶의 목적, 의미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관적 웰빙은 단순히 쾌락주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삶을 평가하는 다양함 방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Diener & Tov, 2012).

주관적 웰빙은 행복(happiness), 좋은 삶(good life), 만족(satisfaction) 등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1950년대에는 종종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적응과 사기(adjustment and morale)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1960년대에는 ‘삶에 대한 만족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1984년 Ed Diener에 의해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용어가 소개되었으며, 이후 심리학에서는 이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주관적 웰빙은 행복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Veenhoven, 2012).

기존에 이루어졌던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주관적 웰빙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하다. 용어상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삶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측정된다. 즉 긍정적인 정서는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적게 경험하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김정호 외, 2009).

이러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경험만으로 측정하는 주관적 웰빙은 과거와 현재의 만족은 포함하지만 미래에 대한 만족과 기대감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희망이나 기대도 개인의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심리학계에서는 웰빙 측정에 있어 이와 같은 심리적, 긍정적 기능을 반영하고자 ‘심리적 웰빙’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김정호 외, 2009). Ryff & Keyes(1995)는 이러한 심리적 웰빙 측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 의사결정권, 타인과의 관계, 삶의 목적 등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⁶³⁾.

2) 어떻게 주관적 웰빙을 측정할 것인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개인적 수준과 집단 간 비교 등 다양한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개인 수준에서의 주관적 웰빙과 국가 수준에서의 주관적 웰빙은 서로 측정 단위가 다르므로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도 서로 다르게 구성된다.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의 주관적 웰빙 결정요인과 국가 수준에서의 결정요인을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개인적 수준에서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

63) 심리적 웰빙 측정을 위해 긍정적, 심리적 기능으로 자기수용(self-acceptance),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율성(autonomy), 환경지배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을 제안하고 있다(Ryff & Keyes, 1995).

결과를 토대로 알아볼 수 있다. Diener 등(Diener et al., 1999)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⁶⁴⁾. 외적 요인은 연령, 성별, 소득수준, 종교, 학력, 결혼상태, 사회관계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들로 구성되고, 내적 요인은 기질적 경향, 성격, 자아존중감 등이 포함된다(서경현 외, 2009).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외적요인 중 사람들 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Diener와 Seligman의 연구(2002)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친구나 가족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 충분조건은 없지만, 사회적 관계는 필수조건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 크게 기질적인 경향과 성격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Diener et al., 2009). 내적 요인은 주관적 웰빙의 개인 간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개인의 성격은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설명되어 진다. 많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외향적이고, 자아 존중감이 높으며,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외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과 같은 내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력이 훨씬 높다. 보편적으로 외향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외적 요인 중 개인들이 맺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외에 다양한 외적 요인들도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떠한 요인이 더 중요한지는 문화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화와 개인에 따라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수준에서의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은 개인수준에서의 결정요인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와 한 사회내에서 개인 간 차이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결정요인은 서로 다르다. 우선 국가 전체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 전체

64) 외적 요인은 bottom-up factor로 내적 요인은 top-down processes로 구분하고 있다.

의 평균을 보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격으로 인한 차이는 상충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주관적 웰빙의 측정에서는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적인 특성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주로 설명되어 진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주관적 만족감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득과 주관적 만족도의 비교 연구결과는 국가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만족도 평균이 증가하나, 소득의 어느 정도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Diener 등(1995)의 연구에서는 국가 간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결과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소득과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주관적 웰빙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변수를 통제하고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국가 간 주관적 웰빙을 비교하는 연구결과들을 보면, 국가의 소득을 통제했을 때 전체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변수로 평균수명, 나라의 부패정도, 선택의 자유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Diener et al., 2009). 또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내적 요인들은 문화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문화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을 예측하는 개인적 자원은 서로 다를 수 있다(구재선·서은국, 2011)

그렇다면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주관적 웰빙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이러한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은 그리 많지 않다. 개인의 주관적 웰빙 수준으로 인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 대상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들은 주관적 웰빙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는 개인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웰빙의 측정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책적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주관적 웰빙 측정에서 전체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와 긍정적/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측정하는 것은 필수 요소로 볼 수 있다. 심리적 번영 측면의 웰빙은 최근에 부각된 개념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 가치, 자율성 등 개인들의 잠재성이나 심리적인 요인과 연관된다. 이러한 요인이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는 OECD 보고서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사례에 잘 나타난다. “자녀가 있는 것은 삶의 평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는 부정적이고, 자녀를 돌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긍

정적 정서와 관련된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의 의미나 목적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12). 즉 가치있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목적의식, 자율성 등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서경험과 더불어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그리고 주관적 웰빙 측정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개인의 성격에 대한 측정이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성격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고 매우 높다. 따라서 성격에 대한 통제 없이는 주관적 웰빙의 상관분석에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관적 웰빙 측정에서 개인의 성격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해서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모두 측정하고자 하며, 이러한 만족도와 정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영 측면을 자율성, 삶의 가치와 목적, 낙관성 등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서경험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삶의 가치와 목적, 자율성의 정도는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서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고용상태, 교육정도, 혼인, 건강상태 등은 주관적 웰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성격은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낙관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이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⁶⁵⁾에서 검증된 사실이다(구재선·서은국, 2011). 따라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을 제외하고 다른 요인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3) 주관적 웰빙에서의 지표선정

(1) 주관적 웰빙영역에서의 선행연구 사례

주관적 웰빙이 과학적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진 역사가 짧고 비교적 최근에 측정이 이루어진 만큼, 아직은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측정이 진행되고 있고 국제기구나 국가 차원에서는 최근에야 측정이 이루어져 그 사례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즉, 심리학계 중심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

65) Wil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 294-306; Diener et al. (1999)

면서 이를 최근에 와서 국제기구 및 국가통계청에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놀랄 만큼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확산의 배경에는 GDP와 같은 경제지표를 넘어서 웰빙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이동으로 주관적 웰빙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고, 동시에 주관적 웰빙의 증진은 소득 증대,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개선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관심이 부각된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기존 객관적 지표의 한계와 보완 장치로서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 대두, 민주주의의 증진에 따른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정보의 필요성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사례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격적으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사례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경험’을 측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사회조사 및 삶의 질 조사, 갤럽의 World Poll, OECD의 연구결과, 영국, 부탄, 일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심리적 번영의 측정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하며 심리적 번영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합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주관적 웰빙 구성요인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나 정서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가 존재하나 심리적 번영에 대해서는 필요여부와 척도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성격이나 기질은 개인 수준의 분석에서 중요하나 국제비교에서는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성격은 주관적 웰빙의 구성요인은 아니나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측정 결과 해석에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14〉 주관적 웰빙 측정 사례 비교

	삶의 만족도	행복정도	영역별 만족도	정서경험	심리적 번영
OECD	○		○	○	○
갤럽월드폴	○		○	○	
세계가치관조사	○	○	○		○
유럽사회조사	○	○	○	○	○
유럽 삶의 질	○	○	○	○	○
영국 SWB	○		○	○	○
부탄			○	○	
일본 SWB	○	○	○	○	○
통계청 사회조사	○		○		
서울시		○	○		
한국종합사회조사		○	○	○	○

둘째,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측정과 관련해서 아직은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OECD의 ‘Better Life Index’ 에서도 비공식 통계인 Gallup World Poll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OECD가 주관적 웰빙 측정 매뉴얼 개발에 나선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주관적 웰빙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일된 척도를 활용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서경험 측정항목은 다양한 감정에 대해 측정하는데, 이는 문화마다 상이한 뉘앙스를 지닌 감정경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상기간에 있어서도 어제, 지난 1주일 간, 지난 2주일 간, 지난 몇 달 간 등 상이하다. 상이한 회상기간은 비교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는 경험적 연구에 기반한 타당한 회상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차이는 덜하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 측정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측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가치관조사, 유럽, 일본 등에서는 ‘행복 정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측정 항목의 척도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조사별로 4점, 5점 척도 혹은 10점, 11점 척도 등 다양하다. 특별히 조사의 신뢰성에 영향이 없다면 가능하면 국제적 비교가능한 척도 활용이 요구된다.

끝으로, 주관적 웰빙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조사로 진행하기 보다는 다른 조사에 포함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주관적 웰빙의 측정항목이 많지 않고, 그 결과의 활용도 다른 객관적, 주관적 지표 항목과의 관계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주관적 웰빙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으며, 현재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적용 가능한 주관적 웰빙의 측정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관적 웰빙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주관적 웰빙 측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이를 활용하고자 할 때, 단순히 현재 주관적 웰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의 수치만으로는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다. 다른 여러 요인과 같이 설명되고 분석되어야 주관적 웰빙의 수치 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관적 웰빙이 낮은 집단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웰빙만을 별도로 측정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조사항목과 같이 측정되어야 한다.

(2) 주관적 웰빙영역에서의 행복지표체계의 구축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게 된다면, 현재 통계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중 가장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관심사를 조사하고 있는 「사회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지역별, 인구집단별 자료 산출이 가능한 표본 크기가 유지되는 조사로,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 둘째, 조사내용이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조사항목과의 상관분석이 가능하다. 앞서 주관적 웰빙 분석들에서 제시된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인 객관적 조건, 사회관계등을 이미 측정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항목 없이도 이러한 관계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사회조사의 경우 객관적 사실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주관적 의식과 관련된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앞서서도 검토하였듯이 전반적인 만족도 항목과 함께 일부 영역의 경우 영역별 만족도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조사에서 조사될 경우 영역별 만족도 항목을 신규로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조사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사회조사」에 포함하게 될 경우, 주관적 웰빙은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되어 측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주관적 웰빙은 객관적 영역과 비교적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생활영역과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생활영역(life domain)으로, OECD나 유럽의 사례에서도 삶의 질에서 주관적 웰빙은 독립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틀로 삶의 만족도, 정서경험, 심리적 번영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항목 구성에 있어서는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웰빙 측정의 가이드라인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는 이 연구가 국내에서의 주관적 웰빙 측정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비교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조사항목을 구성하는 데 있어 크게 핵심이 되는 항목과, 부가적으로 필요한 항목, 그리고 결과분석의 활용에 있어 통제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만족도와 정서경험은 주관적 웰빙 측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면서 보편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으로 핵심지표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비교 항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항목(core measures)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심리적 번영은 주관적 웰빙 측정에 있어 삶의 만족도나 정서경험과 같이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분야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사항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OECD에서는 심리적 번영과 관련된 조사항목(eudaimonic well-being)은 핵심항목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주관적 웰빙 측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부가항목으로 포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격을 측정하는 항목의 경우는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데 있어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항목이다. 성격이 개인의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를 측정하여 결과분석시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소득,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참여, 사회적 지원 등 여러 결정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은 현재 사회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는 항목임으로 이러한 다양한 결정요인들은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지 않고 기존의 사회조사 항목을 활용하고자 한다.

〈표 115〉 주관적 웰빙 측정 항목 구성

구분	측정내용	비고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정도(0-10점 척도)	핵심항목
정서경험	긍정적,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경험 여부	핵심항목
심리적 번영	심리적 웰빙의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정도를 측정	부가항목
성격 측정	결과 분석시 통제변수로 활용하기 위한 항목으로 주관적 웰빙과 가장 관련이 높은 외향성을 측정	통제항목

①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조사에서 기존에 조사되어 온 유사항목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 조사항목 중에서 일부 영역의 경우 영역별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영역별 만족도를 추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존에 있는 항목들은 충분히 활용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항목의 경우 기존 항목이 있지만,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비교 시 한계가 있어 국제비교 측면을 고려하여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웰빙 측정의 핵심항목 중 삶의 만족도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② 정서경험

정서경험과 관련된 항목은 기존의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회상기간과 정서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회상기간과 다양한 감정에 대한 내용이다. 심리학계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정서경험 척도들은(PANAS, ITAS, SPANE)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한국 사람의 정서와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들 척도에서 사용되는 정서 어휘들은 ‘흥분된’, ‘활기찬’ 등과 같은 높은 각성 수준의 어휘들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동양문화에서는 ‘편안함’ 과 같은 낮은 각성 상태의 정서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서은국·구재선, 2011). 정서경험 측정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느끼고 사용하는 긍정, 부정적 감정으로 구성되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축형 행복척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긍정과 부정적 정서 어휘들을 검토하고, 또한 국제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을 검토하였다. 이 척도들은 모두 이미 기존의 연구를 거쳐 타당성이 입증된 단어이고, 단축형 행복척도에서 사용된 정서 어휘들은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서 어휘이며,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서 어휘들은 국제비교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서 어휘 선택에 있어 최대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선택하되 번역과정에 있어 좀 더 한국사회에 맞는 어휘로 번역하고자 하였다.

③ 심리적 번영(eudaimonia)

심리적 번영은 삶의 목적과 가치, 자율성, 미래에 대한 희망, 자아존중감 등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으로 측정항목 중 가장 주관적이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다. 실제로 삶의 만족도나 정서경험의 경우 거의 보편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 반면, 심리적 번영과 관련된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통점이 없는 편이다. 또한 심리적 번영이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도 보편적이지 않다⁶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데 있어 최근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어 다른 국가에서도 측정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부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번영의 측정에 있어서는 크게 낙관성, 자율성, 삶의 목적이나 의미, 복원력(resilience)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관계는 일부 사례에서 측정되는 항목이기는 하나 일반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의 경우 사회조사의 사회참여 부분에 사회적 관계망 항목과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항목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항목이면서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리적 번영 관련 항목을 주로 반영하여 여섯 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④ 성격 측정 항목

주관적 웰빙 측정 결과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개인의 성격이다. 앞에서도

66) 주관적 웰빙 분야의 연구자인 연세대 서은국 교수의 자문에서는 심리적 번영은 주로 서양적인 사고방식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한국사회에서도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언급되었듯이 심리학계에서는 주관적 웰빙 결과의 분석에 있어 성격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성격요인이 중요한 변수임이 기존의 연구결과(Diener et al., 1999; 서경현 외 2009)들을 통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웰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은 외향성으로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주관적 웰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주관적 웰빙 측정에 있어서 외향성을 측정하는 항목을 최소한 하나 이상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조사에서는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한 통제변수로의 활용을 위해 성격 측정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응답자의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최소한의 항목만을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향성과 신경증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외향적인’, ‘걱정이 많은’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웰빙의 측정항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측정할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척도구성 방법, 회상기간의 결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해 봐야 한다.

척도의 길이는 너무 짧을 경우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너무 길면 응답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응답하기 보다는 보기 좋게 또는 임의로 응답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가능한 의미있는 차이를 포착하면서, 개인들이 임의로 응답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OECD, 2012). 현재 사회조사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대부분이 5점 척도이다. 이는 응답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으며, 응답결과의 변별이 가능한 최소한의 척도이다. 3점 척도의 경우 대부분이 중간에 응답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응답의 변별력의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척도는 5점 척도이다(OECD, 2012).

주관적 웰빙 측정에 있어서 어떤 척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OECD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11점 척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제시한다(OECD, 2012). 영국에서도 5점 이하의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알고자하는 것은 ‘만족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했는지’ 이므로 11점 척도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Hicks, 2011). 또한 숫자로 구분된 척도가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 없으며, 각 단계의 동일한 간격의 차이를 전달하는 데 적절하므로 이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변영이나 정서경험을 측정에서 11점 척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 사례가 많지 않다.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는 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와 빈도를 측정

하는 경우(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로 나뉘어지고, 척도의 길이도 3점 척도에서 11점 척도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정서경험의 측정에서는 주로 개인이 느낀 감정의 강도보다는 얼마나 자주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한다(OECD, 2012; 서은국·구재선, 2011).

사회조사에 포함되어 조사될 ‘주관적 웰빙’ 영역의 조사항목은 핵심항목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경험, 그리고 부가항목인 심리적 번영, 통제변수로 사용될 성격 측정 항목으로 구성된다. 핵심항목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경험 항목은 국제비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OECD에서 제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항목을 구성하고자 하며, 또한 다른 영역의 항목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매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심리적 번영 항목은 매년 조사되지는 않지만,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부가항목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다만 심리적 번영 조사항목의 경우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항목이 없어서 항목의 선택에 있어 문헌검토와 함께,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일부 포함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항목의 경우 시험조사 등을 통해 응답결과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격을 측정하는 항목의 경우 주관적 웰빙의 측정 항목이 아닌 분석과정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될 부분이라 중요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격은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결과활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재 구성한 항목은 외향성과 신경증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삶의 만족도

- 귀하의 삶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귀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시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뜻함)



- 정서경험

- 귀하께서는 어제 하루동안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경험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 즐거운		
2) 편안한		
3) 불안한		
4) 슬픈		

- 심리적 번영

- 다음에 나타난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2)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3) 나는 나의 삶이 가치있다고 느낀다					
4)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 느낀다					
6)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 성격 측정

- 다음은 개인의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고 각 단어가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아래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1) 외향적인					
2) 걱정이 많은					

4) 주관적 웰빙에서의 정책방향

주관적 웰빙 측정 결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GDP, 인구수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전체 사회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지표들이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개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지, 정책수행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게 된다. 주관적 웰빙 측정 결과는 개인들의 경험과 평가를 포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Diener et al, 2009).

정책의 목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문제가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관적 웰빙의 측정 결과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에서 취약한 집단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영역별 만족도 조사항목을 통해서 어떤 영역의 만족도가 낮은지, 인구집단별로 만족도가 낮은 집단,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집단에 대한 정보는 향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조사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조사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Diener et al, 2009).

두 번째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관적 웰빙 측정 결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 안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고, 환경보호와 경제성장과 같이 서로 상반되는 정책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이 현재 중요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국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만족도가 낮은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주관적 웰빙 측정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객관적인 자료가 주로 활용되겠지만, 정책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눈에 띄만한 성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객관적 지표는 좋아졌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정도는 또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에 대한 만족정도, 정책 실행 이후의 만족도의 변화 정도 등은 좋은 정보가 된다. 또한 특정 정책을 실시한 지역과 아닌 지역에서의 차이 정도 등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외에도 Diener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있어서 벌금이나 보상수준의 결정, 논쟁이 되는 문제의 해결 등에 있어서도 주관적 웰빙 측정 결과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웰빙은 그 자체로도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이 높을수록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사회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관적 웰빙 측정 항목은 주로 OECD에서 제시한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는 OECD에서 이미 많은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작성한 최종 결과물이고 측정 결과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핵심 항목과 부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시된 항목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부정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핵심항목, 심리적 변인을 측정하는 부가항목, 통제변수로 활용될 성격 측정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주관적 웰빙’ 영역의 측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조사에 포함되어 조사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지표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사회지표내에서 하나의 부문으로 포함되어야 할지, 전체 부문에 걸쳐서 포괄되어야 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1. 정책제언

앞서 행복에 관한 연구들과 적용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의 행복을 위해 가져가야 할 지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도민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행복과 연관된 경험과 조건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들로 대체로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앞선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충남도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정리하여 본다.

먼저 정책방향으로서 ① 일하는 기쁨을 안겨주어야 한다. 충남도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해보고 싶은 매력적인 일을 지역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생의 상당부분을 보내는 직장엔 큰 매력이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물론 그 가족도 결코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사람의 행복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것이라 하는데 이는 상당부분 일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니며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인 것이다. ② 매력적인 생활여건이 창조되어야 한다. 도민들이 충남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매력적

인 공간을 창조하여야 한다. 다른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하여도 생활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류인구는 일시적으로 늘어날지 모르나 상주인구의 증가는 의문시 된다. 매력적인 생활공간이란 생활편리성과 전문서비스분야 모두를 포함한다. 생활여건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정책은 도민들의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체의 안전, 안심의 확보는 개인행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위협속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서 더 할 것이다. 현재 각종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는 다른 무엇보다 매력적인 생활여건이 될 것이 분명하다.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여건의 또 다른 방법은 도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다. 건강은 사람의 행복도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건강에 대한 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료 및 복지기관의 존재도 중요하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비록 현재 수준에서는 다른 여건보다 우선시 되고 있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향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제는 지역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③ 창의적인 학습공간을 준비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이 자신의 성장과 타인에 대한 기여로서 체감하는 것처럼 이는 다양한 학습을 통해 준비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학습은 학교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교육기관을 통한 학습이 중요하지만 사회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학습여건은 지식사회에 있어 주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교육을 위한 학습여건이 아니라 모든 사회인에게 지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의 물리적 여건과 함께 최첨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주민들간의 연계와 공동체 형성은 물리적 제도와 함께 정신적 공감대 형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독립적이고 고립되어 가는 사회의 정신적 피폐함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충남에서도 분권과 함께 다양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제도적 정책의 마련과 함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⑤ 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표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의지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는 단체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이에 지방의회도 중요함을 포함한다.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행복도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지역의 정책이 기존의 틀 속에서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움직인다면 도민들은 도정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들과도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정책의 추진에는 도민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도민들의 참여는 도정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정책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영역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이며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만족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전히 미흡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충남에서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보완되며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지표가 과연 도민들의 행복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이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과연 도민들이 행복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도민들에게 행복에 대한 감정과 중요성 등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하나 본 연구는 이러한 여건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정리하여 본다.

①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에 불과하다. 여전히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실제 측정이 선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점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누적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정책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② 정책적 활용과 연계시켜야 한다. 단순히 연구에 그치게 되어 도정의 정책과 연계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연구보다 그 가치가 떨어진다. 도정이 행복을 가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정책과의 연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③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들이 발굴되어야 한다. 도정과 연계성을 위해서도 시책들의 발굴은 필요하다. 향후 행복지표들의 측정과 분석을 통해 영역별 시책들이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방향 설정에서부터 세부시책까지 행복도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행복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연구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의 의미를 도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정이 도민들의 행복을 중요시하고 있고 도민들은 행복을 위

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진정한 행복도가 측정되고 이를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행복의 가치가 한 사회가 추구해야 할 만한 목표로 의미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도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정책은 어떻게 행복의 조건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도민들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답이지만 찾아내야 할 답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내고 측정할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이라도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정서를 미묘한 느낌과 감정까지 완벽하게 측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행복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 연구에 얼마나 의존할 것인가는 정책결정자가 선택할 사항이다. 그러나, 행복연구가 최소한 정책결정자에게 그 유용성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만큼은 기존 연구들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도민의 행복이 충남도정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 한다면 행복연구 활용이 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행복에 대한 연구를 정책에 직접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제한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유용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 내에서 가능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행복연구가 정책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가치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조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가정을 검증하고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며 도민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내릴 수 있는 판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행복지수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행복지수의 지표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충남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지표의 개발에 있어 기

관 간 비교가 아닌 시계열적 비교를 염두에 두고 지표를 검토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삶의 물질적 조건과 함께 개인들의 만족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행복이란 물질과 정신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앞서 기술한 것처럼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개념을 지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보다 타당성이 높은 지표구성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여러 분야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의 구성과 활용을 위해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의 과제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면서 연구결과와의 잠재적 이용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행복 주관적지표 만족도 조사

영역	설문조사 문항
주거 및 교통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혹은 주거환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일자리 소득 소비	귀하는 충남의 전반적인 일자리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귀하의 소득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가족 및 공동체	가족관계에 있어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가족관계에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가족관계에 있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교육	귀하는 충남의 교육여건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고등학교의 계열 혹은 대학교 전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학교에서의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학습의 결과, 즉 취업가능성 혹은 상급학교 진학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문화 및 여가	귀하는 충남의 문화/여가 여건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환경	귀하는 충남의 환경 여건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p>현재 귀하의 생활권 주변의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청결상태에 대하여 어느 만족하고 계십니까?</p> <p>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p>
건강 및 보건	<p>귀하는 총남의 건강/보건 여건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p> <p>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p>
	<p>현재 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p> <p>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p>
	<p>귀하는 총남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p> <p>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p>
	<p>귀하는 총남의 공중보건(질병예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p> <p>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p>
주민 참여	<p>귀하는 총남의 도정에 대한 주민참여 여건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p> <p>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p>
	<p>귀하는 총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십니까?</p> <p>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p>
전반적인 행복감	<p>현재 귀하의 전반적인 행복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p>

참 고 문 헌

- 국토연구원, 2012,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재해 취약성 분석 및 도시방재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제388호.
- 김경석, 2011, “3S 도로 조성방안”,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만들기 전략과제 워크숍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 김명소·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승권·장영식·조승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 3인,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신영외 1인, 2006, 한국 청소년 행복·역량지수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윤태, 2010.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 「문화경제연구」 13(1): 23-45
- 김지경·송은경, 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따로 사는 부모가 구와 자녀가 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pp.37-63.
- 박대식·마상진·신은정, 2005.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환, 2009. “근대사회의 행복논리”. 〈행복사회와 문화정책의 방향〉
- 박혜경·고미선·정승화·국미애, 2004. 인천시민의 가족실태 및 가족가치관 조사. 인천발전연구원.
- 서은국·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25(1), pp.96-114.
- 서은국, 2012. “행복의 심리학적 이해”. 〈충남발전연구원 행복연구회 내부 발표자료〉
- 서은국·구재선·이동귀·정태연·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성지미·안주엽, 2006.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1): 39-74.
- 심수진·이희길, 2009. 사회조사 항목 개발. 통계청.
- 양현미·심광현·박건희, 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용준·윤갑식, 201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3권 제4호.
- 요하네스발라허지음(박정미옮김), 2011. 「경제학이 깔고 앉은 행복」. 대림북스
- 이민아. 2010. “결혼상태에 따른 노인의 우울도와 성차.” 한국사회학 44(4): 32-62.
- 이성규, 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윤석. 2010. “취업한 기혼 남녀의 일과 가족 전이: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의 통합적 접근.” 한국인구학 33(2): 1-31.
- 이윤석. 2011. “부모의 성인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 연구.” 한국인구학 34(3): 1-30.
- 이희길, 2012. “사회발전 및 웰빙 측정”. <충남발전연구원 행복연구회 내부 발표자료>
- 이희길·심수진, 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 연구」. 통계개발원
- 임영진·고영건·신희천·조용래, 2010. “한국인의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 전상인, 2009. “행복의 공간 사회학 시론”. <행복사회와 문화정책의 방향>
- 조지프 스티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 지음(박형준 옮김), 2011. 「GDP는 틀렸다」. 동녘
- 최항섭, 2009. “미디어와 행복”. <행복사회와 문화정책의 방향>
- 통계개발원,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 2011.
- 통계청. 2006. 200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8. 2008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10. 2010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11. 전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보도자료. 통계청.
- 한국인구학회. 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구결과: 심층 분석을 위한 연구.” 통계청.
- 황명진·심수진, 2008.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 Alan B. Krueger, David A. Schkade (2008). The reliability of subjective well-being measu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 1833-1845
- Berger-Schmitt R., and Noll, H., 2000, Conceptual Framework and Structure of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EU Reporting Working Paper No. 9, Centre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 Mannheim.
- Boarini, R., M. Comola, C., Smith, R. Manchin, and F. Keulenaer (2012), “What

- Makes for a Better Life?: The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OECD Countries –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 Clark, A. E. and A. J. Oswald(1994), “Subjective well-being and unemployment,” *Economic Journal*, 104, pp. 648-659
- Coontz, S. (1997). *The Way We Really Are*. Basic Books.
- Cummins, R.A. (2000),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 interactive mod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42(1), 55-72.
- Delors, J., Mufti, I., Amagi, I., Carneiro, R., Chung, F., Geremek, B., et al. (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Paris, France: UNESCO Publishing.
- Diener, E, RE Lucas, U Schimmack and JF Helliwell (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d and Suh, Eunkook M.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89-216.
- Diener, Ed and Suh, Eunkook M.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89-216.
- EU, 2006,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비교연구 프로젝트.
- Jane Jacobs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Second Edition, Random House, New York.
- Keizer, M. and L.J.G. van der Maesen(2003), “Social Quality and the Conditional Factor of Socio-Economic Security,” working paper
- Lucas, R., A. Clark, Y. Georgellis, and E. Diener(2004), “Unemployment Alters the Set Point for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15(1), pp. 8-13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76 *Measuring Social Wellbeing: a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Paris.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82 *The OECD List*

- of Social Indicators, Paris.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86 Living Conditions in OECD Countries: A Compendium of Social Indicators, Paris.
- Schneider, M. (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6, 297-305.
- Sen, Amartya. (1985). Well-being, Agency and Freedom: the Dewey Lectures., Journal of Philosophy, 82(4), 169-221.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Trewin, D.(2001). Measuring Wellbeing,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U. S.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1996, 『Creating Defensible Space by Oscar Newman』, US.
- Winkelmann, L. and R. Winkelmann(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 pp. 1-15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와 귀댁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더불어 행복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충청도민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하여, 도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충청도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려 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통계법 제 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연구책임 : 고승희 책임연구원 / 홍성호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연락처 : 041)840-1169

■ 응답시 유의사항 ■

1. 응답은 반드시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가능한 가구의 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해 주십시오.
3. 각 항목별로 응답항목에 ○표 하거나 빈칸에 해당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주 소 :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 연락처 : _____

응답자 일반사항

Q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Q2. 귀하의 출생연도는?

_____년

Q3. 귀하의 학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Q3-1. 교육정도는?

- ① 안 받았음 ② 초등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학교 (4년제 미만) ⑥ 대학교 (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석사 과정) ⑧ 대학원 (박사 과정)

Q3-2. 교육상태는?

-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Q4. 귀하의 세대구분은?

- ① 1인 가구 ② 1세대 가구 ③ 2세대 가구 ④ 3세대 이상 가구 ⑤ 비혈연 가구

Q5. 가구주와의 관계는?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⑥ 손자녀 및 그 배우자,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⑦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⑧ 기타 친인척 ⑨ 기타 동거인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① 미취학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대학교
(명) (명) (명) (명) (명) (명)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다세대 주택(연립주택/빌라) ④ 기타(오피스텔 등)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보증금 있음) ④ 월세(보증금 없음)

_____ $\frac{1}{10}$ $\frac{1}{10}$ $\frac{1}{10}$ _____ m^2

① 있음 ②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건강 등의 이유로 잠시 쉬고 있음 ③ 없음
(가사, 학업 등)

① 농림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⑬ 교육 서비스업 ⑭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⑮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①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노무 종사자 ⑪ 군인 ⑫ 그 외 ()

①임금근로자 ②고용이없는자영업자 ③고용을둔사업주 ④가구주중자 ⑤그외)

Q10. 귀하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Q10-1. 귀하는 일상생활에 있어 건강으로 인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Q10-2. 귀하는 만성적인 질환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Q11. 문화 혹은 여가활동에 대한 귀하의 연간 지출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연간 _____만원

Q12. 귀하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환경오염에 기인한 질병이나 질환(아토피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Q13. 귀하는 충남도 혹은 도내 시군의 정책결정에 참여(각종 위원회 등)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일자리/소득/소비 영역

JQ1. 다음의 일자리/소득/소비 관련 지표들 가운데 개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지표에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가장 중요, 2 : 두 번째로 중요, 3 : 세 번째로 중요, . . . 8 : 가장 덜 중요)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
일자리/소득/소비	고용률	
	청년층 고용률	
	고령층 고용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실질임금	
	성별 임금격차	

JQ2. 귀하는 충남의 전반적인 일자리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JQ3. 귀하가 속한 직장 내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보통 ④ 다소 있음 ⑤ 매우 많음

JQ4. 귀하의 소득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주거/교통/안전 영역

RQ1. 다음의 주거/교통/안전 여건 관련 지표들 가운데 개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지표에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가장 중요, 2 : 두 번째로 중요, 3 : 세 번째로 중요, . . . 8 : 가장 덜 중요)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
주거/교통/안전	자가거주비율	
	주택전세가격지수	
	통근·통학소요시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1인당 공원 및 녹지조성면적	
	상수도보급률	
	사회안전망시설 (CCTV) 구축도	
	범죄발생건수	

RQ2.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혹은 주거환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RQ3.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통시설을 통한 이동이 어느 정도 편리하십니까?

- ① 매우 편리 ② 편리한 편 ③ 보통 ④ 불편한 편 ⑤ 매우 불편

RQ4. 귀하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안전 ② 안전한 편 ③ 보통 ④ 불안정한 편 ⑤ 매우 불안전

가족/공동체 영역

FQ1. 다음의 가족/공동체 여건 관련 지표들 가운데 개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지표에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가장 중요, 2 : 두 번째로 중요, 3 : 세 번째로 중요, . . . 7 : 가장 덜 중요)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
가족/공동체	가족접촉빈도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적관계망	
	자살률	
	사회단체참여율	
	지방정부 신뢰도	

FQ2. 가족관계에 있어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FQ3. 가족관계에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FQ4. 가족관계에 있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FQ5.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믿을수있음 ②대체로 믿을수있음 ③보통 ④대체로 믿을수없음 ⑤매우 믿을수없음

FQ6. 귀하는 평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최소 2명 이상)이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 ① 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1시간 ④ 1~2시간 ⑤ 2시간 이상

교육 영역

EQ1. 다음의 교육 관련 지표들 가운데 개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지표에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가장 중요, 2 : 두 번째로 중요, 3 : 세 번째로 중요, . . . 8 : 가장 덜 중요)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
교육	유아교육 접근성	
	고등교육 접근성	
	평생교육 접근성	
	교사/학생 비율	
	1인당 장서 수(공공도서관)	
	학교폭력 경험비율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학습시간의 적정성과 성취도 (단위학습시간 당 학업성취도)	

EQ2. 귀하는 충남의 교육여건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EQ3. 고등학교의 계열 혹은 대학교 전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EQ4. 일반적으로 도내 학생과 교사 간 친밀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친밀 ② 약간 친밀 ③ 보통 ④ 다소 친밀하지 않음 ⑤ 전혀 친밀하지 않음

EQ5.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우 간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원만 ② 약간 원만 ③ 보통 ④ 다소 원만하지 않음 ⑤ 전혀 원만하지 않음

EQ6. 학교에서의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EQ7. 학습의 결과, 즉 취업가능성 혹은 상급학교 진학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문화/여가 영역

CQ1. 다음의 문화·여가 관련 지표들 가운데 개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지표에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가장 중요, 2 : 두 번째로 중요, 3 : 세 번째로 중요, . . . 6 : 가장 덜 중요)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
문화/여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레저시설 이용여부	
	독서 여부	
	일반신문구독 여부	
	국내관광여행 여부	
	해외여행 여부	

CQ2. 귀하는 충남의 문화/여가 여건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CQ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문화유적, 공연, 축제 등)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러함 ② 다소 그러함 ③ 보통 ④ 다소 그렇지 못함 ⑤ 매우 그렇지 못함

CQ4. 귀하는 이와 같은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러함 ② 다소 그러함 ③ 보통 ④ 다소 그렇지 못함 ⑤ 매우 그렇지 못함

CQ5.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귀하가 사는 지역의 문화·여가시설은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매우 좋아짐 ② 다소 좋아짐 ③ 보통 ④ 다소 나빠짐 ⑤ 매우 나빠짐

CQ6.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한 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까?

- ① 매우 그러함 ② 다소 그러함 ③ 보통 ④ 다소 그렇지 못함 ⑤ 매우 그렇지 못함

환경 영역

BQ1. 다음의 환경영역 지표들 가운데 개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지표에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가장 중요, 2 : 두 번째로 중요, 3 : 세 번째로 중요, . . . 8 : 가장 덜 중요)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
환경	하천 및 호소수질 오염	
	통합대기환경지수(CAI) (공기 오염도)	
	주거지역 야간소음도	
	환경오염 질환발생	
	친환경 축산농가율	
	야생 동·식물 다양성	
	환경민원 해소율	
	폐기물 및 쓰레기 관리	

BQ2. 귀하는 충남의 환경 여건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BQ3. 귀하의 생활권 주변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은 건강상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안전 ② 다소 안전 ③ 보통 ④ 다소 위협 ⑤ 매우 위협

BQ4. 현재 귀하의 생활권 주변의 공기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짐 ② 약간 좋아짐 ③ 보통 ④ 다소 나빠짐 ⑤ 매우 나빠짐

BQ5. 현재 귀하의 생활권 주변의 수질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짐 ② 약간 좋아짐 ③ 보통 ④ 다소 나빠짐 ⑤ 매우 나빠짐

BQ6. 현재 귀하의 생활권 주변의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청결상태에 대하여 어느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건강/보건 영역

HQ1. 다음의 건강/보건 영역 지표들 가운데 개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지표에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가장 중요, 2 : 두 번째로 중요, 3 : 세 번째로 중요, . . . 5 : 가장 덜 중요)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
건강/보건	출생시 기대수명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흡연율과 음주량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의료비 본인부담률	

HQ2. 귀하는 충남의 건강/보건 여건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HQ3.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HQ4. 귀하는 충남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HQ5. 귀하는 충남의 공중보건(질병예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주민참여 영역

PQ1. 다음의 주민참여 관련 지표들 가운데 개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시는 지표에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가장 중요, 2 : 두 번째로 중요, 3 : 세 번째로 중요, . . . 5 : 가장 덜 중요)

영역	지표	우선순위
주민참여	투표율	
	부패지수	
	정보공개율	
	자원봉사참여율	
	주민참여위원회수	

PQ2. 귀하는 충남의 도정에 대한 주민참여 여건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PQ3. 귀하는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PQ4. 귀하는 개인의 참여가 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러함 ② 약간 그러함 ③ 보통 ④ 다소 그렇지 않음 ⑤ 매우 그렇지 않음

PQ5. 귀하는 충남도정의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러함 ② 약간 그러함 ③ 보통 ④ 다소 그렇지 않음 ⑤ 매우 그렇지 않음

PQ6. 귀하는 충남도정을 신뢰하십니까?

- ① 매우 그러함 ② 약간 그러함 ③ 보통 ④ 다소 그렇지 않음 ⑤ 매우 그렇지 않음

전반적인 행복감

GQ1. 현재 귀하의 전반적인 행복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점수표에서 해당하는 점수에 표시해 주세요.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큰 의미를 함)

0	1	2	3	4	5	6	7	8	9	10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고승희 · 홍성호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내부연구진 · 이상진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수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창석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신혜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외부연구진 · 장수명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이윤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송정기 교수(전북대학교)

이희길 박사(통계개발원)

전략연구 2012-01 ·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글쓴이 · 고승희 외 11인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2년 12월 31일 / 발행 · 201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231(기획조정연구실)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39

ISBN · 978-89-6124-190-8 03350

<http://www.cdi.re.kr>

© 2012,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